연구보고 2019-17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

: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최윤경·김나영·이혜민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19-17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Ⅱ)
: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최 윤 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나 영**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이 혜 민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19-17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
: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발행일 2019년 12월
발행인 백선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 9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세일포커스 02-2275-6894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90485-16-6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리말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이래 저출산정책의 추진을 포함하여 육아정책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종합적 관점의 개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만 2년을 경과하는 중간시점에 해당하는 2019년은 구체적인 정책의 실행이 적극 추진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5년 연속과제로 진행되는 「육아정책의 분석과 과제(2018~2022)」는 지난 2년간의 성과와 함께 정책의 계획과 수립, 추진 과정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담았다.

과거 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성과와 과제로 살펴보던 성과평가의 틀에서 발전하여, 2019년 현 시점에 요구되는 보다 광의의 육아정책에 대한 관점과 수요를 반영하여 정책평가의 틀과 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부처별로 제시한 정책의 계획과 연도별 목표 대비 달성도에 의한 협의의 성과평가뿐만 아니라 달성한 정책의 목표와 계획의 이행이 육아 수요자인 부모와 아동, 현장의 교직원에게는 어떻게 체감되고 육아의 과정과 환경 전반에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육아정책 전문가와 수요자 부모 대상 조사 결과, 육아정책에 대한 구체적 성과 인식에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공통적으로 육아정책의 방향 설정과 구체적 설계, 추진의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특히 돌봄정책과 보육정책의 성과에 대한 체감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반면, 실제 수요자인 부모와 예비부모 청년세대, 영유아와 아동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정책 추진의 과정에서 체감도가 떨어지며, 특히 저출산정책의 추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과제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이행과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타났다. 육아정책이 수요자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질적 전략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하겠다. 향후 육아정책의 분석과 과제는 육아정책의 전 과정을 고려하고 수요자 관점의 평가와 목소리를 담아내는 분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각 계 전문가와 육아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주신 교육·보육·돌봄의 전문가, 그리고 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 보고서의 내용은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연구진의 견해임을 밝혀둔다.

2019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목차

요약 1

Ⅰ. 서 론 1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2. 연구내용 21
3. 연구방법 22
4. 연구의 배경 31

Ⅱ. 육아정책 성과분석의 대상 및 방법 51
1. 육아정책의 범주 54
2. 육아정책 분석의 틀 66

Ⅲ. 육아정책 성과평가 75
1. 주요 국정과제 달성도 평가 77
2. 육아정책 성과평가(1)-전문가 조사 분석 106
3. 육아정책 성과평가(2)-수요자 조사 분석 126
4. 정책효과 계량분석 155

Ⅳ. 2018-2019 육아정책 분석 및 제언 183
1. 육아정책 성과분석 185
2. 육아정책의 효과성 제고 제언 196

참고문헌 205

Abstract 213

부록 215

부록 1. 전문가용 설문지 215
부록 2. 수요자용 설문지 233
부록 3. 조사결과 표 256

표 목차

〈표 Ⅰ-3- 1〉 전문가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 23
〈표 Ⅰ-3- 2〉 전문가 설문조사 항목 ····· 23
〈표 Ⅰ-3- 3〉 수요자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 24
〈표 Ⅰ-3- 4〉 부모 설문조사 항목 ····· 24
〈표 Ⅰ-3- 5〉 부모 대상 심층면담: 피면담자 특성 ····· 26
〈표 Ⅰ-3- 6〉 기관 원장 대상 심층면담: 피면담자 특성 ····· 26
〈표 Ⅰ-3- 7〉 부모 대상 면담 내용 ····· 26
〈표 Ⅰ-3- 8〉 원장 대상 면담 내용 ····· 27
〈표 Ⅰ-3- 9〉 육아정책의 목적 대비 정책평가 지표(안) ····· 30
〈표 Ⅰ-4- 1〉 2018년 연구 15대 핵심육아정책 목록 ····· 31
〈표 Ⅰ-4- 2〉 2018년 연구 선정 복합혁신과제 중요도 결과-요약표 ····· 32
〈표 Ⅰ-4- 3〉 2017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대상(기본계획) ····· 33
〈표 Ⅰ-4- 4〉 2017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예산(기본계획) ····· 34
〈표 Ⅰ-4- 5〉 2017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핵심성과평가 지표 內 육아정책 관련 지표 ····· 34
〈표 Ⅰ-4- 6〉 '2010-2015 보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 내 주요 성과 지표 ····· 35
〈표 Ⅰ-4- 7〉 '2010-2015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 내 주요 성과 지표 ····· 37
〈표 Ⅰ-4- 8〉 한국 육아지표(2007년) ····· 38
〈표 Ⅰ-4- 9〉 보육정책 평가 영역 ····· 40
〈표 Ⅰ-4-10〉 SDG Target 4.2 달성을 위한 아태지역 모니터링 지표 ····· 43
〈표 Ⅰ-4-11〉 현 정부 육아정책 대목표, 세부목표, 정책과제 ····· 47
〈표 Ⅱ-1- 1〉 국정목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內 전략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세부과제 내용 ····· 55
〈표 Ⅱ-1- 2〉 국정목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內 전략 2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세부과제 내용 ····· 56
〈표 Ⅱ-1- 3〉 정부 국정과제('17) 계획 및 추진과제 ····· 57
〈표 Ⅱ-1- 4〉 4대 복합·혁신 과제 '교육·복지·노동 체계 혁신' 內 육아 관련 내용 ····· 59
〈표 Ⅱ-1- 5〉 정부 실행주체별 각종 계획 및 추진과제 ····· 62

〈표 Ⅱ-1- 6〉 2018년 핵심육아정책 목록 및 2019년 육아정책 범주 재구조화 … 65
〈표 Ⅱ-2- 1〉 정부 주요 국정과제-육아정책 성과평가 지표 연계 …… 68
〈표 Ⅱ-2- 2〉 육아정책의 목적 대비 중장기 영향 모니터링(효과평가)을 위한 지표(안) …… 70
〈표 Ⅲ-1- 1〉 2018년 9~10월 아동수당 신청·지급 현황 …… 78
〈표 Ⅲ-1- 2〉 2019년 4월 아동수당 추가 지급 결과 …… 79
〈표 Ⅲ-1- 3〉 2019년 9월 아동수당 신청·지급 현황 …… 79
〈표 Ⅲ-1- 4〉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확대 관련 2018년 추진실적 …… 81
〈표 Ⅲ-1- 5〉 연도별 국·공립 신증설 계획 …… 82
〈표 Ⅲ-1- 6〉 연도별 유치원 원아수와 취원률(2016. 11.~2018. 11.) …… 83
〈표 Ⅲ-1- 7〉 2019년 국공립 유치원 1,080개 학급 이상 확충 계획 …… 84
〈표 Ⅲ-1- 8〉 2018년 유초중등교육전문위원회 회의 내용 중 유보격차 안건 … 85
〈표 Ⅲ-1- 9〉 초등돌봄 부처별 추진현황 …… 87
〈표 Ⅲ-1-10〉 부처별 초등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약33만명 …… 88
〈표 Ⅲ-1-11〉 부처별 돌봄서비스 현황 …… 88
〈표 Ⅲ-1-12〉 초등돌봄 부처별 개선 계획 …… 90
〈표 Ⅲ-1-13〉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대책 …… 92
〈표 Ⅲ-1-14〉 연도별 돌봄 인원 확대계획 …… 92
〈표 Ⅲ-1-15〉 남성 육아휴직 현황(2009년~2019년) …… 94
〈표 Ⅲ-1-16〉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 현황(2014년~2019년) …… 95
〈표 Ⅲ-1-17〉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2018년 추진 실적 …… 102
〈표 Ⅲ-1-18〉 아동권리보장원 구성 조직 …… 103
〈표 Ⅲ-1-19〉 누리과정 혁신방향 …… 104
〈표 Ⅲ-1-20〉 방과후 놀이유치원 운영 주요사항(안) …… 105
〈표 Ⅲ-2- 1〉 육아정책 범주 구성 관련 의견 …… 107
〈표 Ⅲ-2- 2〉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성과 평가 …… 108
〈표 Ⅲ-2- 3〉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중요도 및 실행수준 (성과)평가 …… 110
〈표 Ⅲ-2- 4〉 육아정책 저출산 분야 국정과제 수행 달성도 인식 평가 …… 112
〈표 Ⅲ-2- 5〉 육아정책(유아교육·보육·돌봄 분야) 관련 국정과제 수행 달성도 평가 … 113
〈표 Ⅲ-2- 6〉 육아정책(아동 분야) 관련 국정과제 수행 달성도 평가 …… 115
〈표 Ⅲ-2- 7〉 육아정책 관련 성과 세부 평가(1, 2순위 응답) …… 116
〈표 Ⅲ-2- 8〉 육아정책 계획-실행-성과 평가 …… 118
〈표 Ⅲ-2- 9〉 구체적 정책설계-정책의제설정-투입요소-수행체계-정책집행 평가 … 119

〈표 Ⅲ-2-10〉 육아정책 관련 평가요소별 평가 ····· 119
〈표 Ⅲ-2-11〉 정책 효과평가-정책의 중장기 영향 평가 지표 및 항목 ····· 121
〈표 Ⅲ-2-12〉 국가/부모/아동/기관 영역 현재 수준 및 기여도 평가 ····· 121
〈표 Ⅲ-2-13〉 육아정책 중장기 평가 ····· 124
〈표 Ⅲ-2-14〉 육아정책 조정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전략 ····· 125
〈표 Ⅲ-3- 1〉 수요자 조사 응답자 분포 ····· 127
〈표 Ⅲ-3- 2〉 가구 월 평균 소득 및 지출액
-(부모 소득과 취업특성, 서비스 이용간의 관계) ····· 128
〈표 Ⅲ-3- 3〉 영유아서비스 이용률-만족도-인지도 ····· 130
〈표 Ⅲ-3- 4〉 육아관련 서비스 미이용 이유 ····· 133
〈표 Ⅲ-3- 5〉 초등 서비스 이용률-만족도-인지도 ····· 134
〈표 Ⅲ-3- 6〉 초등 서비스 이용률-1) 공공서비스 ····· 135
〈표 Ⅲ-3- 7〉 초등 서비스 이용률-2) 사교육 ····· 137
〈표 Ⅲ-3- 8〉 초등 관련 서비스 미이용 이유 ····· 139
〈표 Ⅲ-3- 9〉 현금-시간-건강 지원 제도/서비스 이용률-만족도-인지도 ····· 140
〈표 Ⅲ-3-10〉 현금-시간-건강 지원 제도/서비스 미이용 이유 ····· 142
〈표 Ⅲ-3-11〉 향후 출산 의향 ····· 143
〈표 Ⅲ-3-12〉 출산 관련 지원 제도 이용 의향 ····· 144
〈표 Ⅲ-3-13〉 국정과제 수행에 대한 체감 긍정 평가 ····· 146
〈표 Ⅲ-3-14〉 국정과제 성과가 우수/미흡한 과제 인식 평가(1순위 응답률) ··· 147
〈표 Ⅲ-3-15〉 문재인정부에서 성과가 우수한 국정과제(1순위, 1+2순위) ····· 148
〈표 Ⅲ-3-16〉 문재인정부에서 성과가 미흡한 국정과제(1순위, 1+2순위) ····· 148
〈표 Ⅲ-3-17〉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 달성도 평가:
1) 저출산정책 ····· 149
〈표 Ⅲ-3-18〉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 달성도 평가:
2) 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 ····· 150
〈표 Ⅲ-3-19〉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 달성도 평가: 3) 아동 정책 ··· 151
〈표 Ⅲ-3-20〉 문재인정부의 육아정책 평가(1)-인지도 및 성과평가 ····· 152
〈표 Ⅲ-3-21〉 문재인정부의 육아정책 평가(2)-내용, 서비스, 효과성 ····· 152
〈표 Ⅲ-3-22〉 문재인정부의 육아환경 현재수준과 이에 대한 정책의
기여도 평가 ····· 153
〈표 Ⅲ-4- 1〉 분석변수 ····· 157
〈표 Ⅲ-4- 2〉 상관관계: 저출산정책에 대한 성과 수준 ····· 159

〈표 Ⅲ-4- 3〉 분석결과: 저출산정책에 대한 성과 수준 ····· 160
〈표 Ⅲ-4- 4〉 상관관계: 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성과 수준 ····· 162
〈표 Ⅲ-4- 5〉 분석결과: 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성과 수준 ····· 163
〈표 Ⅲ-4- 6〉 상관관계: 보육정책에 대한 성과 수준 ····· 165
〈표 Ⅲ-4- 7〉 분석결과: 보육정책에 대한 성과 수준 ····· 166
〈표 Ⅲ-4- 8〉 상관관계: 돌봄정책에 대한 성과 수준 ····· 168
〈표 Ⅲ-4- 9〉 분석결과: 돌봄정책에 대한 성과 수준 ····· 169
〈표 Ⅲ-4-10〉 상관관계: 아동정책에 대한 성과 수준 ····· 171
〈표 Ⅲ-4-11〉 분석결과: 아동정책에 대한 성과 수준 ····· 172
〈표 Ⅲ-4-12〉 분석변수 ····· 173
〈표 Ⅲ-4-13〉 상관관계: 저출산정책 과제/목표 달성도 평가 ····· 175
〈표 Ⅲ-4-14〉 분석결과: 저출산정책 과제/목표 달성도 평가 ····· 176
〈표 Ⅲ-4-15〉 상관관계: 유아교육·보육 돌봄 정책에 대한 과제/
목표 달성도 평가 ····· 177
〈표 Ⅲ-4-16〉 분석결과: 유아교육·보육 돌봄 정책에 대한 과제/
목표 달성도 평가 ····· 178
〈표 Ⅲ-4-17〉 상관관계: 아동정책의 과제/목표 달성도 평가 ····· 179
〈표 Ⅲ-4-18〉 분석결과: 아동정책의 과제/목표 달성도 평가 ····· 180
〈표 Ⅳ-1- 1〉 2018년 핵심육아정책 목록 및 2019년 육아정책 범주 재구조화 ·· 187
〈표 Ⅳ-1- 2〉 정부 주요 국정과제-육아정책 성과평가 지표 연계 ····· 188
〈표 Ⅳ-1- 3〉 육아정책의 목적 대비 중장기 영향 모니터링(효과평가)을 위한
지표(안) ····· 190
〈부록 표 1〉 육아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1 ····· 256
〈부록 표 2〉 육아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2 ····· 257
〈부록 표 3〉 육아관련 서비스 이용 만족도 1 ····· 258
〈부록 표 4〉 육아관련 서비스 이용 만족도 2 ····· 260
〈부록 표 5〉 육아관련 서비스 이용 만족도 3 ····· 261
〈부록 표 6〉 육아관련 서비스 이용 인지도 1 ····· 263
〈부록 표 7〉 육아관련 서비스 이용 인지도 2 ····· 264
〈부록 표 8〉 가정 양육수당 증액에 대한 의견 ····· 266

그림 목차

[그림 Ⅰ-3- 1] 연구 진행 절차 ····· 27
[그림 Ⅰ-3- 2] 육아정책 성과 평가의 틀 ····· 28
[그림 Ⅰ-4- 1] OECD Child Well-Being 요소 ····· 44
[그림 Ⅱ-1- 1] 정책단계와 정책분석 및 평가 ····· 53
[그림 Ⅱ-2- 1] 육아정책 성과 평가의 틀 ····· 67
[그림 Ⅲ-1- 1] 각 년도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및 이용률 ····· 80
[그림 Ⅲ-1- 2] 국공립어린이집 신·증설 계획(안) ····· 83
[그림 Ⅲ-1- 3] 0~12세 공적돌봄체계 ····· 87
[그림 Ⅲ-1- 4] 다양한 초등돌봄서비스 현황 ····· 89
[그림 Ⅲ-1- 5] 온종일돌봄 공급 계획 ····· 90
[그림 Ⅲ-1- 6] 초등돌봄교실 운영 추이 ····· 91
[그림 Ⅲ-1-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 증가추이 ····· 96
[그림 Ⅲ-1- 8] 포용국가 아동정책 주요 추진과제 ····· 99
[그림 Ⅲ-1- 9]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 건강, 취약아동 보호 ····· 100
[그림 Ⅲ-1-10]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 체계 ····· 101
[그림 Ⅲ-1-11]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안) ····· 102
[그림 Ⅳ-1- 1] 육아정책 성과 평가의 틀 ····· 186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9년은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만 2년이 경과하는 시기로, 100대 국정과제를 비롯하여 정책의 추진 과정을 검토, 분석하여 그 실행력을 제고해야 할 시점임.

□ 이 연구는 2018년에 시작하여 2022년까지 수행하는 연속과제로, 현 정부의 육아정책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1차년도 연구(이윤진·양미선·김문정, 2018)에서는 육아정책의 범위를 유아교육과 보육 위주에서 확대하여 일·가정 양립의 저출산정책을 포괄하여 분석하였음.

□ 정부의 육아정책은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슬로건으로 하여 부모의 노동권과 육아권을 비롯한 아동의 행복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육아정책의 범주가 무엇이며 어떠한 정책과 사업까지 담고 이에 대해 모니터링 및 평가를 해야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며, 이는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됨.

□ 2018~2022년 육아정책의 분석과 과제(II)는 2년차 연구로서, 연구에서 다루는 ‘육아정책의 범위’와 ‘성과분석의 방법’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였음. 2019년 시점에 육아정책의 범주 하에서 무엇(어떤 정책)을 어떻게(평가의 틀과 지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를 담고자 함.

□ 이 연구는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2018년[1)]의 육아정책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향후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와 현황 대비 추진이 미약한 과제에 대한 제언을 함으로써 정부의 육아정책 실행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1) 부제가 ‘2018년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되어있음. 보고서 발간 시점(2019년 말)을 고려할 때, 2018년 정책의 성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한 시의적절성과 실제 연구 진행상의 어려움을 고려, 최종보고 워크숍 등에서 부제에 제시된 정책분석의 기간을 ‘2018-2019년’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2019년 연구에서는 2018년 정책 수행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의 계획과 목표 대비 구체적인 산출 또는 결과(output)와 그 성과(outcome)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육아정책의 실행이 미치는 향후 중장기 정책 영향(또는 효과, impacts)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안함.

나. 연구내용

□ 첫째, 육아정책의 범위를 1년차 연구의 내용과 주요 부처별로 수행한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육아정책의 목록을 (재)구조화 함.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육아정책의 범주를 저출산과 유아교육·보육·돌봄, 아동에 관한 3개 영역으로 구성함.

□ 둘째, 육아정책의 추진과제들에 대해 정책의 설계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 주요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육아정책의 영역과 단계를 고려한 성과평가를 제안함.

□ 셋째, 부처별 육아정책의 목록을 중심으로 주요 핵심과제(8개)에 대해 가용한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된 목표 대비 2018-2019년 9월 시점까지의 달성도(output)를 평가하고, 성과지표 항목을 담은 설문을 통해 수요자/전문가 조사 결과에 기초한 성과평가(outcome)를 실시함.

□ 넷째, 육아정책이 추구하는 상위의 목적과 보편적 지향을 담은 지표를 구성하여, 개별정책의 추진과 목표의 달성이 궁극적으로 육아정책의 중장기 효과(impacts)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살펴봄(정책의 중장기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 다섯째, 정책의 설계와 집행 및 결과와 중장기 효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근거하여 정책의 성과가 유의미한 부분과 미흡한 부분을 도출하고, 2019년 집권 3년차의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과 과제를 논의함.

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설문조사

-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 실시(최종 106인 참여)
- 전국 영유아 및 초등 1~3학년 자녀를 둔 부모 1,000명 대상 수요자 조사 실시(최종 1,013명 참여)

□ 심층면담

- 육아정책의 대상이 되는 수요자 집단(영유아 부모, 초등자녀 부모, 유치원 원장,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총 4회 실시

□ 전문가 협의

- 육아정책 분야 각 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책의 분석과 성과지표의 구성에 대해 협의

□ 정책효과 계량분석

- 저출산정책/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아동정책의 성과 수준에 어떠한 요인 및 정책경험이 영향을 주는지 본 연구의 설문응답 데이터를 분석함.

□ 연구의 틀

- 성과평가: 정책별로 제시된 구체적 계획과 세부목표가 연도별로 제시한 목표치를 달성했는지에 대해 단기적 정책 달성도를 평가하고, 이러한 계획 및 목표의 달성 여부가 미치는 정책의 성과에 대해 분석
- 중장기 영향 모니터링: 연도별 평가에 이어, 이러한 정책성과가 중장기적인 육아정책의 목적 달성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정책수행의 중장기 영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

라. 연구의 배경

□ 국내연구 및 주요 정책 고찰

□ 국외연구 및 주요 지표 고찰

□ 육아정책 현황 고찰

- 저출산정책, 유아교육, 보육, 돌봄 정책, 아동정책

2. 육아정책 성과분석의 대상 및 방법

가. 육아정책의 범주

□ 국정과제

□ 4대 복합·혁신과제

□ 육아정책 목록 재구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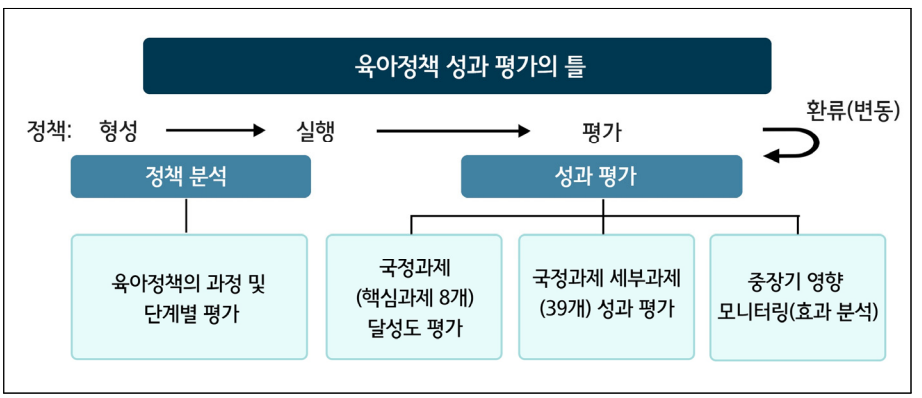
- 기존 저출산-유아교육-보육 정책으로 구성된 육아정책의 목록을, 저출산-유아교육·보육·돌봄-아동 정책의 3개 카테고리로 범주화 함.

나. 육아정책 분석 틀

□ 육아정책을 구성하는 상기 3개 범주에 해당하는 국정과제 중 (1) 핵심과제에 대한 달성도 평가에 이어, (2) 국정과제 세부과제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가 아닌 성과에 대한 평가로서 (3) 중장기 영향에 대한 보편적 지표에 근거한 응답을 분석함.

- 또한 정부의 육아정책의 수립과 설계, 추진과정 등 정책수행의 단계와 요소를 고려한 분석을 실시함. 이를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1] 육아정책 성과 평가의 틀



3. 육아정책 성과평가

가. 주요 국정과제 달성도 평가

□ 정부의 국정과제 중 육아정책 분야 핵심과제 8개에 대한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실행계획과 목표 대비 달성도를 평가함.

- 8개 핵심과제의 연도별 추진계획 및 목표 대비 달성도를 점검한 결과, 8개 과제의 실행 목표가 제도 도입과 확대 위주로 설정되어 있으며, 다수의 핵심과제가 연도별 계획대로 일정수준 이상 '달성'된 것으로 평가됨. 단,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와 유아 학습/휴식 시간 보장, 일·가정양립의 일상화에 대한 달성도는 미달성 또는 평가보류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연도별 실천계획이 ① 아동수당 제도 도입(달성), ② 국공립어린이집 및 국공립유치원 이용률(40%) 제고(달성), ③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미달성), ④ 온종일 돌봄체제 도입(아이돌보미 확충 및 질 관리를 통한 가정양육지원 여건 개선 포함)(어느정도 달성), ⑤ 일·가정 양립 일상화-(남성)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도입 달성), ⑥ 출산에 대한 사회책임 확립(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달성), ⑦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건강, 취약아동보호-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중앙지원체계 통합-아동권리보장원 설립)(달성), ⑧ 유아 놀이 보장-누리과정 개편(달성) 및 유아 학습/휴식시간 보장(달성도 평가 보류)으로 논의됨.
- 한편 제도의 도입과 인프라 등의 확대를 위해 설정한 실행 계획이 달성되었어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도의 도입과 기반 확대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평가와 효과분석은 다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나. 육아정책 성과평가(1)-전문가 조사 분석

□ 육아정책 국정과제(17개)에 대한 전문가 성과평가

- 국정과제 17개(하위과제 6개 포함)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을 질문한 결과, 7점 평균 3~4점대로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잘 못하는 편에 가까운 응답으로 나타남.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와 같이 구체적 성과달성이 드러나는 세부과제에 대해 (매우+어느정도) '잘하고 있다'는

긍정 응답 비율이 54.7%로 응답 과반을 넘은 유일한 항목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46.2%,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투자 강화' 43.4%,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40.6%,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여가부)' 39.6%로 약 40%대의 긍정 응답을 보임.

- 그 중에서도 '강력한 저출산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15.1%,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18.9%로 상대적으로 긍정 응답이 적게 나타남.
- 육아정책의 상위 목표인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 40.6%, 못하고 있다 39.6%로 7점 평균 4점의 '보통' 수준으로 평가됨. 한편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투자 강화', '온종일 돌봄의 실현'과 같은 국정과제에서 긍정적 평가가 어느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육아정책 국정과제의 중요도 및 실행수준 평가

- 육아정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상위의 목적에 해당하는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의 중요도 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실행력 측면에서 우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저출산정책의 경우 높은 중요도에 비해 구체적인 정책 추진과 실행이 미흡한 것으로, 특히 정책 추진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정책의 추진과 실행이 우수한 과제로는 교육부의 '공공성 강화' 정책 추진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정책 입안을 통해 구체적 성과가 드러난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가족 지원', 그리고 '돌봄 정책'의 추진과 '아동·가족 사회적 투자 강화'에 대해 평가가 우수하게 나타남.
- 교육의 공공성 강화의 정책 추진과 실행이 높게 평가된 것이 비해,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과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에 대한 실행과 추진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전문가의 경우, 저출산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에 대한 미흡 평가와 함께 교육정책 성과가 공공성 외 관점에서는 미흡하게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육아정책 분야별 국정과제 수행의 달성도 인식 평가

- 저출산분야 달성도 평가: '기타지원 확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다자녀 지원 등)'에 대한 달성도 평가가 긍정 응답률 72.6%(7점 척도 평균 5.1점)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의료비지원 강화'(70.8%), '양육지원체계 개편'(66.0%), '(취약계층 등) 포용적 가족정책'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에 대한 달성도 평가가 과반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응답됨.
- 아동수당의 도입과 연령 확대(21.7%), 저출산 패러다임과 전환(삶의 질 제고)에 대한 달성도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음.

- 유아교육·보육·돌봄 분야 달성도 평가: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67.0%, 7점척도 평균 4.9점)에 대한 긍정평가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 (60.4%), '놀이중심의 누리과정 개편'(57.5%)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과반 이상으로 나타남.
  -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31.1%)와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34.9%)에 대한 달성도 긍정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음.
- 아동 분야 달성도 평가: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개편하는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평가가 과반 이상의 긍정 응답을 보이며 높이 평가됨. 상대적으로 '부모의 육아행복감 증진'에 대한 달성도 평가가 저조하게 나타남.

□ 육아정책 성과 세부평가(1, 2순위 응답)

- 육아정책의 세부과제(39개)를 전문가에게 모두 제시하고 성과가 가장 큰 (즉 수요자 효능감이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 정책과제와 그렇지 않은 과제, 향후 우선적으로 집중해야할 정책을 1, 2순위로 응답하게 함.
- (성과가 우수한 과제) 그 결과, 가시적 성과가 우수한 정책과제로 '아동수당의 도입과 연령 확대',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가 각 25.5%, 20.8%로 가장 높게 나타남(1+2순위 중복응답 기준). 그 다음으로 '놀이중심의 누리과정 개편', '의료비 지원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순으로 나타남.
- (성과가 미흡한 과제) 세부과제 평가에서도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의 성과가 미흡한 과제로 응답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아동의 웰빙/행복',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부모의 육아행복감', '부모의 육아권 보장'의 순을 보임.
- (향후 우선집중 과제) 향후 우선 집중이 필요한 정책 과제로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삶의 질 제고'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아동의 웰빙/행복',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와 '부모의 육아행복감', 그리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의 순으로 나타남.

-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저조한 성과평가와 향후 우선집중과제라는 전문가 응답이 많았음을 알 수 있음.

□ 육아정책 평가

- 육아정책의 단계별 평가: 계획-실행·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 육아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는 7점 평균 4.0~4.2점으로 '보통'으로 나타남. 육아정책의 '계획 수립'에 대한 긍정 응답과 비교하여 정책의 '추진과 실행', '성과' 단계에 대한 긍정 응답률이 다소 떨어짐.
  - 정책의 계획 수립과 실행및추진, 성과의 3개 측면에서 '돌봄정책'에 대한 평가가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보육정책'과 '아동정책'에 대한 평가가 우수하게 나타남. '저출산정책'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저조함.
- 육아정책의 요소별 평가: 설계-의제-수행체계-투입요소-집행 평가
  - '정책의 내용과 구성'에 대한 평가가 7점 평균 4.9점으로 제시된 요소 중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정책 의제 설정'으로 당면한 사회적 이슈와 문제, 내재된 욕구를 잘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이를 실제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과 인력 등의 '투입요소와 수행/전달체계', 구체적인 정책 집행으로 '산출된 서비스 성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남. 남은 임기 동안 계획된 정책 내용과 의제를 구체적으로 추진, 실행하고 서비스로 산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프라와 전달체계의 정비가 요구됨.
- 육아정책의 평가요소별(9개) 평가
  - 전문가조사에서 정책 추진과 실행의 '노력'에 대한 평가가 가장 우수하게 나타난 가운데, 그 다음으로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적·포괄적 정책 설계와 추진'에 대한 긍정 평가가 과반이상으로 나타남. 이러한 '포괄성'은 '형평성' 요소 평가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영됨.
  - 반면 비용투입 대비 '효율성'과 구체적 정책 타겟 집단과 수요자 욕구 충족의 '대응성'과 '추진체계'에서는 긍정 응답이 적게 나타남.

□ 정책의 중장기효과 분석을 위한 지표별 현재수준 및 정책기여도 평가

- 국가-부모-아동-기관 영역으로 나누어 중장기 관점에서 육아정책이 추구하는 보편적 지표를 구성하고 살펴봄.
  - ‘기관’ 영역에 대한 현재 수준 긍정평가 응답이 61.4점(100점 환산)으로 4개 영역 중 가장 높이 평가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아동’-‘국가’ 영역의 순을 보임.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서비스 제공 기관 중심의 정책 평가가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그 간의 정책투입의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전반적으로 지표별로 당면한 ‘현재수준’에 대한 평가보다 해당 과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추진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남.

다. 육아정책 성과평가(2)-수요자 조사 분석

□ 2018-2019년 육아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성+정량) 평가를 위해 초등 3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국의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총 1,013명 참여).

□ 영유아서비스 이용률-만족도-인지도

- 부모들에게 이용 경험이 있는 육아 관련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약간+매우) 만족하였다’는 긍정 응답이 ‘유치원·어린이집 이용’에서 7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조부모/친인척돌봄’을 이용한 경우 만족도가 70.1%로 높았으며, ‘시간제보육’과 ‘(기관이용과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부모가 돌보는 경우’ 그리고 ‘반일제이상 서비스’ 이용 만족도가 각 63.4%, 63.7%, 62.1%로 높게 나타남.
- 영유아기 사교육과 사설놀이공간 이용률도 과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사교육과 사적놀이공간도 영유아 서비스 이용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줌.
- 전반적으로 취학전 영유아기 서비스 이용이 초등 시기에 비해 다양하고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남.
- 보편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에 대한 부모 인지도가 가장 높은 가운데, ‘아이돌봄’과 ‘산후돌봄’ 관련하여 공공 인력서비스와

민간 인력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비교적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 및 이용되고 있으나, 관련 서비스 인지도는 이용경험이나 접근성이 있는 이용자 위주로 제한되어 있음.

- 따라서 보편적 육아 지원 체계로서의 다양한 영유아 서비스 이용 기반(예: 인프라확충, 이용률)이 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수요자의 만족도과 육아지원에의 요구가 충족됨을 알 수 있음.

□ 초등 서비스 이용률-만족도-인지도

- 초등 방과후학교(87.0%)와 이를 포함한 초등돌봄 전반(76.8%)에 대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 한편 예체능 학원(80.5%)과 초등사교육(66.6%), 학습지, 온라인수강과 같은 학원 외 사교육(62.3%), 문화/오락/체험 활동(63.7%)에 대한 이용률도 고르게 높아, 초등 저학년의 사교육 프로그램의 이용이 일정 수준 보편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초등돌봄교실(42.8%)과 온종일돌봄(2.5%)과 같은 구체적인 돌봄서비스의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기타 인프라(공공기관/센터/기관 등)에 대한 초등 저학년 아동의 이용률은 36.5%, 지역아동센터 이용률은 4.2%로 나타남.
-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돌봄의 저변 확대와 인프라 강화에서 학교 중심의 초등돌봄교실의 이용률이 2019년 시점 응답가구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현황을 보임.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돌봄인프라 강화 정책은 현재 드러나는 초등 돌봄서비스의 이용과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간의 불균형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초등서비스 이용 '만족도'의 경우, 초등돌봄교실과 초등방과후학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만족도가 모두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돌봄서비스 이용 전반과 기타 공공인프라에 대한 만족도(68.3%, 62.8%)에도 반영되어 있음.
- 온종일돌봄에 대한 만족도는 44.4%로 다른 초등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에 비해 다소 낮음.
- 초등 사교육의 경우, 예체능학원(65.1%)과 문화/오락/체험 활동(64.9%)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그 외 학습 위주의 사교육 만족도는 50% 내외 수준으로 나타남.
- 초등 돌봄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이 초등 돌봄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예:

돌봄 공백 해소, 교육력 제고)를 충족할 경우 공-사 서비스 이용과 선택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현금-시간-건강 지원 제도: 이용률, 인지도, 이용의향

- 육아지원을 구성하는 정책 중, '의료비지원'과 '시간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과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현금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인지도와 수혜율, 향후 이용의향이 높은 것과 달리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임.
- '시간지원'과 '의료지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용률(수혜율)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반면, '현금지원'의 경우 높은 이용률 대비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국정과제 수행에 대한 수요자 성과평가

- 전반적으로 (어느정도+매우) '잘 하고 있다'는 긍정 응답률이 10% 이하로 나타나 국정과제별로 체감하는 수요자 부모의 평가는 평균 '못하는 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과가 우수한 과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의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가장 우세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투자 강화'로 나타남(1+2순위 중복응답 기준).
- (성과가 미흡한 과제) 성과가 미흡한 정책과제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아, 이는 성과가 우수한 과제임과 동시에 미흡한 과제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과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에 대한 응답이 많아, '육아친화적이고 행복한 육아 환경 조성'에 대한 응답과 함께 '저출산정책의 효과와 컨트롤타워 기능'에 대한 성과평가가 전문가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요자에서도 미흡한 과제로 나타남.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대해 미흡하다는 응답률도 높은 편임.

□ 국정과제 추진 달성도 평가

- (저출산정책) '아동수당의 도입과 연령 확대'에 대한 응답이 46.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의료비 지원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양육지원체계 개편'이 약 30% 내외로 높게 나타남.

- ‘저출산 패러다임의 전환: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와 ‘부모의 노동권 보장’, ‘육아권 보장’, ‘종합적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에 대한 달성도 평가는 10%대의 응답률을 보여 상대적으로 낮음.
- (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 (저출산정책과 달리) 전반적으로 20% 내외로 비교적 고른 긍정 응답을 보임. 그 중에서도 ‘놀이중심의 누리과정 개편’과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의 질 강화’,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 ‘육아지원의 확대’,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긍정평가가 많았음.
- 긍정 응답률이 낮았던 정책과제로 ‘취학전 출발선 평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과 돌봄 서비스’, 그리고 ‘사립/민간 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와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의 확대’, ‘양육비 부담 완화’가 나타남.
- 양육지원의 개선 과제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와 ‘양육비 부담 완화’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가 여전히 높게 나타난 가운데, ‘출발선 평등’과 ‘사립/민간 기관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아동의 놀이시간 확보’에서 실질적 성과가 부재한 것으로 수요자 평가가 나타남.
- (아동정책) 세부과제 달성도 평가는 전반적으로 10%대로 앞서 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 응답과 차이를 보이며 낮게 나타남.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양육 참여’ 정책의 달성도에 대한 긍정평가가 21.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아동의 권리보장(4영역)’에 대한 긍정 평가가 많음. ‘부모의 육아행복감’과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개편’에 대한 긍정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남.
  -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공표되어 아동권리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아동정책’의 구성과 실행에 대한 인식이 수요자 부모에서 낮은 수준을 보임.

□ 육아정책분석- 요소별 평가

- ‘돌봄정책’과 ‘보육정책’의 성과에 대한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긍정 응답도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상대적으로 ‘아동정책’과 ‘저출산정책’에 대한 수요자 성과 인식은 다소 저조하였음. 이는 정책 인지도 결과와 유사함.

라. 정책효과 계량분석

□ 수요자 부모 대상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계량분석을 통해 정책 성과 분석을 실시함.

- (정책성과분석 모형) 정부의 육아정책을 저출산정책/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아동정책으로 나누어 각각의 성과 수준에 대하여 설문 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 정책의 성과 수준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지 분석함. 종속변수로 사용된 정책의 성과수준은 순위 만족도(전혀 잘 되지 않았다/잘 되지 않았다/보통/잘 됐다/매우 잘 됐다)로 조사됨에 따라 순서화 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음.
  : 종속변수-저출산, 유아교육, 보육, 돌봄, 아동 정책에 대한 성과 수준
- (정책성과분석 결과) 시간지원 정책 이용경험, 막내자녀연령이 육아정책의 범주별 성과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각 정책들과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 연령, 가구 월평균 소득은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육아정책의 범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용경험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현금지원을 받은 경우' 정책의 성과평가와 달성도평가가 '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시간지원'과 '건강/의료지원'의 경험은 정책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시간지원은 '맞벌이가구'를 지원하는 일·가정양립의 긍정효과를 유의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음.
- 보편적 현금지원이 갖는 정책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중장기 데이터를 활용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예: 정책목표 대비 양육부담 경감 및 아동발달지원). 수요자가 체감하는 성과평가와 달성도평가 결과에 의하면 현금지원의 효과가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반면에 시간지원과 건강/의료지원(그리고 제한적이나 돌봄 및 교육정책 이용)의 경험은 관련 정책의 성과평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간지원과 의료지원, 돌봄정책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현금지원의 정책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다층적인 분석이 필요함.

4. 제언

성과평가의 틀에 근거하여 국정과제 성과평가와 육아정책의 과정과 요소를 고려한 정책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선 과제와 전략을 제시함.

□ 국정과제 성과평가에 근거한 제언

- 시간지원의 실행력 강화–시간지원 수혜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보완
- 현금지원의 면밀한 효과성 검증과 현금 - 서비스 지원 간 다층적 설계
- (취학전 영유아기 대비) 초등 시기 다양한 수요 충족과 양질의 우수한 프로그램 및 환경 공급 중요.
- 미래세대의 가치와 지향을 담아내는, 육아정책의 비전과 어젠다 제시

□ 정책 단계와 요소를 고려한 정책분석 결과에 근거한 제언

- 저출산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및 집행/전달체계 개선: 중앙 - 지방정부의 역할 설계, 주요 육아지원의 인프라 확충과 전달체계 정비
- 저출산정책의 재구조화: (4차 기본계획 등) 정책 구성의 차별성 확보
- 온종일돌봄체계와 국공립기관 확대 추진 방식에 대한 재고
- 육아정책의 설계와 추진 과정에서의 소프트파워 강화: 정책 수행 및 전달 과정의 질적 전략의 중요성
- 포용정책 성과를 위한 육아지원 정책대상집단의 확대 지속
- 지역간 격차, 사교육 이용, 인프라 문제를 적극 고려하는 육아정책의 추진

I

서 론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2 연구내용

03 연구방법

04 연구의 배경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9년은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만 2년이 경과하는 시기로, 100대 국정과제를 비롯하여 정책의 추진 과정을 검토, 분석하여 그 실행력을 제고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2018년에 시작하여 2022년까지 수행하는 연속과제로, 정부의 육아정책 이행과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윤진·양미선·김문정, 2018). 첫 번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의 범위를 유아교육과 보육 위주에서 확대하여 일·가정양립의 저출산정책을 위주로 포괄하여 분석하였다(이윤진 외, 2018).

정부의 육아정책은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슬로건으로 하여(이윤진 외, 2018: 3;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8. 7. 5), 부모의 노동권과 육아권을 비롯하여 아동의 행복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9a). 그간 정부의 육아정책은 저출산의 패러다임 전환과 양육지원체계의 개편, 돌봄체계의 구축 등 큰 틀에서 제도적 구축과 변화를 적극적으로 꾀하여 왔으며, 정책 실행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아동과 가족, 일·가정양립 등을 대상과 목표로 하는 정책을 위주로 하는 가운데 유아교육과 보육, 아동복지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육아정책이 포괄하는 범위는 상당히 넓다. 정부는 분야별로 정책 목표를 수립하여 주요 부처별로 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부처간 국정과제 수행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9a).

육아정책은 증가하는 중요도와 함께 매우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육아정책과 양육지원정책은 유사한 내용을 다루지만, 육아정책으로 불리울 때 관련된 대상과 주체, 육아라는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광의의 포용성과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럴 때 육아정책은 어떠한 범주를 가지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과 사업까지 담고, 이에 대해 모니터링 및 평가를 해야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며, 이는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된다.

2018~2022년 육아정책의 분석과 과제는 2년차 연구로서, 연구에서 수행해야 할 '육아정책'의 범위와 평가방법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고 있다. 즉 2019년 시점에 육아정책의 범주 하에서, 무엇(어떤 정책)을 어떻게(분석틀과 성과지표 등)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육아정책을 저출산과 양육지원, 유아교육과 보육, 아동복지의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보편적인 기준과 지표에 근거하여 접근할 것인지, 정부에서 제시한 국정과제와 주요 부처별 계획의 정책 목표치를 중심으로 달성 여부를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육아정책에는 정책 구성 전반에 대한 분석과 함께 심층분석을 요하는 정책 현안 과제가 있으며, 방법론에서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는 성과지표의 구성이 객관적(예: 계량적 성과목표) 또는 주관적(예: 개인의 인지적 판단)인지, 결과지향적인지(예: 효율성 측정)에 따라 다르게 되며, 측정 가능한 지표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로 한다(김영록, 2011).

2019년의 육아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출산율이 0.98명, 연간 출생아 수 32만명으로 저출산의 대세 하락세가 공고해지고 있으며(통계청 보도자료, 2019. 8. 28),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기피와 어려움에 대한 호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적 이유 등으로 비혼과 비출산이 젊은 세대에 합리적인 선택과 가치관으로 그 비중을 키워가고 있다. 정부의 육아지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육의 어려움과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과 서비스의 부족, 사립/민간 위주의 기관 인프라, 종합적 육아지원 인프라의 부족은 지속되고 있다. 정보와 개별 서비스에 대한 이용 수요 증대, 아동학대의 발생, 아동의 상대적으로 낮은 행복감과 놀이시간의 부족, 경쟁적인 교육 위주의 양육·교육과정으로 인한 양육비의 부담, 취약계층의 출발선 평등 저해 등 산적한 이슈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육아지원의 체계는 아동수당의 도입과 육아휴직과 시간지원 등의 일·가정양립 정책,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대, 돌봄체계의 강화 등 주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출범이 만 2년이 경과하고 주요 대응체계로서의 정책 추진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8년 정책 수행을 중심으로 현재의 육아정책에 대한 분석과 향후 과제를 도출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3년차에 접어든 정부의 육아정책의 추진을 정책의 과정(설계-집

행-결과-성과)에 대한 단계적 접근을 고려하여, 각 과정에 필요한 분석과 평가를 전체 평가의 틀로 구성하였다. 제시된 목표 대비 (단기) 성과 위주의 점검에서 나아가 정책의 구성과 설계에서부터 중장기 효과와 영향력에 대한 점검과 평가로 이어지도록 제안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의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 시 정책의 조정과 대안 모색에 기여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2018년의 육아정책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향후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와 현황 대비 추진이 미약한 과제에 대한 제언을 함으로써 정부의 육아정책 실행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2019년 연구에서는 2018년 정책 수행을 중심으로 정책 계획과 목표 대비 구체적인 산출 또는 결과(output)와 그 성과(outcome)[1]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논의하며, 이를 토대로 향후 중장기 정책 영향(또는 효과, impacts)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 수행할 육아정책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정책의 범위를 1년차 연구내용과 주요 부처별로 수행한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육아정책의 목록을 (재)구조화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육아정책의 범주를 저출산과 유아교육·보육·돌봄, 아동에 관한 내용 영역으로 구성한다.

둘째, 상기한 육아정책의 추진과제들에 대해 정책의 형성과 설계에 대한 분석을 하고 주요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틀에 대해 검토하며, 이로써 육아정책의 영역과 단계를 고려한 성과평가를 제안한다.

셋째, 부처별 육아정책의 목록을 중심으로 주요 핵심과제(8개)에 대해 제시된 목표 대비 2018-2019년 9월 시점까지의 달성도를 평가하고, 전문가 의견과 가용한 자료와 수요자/전문가 조사결과에 기초한 연구진 분석을 통해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1) 이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출/결과(output)와 성과(outcome) 평가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음.

넷째, 육아정책이 추구하는 상위의 목적과 보편적 지향을 담은 지표를 구성하여, 개별정책의 추진과 목표의 달성이 궁극적으로 육아정책의 중장기 효과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장기적 영향 및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다섯째, 단계별로 정책의 설계와 집행 및 결과와 효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근거하여 정책의 성과가 유의미한 부분과 미흡한 부분을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2019년 집권 3년차의 정부의 육아정책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과제를 논의한다.

3. 연구방법

가. 문헌 분석

육아정책에 대한 분석과 성과평가를 다룬 국내외 연구와 정부 보고서, 자료 등을 고찰하여, 정책 성과평가에 필요한 정책의 범주와 성과지표에 관한 내용을 도출한다. 공표된 정부 자료와 가용한 연구내용을 활용하여 육아정책을 평가한다.

나. 설문 조사

설문조사는 크게 2가지로, 첫째, 2018년에 수행한 육아정책의 범주(심층분석 과제 선정 포함)와 이에 대한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와 분석의 틀 구성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약 100명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개발 과정에서 유아교육과 교수 1인과 아동학과 교수 1인의 설문 검토 과정을 거쳤다. 전문가 설문의 경우 최종 106인의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응답자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참여 비율로는 유아교육/교육학 전공 교수가 43.4%로 가장 많았고, 아동/가족/보육 34.0%, 사회복지/정책/경제/기타 22.7%로 나타났다. 분석은 전체 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필요한 경우 유아교육/교육 분야(총 46인), 아동/보육/가족 분야(총 36인), 사회복지/행정/경제/기타 분야(총 24인)의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Ⅰ-3-1〉 전문가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사회복지	11	10.4	가족	5	4.7
정책/행정	5	4.7	아동	22	20.8
유아교육/교육	46	43.4	경제	6	5.7
보육	9	8.5	기타	2	1.9
			계	106	100.0

전문가 대상 설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먼저 육아정책의 성과평가에 앞서, 본 연구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제기된 육아정책의 범주에 대한 재고찰의 필요성에 동의하여, 첫째, '육아정책의 범주와 구조화'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둘째, 문재인정부의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를 추리고 이에 대한 수요자 부모 및 전문가 집단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세부항목은 〈표 Ⅰ-3-2〉 및 〈부록 1〉, 〈부록 2〉와 같다.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평가에 이어 셋째, 육아정책 전반 및 하위범주별(저출산-유아교육·보육·돌봄-아동 정책)로 정책의 수립과 실행, 집행체계, 성과에 이르는 정책 요소 및 단계별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현 시점 2018년에 수행한 육아정책의 중장기 효과에 대한 분석은 불가능하나, 넷째, 5년 연속과제로서 정부의 육아정책의 수립와 실행이 육아정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지향하는 주요 지표와 어떠한 연관을 가지며 영향을 주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기 위해 (중장기) 효과분석을 위한 주요 지표를 제시하고 현 수준에 대한 인지와 여기에 육아정책의 수행이 기여한 정도를 조사하였다.

〈표 Ⅰ-3-2〉 전문가 설문조사 항목

조사 영역	세부 조사항목
Ⅰ. 육아정책의 범주/내용구성	• 육아정책 범주와 분류의 적절성 평가
Ⅱ. 국정과제 성과평가 - 육아정책 전반 및 범주별	• 육아정책 관련 정부 국정과제 성과 평가 • 문재인정부의 육아 관련 국정과제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 • 문재인정부의 육아 관련 국정과제 중 실행이 가장 잘되었다고 평가하는 항목 • 문재인정부의 육아 관련 국정과제 중 실행이 가장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항목 • 정부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수립, 실행, 성과 관련 전반적 평가 • 정부 육아정책별(저출산정책/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아동정책) 추진 목표 달성도 평가 • 정부 육아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 과제 • 정부 육아정책 중 성과가 가장 미흡한 과제 • 정부 육아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집중해야 할 정책

조사 영역	세부 조사항목
Ⅲ. 육아정책 분석 및 평가: 정책의 계획-실행-수행 체계-산출-성과에 대한 평가	• 육아정책의 계획 수립에 대한 평가(육아정책 전반, 육아정책 실행 및 추진, 구체적 정책 설계, 정책의제평가, 수행 및 전달 체계) • 정책 투입 요소 평가, 정책 집행 평가, 정책 성과 평가, 평가요소별 평가 • 정책 효과평가-정책의 중장기 영향 평가(국가-부모-아동-기관 수준별) • 육아정책에서 조정하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 및 해당 전략

둘째, 육아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위해 정량 및 정성 평가에 필요한 이용률, 인지도, 만족도, 이용의향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전국 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용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책의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지표와 내용을 위주로 주관적 판단 외에 이용률과 인지도,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전국 영유아 및 초등 1~3학년 자녀[2]를 둔 부모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최종 1,013명 참여).

〈표 Ⅰ-3-3〉 수요자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계(수)	구분	계(수)
전체	100.0(1,013)		
성별		응답자 최종학력	
남성	37.6(381)	고졸 이하	12.8(130)
여성	62.4(632)	대졸이상	87.2(883)
지역 구분		연령	
대도시	22.0(223)	20대	5.0(51)
중소도시	56.3(570)	30대	71.2(721)
읍·면	21.7(220)	40대 이상	23.8(241)

〈표 Ⅰ-3-4〉 부모 설문조사 항목

조사 영역	세부 조사항목
Ⅰ. 응답자 특성	• 응답자 연령, 성별, 혼인상태, 취업상태, 거주 지역, 월평균 소득 • 자녀 수 및 자녀 연령, 동거가족 구성원 • 기초생활수급 및 법정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 다문화가족 및 한부모가족 여부 • 월평균 가구소득 및 월평균 자녀양육비용

2) 육아정책의 대상은 아동, 부모, 기관 등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 대상으로의 아동의 연령 범위를 임신기부터 초등 3년까지로 봄.

조사 영역	세부 조사항목
Ⅱ. 육아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 인지도, 만족도, 이용의향 등	• 영유아 대상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불만족 이유, 인지도, 미이용 이유, 정책 제언 • 초등학교 아동 대상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불만족 이유, 인지도, 미이용 이유, 정책 제언 • 부모 대상 서비스 이용 경험 및 향후 이용 의향, 만족도, 불만족 사유, 인지도, 미이용 이유, 정책 제언 • 추가 출산 계획 및 출산 지원 이용 의향 • 육아 관련 제도 변경에 따른 이용 계획 변동 유무
Ⅲ. 육아정책 국정과제 성과평가 및 정책분석	• 국정과제 관련 정부 수행정도 체감 평가 • 문재인정부에서 성과가 가장 우수한 육아정책 • 문재인정부에서 성과가 가장 미흡한 육아정책 • 문재인정부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의 실행과 성과 평가 • 정부 육아정책별(저출산정책/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아동정책) 추진 목표 달성도 (체감) 평가 • 문재인정부 육아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집중해야 할 과제 • 문재인정부 육아정책 중 인지도, 성과 수준, 내용과 구성, 의제 반영 정도, 서비스 산출 정도 평가 • 항목별 육아정책 실행이 기여한 정도 • 정책 효과평가-정책의 중장기 영향 평가(국가-부모-아동-기관 수준) • 문재인정부의 육아정책에서 가장 잘 된 부분, 미흡한 부분, 가장 중요한/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부분

다. 심층 면담

육아정책에 대한 정성평가의 일환으로 정책의 대상이 되는 수요자 집단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 기존 데이터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나지 않는 정책 수행 과정의 경험과 내용, 배경 정보를 도출하였다. 정책에 대한 인식 및 만족/불만족 요인 등을 통한 정책 평가와 함께, 정책 수행에의 제언과 의견을 담았다.

심층면담의 대상은 우선 자녀 연령별로, 임신출산기 및 영유아자녀를 둔 부모,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직원 및 돌봄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대상자 특성과 세부 면담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Ⅰ-3-5〉 부모 대상 심층면담: 피면담자 특성

구분	피면담자 특성					
	이름	거주 지역	맞벌이 여부 및 근로형태	자녀 수	자녀 연령/학년	자녀 이용 기관
영유아 부모 대상 면담	A	경기	맞벌이(시간제)	1명	만2세	어린이집
	B	경기	맞벌이(학생)	3명	만6세, 만4세, 만1세	반일제기타, 어린이집, 가정보육
	C	경기	맞벌이(전일제)	2명	만4세, 만1세	어린이집, 어린이집
	D	경기	외벌이	1명	만2세	가정보육
	E	경기	외벌이	2명	만4세, 만1세	어린이집, 어린이집
초등 부모 대상 면담	F	서울	맞벌이(시간제)	2명	초등 3학년, 초등 1학년	초등학교
	G	서울	외벌이	1명	초등 4학년	초등학교
	H	서울	맞벌이(휴직중)	2명	초등 4학년, 초등 2학년	초등학교
	I	서울	외벌이	2명	초등 1학년, 만4세	초등학교, 유치원
	J	서울	맞벌이(시간제)	2명	초등 1학년, 만5세	초등학교, 유치원

〈표 Ⅰ-3-6〉 기관 원장 대상 심층면담: 피면담자 특성

구분	피면담자 특성						
	이름	직위	소재지역	유형	현원/정원	교직원 수	운영시간
어린이집 원장 대상 면담	K	원장	서울 서초구	국공립	56/57	11	7:30~19:30
	L	원장	서울 마포구	국공립	73/79	16	7:30~19:30
	M	원장	서울 노원구	민간	42/44	9	7:30~19:30
	N	원장	서울 구로구	민간	69/77	11	7:30~21:30
	O	원장	경기 시흥시	가정	20/20	7	7:30~19:30
유치원 원장 대상 면담	P	원장	서울 성북구	사립법인	6/140	11	9:20~19:00
	Q	원감	서울 동대문구	공립병설	4/81	9	09:00~19:30
	R	원장	서울 강남구	공립단설	8/153	23	09:00~20:00
	S	겸임교수 (前원장)	-	-	-	-	-

〈표 Ⅰ-3-7〉 부모 대상 면담 내용

면담 영역	세부 면담 내용
Ⅰ. 응답자 일반 특성	• 응답자 자기 소개, 부모 근로 형태 및 맞벌이 유무, 자녀 연령 및 양육 현황 • 부모 및 자녀의 하루와 1주일 일과
Ⅱ. 주요 면담 내용	• 자녀 육아 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만족을 느끼는 부분 • 이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체감하는 부분 • 이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 이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추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 주요 육아정책 인지 여부, 만족도, 각 정책에 대한 평가 • 정부의 육아정책에 대한 의견, 제안하고 싶은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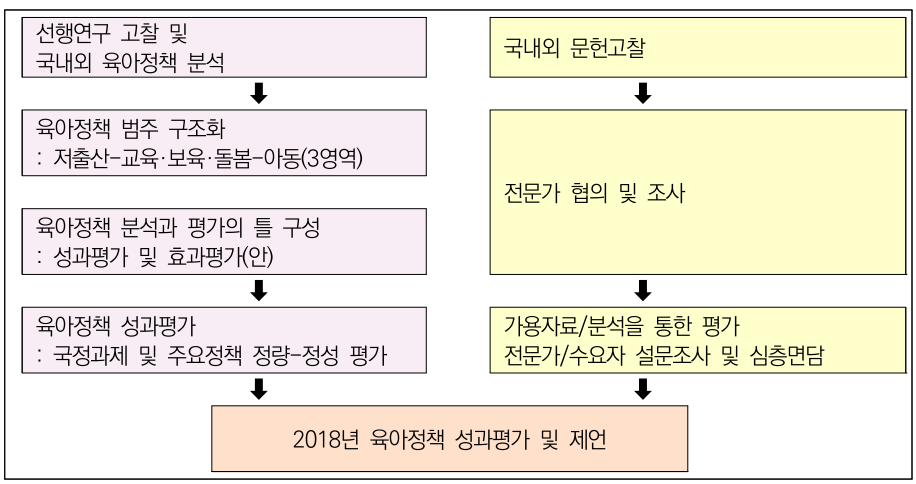
〈표 Ⅰ-3-8〉 원장 대상 면담 내용

면담 영역	세부 면담 내용
Ⅰ. 응답자 일반 특성	• 응답자 자기 소개, 기관 설립 유형, 규모(현원/정원, 교사 반 편성, 운영시간), 운영 특성 등 전반적 기관 운영 현황
Ⅱ. 주요 면담 내용	•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에 대한 생각, 평가(저출산정책/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아동정책 등) • 이번 정부 정책의 수립과 실행으로 체감하는 가시적인 변화 • 이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체감하는 부분 • 이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 이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추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 이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변화와 조정이 필요한 부분 • 주요 육아정책(저출산정책/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아동정책 등) 인지 여부, 만족도, 각 정책에 대한 평가 • 정부의 육아정책에 대한 의견, 제안하고 싶은 정책

라. 전문가 협의회

육아정책 분야의 저출산, 아동, 가족, 복지, 교육, 보육, 경제, 고용, 정책 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관련 정책의 분석과 성과지표의 구성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협의하였다. 정책범주의 구성, 성과지표의 체계, 정책분석 및 평가의 과정에 대해 전문가 협의를 통해 단계별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이로써 의미있는 정책분석과 평가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 설정, 정책 제언에 대해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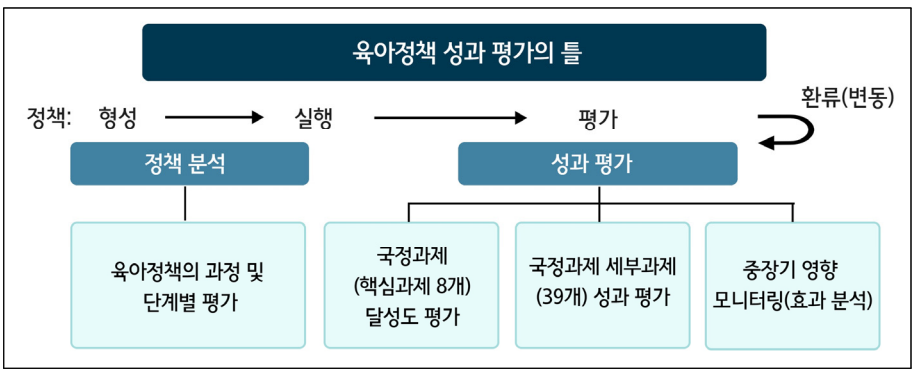
[그림 Ⅰ-3-1] 연구 진행 절차



마. 연구의 틀-정책분석 및 성과평가 제안

연속과제(2018~2022년)로 수행되는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의 틀로서 정책수행의 과정과 단계를 고려하여, 사회적 이슈로부터 정책의 의제가 구성되고 정책의 내용이 결정되는 정책의 설계와 목표설정, 추진체계 등에 관한 '정책분석'과, 정책 실행을 통해 나타나는 구체적 성과에 관한 '성과평가'의 두 축으로 나누어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제안하고 실시하였다[3]. 과정별로 중첩 반복되는 지점이 있어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나, 정책의 진행 과정을 고려하여 정책에 대한 분석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담고자 하였다. 다만, 2019년 본 연구에서는 정부 출범 이후 중간 시점임을 고려하여, 국정과제 중심의 육아정책의 성과평가를 위주로 진행하였음을 밝혀 둔다.

[그림 Ⅰ-3-2] 육아정책 성과 평가의 틀



1) 정책분석

1차년도 연구에서 구성한 육아정책의 범주에 현 정부에서 새롭게 제시한 아동정책을 반영하여, 육아정책의 범주를 [저출산-유아교육·보육·돌봄-아동 정책]으로 하고 정책 주체 및 대상별로 구성하였다. 정책분석을 통해 제시된 정책 내용 구성의 적절성과 합리성에 대해 연구진 의견과 전문가 자문,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정책분석을 연구과정에 담고자 하였다.

3) '권기헌(2010). 정책분석론. 박영사' 참조

2) 성과평가[4)]

정책별로 제시된 구체적 계획과 세부목표가 연도별로 제시한 목표치를 달성했는지에 대해 단기적 정책 달성도를 평가하고, 이러한 계획 및 목표의 달성 여부가 미치는 정책의 성과와 중장기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전자의 구체적 계획 달성과 후자의 정책 성과평가 및 장기적 효과 모니터링은 단기목표 달성에 관한 ① 가용한 양적 데이터와 ② 전문가/수요자 설문조사 결과, ③ 계량분석에 근거하여 실시하였다.

가) 정책 성과평가

당해연도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정책수행의 주체인 부처별 그리고 내용별 구분에 의한 육아정책의 범주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육아정책을 관장하는 주요 행정체계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그리고 돌봄정책과 관련된 여성가족부의 일부 정책을 육아정책의 범주로 목록화 하고 실행 주체별로 제시된 목표치 대비 이행과정과 성과를 평가한다.

나) 중장기 영향 모니터링: 육아정책의 상위목적 및 주요지표에 의한 평가

개별 정책 목표의 달성이 육아정책이 추구하는 상위의 목적과 궁극적인 지향(예: 출산율 제고, 삶의 질 보장, 육아행복, 아동웰빙 등)을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는다. 즉 미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육아의 환경과 서비스 질의 개선과 같은 상위목적의 달성은 체감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제시된 연도별 평가에 이어, 이러한 정책성과가 중장기적인 육아정책의 목적 달성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는 정책수행의 중장기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여기에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그 간의 육아지표연구 및 보육·유아교육 성과와 과제에서 사용한 주요 지표[5)]와 국외자료를 참조하고, 이를 2018~2022년 정책 어젠다에 맞게 수정 반영하였다. ECEC(Early Childhood Ecuation and Care: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에서 추구하는 보편적 지표인 서비스의 질(quality),

---

4) 학계에서는 정책분석과 정책평가, 성과분석과 성과평가, 효과평가가 광의의 그리고 협의의 관점에서 유사한 의미로 사용됨(예: 권기헌, 2010; 김영록, 2011). 이 연구에서는 국정과제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정책에 대한 분석과 중장기 모니터링(효과)까지 고려하는 평가의 틀을 제시하고 2019년 연구에 반영하고자 함.

5)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2010~2015)', '유아교육의 성과와 과제(2010~2015)', '한국의 육아지표(2007)' 참조.

이용률/이용시간/접근성(quantity/access), 비용지불 및 비용지원(affordability), 형평성(equity), 아동의 성장·발달(developmental outcome) 등과 OECD 5개 정책수단인 질관리체계, 커리큘럼, 교직원의 전문성, 부모/지역사회 참여와 연계, 데이터와 연구 및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고려하였으며(OECD, 2012; OECD, 2017a), 현재의 정책 상황에 맞지 않는 지표는 삭제하거나 보완하였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수당의 보편적 도입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율과 아동1인당 보육예산의 지표는 정책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표 Ⅰ-3-9 참조).

〈표 Ⅰ-3-9〉 육아정책의 목적 대비 정책평가 지표(안)

평가 영역/항목	
국가수준	출산율
	접근성(access, diversity)
	재정
	삶의 질
부모대상	양육비용(affordability)
	서비스의 질
	양육역량 및 가정환경
아동대상	형평성(equity)
	웰빙 및 발달성과 (learning or developmental outcome)
기관관점	서비스의 질(quality, pedagogy)
	공공성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달성도 평가와 함께 전문가와 정책의 최종 수혜자인 수요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정책과정의 단계와 요소를 담은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단계별로 성과의 과부족과 갭(gap)을 탐색하고 육아정책의 상위 지표의 달성에서 간과된 부분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정책의 조정과 달성에 유의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연속과제로서 연도별 연구 진행을 통해 정책분석과 평가의 제 영역을 실시하고 연도별로 평가 내용과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이를 통해 바람직한 정책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4. 연구의 배경

가. 선행연구

육아정책의 분석에 관한 국내외 연구는 다양한 가운데, 최근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평가와 분석을 다룬 연구는 제한적이다. 관련 분야의 최근 연구내용을 성과지표의 구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2, 3장으로 이어지는 육아정책 목록 재구조화와 주요 핵심과제 및 관련 정책의 성과지표 도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1) 국내연구

가) 1차년도 연구 결과(2018)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는 총 5차년도 연속과제로서,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육아정책들 중에서 향후 본 연구에서 지속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할 육아정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 정책 수요자들의 의견 및 정책 추진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이윤진 외, 2018: 1).

이윤진 외(2018)의 1차년도 연구에서는 현 정부의 육아정책 중에서 향후 5년간 지속적이고 심층적으로 다룰 육아정책을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 선정하여, 이에 대한 정책 수요자들의 의견을 파악하였다(이윤진 외, 2018: 2). 전문가들에 의해 선정된 15대 핵심 육아정책은 다음 〈표 Ⅰ-4-1〉과 같다.

〈표 Ⅰ-4-1〉 2018년 연구 15대 핵심육아정책 목록: 육아분야 전문가 조사 결과

분야	핵심정책과제
저출산정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및 일·가정 양립제도 재원 확보방안 마련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누리과정 국가 책임 확대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 달성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만0~5세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출산·양육 친화적 세제 개선
	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 돌봄체제 도입
	공공보육 이용 아동비율 40% 달성

분야	핵심정책과제
유아교육정책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한 국가책임 강화
	건전한 사립유치원 육성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
보육정책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자료: 이윤진 외(2018).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Ⅰ). 육아정책연구소, p. 89.

일반국민, 원장교사 모두 일·가정양립의 일상화의 하위과제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및 일·가정양립제도 재원 확보 방안,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의 3개 과제가 중요도에서 상위 3순위를 차지하였다. 이로써 육아와 노동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각 목표별위계별 1순위 중요도가 일관되게 나오지 않음에 따라, 현 정부의 저출산 복합혁신과제의 체계를 재조직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하였다(이윤진 외, 2018).

〈표 Ⅰ-4-2〉 2018년 연구 선정 복합혁신과제 중요도 결과-요약표

중목료	세부목표	핵심정책과제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일·가정 양립 일상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및 일·가정 양립제도 재원 확보방안 마련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누리과정 국가 책임 확대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 달성
자녀 출산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보육정책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투자 강화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만0~5세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출산·양육 친화적 세제 개선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 돌봄체제 도입
		공공보육 이용 아동비율 40% 달성

자료: 이윤진 외(2018).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Ⅰ). 육아정책연구소, p. 8.

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평가(2007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4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매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본 성과지표에 따른 평가의 목적은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취합하고 검토하여, 수정·보완이 완료된 추진실적(목표달성률, 예산집행률)을 분석하고 평가 후 성과평가 결과를 해당 부처에 통보하여 향후 시행계획에 환류하는 데 있다(이소영·백혜연·변수정·장인수, 2018). 매년 이루어지는 성과평가 결과는 국회에 보고되며, 중앙부처의 예산 심의 자료로도 활용된다(이소영 외, 2018).

2007년 3월, 처음으로 제1차 기본계획 성과지표가 마련되었고(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 5. 29), 2009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성과평가에서 성과지표를 간명하게 하였으며 지수화 작업을 실시하였다(이소영 외, 2018: 4). 2016년에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가 마련되어, 2018년에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른 중앙부처의 2017년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이소영 외, 2018: 5).

2017년 시행계획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 대상 과제는 다음 〈표 Ⅰ-4-3〉과 같다. 이 중 저출산 분야 과제는 45.4%로 나타났다.

〈표 Ⅰ-4-3〉 2017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대상(기본계획)

구분	평가대상 과제 수	성과지표 부재	2017년 목표 부재	달성도 산출 불가	최종 평가 과제 수
전체	196	1	4	2	189
저출산 분야	89	0	1	0	88
고령사회 분야	99	0	3	2	94
대응기반 강화 분야	8	1	0	0	7

자료: 이소영 외(2018). 2017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p. 5.

한편 2017년 중앙부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과제 및 예산 현황은 다음 〈표 Ⅰ-4-4〉와 같다.

〈표 Ⅰ-4-4〉 2017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예산(기본계획)

구분	분야	과제 수		예산(억원)	
총계		196		384,030	
저출산	결혼하기 좋은 여건 조성	22	89	52,826	241,150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35		14,223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17		162,351	
	일·가정양립의 일상화	15		11,750	
고령사회	노후소득보장 강화	10	99	112,935	142,780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33		20,977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31		5,510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25		3,358	
대응기반 강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8	8	108	108

자료: 이소영 외(2018). 2017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p. 6.

한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기본계획의 핵심성과 지표는 다음 〈표 Ⅰ-4-5〉와 같으며, 총 13개 지표 중 육아 및 저출산 관련된 지표 7개(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 임신유지율, 청년 고용률, 전체 휴직자 중 남성비율,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비율, 사교육비 부담, 여성고용률)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Ⅰ-4-5〉 2017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핵심성과평가 지표 內 육아정책 관련 지표

성과지표	현재('14)	목표('20)	출처	설정근거	측정산식	관련 과제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	4.8%	10%	국토부 행정통계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정책효과	-국민임대, 5년 10년 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신혼부부 지원물량/연간 초혼 부부 수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확대 -신혼부부 주택자금지원 현실화
임신유지율	77.6%	82%	보사연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연평균 유산·임신 중절 비율 두배 이상(1.1%) 감소 목표	-유배우 부인 임신자수-유산, 임신중절 등 규모/15~44세 유배우 부인 임신자수*100	-고위험 산모 신생아 의료지원 확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강화 -생명존중 분위기 확산
청년 고용률	40.7%	48%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OECD평균치(50.9%) 도달	-15~29세 청년 취업자/청년 경제활동인구	-청년고용대책 -노동개혁 과제 -일학습병행 등
전체 휴직자 중 남성비율	5% ('15.7)	15%	고용부 고용보험 D/B	최근 증가세, 정책효과 반영	-남성육아휴직자/전체 육아휴직자*100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육아휴직제도 내실화 -남성육아참여 문화 확산

성과지표	현재('14)	목표('20)	출처	설정근거	측정산식	관련 과제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비율	26%	37% ('25년까지 45%)	복지부 보육정책D/B	정책 목표치	-평균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평균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개혁
사교육비 부담	18.2조	17조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결과」	매년 2천억 이상 감소	-초·중·고생 총 사교육비(명목)	-사교육 경감 -공교육 정상화 -능력중심사회 구현
여성고용률	55.4%	62%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OECD 평균 수준 도달	-15~64세 여성고용률	-여성 재취업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유연근로 활성화 등

자료: 대한민국 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p. 44.

다) 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2010년~2015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여 평가한 연구로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수행한 '보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와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가 있다. 2010~2014년에 수행한 보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에서는 보육비용 지원, 가정양육수당, 보육재정, 공급 및 이용률, 시간연장보육, 평가인증, 교사 근무환경을 평가영역으로 활용했다. 2015년에는 평가영역을 재편하였는데, 서비스 접근성, 양육비용 부담 완화, 서비스 질 제고, 부모 선택권 보장을 지표로(유해미·강은진·조아라, 2015) 활용하였다(표 Ⅰ-4-6 참조).

〈표 Ⅰ-4-6〉 '2010-2015 보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 내 주요 성과 지표

수행연도	평가영역	평가지표
2010 ~2014	보육비용 지원	보육료 전액지원 아동, 전체 보육료 지원 아동, 보육료 소득대비 비율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아동 비율, 가정양육수당 지원액
	보육재정	GDP 대비 국고지원금 비율, GDP 대비 총 보육재정 비율, GDP 대비 총 보육·유아교육재정 비율, 아동 1인당 보육예산
	공급 및 이용	어린이집 공급률, 어린이집 이용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시간연장보육	시간연장 보육아동 비율
	평가인증	평가인증 어린이집 비율, 평가인증 어린이집 유지율
	교사 근무환경	월 수당액(농어촌), 수당 지급 교사비율, 교사 수 대비 대체교사 비율, 근무환경개선비(0-4세), 누리과정 수당(5세)

수행연도	평가영역	평가지표	
2015	서비스 접근성 제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재정 투입, 공급·이용 아동 현황, 서비스 접근성 인식 및 만족도
		농어촌 공동아이돌봄센터 확충	농어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재정 투입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인증 현황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직장어린이집 재정 투입, 공급·이용아동 현황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정 투입, 공급·이용 현황, 서비스 접근성 인식 및 만족도
	양육비용 부담 완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 아동 현황, 부모 양육비 부담 인식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비율, 자녀 양육시 도움 정도
	서비스 질 제고	평가인증제도	평가인증 통과 시설 비율, 평가인증 유지율
		부모모니터링단	제도 도입 및 추진 현황, 부모 인지도/도움 정도
		정보공시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열린어린이집	
		교직원 양성 관리	어린이집 원장/교사 자격증 발급 건수, 보육교사 배치 현황
		대체교사 지원	보육교사 대비 대체인력 비율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 수준
	부모 선택권 보장	시간연장형보육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율
		시간제보육 지원	시간제 보육 실시 기관수, 부모인지도/도움 정도
		장애아 보육지원	장애아 보육 기관수/아동수
		다문화가족 보육지원	다문화 영유아 기관수/아동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기타	가정양육수당의 선택권 보장 수준,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자료: 이윤진·양미선·김문정(2018).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Ⅰ). 육아정책연구소, pp. 58-59
재인용 문헌: 서문희·최혜선(2010). 2010 보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60
서문희·최윤경·김문정(2011). 2011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72.
서문희·김혜진(2012). 2012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103.
서문희·이혜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61
이정원·이혜민(2014). 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p. 69-70.
유해미·강은진·조아라(2015). 2015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19.

한편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에서는 2010년에는 유아교육 학비지원, 유아교육 재정, 유치원 이용률을 평가지표로 활용하였고, 2011년에는 유치원 설치와

이용, 유아교육 재정을 활용하였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유치원 설치와 이용, 유아교육 재정, 유아 학비 지원, 교사 근무환경,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 평가, 유아교육지원 체계를 평가지표로 활용한 바 있다(표 Ⅰ-4-7 참조).

〈표 Ⅰ-4-7〉 '2010-2015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 내 주요 성과 지표

수행연도	평가지표	
2010	유아교육 학비지원	5세 무상교육비지원 유아비율, 학비지원 유아비율
	유아교육 재정	총교육재정 대비 유아교육재정 비율, 유아1인당 유아교육예산
	유치원 이용	유치원 취원율,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종일제 이용률
2011	유치원 설치와 이용	유치원 이용률, 교사 1인당 유아수, 국공립 유치원 이용 유아 비율
	유아교육 재정	GDP 대비 총 유아교육 재정 비율, 유치원 학비 정부 분담 비율, 총 교육재정 대비 유아교육 재정 비율, 유아 1인당 유아교육 예산,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비율,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규모
	교육비 지원	유치원 학비 지원 유아 비율
	종일제 운영	종일제 운영 유치원 비율, 종일제 교육 유아 비율, 특성화 프로그램 활용 비율
	유치원 평가	유치원 평가 참여 비율
	교사 근무환경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수당액, 사립 교사 처우 개선 수당 지급 교사 비율
	기타 인프라	유아교육 진흥원 수,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 비율,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 참여 유치원 비율
2012 ~2015	유치원 설치와 이용	유치원 수, 학급 수, 유치원 이용률(만3, 4, 5세),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교사 1인당 유아 수
	유아교육 재정	GDP 대비 총 유아교육 재정 비율, 총 교육재정 대비 유아교육 재정 비율, 유아 1인당 유아교육 재정,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비율,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규모
	유아 학비 지원	5세 유아학비 지원율, 3, 4세 유아학비 지원율
	교사 근무환경	유치원 교원수, 유치원 교사 급여(공립, 사립),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수당액, 사립교사 처우 개선수당 지급 교사 비율
	방과후 과정 운영	방과후 과정 운영 비율, 방과후 과정 이용률
	유치원 평가	유치원평가 참여 비율
	유아교육지원 체계	유아교육 진흥원 수, 체험교육원 수, 유아교육협력 네트워크 참여 유치원 비율

자료: 이윤진·양미선·김문정(2018).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Ⅰ). 육아정책연구소, p. 57
재인용 문헌: 1) 김은설·유해미·김선화(2010). 2010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42.
2) 김은영·최은영·조혜주(2011). 2011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190.
3) 권미경·김문정(2012). 2012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147.
4) 최은영·김정숙·송신영(2013). 2013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p. 75-76.
5)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 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p. 73-74.
6) 최은영·이진화·김승진(2015). 2015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p. 57-58.

라) 한국 육아지표(2007년)

장명림 등은 2007년, 유아교육·발전은 물론 부모의 양육과 아동의 복지 측면을 포함하는 육아지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장명림·이재연·김영옥·안동현·박수연·김홍희, 2007: 2). 연구자는 본 지표를 통해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전 목적과 가치에 비추어 유아교육과 보육 현황을 평가하고, 자녀양육 및 영유아의 권리·복지 현황과 변화를 알 수 있게 해주며, 바람직한 유아교육·보육 정책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일련의 의미있는 통계치(장명림 외, 2007: 9)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지표는 총 110개의 육아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 〈표 Ⅰ-4-8〉과 같다.

〈표 Ⅰ-4-8〉 한국 육아지표(2007년)

지표	항목		지표
기초지표	영유아 인구 및 양육현황		합계출산율, 0-5세 영유아 인구 비율, 장애영유아 인구 비율,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족의 형태별 비율, 영유아의 양육형태, 0-5세 자녀를 둔 모의 취업률
유아교육·보육 분야 지표	기관현황		유치원·보육시설 취원율, 유치원·보육시설 설립유형별 기관 비율·국가수준의 기관평가(인증) 수임 기관 비율, 종일반 운영 기관 비율(유), 종일반 참여 유아 비율(유)
	교직원 및 종사자		교원(종사자)의 연령별 구성 비율, 교원(종사자)의 성별 구성 비율, 교원(종사자)의 학력별 구성 비율, 교원(종사자)의 자격별 구성 비율, 교사의 경력별 구성 비율, 교사 1인당 영유아수, 교사의 연간 근무일 수, 교사의 연간 연수시간, 최저 임금 대비 교사의 급여 수준, 초과근무 수당 지급 기관 비율, 교직원 보험(연금) 가입 기관 비율, 퇴직금 지급 기관 비율
	물리적 환경		영유아 1인당 교사 면적, 영유아 1인당 교실면적, 실외 놀이터 보유 기관 비율
	교육·보육과정		국가 수준의 교육·보육과정 활용 기관 비율, 교육·보육계획안 작성 기관 비율, 교육·보육과정 운영 자체평가 실시 기관 비율,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기관 비율, 장애영유아 통합 교육·보육 실시 기관 비율
	건강·안전		연간 시설·설비 안전점검 횟수, 연간 영유아 대상 안전교육 실시 횟수, 연간 교사 대상 안전교육 실시 횟수, 연간 안전사고 발생 건수, 영유아 상해보험 가입 기관 비율,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기관 비율, 질높은 급간식을 제공하는 기관 비율
	부모교육		부모교육·참여 실시 기관 비율, 운영위원회 구성 기관 비율
	교육·보육의 효과	영유아에 대한 효과	신체발달에 대한 유아교육·보육 효과 인식 부모 비율, 언어발달에 대한 유아교육·보육 효과 인식 부모 비율, 인지발달에 대한 유아교육·보육 효과 인식 부모 비율, 정서발달에 대한 유아교육·보육 효과 인식 부모 비율, 사회성발달에 대한 유아교육·보육 효과 인식 부모 비율, 유치원·보육시설 경험 유아의 초등학교 적응도

지표	항목		지표
		교직원에 대한 효과	근무에 만족하는 교사 비율, 전문성이 향상되었다고 느끼는 교사 비율
		가정에 대한 효과	유아교육·보육과정 운영에 대해 만족하는 부모 비율, 교사에 대해 만족하는 부모 비율, 기관장에 대해 만족하는 부모 비율, 육아비용 지원에 대해 만족하는 부모 비율
	국가재정 투자 및 유아교육·보육 비용		중앙정부 교육·여성가족 예산 대비 유아교육·보육 예산 비율,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교육·보육 예산 대비 유아교육·보육 예산 비율, 국내총생산(GDP) 대비 유아교육·보육 예산 비율, 유아교육·보육 관련 연구·개발비, 영유아 1인당 유아교육·보육 예산, 무상교육·보육비 수혜 영유아 비율, 차등교육·보육비 수혜 영유아 비율, 가정의 연간 영유아 1인당 유아교육·보육료 지출액, 가구소득 대비 연간 유아교육·보육비에 대한 부모 분담 비율, 영유아 1인당 연간 사교육비 지출액
자녀양육 및 영유아복지 분야 지표	기본현황		영유아 신체 충실 지수→영유아 체질량 지수(BMI), 장애 영유아 출현율, 영유아 사망률
	건강관리 및 보호	모자보건	모유수유율, 영유아 예방접종률, 영유아 정기검진율
		음식	균형적인 영양의 식사제공→지방적정섭취인구비율(AMDR), 식자재의 청결한 관리 및 보관
		주거	주방가구의 청결한 관리, 전기안전 관리, 약품 및 유해물질의 안전한 보관
		의복	의복 청결 관리
		개인위생	영유아의 신체 청결 관리, 영유아의 치아 관리
		질병 및 의료 이용	건강보험 보유 영유아 비율, 영유아 유병률, 영유아 의료이용 충족률
	교육 및 생활지도	교육	정규기관 등록률, 자녀지도 교사와의 의사소통 여부, 자녀에게 책 읽어주는 횟수→시간, 자녀와의 놀이 시간, 자녀와의 현장 경험 및 문화체험 활동 횟수
		생활지도	식습관지도, 안전지도, 위생지도, 영유아의 발달 및 심리 이해 정도
	가족 및 가정생활	부부관계	부부간의 긍정적 관계, 결혼만족도
		부모-자녀 관계	영유아의 요구에 대한 반응적 태도, 적절한 신체적 접촉, 부모-자녀간의 대화 횟수→시간, 자녀 양육 철학 및 신념
		가족해체	부모의 질병, 가족내 스트레스, 영유아수 가정의 이혼 건수→한부모 가구 비율
		생활안정	부모의 안정적인 직업 여부, 가정 경제생활의 만족도
	안전	안전사고	안전사고 사상 영유아 비율
		학대	영유아 학대 신고수, 영유아 학대 경험률→학대자 현황, 영유아학대 유형별 구성비
	사회적 보호	빈곤	영유아 인구 대비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영유아 비율
		요보호 영유아	요보호 영유아 발생 유형, 요보호 영유아 보호 유형
		장애 영유아	치료서비스를 받는 장애영유아 비율, 전문교육서비스를 받는 장애영유아 비율

자료: 장명림·이재연·김영옥·안동현·박수연·김홍희(2007). 한국의 육아지표 개발 및 정책 모니터링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 81-85.

마) 보육정책 평가 지표(2009년)

백선희(2009)의 연구에서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 10년(1998~2007)의 보육정책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보육정책 계획과 추진 실적을 바탕으로 한 기존의 평가연구와 달리 접근성, 비용부담의 적절성, 서비스의 질, 서비스의 다양성, 공공성 영역에서 평가를 시도하였다(백선희, 2009: 95). 본 연구에서 보육정책 평가를 위해 사용한 분석 틀은 다음 〈표 Ⅰ-4-9〉와 같다.

〈표 Ⅰ-4-9〉 보육정책 평가 영역

구분	지표	내용
접근성	보육수요 충족률	보육수요 대비 보육공급 현황 -보육시설아동정원/(보육대상아동×보육수요율)×100
	지리적 접근성	지역별 균형 분포: 읍, 면, 동 단위 보육시설 공급률
비용부담의 적절성	정부의 보육재정 분담률	총 보육재정 중 정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서비스의 질	보육인력 자격제도	보육인력의 자격과 관련된 규정
	보육내용 표준화	보육내용의 표준화를 위한 규정
	보육서비스 질 관리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규정
서비스의 다양성	보육서비스 유형의 다양성	다양한 보육서비스 유형의 존재
공공성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중	전체 보육아동 중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수
	보육료 지원 대상의 규모	보육료 지원 대상 기준의 확대와 수급자 규모
	민간보육시설의 지원과 감독	민간보육시설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관리 감독 기능

자료: 백선희(2009).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의 보육정책 평가-국가계획을 중심으로-. 상황과 복지, 제28호, p. 118.

바) 아동권리 및 행복감 지표

한편 육아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이 되는 아동권리 관점과 아동의 행복감에 관한 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권리 지표는 1989년 유엔 총회를 통해 아동을 통제의 대상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아동권리협약에 의해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보유자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이성옥, 2015). 협약은 아동에게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부여하는데[6], 아동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만들 때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반영되도록 해

6)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개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러한 분류에 이론적 근거가 없고(김경준·이호균·서여정·김광혁·김형욱·윤상석 외, 2014), 일반 인권과의 연계를 약화시킨다(Quennerstedt, 2011)는 비판적 견해가 있음(이성옥, 2015: 13; 최윤경, 2019, 재인용).

야하며,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은 아동 최선의 이익 우선 원칙, 비차별 원칙, 생존·보호·발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권리협약은 취약한 아동을 위하여 포괄적 정책과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으며(이성옥, 2015), 다음과 같은 정책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최윤경, 2019, 재인용).

23. 연령범위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기준 및 전문적인 훈련 24. 가장 취약한 집단에의 접근 25. 출생등록 26. 생활수준과 사회보장 27. 보건의료의 제공 28. 유아기 교육 29. 유아기 교육에 대한 부모와 공공의 책임 31. 공동체 기반의 프로그램 34. 휴식, 여가 및 놀이의 권리 (Ⅵ)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유아 36. 위험에 취약한 유아 37.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개입 촉구 (Ⅶ) 유아기를 위한 역량 구축

자료: 이성옥(2015). 참여권의 재해석에 기초한 보육 현장의 영유아 청문권-부록: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7호 주요 내용(pp. 190-191).

아동 정책의 설계 시 생존·보호의 권리에서 나아가, 돌봄과 보육, 교육, 양육의 과정에서 아동의 발달권과 참여권[7]의 실현이 요구되며, 이는 청문권(묻고 답하는 과정에 아동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경청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권리)으로 구체화되고있다(이성옥, 2015). 아동권리협약의 대부분의 조항들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아동의 개입(involvement)을 요구하고 촉진하며, 아동을 돌보고 보육·교육하는 정책의 추진은 발달권과 참여권(청문권)의 구체적 실현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최윤경, 2019, 재인용).

둘째, 아동의 행복감은 객관적인 삶의 질 요소와 주관적 정서를 함께 반영하는데, 행복감은 주로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에 가까운 의미로 이해된다. 국내연구에서는 유아기 행복감이 물질적 수준, 대인관계, 성취, 자기자신(인지·정서적 측면) 및 신체·건강의 5개 측면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주로 물질적 수준, 건강과 안전, 주거와 환경, 가정환경, 그리고 보육·교육 경험, 대인관계, 자기자신 영역으로 구성된다. 유아기 삶의 질은 유아 개인 특성(연령, 성별, 정서성,

7) 아동 의사표현의 권리, 아동의 의사결정과정 참여의 권리, 유아의 견해와 감정에 대한 존중

자아탄력성 등) 외에 부모 특성(사회경제적 특성, 양육행동, 우울/행복감 등)과 환경특성(기관, 생활경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도남희·배윤진·김지예, 2013).

주요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아동권리과 아동행복 등의 요소를 육아정책의 성과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2) 국외연구

주요 정책의 계획과 관리, 수행 결과에 대한 지표와 별도로, 국제기구에서는 보편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에의 가이드라인으로서 특정 정책의 여부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적인 기준으로서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로써 아동과 가족의 생존과 생활, 아동의 삶의 질과 기본권의 보장 및 교육의 질과 형평성 제고하는 국제적 노력을 이행하고 있다.

가) UN SDG 목표 달성을 위한 모니터링 지표

첫째, UN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SDG 4.2 목표 달성 모니터링 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UN총회에서 지구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17개 부문에 걸쳐 채택한 이래, 이의 하나로 '모든 취학 전 영유아에게 양질의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를 보장(Target 4.2)'을 주요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였으며, 2016년 7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제2차 아태지역 장차관 육아정책포럼에서는 푸트라자야 선언문을 통해 SDG Target 4.2 이행을 위한 주요 전략들을 제시하였다(문무경, 2016. 3: 1).

이 가운데 핵심 모니터링 지표는 학교준비도에 대한 2가지 지표로, 1) 정상적인 발달수준의 유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비율과, 2) 긍정적인 가정교육환경을 경험하는 5세 이하 영유아 비율이 있다(문무경, 2016. 3: 3). 이외에도 ECCE 서비스 이용률,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 법적 연한, 공적 재원 비율, 교사 자격 및 교사-아동 비율, 교사 보수 및 연수 관련 지표가 포함된다(문무경, 2016. 3: 3).

〈표 Ⅰ-4-10〉 SDG Target 4.2 달성을 위한 아태지역 모니터링 지표

항목	지표
학교 준비도	건강, 학습, 사회심리적 웰빙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유아의 초등학교 입학률
	긍정적인 가정교육 환경을 경험하는 5세 이하 영유아 비율
	초등학교 입학 전 일정기간 동안의 ECCE 서비스 이용률
기관 이용률	총 유아기 서비스 취원율
	무상 및 의무 유아교육 법적 연한
ECCE 재정	총 정부예산 대비 ECCE 공적재원 비율
	GDP 대비 ECCE 공적재원 비율
	총 공적 교육예산 대비 유아교육(pre-primary education) 공적재원 비율(보육예산 제외)
ECCE 교사자격 및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교육수준 및 기관유형에 대한 국가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교사 비율
	자격을 갖춘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교사 대 영유아 비율
ECCE 교사 보수 및 연수	교사 보수 수준(동일한 교육수준을 요구하는 직종과 비교)
	교육수준별 교사 이직 및 퇴직률
	최근 1년간 현직연수를 받은 교사 비율

자료: 문무경(2016. 3). 육아정책 Brief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과제: 푸트라자야 선언문(Putrajaya Declaration)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둘째, UNESCO와 UNICEF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보편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Education for all), 공평하고 포괄적인 양질의 교육을 통해 빈곤의 타파와 성평등 제고, 다양성의 포용,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다. 양 기구는 교육에 관한 글로벌 파트너쉽을 표방하며 공평함(equity), 질(quality), 배움(learning)에서의 구체적인 발전과 향상을 위한 post-2015 교육 어젠다를 공표하였다[8]. 여기에는 모든 아동에 대한 학교 교육과 배움에의 기회 제공뿐 아니라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평생에 걸친 생애교육의 제공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기 교육과 보육(ECEC), 기본교육의 제공, 문해교육, 일·가정양립, 평화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가치과 태도, 기술의 습득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특히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양성되고 자격을 갖춘 교사가 양질의 지원을 받으며 교사업무를 수행하는 체계를 필수적인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UNICEF에서는 Education for all 어젠다를 통해 교육에의 접근성과 이용가능성(accessibility, availability, affordability), 기회의 공평성(equ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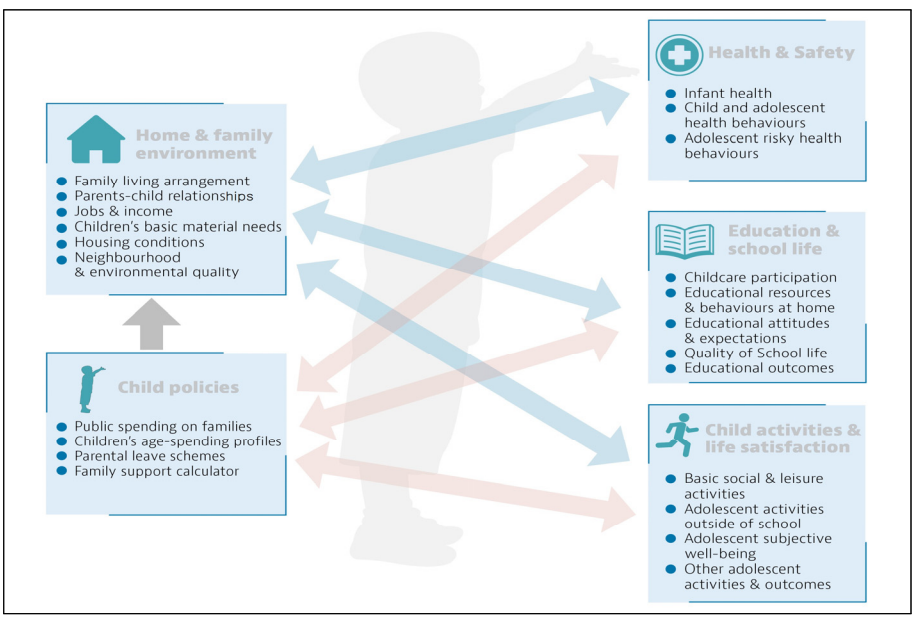
8) 유네스코 홈페이지, https://en.unesco.org/news/unesco-unicef-promote-new-education-agenda(2019. 3. 11, 인출)

양질의 교육(quality)을 위한 커리큘럼, 학습과 평가, 아동친화적이고 안전한 환경의 구축을 요건으로 제시한다(UNICEF, 2007). 정부에서 해야할 미션으로 모든 아동을 위한 권리로서의 교육 보장, 최소 규준의 마련, 포용적 틀, 아동 노동의 금지, 출생 등록, 아동의 참여권 보장, 모든 종류의 폭력과 차별의 철폐를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부모와 돌봄제공자, 지역사회, 교사, 시민사회 기구, 그리고 국제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UNICEF, 2007).

나) OECD의 웰빙 및 ECEC 지표[9)]

OECD에서는 정책 방향에의 제언을 위해 국제비교를 위한 지표와 데이터 공표를 지속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OECD에서는 Child Wellbeing과 ECEC Quality monitoring 지표를 통해 가족과 아동, 육아에 관한 삶의 질과 행복감 제고를 추구하고 있다.

[그림 Ⅰ-4-1] OECD Child Well-Being 요소



출처: OECD(2017b). OECD Child Well-being Data Portal Country Factsheet: Korea(Nov. 2017).

9) 이하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OECD(2017b). OECD Child Well-being Data Portal Country Factsheet: Korea(Nov. 2017).

첫째,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OECD에서는 웰빙(Wellbeing) 개념을 적용하고, 아동의 웰빙에 필요한 정책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는 (1) 아동의 가정환경 및 부모-자녀관계, 이웃, 환경의 질, (2) 아동정책의 설계: 가족에 대한 공적투입 및 가족지원, 아동에 대한 연령별 접근, 부모육아휴직 등의 구성, (3) 건강·안전 요소, (4) 교육·보육 및 그 성과, 교육자원과 인프라, (5) 기본적인 사회활동과 여가, 학교밖/비교과 활동, 주관적 웰빙, 아동발달에 대한 성과 측정으로 구성하고 있다.

한편, 한국 아동에 대한 웰빙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영아사망률과 저체중 출생아의 비율이 양호하여 OECD 국가 상위 30% 그룹에 속하나,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웰빙, 부모와의 대화시간과 관계지수는 하위 30%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7b). 이로써 객관적인 양적 목표치에 의한 평가에서는 양호한 반면, 삶의 질과 아동행복지수(주관적웰빙)와 같은 질적 평가에서는 낮게 보고됨을 알 수 있다.

둘째, OECD ECEC 분야에서는 생애초기 교육과 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영유아기 교육·보육의 질 관리를 위한 정책 수단을 크게 5가지 구분하여 관련 기준을 제시하고 국제비교를 통한 모니터링을 수행한 바 있다(OECD, 2012; OECD, 2017a). ECEC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5개 정책 수단으로 (1) 질에 관한 목표와 규제, (2) 커리큘럼 구성과 실행, (3) 전문성을 갖춘 교사와 근로환경, (4) 가족과 지역사회의 참여, (5) 관련 분야 데이터 수집과 연구 및 모니터링의 수행을 제시하였다. OECD ECEC 지표로는 첫째, 정책 투입(policy input) 요소로 ECEC 재정, 교사 대 아동 비율, 교사의 자격, 급여, 근로시간 등과 같은 교사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둘째 정책 결과(policy output) 요소로 아동의 서비스 접근성, 등록률, 아동의 교육 연한 및 교육 강도, 커리큘럼 틀의 구성과 내용, 질 관리 기제 등을 들고 있다. 셋째, 정책 성과(policy outcome) 요소로 아동·청소년의 성과(child performance: 15세 성취도)를 주요 지표로 하여, 아동의 건강과 웰빙, 취약계층 아동의 ECEC 성과, ECEC 접근성와 모의 노동시장 참여 간의 관계 등을 ECEC 정책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로써 객관적 지표 외에 주관적 평가의 중요성, 그리고 지표 간 연계와 효과분석[10]을 통한 성과지표의 도출 등을 주요 이슈로 제시하고 있다.

나. 육아정책 현황

1) 저출산정책

연구에서 다룰 육아정책의 범위에 대한 재구조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1년차 연구(이윤진 외, 2018)에서 정리한 육아정책의 범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에서 육아정책은 현 정부가 5년간(2018~2022)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계획에 초점을 둔 가운데, 육아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부처별 국정과제와 업무계획에 초점을 둔 것과 달리 1년차 연구에서는 다수의 부처가 연관된 복합과제 위주로 육아정책을 선정하였다. 이로써 100대 국정과제 보다 다부처 저출산정책으로서의 4대 복합·혁신 과제 중에서 육아정책과 관련된 영역을 위주로 육아정책을 정리하였다(이윤진 외, 2018).

복합·혁신 과제는 핵심공약과 국가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는 과제로, 예산과 인력 등 정책집행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할 과제이며, 다수의 부처가 연관된 대형 복합과제이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7: 143; 이윤진 외, 2018: 42, 재인용). 이 중 육아정책과 관련된 복합혁신과제는 세 번째에 해당하는 다부처 저출산정책으로 "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의 해소"를 목표로 한다. 문재인정부의 저출산정책이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정책 추진 방향으로 하여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적 대책 마련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출산율 제고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 2019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어젠다 논의를 본격화 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12).

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의 해소라는 대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중목표과 세부목표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를 통해 성과지표과 세부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결과지표로 활용하고자 한다.

---

10) 분석 예: 육아정책 변경에 따른 복직의 지연에 대해 크게 3가지(2개월 vs 6개월, 6개월 vs 10개월 그리고 18개월 vs 36개월 내 복직)로 비교한 결과, 첫번째 그룹: 2개월 안에 복직할 확률이 30%p 감소, 두번째 그룹: 25-26%의 여성이 복직을 늦춤, 세번째 그룹: 7-8%p정도 감소로 나타남. 육아휴직 정책이 관대해질수록 여성 복직이 증가 혹은 감소하는지에 대한 답은 결과만 본다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실제로 육아휴직 정책을 변경(2개월에 6개월로) 한 후 5년 안에 복직하지 않는 여성의 비율이 1.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여성 복직이 감소하는 것은 시간에 따른 감소 효과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정책 변경 1년 전후를 비교하는 건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Schőnberg & Ludsteck, 2007).

〈표 Ⅰ-4-11〉 현 정부 육아정책 대목표, 세부목표, 정책과제

중목표	세부목표	핵심정책과제
자녀 출산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보육정책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확립	• 배우자 출산휴가 단계적 확대 • 기간제근로자 출산휴가급여 보장(17년) • 산모신생아 (방문형)건강관리서비스 확대(19년) • 난임시술 건강보험 전환(17년) • 공공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18년)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투자 강화	• 만0-5세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 15세이하 입원비 국가책임 • 초중고 독감예방접종 국가지원 • 아동재활병원 확충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운영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 미혼모 출산-양육-자립 패키지 지원 • 다자녀 통합복지카드 도입 • 출산양육 친화적 세제 개선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 공공보육 이용 아동 비율 40% 달성(22년) • 초등돌봄 전 학년 확대 • 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 돌봄체제 도입(18년) •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일·가정 양립 일상화	•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및 일·가정 양립제도 재원 확보방안 마련(17년)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가족친화인증기업 확산(17년) • 일·가정양립 문제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 양립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 확대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 누리과정 국가 책임 확대 •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 달성 • 1:1 맞춤형교육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 추진(17년)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중 중고등교육 청년일자리, 주거, 성평등문화 관련 내용은 미포함). 이윤진 외(2018).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Ⅰ). 육아정책연구소, pp. 44-45 참조

2) 보육 정책[11)]

보건복지부에서는 앞서 살펴본 저출산정책 중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아동수당의 지급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등

11) 보건복지부 정책 동향은 '보건복지부(2019. 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시행계획'과 '대한민국정부(2019b).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 여성가족부 정책 동향은 '여성가족부(2018. 12. 20). 2019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9. 1. 22). 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 '대한민국정부(2019b).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 밖에 (1)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사 근로-휴게시간 보장과 보조/대체교사 투입 및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방안이 있으며, (2) 표준보육비용을 토대로 한 보육료 현실화와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주요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어린이집 의무평가제의 도입과 (4) 시간제보육 제공 시설의 지속 확대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단계적 확충이 계획되어 있으며, (5) 아이돌봄서비스의 확대와 내실화, (6)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7) 방과후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8)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과 자립 지원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근절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9)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이 아동보호 인프라와 전담인력 확충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10) 아동친화도시, (11) 아동그룹홈 지원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9b; 보건복지부, 2019. 2).

여성가족부에서도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과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정책 관련하여 공동육아나눔터와 가족돌봄 지원 체계, 부모교육 및 부모역할지원을 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과 미혼모·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양육비이행지원제도, 취약·위기가족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가족친화 직장 및 마을 환경 조성과 아이돌봄서비스를 추진하고,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수립에 근거하여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관련하여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육아정책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일하는 부모, 취약배경을 가진 부모 및 아동·청소년 대상의 지원 및 보호 체계를 보여준다(대한민국정부 2019b; 여성가족부, 2018. 12. 20;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 1. 22).

3) 유아교육 정책

교육부에서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온종일돌봄체계의 구축 등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고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을 목표로 다음의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누리과정 지원 확대, 국공립유치원 이용 아동비율 확대(40%), 저소득층 유아 우선입학 확대, 학부모

안심유치원 도입,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유치원-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온종일돌봄 체계의 구축을 위해 초등돌봄교실의 단계적 확대와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교육부, 2018. 3; 교육부 보도자료 2017. 12. 27).

구체적으로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국공립 유치원 확대, 에듀파인 적용, 누리과정의 개정과 현장 안착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밖에 사립유치원 설립·폐원 제도 개선, 유치원 관련 3법 등 제도 개선, 유치원 방과후과정과 유초연계, 유아학비지원의 확대,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관련 정책을 계획 및 이행 하고 있다. 방과후돌봄 관련하여 초등돌봄교실의 제공과 확대, 오후돌봄시간 자율적 연장 운영, 교실 증축을 목표로 하여 학교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확충을 추진 중이다(교육부, 2018. 3; 교육부 보도자료 2017. 12. 27).

4) 아동 정책

아동정책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난임부부 지원 등 모성건강사업과 영유아건강관리, 그리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과 산후조리원 관리를 맡고 있다. 또한 빈곤아동대책 수립과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아동수당, 가정위탁, 입양지원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실종 예방, 취약계층아동 종합서비스 드림스타트 사업, 지역아동센터(방과후돌봄서비스)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5. 23).

II

육아정책 성과분석의 대상 및 방법

01 육아정책의 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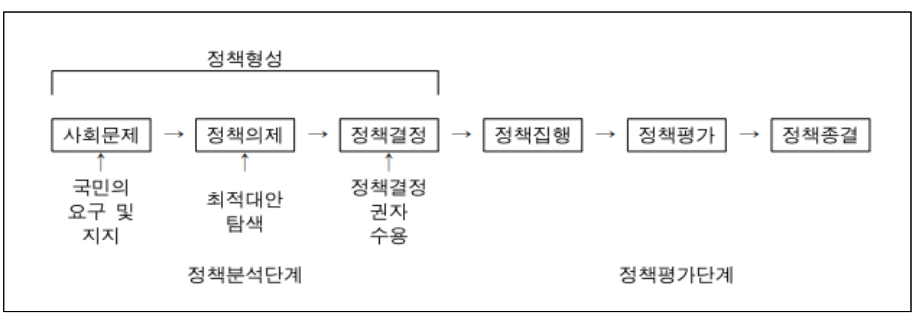
02 육아정책 분석의 틀

Ⅱ. 육아정책 성과분석의 대상 및 방법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므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형성과 집행 결과에 대한 정책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장에서는 연구를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 육아정책의 범주에 대해 2018년 1년차 연구의 핵심과제 목록에 기초하여 재검토하고, 이에 근거하여 육아정책의 분석과 성과 평가를 실시하는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서 논의한 정책의 분석과 평가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책과정은 정책형성(policy formulation), 정책집행(policy implementation), 정책평가(policy evalation), 정책변동 및 환류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각 단계별로 정책설계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의 집행과정과 정책영향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평가단계에서는 실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단기 실적(performance)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력이나 효과(impact)를 평가하게 된다. 이는 통상 정책의 효과성(ef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 형평성(equity), 적절성(relevance), 그리고 사업수행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가에 대한 노력(effort)을 초점으로 하여 역량이나 노력 그 자체에 대해 평가를 하고, 정책이 수혜자/수요자에게 문제해결을 위해 실제로 얼마나 대응력을 갖추었는가에 대한 대응성(responsiveness)을 평가하게 된다[12].

[그림 Ⅱ-1-1] 정책단계와 정책분석 및 평가



자료: 박종관(2014). 정책분석평가에 대한 이해와 사례. p. 3, 전라남도 제1회 정책분석평가사 보수교육 강의자료.[13]

12) '권기헌(2010). 정책분석론. 박영사' 참조

정책결정을 돕기 위한 '정책분석'과 정책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책평가'에는 다소 차이점이 있다. 정책분석은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해 주로 정책을 구성하고 설계하는 시점에 이루어진다면, 정책평가 및 성과평가는 정책집행이 일어난 이후 집행과정과 정책결과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활동을 주로 가리킨다(박종관, 2014: 2). 그러나 엄격한 구분과 분리는 어려운데, 정책과정이 형성→집행→평가→환류(변동)과 같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과정들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아 정책의 과정과 산물을 분리하기가, 즉 정책분석과 평가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박종관, 2014: 6).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의 분석과 과제: 성과평가를 중심으로〉의 연구 미션을 고려하여, 현 정부의 육아정책 수행에 대한 성과평가와 함께 정책과정의 요소와 단계를 고려한 정책분석을 부분적으로 시도하고자 한다.

1. 육아정책의 범주

정책 분석과 평가의 대상이 되는 육아정책의 범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정과제 현황을 통해 살펴보았다.

가. 정부 국정과제 및 전략

1) 목표, 전략 및 100대 국정과제[14)]

현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하에 5대 국정목표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내세우고 있다. 5대 국정목표 하에는 20대 국정전략이 제시되어 있고, 그 하위에는 100대 국정과제와 487개의 실천과제가 있다.

국정목표 중 하나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서의 5대 전략 중 하나가 '국가가

13) 박종관(2014). 정책분석평가에 대한 이해와 사례. 전라남도 제1회 정책분석평가사 보수교육 강의자료. http://www.policyanalyst.net/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edudata/26%ED%9A%8C%EB%B3%B4%EC%88%98%EA%B5%90%EC%9C%A1/1.%EC%A0%95%EC%B1%85%EB%B6%84%EC%84%9D%ED%8F%89%EA%B0%80%EC%9D%98%EC%9D%B4%ED%95%B4_%EB%B0%95%EC%A2%85%EA%B4%80.pdf(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홈페이지, 2019. 6. 22, 인출)

14) 다음의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함.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인데, 이 전략 하위에는 총 6개의 국정과제와 13개의 실천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다음에서는 6개의 국정과제 중에 육아 관련 국정과제인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4가지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세부 과제 목표 및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Ⅱ-1-1〉과 같다.

우선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국정과제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로,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일-가정양립을 위한 휴직 관련 제도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교육부가 주무부처인 국정과제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의 경우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완화하고,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에 대한 내용이 있다.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의 국정과제에서는 유아 학습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을 법제화하고,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의 국정과제에서는 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표 Ⅱ-1-1〉 국정목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內 전략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세부과제 내용

국정과제	과제목표	주요내용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복지부)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보육·양육 지원 강화) '18년부터 아동수당 지급(0~5세, 월 10만원), 매년 어린이집 대폭 확충하여 '22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일-가정양립 지원 강화) '17년부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18년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도입 및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10to4 더불어 돌봄) -(저출산 대책) 저출산 대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학대아동, 입양아동, 요보호아동 등 지원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공공성 강화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부)	-누리과정 지원예산 등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및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 실질적 기회 제공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 '18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확대('17년 25%→'22년 40%)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 교사·교육프로그램·교육시설 질 균등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내실화방안 병행 추진

국정과제	과제목표	주요내용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부)	-경쟁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의 성장 지원 -수업 혁신을 선도하는 혁신학교·자유학기제 확대, 대입전형 간소화 등을 통해 교실에서 시작되는 공교육 혁신 도모	-(학생 중심 교육과정 개편) 유아·초등학생 학습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법제화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수-학습 활동 개선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선진국 수준 교육환경 조성)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

주: 육아 관련 내용만 발췌하여 제시함.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pp. 65-67, p. 71.

국정목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중 다른 전략인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에서도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서의 양육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양육비 이행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세부 내용은 다음 〈표 Ⅱ-1-2〉와 같다.

〈표 Ⅱ-1-2〉 국정목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內 전략 2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세부과제 내용

국정과제	과제목표	주요내용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여가부)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	-(한부모가족 자립)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지원 연령 단계별 인상·확대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소득재산 조회 등 제도 개선 -(다문화가족 지원)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패키지' 및 '다문화 자녀 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자립 도모

주: 육아 관련 내용만 발췌하여 제시함.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p. 100.

상기한 육아정책의 주요 과제를 정책의 실행주체인 부처별로 나누어 추진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1-3〉 정부 국정과제('17) 계획 및 추진과제

구분		계획/비전	목표	추진과제/전략	세부과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보육·양육 지원 강화) 2018년부터 아동수당 지급(0~5세, 월 10만원), 매년 어린이집 대폭 확충하여 2022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건강보험정책국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 2017년부터 난임시술비 등 건강보험 적용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학대아동, 입양아동, 요보호아동 등 지원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공공성 강화	-2017년부터 빅데이터 활용 위기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기능 역할 재정비 중점 추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일-가정양립 지원 강화) 2017년부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2018년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도입 및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10to4 더불어 돌봄)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누리과정 지원예산 등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및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 실질적 기회 제공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 교사·교육프로그램·교육시설 질 균등화	-교사자질 향상과 교사처우 개선(2018년), 전문교육과정 운영, 자격체계 개편 추진(교육부·복지부)
	교육부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내실화 방안 병행 추진	-부처 간(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등), 지자체-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학교 안·밖 온종일 돌봄체계 모델 개발·확산

구분		계획/비전	목표	추진과제/전략	세부과제
	유아 교육과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 2018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확대(2017년 25%→2022년 4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경쟁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의 성장 지원 -수업 혁신을 선도하는 혁신학교·자유학기제 확대, 대입전형 간소화 등을 통해 교실에서 시작되는 공교육 혁신 도모	-(학생 중심 교육과정 개편) 유아·초등학생 적정 학습 시간 및 휴식시간 법제화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수-학습활동 개선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선진국 수준 교육환경 조성)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	
				-(학교 주변 교육환경 개선) 2018년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시스템 간 연계	-유치원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여성 가족부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	-(한부모가족 자립)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지원연령 단계적 인상·확대	-자립의지가 높은 청소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립 지원 패키지 도입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소득재산 조회 등 제도 개선	
				-(다문화가족 지원)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패키지' 및 '다문화 자녀 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자립 도모	-일반국민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실시
				-(취약가족 지원) 취약·위기가족 등 지원 서비스 확대로 가족해체 예방	

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pp. 81-83, p. 87. p. 100'을 바탕으로 정리한 결과임.

나. 4대 복합·혁신과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공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20대 전략과 100대 국정과제를 균형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치하여,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새정부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는 복합·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한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7: 143). 이와 같은 과정으로 선정된 과제는 총 4가지로,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교육·복지·노동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7: 143).

‘교육·복지·노동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과제의 경우, 인구절벽위기 극복을 위해 전 사회적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에 따라 초저출산을 탈피하고 자녀 양육·교육의 국가책임시스템을 구현, 일·가정 양립을 일상화하고자 하는 배경으로 추진이 된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7: 154).

본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책임시스템 구현’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전 사회적 총력대응체제 강화’가 있는데(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7: 154), 해당 과제 내에서 육아 관련 내용으로 좁혀서 복합·혁신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자녀의 출생·양육·교육의 국가책임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하여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을 확립하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투자를 강화하며,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7: 154).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7: 155).

〈표 Ⅱ-1-4〉 4대 복합·혁신 과제 ‘교육·복지·노동 체계 혁신’ 內 육아 관련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책임 시스템 구현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확립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기간제 근로자 출산휴가급여 보장(‘17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투자 강화	-만 0세~5세 대상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18년) -비혼·동거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 논의기구 구성·운영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미혼모 ‘출산-양육-자립’ 패키지 지원, 다자녀 통합복지카드 도입, 출산·양육 친화적 세제 개선

구분	주요 내용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공공보육 이용 아동비율 40% 달성(~'22년), 초등돌봄교실 전학년 확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온종일 돌봄체제 도입('18년)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등 가정양육지원 여건 개선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일·가정 양립 일상화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및 일·가정 양립제도 재원 확보방안 마련('17년)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업의 출산·양육친화 행태 변화 유도, 가족친화인증기업 확산('17년) -건강보험(임신·출산)-고용보험(사업장) 정보연계를 통한 일·가정 양립 문제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일·가정 양립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확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인상 범위 확대 등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18년)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누리과정 국가책임 확대('18년),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 달성(~'22년)

주: 육아 관련 내용만 발췌하여 제시함.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pp. 154-156.

다. 정부 각종 계획 및 추진과제[15)]

실행주체인 주요 부처별 정책 목표를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추진과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정책 계획도 포함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장려에서 모든세대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핵심정책 과제를 마련, 급격한 인구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요 분야별 정책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3차(~2020년), 4차(~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국정과제(17. 5~22. 5)의 추진시기가 중첩되어있는데, 이를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국정과제 및 저출산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기존 과제를 정비하고 범정부적으로 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할 핵심과제(아동수당, 온종일돌

15) 다음의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8. 1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보건복지부(2019. 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시행계획.
교육부(2018. 3).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공공성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여성가족부(2018. 12. 20). 2019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보건복지부(2019. 2. 19).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 인포그래픽.

봄, 아이돌봄, 한부모 양육지원 등)를 선별하여 이들 위주로 제시하고 있다. 민간-지역-정부 간 협력체계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서비스/재정 측면에서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국가재정의 지속성 확보, 인프라 구축을 주요 추진체계로 제시하였다. 정책 설계의 측면에서 이러한 구성이 어떠한 효과성을 갖는지 검토가 필요하겠다.

보건복지부는 보육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을 목표로 제 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발표, 국정과제 4개 보육분야 17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3차 기본계획을 통해 그 간 확대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고 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을 지속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4대 전략(보호권, 인권 및 참여권, 건강권, 놀이권), 16대 과제(40개 소과제)에서 마련한 10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정책은 아동이 단순히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행복을 누려야 할 아동권의 주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아동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UN 아동권리협약(아동 18세 미만의 자)의 생존·발달·참여·보호권에 기반한다.

한편 여성가족부에서는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비전으로 하여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 6개 대과제와 22개 중과제를 제시하였다(여성가족부, 2018. 1) 이를 통해 남녀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일-생활 균형의 사회기반 조성,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건강의 증진 등을 계획하였다. 이 중에서 육아정책의 주요 과제로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지원 확대, 지역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확대, 배우자 유급출산휴가기간 단계적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 해소와 같은 양성평등 관점의 시간지원 확대와 돌봄지원의 확대 및 자격 제도화를 육아정책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표 Ⅱ-1-5〉 정부 실행주체별 각종 계획 및 추진과제

구분		계획/비전	목표/정책방향	추진과제·전략	세부과제(일부 측정지표)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	-삶의 질 향상 -성 평등 구현 -인구변화 적극 대비 [1단계: 3차계획(~2020)] 아이/부모 삶의 질 업그레이드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 (비용)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 (시간)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최대화 · (돌봄)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 (문화) 모든아동 존중,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 (기반) 2040 안정적 삶의 기반(일·주거·교육)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인구변화 적극 대비	· (비용) 의료비제로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아동수당, 기타지원(난임시술, 다자녀지원, 교육비 경감) · (시간)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돌봄) 공보육이용40%,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보육교사 근로환경개선, 자격체계개편, 종일보육내실화, 초등돌봄/다함께돌봄 등 20만명 추가돌봄, 아이돌보미 2배확충, 민간돌봄 등 국가자격제 도입, 지역(비용지원위주에서) 지역 맞춤돌봄서비스 중심 지원 · (문화) 출생신고 구별폐지, 한부모아동 양육비지원확대, 출생등록제, 보호출산제, 다양한가족수용방안 · (기반) 중소/중견 기업 육아휴직후복귀 인건비 세액공제, 공교육강화-초등 활동중심수업→초등교육혁신→아이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환경
보건 복지부	보육 정책국	〈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	-보육의 공공성 강화	-국공립 이용률 확대 -국공립 운영의 공공성 보장 강화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어린이집 운영 건전성 제고	-22년까지 40% 달성(조기달성) -컨설팅, 평가, 사후관리 -의무이행률 90%이상 -어린이집 원장 자격요건 강화, 원감 등 중간관리직 신설

구분		계획/비전	목표/정책방향	추진과제·전략	세부과제(일부 측정지표)
			-보육체계 개편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 개선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보육과정 개편	-표준보육시간제도 도입 등 -표준보육비용 산정 -누리과정, 0-2세 표준보육과정개정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	-유보교사 격차해소-1·2급 자격체계 개편, 보수교육관리 강화, 보조·대체교사 확대 -적정근로-휴게시간, 수당보장 -반구성: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건강안전관리 강화-안전컨설팅 실시 -의무평가제-사전사후관리 도입
			-부모 양육지원 확대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 지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5년간 단계적 확대 -취약보육 지원 개선	-육아종합지원센터: 22년까지 다양한 방식 확대 -장애·다문화아동 등 지원 보강
	인구아동 정책국	〈포용국가아동정책〉 아동이 행복한 나라	[보호권]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 강화	-보호대상아동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 혁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혁신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 강화	
			[인권 및 참여권] -아이들 권리가 보장되도록 법·제도 개선	-누락없는 출생등록 및 생애초기 건강관리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건강권] -생애초기부터 촘촘하게 돌보는 아동 건강	-아동발달단계에 맞는 예방적 건강지원 강화 -마음건강 돌봄지원 강화 -믿을 수 있는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취약아동	
			[놀이권] -창의성·사회성 계발을 위한 놀이 혁신	-아동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	

구분		계획/비전	목표/정책방향	추진과제·전략	세부과제(일부 측정지표)
교육부	유아 교육과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교육문화 혁신을 통해 교육의 공공선 실현	-국가 책무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유아교육 및 실질적 교육기회 평등 보장 -유치원, 교원,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와 함께 유아발달 지원 -교육현장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확대 -희망사다리 복원을 통한 실질적 교육기회 평등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 -건전한 사립유치원 육성·지원
				-교실혁명을 통한 유아중심의 교육 문화 조성	-유아 중심 교육패러다임 전환 -영유아대상 과도한 사교육문화 개선
				-교육공동체와 함께 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유아 교육환경 조성 -학부모 참여 강화로 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교원의 업무부담 완화를 통한 유아와의 상호작용 강화
				-유아교육 혁신을 위한 행정시스템 구축	-현장에 적합한 평가체계 마련 -사립유치원 행정지원체계 정비
여성가족부		〈2차 양성평등기본계획〉 여성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	-성숙한 남녀평등의식과 문화 확산 -여성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여성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u>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u> -(여성폭력근절과 여성건강증진)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u>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u> -공동육아나눔터및아이돌봄지원확대, -지역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확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확대, -배우자 유급출산휴가기간 단계적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 사각지대해소

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8. 1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보건복지부(2019. 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시행계획
관계부처 합동(2019. 5. 23). 포용국가 아동정책.
보건복지부(2015. 4).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15~2019).
교육부(2018. 3).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공공성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혁신방안-.
여성가족부(2018. 1).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라. 육아정책목록 재구조화

1년차 연구(이윤진 외, 2018)에서 육아정책의 구성은 전문가 중요도 평가를 통해 핵심정책 목록을 추려 저출산-유아교육-보육의 정책 카테고리로 제시하였다. 2019년에는 그 간의 주요 정책 수립과 실행과정을 고려하여 내용적으로 돌봄정책과 아동정책의 구성을 추가하여 재구조화를 하였다. 기존 저출산-유아교육-보육 정책의 구성으로 들여다 본 육아정책의 목록을, 저출산-유아교육·보육·돌봄-아동 정책의 3개 카테고리로 범주화 하여 정책의 설계와 구성에 대해 살펴보고(정책분석), 이에 대한 정책목표의 달성을 살펴보고 평가하고자 한다(성과평가). 이로써 육아정책 목록을 내용적으로 재검토하고, 이어지는 정책분석과 평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범주를 구조화 하였다.

〈표 Ⅱ-1-6〉 2018년 핵심육아정책 목록 및 2019년 육아정책 범주 재구조화

2018년 핵심정책과제	2019년 육아정책범주
〈저출산정책〉	〈저출산정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급여현실화 및 일·가정양립제도재원확보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누리과정 국가 책임 확대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 달성	출산·양육 세제 개선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의료비제로화
만0~5세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기타지원: 난임, 다자녀지원 등
출산·양육 친화적 세제 개선	포용적 가족: 한부모양육지원, 출생등록제등
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 돌봄체제 도입	초등교육 혁신
공공보육 이용 아동비율 40% 달성	양육지원체계 개편
〈유아교육정책〉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한 국가책임 강화	놀이중심 누리과정/표준보육과정 개편
사립유치원 육성 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대
〈보육정책〉	사립유치원 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보육교사 전문성강화(자격) 및 처우개선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관리체계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등 다양한 서비스
	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돌봄체제 도입(돌보미자격)
	〈아동정책〉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편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아동권리보장(4영역: 보호, 참여, 건강, 놀이)

자료: 2018년-이윤진 외(2018).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Ⅰ). 육아정책연구소, p. 89.
2019년 본 연구과제에서 재구성

2. 육아정책 분석의 틀

정책분석(policy analysis)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를 통한 의제의 설정,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의 제시와 진행에 대해 이루어진다. 문재인정부의 육아정책의 설계와 의제 설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절에서 제시한 국정과제와 부처별 주요 계획을 살펴보면, 범정부 육아정책과제가 중첩되어 제시된 특징을 보인다. 이는 관련 정책 추진이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력을 갖는 응집성을 보이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 동일한 정책 목적에 다양한 실행 주체가 유사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고 실행하는 중복되고 산발적인 추진체계를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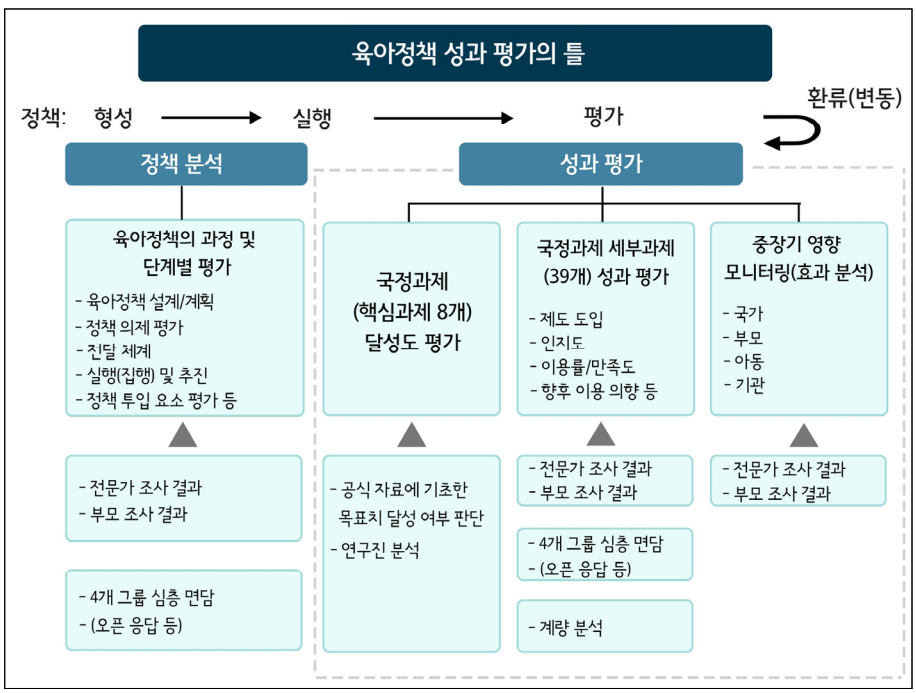
일례로 온종일돌봄체계의 추진에 있어 33만명에서 53만명으로 돌봄아동의 수를 늘리는 정책목표(교육부 보도자료, 2019. 6. 25)의 설정과 집행에서, 학교돌봄(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과 마을돌봄(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이 동시에 유사한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여기에 지자체별 인프라와 관련 사업이 더해져 정책의 설계와 집행과정에서 중복되고 산발적인 경향을 보인다.

육아정책의 추진이 저출산정책 설계과 관련 정책의 동력으로 응집성 있게 설계되어 있는 가운데,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정책과제가 저출산정책의 우산 아래 제시됨으로써 육아정책과 저출산정책의 지향과 추진체계가 동일시 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정책 설계와 추진이 육아정책의 구성과 이행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전문가와 수요자의 인식과 의견 조사 등을 통해 정책 설계와 추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즉 육아정책의 분석과 평가를 위한 틀로, 크게 정책분석과 성과평가의 두 축을 제안하고, 2019년 본 연구는 후자의 육아정책 성과평가를 위주로 수행하되 광의의 성과평가는 연도별 이행목표와 계획 대비 (1) 단기 달성도 평가, 이러한 단기 목표 달성 여부가 (2) 정부의 국정과제의 성과로 어떻게 인식 및 평가되는지(협의의 성과평가), 그리고 (3) 상기한 정책 성과가 육아환경 전반의 향상이라는 보편적 지표의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육아정책의 중장기 효과 모니터링을 실시하도

록 한다. 광의의 육아정책 성과평가에는 정책의 수립과 설계, 실행과정과 추진체계(전달체계), 구체적 서비스의 산출과 정책 성과에 대한 정책의 요소 및 단계별 평가를 반영한 정책분석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평가를 포함한 성과평가를 본 연구의 분석의 틀로 제시하고, 국정과제 및 이를 위한 세부 정책과제의 수행에 대한 평가가 육아정책의 범주 및 주요 핵심과제와 연계되도록 구성하였다. 즉 국정과제와 세부 정책과제에 대한 성과평가가 정책범주별 평가와 이어지도록 하였다.

[그림 Ⅱ-2-1] 육아정책 성과 평가의 틀



가. 주요 국정과제-육아정책의 범주와 목록-성과지표의 연계

정부에서 제시한 육아정책의 핵심 국정과제와 본 연구에서 재구조화 한 육아정책의 범주(4개 하위분류), 그리고 이에 대한 성과평가(달성도-성과평가-중장기영향)와 정책분석를 연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2-1〉 정부 주요 국정과제-육아정책 성과평가 지표 연계

육아정책 성과지표	국정과제 핵심과제	결과지표(세부목표달성)	전문가/수요자 평가
〈저출산정책〉		달성도 평가	성과평가-정책분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일·가정 양립 일상화	-최대 2년 사용가능 -통상임금의 80%(150만원 상한) -이용자 수 증가 -관련 장려금(20→30만원) 인상	· 제도 도입 · 정책 인지도 · 서비스 이용률 · 이용 만족도 · 향후 이용의향 · 만족/불만족 및 미이용이유 (주관적 판단에 의한) · 국정과제 성과평가 · 육아정책수행의 단계별/요소별 평가(정책분석) · 정부 정책의 수행이 미치는 중장기영향 모니터링(효과분석)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증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좌동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아동수당제도 도입	-대상연령 확대 -현금지원제도 보강	
출산·양육 세제 개선		-소득공제, 세액공제조정	
양육지원체계 개편		-현금/서비스지원체계 균형(조정) 및 수요자맞춤 확대	
의료비제로화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립	-의료비 감면 -예방접종 확대	
기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다자녀지원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배우자출산휴가확대	
포용적 가족정책		-한부모양육지원 -출생등록제	
초등교육 혁신	(놀이권/보호권 보장)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편 및 현장 안착	-놀이학교 개념 도입 -학교시간 연장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놀이중심 누리과정 /표준보육과정 개편		-유아학습-휴식시간 보장 법제화 -방과후과정 개선 -유아기 사교육 문화 개선(사교육이용비용 및 이용률)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대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연도별 양적목표:(초과달성중) -질적 목표 :질적목표 부재 :국공립인프라 지역격차 :공-사립 상생방안	
사립유치원 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			
보육교사 전문성강화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양성 및 자격체계 격차 해소	

육아정책 성과지표	국정과제 핵심과제	결과지표(세부목표달성)	전문가/수요자 평가
(자격) 및 처우개선	격차 완화	-놀이중심 공통과정 누리과정 개정 및 안착 : 구체적 어젠다 및 실행계획 부족	
보육지원체계 개편 (기본-연장보육)	(기타) 보육서비스 질 제고	-이용시간실수요보장 -교사 휴게시간 보장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관리체계		-의무평가제 도입 및 실시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서비스이용률 -효율적 전달체계	
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 돌봄체제 도입(돌보미자격)	온종일돌봄체제 도입	-공적돌봄체계 구축 (53만명 돌봄 목표) -초등돌봄부족 해소 -아이돌봄사업 확대 (지원기준완화, 이용확대, 품질/돌보미 관리)	
〈아동정책〉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편	아동보호종합지원 체계 구축	-건강 지원 : 아동의료비부담경감 -위기아동 발견 -위기아동 보호체계혁신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위기아동 예측지원시스템 가동 및 성과)	
아동권리보장(4영역: 보호, 참여, 건강, 놀이)		-요보호아동 지원 체계 통합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주: 다음의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함.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8. 1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보건복지부(2019. 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시행계획.
관계부처 합동(2019. 5. 23). 포용국가 아동정책.
보건복지부(2015. 4).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15~2019).
교육부(2018. 3).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공공성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혁신방안-.

나. 육아정책의 상위목적 및 주요지표에 의한 중장기 영향 모니터링

정책의 성과가 육아정책이 추구하는 상위의 목적과 궁극적인 지향(예: 출산율 제고, 삶의 질 보장, 육아행복, 아동웰빙 등)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그 간의 육아지표연구 및 보육·유

아교육 성과와 과제에서 사용한 주요 지표 그리고 국외자료를 참조하고, 이를 2018~2022년 정책 어젠다에 맞게 수정 반영하였다[16]. ECEC(Early Childhood Ecuation and Care: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에서 추구하는 보편적 지표인 서비스의 질(quality), 이용률/이용시간/접근성(quantiy/access), 비용지불 및 비용지원(affordability), 형평성(equity), 아동의 성장·발달(developmental outcome)과 OECD 5개 정책수단인 질관리체계, 커리큘럼, 교직원의 전문성, 부모/지역사회 참여와 연계, 데이터와 연구 및 모니터링(OECD, 2012)의 중요성을 모두 고려하였으며, 정책 현황에 맞는 지표로 수정 보완하였다(표 Ⅱ-2-2 참조).

〈표 Ⅱ-2-2〉 육아정책의 목적 대비 중장기 영향 모니터링(효과평가)을 위한 지표(안)

영역	지표	평가항목
국가수준	출산율	(결혼율)[17] 출산율
	접근성 (access, diversity)	다양한 서비스(교육·보육·돌봄, 종일제-시간제) 서비스 이용률 및 접근성 무상/의무 교육·보육 및 돌봄 체계(교육연한, 시간)
	재정	GDP 대비 ECEC/가족복지 재정 비율 아동 1인당 보육교육돌봄 예산
	삶의 질	사회적 격차 완화(계층별, 출산율, 결혼율, 부모취업률, 양육비지출 차이)
부모대상	양육비용 (affordability, 양육지원체계)	양육비용(평균, 편차, 양육비용부담률) 공-사 교육·보육·돌봄 비용 부담
		비용지원체계(서비스-현금 지원 조합 및 선택권) 보건의료 지원(산전-산후 출산지원, 양육지원 포용성(inclusiveness): 취약계층 지원체계 다문화, 장애, 한부모/조손 가족 서비스 이용률 및 지원율
	서비스의 질	서비스 이용만족도(질, 이용시간, 내용/프로그램 등) 부모 참여(교사와의 소통, 부모교육 및 참여)
	양육역량 및 가정환경	부모 육아휴직 비율 및 급여수준 부모역량(양육역량, 육아행복감, 부모 양육시간) 가정환경의 질(HOME)

16)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2010~2015)', '유아교육의 성과와 과제(2010~2015)'
17) 결혼율이 육아환경을 반영하는 평가지표로서 적절한가에 대한 의견을 고려(전문가 그룹), 최종 지표안에서는 제외함.

영역	지표	평가항목
아동대상	형평성(equity)	취학전 출발선 평등(학습준비도)
	웰빙 및 발달성과 (learning or developmental outcome)	아동웰빙(행복감, 생활시간조사: 보육·교육-놀이-수면-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등) 아동사망률/유병률, 아동학대, 안전사고 발생건수/비율
기관관점	서비스의 질 (quality, pedagogy)	국가수준 공통의 커리큘럼 평가/모니터링 체계, 평가/모니터링 참여율 교직원 자격, 교육(연수), 급여, 복지(근로시간, 이직률 등) 과정적 질: 교직원 전문성(역량/효능감. 페다고지, 상호작용) 구조직 질: 교사 대 아동 비율, 집단크기, 아동1인당 면적 아동학대, 안전사고 발생건수/비율
	공공성	인프라(다양한 서비스인프라, 국공립기관인프라(이용률)) 기관지원체계(유-보, 공-사립 격차 완화)

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8. 12), 보건복지부(2019. 2), 관계부처 합동(2019. 5. 23), 교육부(2018. 3), OECD(2012), OECD(2017a), OECD(2017b).
이상의 정부 자료와 OECD 지표를 참조하여 연구진이 구성

본 연구에서 정책평가는 성과평가와 동의어로 보고, 정부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책집행의 산출과 결과에 초점을 둔다. 평가는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과정으로, 제시된 정책목표와 대상, 정책집행과정, 산출 및 결과를 비교 분석해야 하며(박종관, 2014[18]),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상위목적과 세부목표, 그리고 결과 및 최종 성과에 대한 파악이 요구된다. 정책의 목적과 의도한 결과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작업으로, 구체적 계획에서 제시된 연도별 세부목표가 제시한 목표치를 모두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어도, 이것이 과연 육아정책이 추진하는 궁극의 정책목적의 달성과 변화에 기여하는가라는 질문이 남게 된다.

이 장에서는 육아정책의 분석과 평가를 단기 목표 달성여부에 의한 논의 외에, 현재 시대적 과제로 추진되는 전반적인 육아환경의 개선과 질적 향상에 대한 주요 기준을 담아 지표를 구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중장기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효과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육아정책의 목적은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는데, 현 정부에서는

18) 박종관(2014). 정책분석평가에 대한 이해와 사례. 전라남도 제1회 정책분석평가사 보수교육 강의자료. http://www.policyanalyst.net/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edudata/26%ED%9A%8C%EB%B3%B4%EC%88%98%EA%B5%90%EC%9C%A1/1.%EC%A0%95%EC%B1%85%EB%B6%84%EC%84%9D%ED%8F%89%EA%B0%80%EC%9D%98%EC%9D%B4%ED%95%B4_%EB%B0%95%EC%A2%85%EA%B4%80.pdf(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홈페이지, 2019. 6. 22, 인출)

육아정책의 슬로건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한 사회(저출산정책), 보육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보육정책),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및 교육의 공공성 실현(유아교육정책), 아동이 행복한 나라(아동정책)으로 제시하였다.

정책이 미치는 중장기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지표에서 제시하는 아동과 육아 관련 항목을 살펴보았다. 육아정책의 목적은 자녀를 낳아 키우는 부모의 관점과, 성장하는 자녀(아동)의 관점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여기에 정책 주체인 정부(국가)와 주요 정책대상이자 전달체계인 기관을 반영하여 평가의 영역을 구성하였다.

III

육아정책 성과평가

01 주요 국정과제 달성도 평가

02 육아정책 성과평가(1)-전문가 조사 분석

03 육아정책 성과평가(2)-수요자 조사 분석

04 정책효과 계량분석

Ⅲ. 육아정책 성과평가

이 장에서는 2018년부터 2019년 9월까지의 육아정책 성과 평가를 위해, 연도별로 제시된 계획 및 세부 이행계획에 대한 (1) 단기달성도 평가와 이로써 나타나는 (2) 정책 성과평가, 정책성과의 (3) 중장기 영향 모니터링을, 가용한 현황자료와 설문조사결과, 계량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육아정책의 내용 설계와 추진체계 등 대한 요소별 평가(정책분석)도 포함되었다.

1. 주요 국정과제 달성도 평가

본 절에서는 문재인정부 3년차로 접어든 현재 시점에서 주요 육아정책의 추진실적(달성도)에 대한 단기 이행 성과를 점검하였다. 앞서 언급한 육아정책의 주요 국정과제 및 4대 복합·혁신과제와 부처별 계획을 고려하여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주요 핵심과제 8개에 대한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구체적 실행계획과 목표 대비 달성도를 평가하였다. 8개 과제는 ① 아동수당 제도 도입, ② 국공립어린이집 및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제고(40%), ③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④ 온종일 돌봄체제 도입(아이돌보미 확충 및 질관리를 통한 가정양육지원 여건 개선 포함), ⑤ 일·가정 양립 일상화((남성)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⑥ 출산에 대한 사회책임 확립(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⑦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건강, 취약아동보호-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중앙지원체계 통합-아동권리보장원 설립), ⑧ 유아 놀이 보장-누리과정 개편 및 유아 학습/휴식시간 보장이다.

가. 아동수당제도 도입

문재인정부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안)」을 통해 2022년까지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관계부처 합동 보도참고자료, 2019. 2. 19). 이 계획에 따르면 2018년에는 만 0~5세 아동의 90%인 아동

238만명이 아동수당을 수혜받았으나 2022년에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인 245만명이 이를 수혜받을 수 있도록 목표설정을 한 바, 2019년 9월 이러한 7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원 기반을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제도 도입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부는 「아동수당법」을 제정하여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을 시작했는데, 2018년에 시작된 아동수당은 첫 지급 시기인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아동수당 선정기준안(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 단서: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함)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 4. 16)되었다. 아동수당 지급 첫 달에 236.5만명(0~5세 248만명 중 95.8%)의 아동이 이를 신청하였으며, 지급 기준에 따라 8만 6천여명이 지급제외 아동으로 분류되어 총 209.2만명이 이를 수급받았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 10. 24).

〈표 Ⅲ-1-1〉 2018년 9~10월 아동수당 신청·지급 현황

대상 연령 아동 수(A)	신청 아동 수(B)	신청률 (B/A)	지급 아동수(C)		지급률 (C/B)	지급제외 아동 수(D)	제외율 (D/B)
2,469,642명	2,364,924명	95.8%	2,092,472명	28,173명*	89.7%	86,802명	3.7%

주: 연령기준상 지난달에만 받았던 '12.10월생 지급분 포함 시 누적 지급자 수 212만명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 10. 24). 두 번째 아동수당 209만 명에게 10월 25일 지급 예정.

2019년 3월에는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4월 시행, 1~3월 분은 소급 지급)하고,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84개월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어 통과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3. 18). 이에 따라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아동수당 지급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며(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3. 18), 서비스(바우처) 위주의 지원체계에 현금지원을 보강함으로써 서비스-현금-시간 지원의 양육지원체계의 균형과 완결성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아동빈곤의 개선, 자녀양육가구의 비용부담과 소득불평등의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제3차 중장기보육계획(보건복지부, 2019. 2)에서도 제시되어있는 것처럼) 기존의 서비스(현물) 위주의 현행 보육지원체계와 조세지원의 현금지원과 어떻게 조합을 이루어나갈지,

기존 지원체계와의 정합성 및 조정이 요구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따른 보편지급 전환으로 2019년 4월, 25만명에게도 아동수당이 추가 지급되어 총 230만 8천여명의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이를 지급받아 수혜아동에 대한 지원율이 향상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4. 25).

〈표 Ⅲ-1-2〉 2019년 4월 아동수당 추가 지급 결과

전체 대상 아동 수(A)	아동수당 신청 아동 수(B)	신청률 (B/A)	4월 아동수당 지급 아동 수	전체 아동수 대비 4월 급여 지급률 (C/A)	4월 지급 아동 수(C)				4월 급여지급 미결정자 (B-C)
					기존 결정 인원	신규결정 인원			
						직권 신청	신규신청		
							기존 미신청자	신규 출생아	
236.7만	232.7만	98.3%	230.8만	97.5%	205.8만	11.8만	6.3만	6.9만	1.8만

주: 연령기준상 지난달에만 받았던 '12.10월생 지급분 포함 시 누적 지급자 수 212만명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 4. 25). 4.25일, 아동 231만 명이 보편지급 아동수당 받는다!

2019년 9월부터는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하여 지급하게 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7. 22).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2019년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6세가 되어 중단되었던 40여만명이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것이라 예상하였으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7. 22), 실제로는 약 268만명이 아동수당을 지급받았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9. 24).

〈표 Ⅲ-1-3〉 2019년 9월 아동수당 신청·지급 현황

기준일	대상 아동 수(A)	신청 아동 수(B)	수당지급 아동 수(C)	지급액	지급률	
					C/A	C/B
'19.9.25	276만 명	271.7만 명	268.5만 명	2,711억 원	97.2%	98.8%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 9. 24).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심의 기관서비스 이용 위주의 기존 지원체계에 현금지원을 보강한 아동수당 도입과 대상연령의 확대라는 정책 목표의 설정과 목표 대비 2018-2019년 달성도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아동수당이라는 보편적 현금 지원의 도입과 확대가 갖는 구체적인 정책 성과와 효과에 대해서는 추후 가용한 자료가 축적한 뒤에 보다 심도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와 수요자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한 성과평가에 대한

논의를 다음 장에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에서 제시한 양육지원체계의 개편이라는 정책 목표와 계획을 통해 현금-현물(서비스)-시간 지원 등의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할 것으로 제시되었는데, 현 시점까지 아직 양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성과는 공표된 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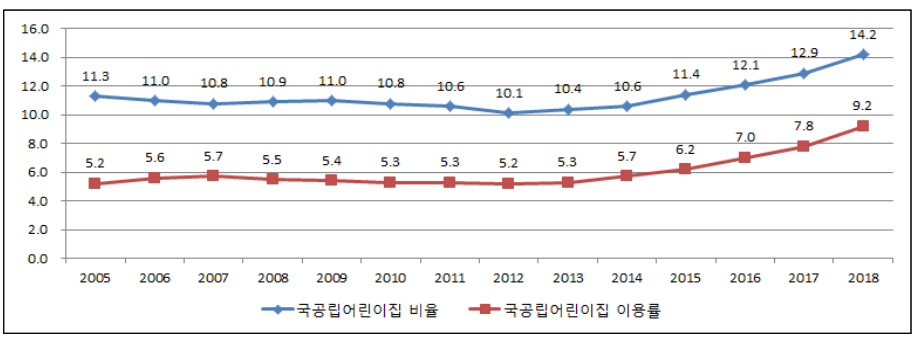
나. 국공립어린이집 및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제고(40%)

1) 국공립어린이집

정부는 2017년 12월,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을 통해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7. 12. 26).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은 총 4개 분야[19]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하나가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공공임대 주택 단지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등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2022년까지 4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7. 12. 26).

가장 최근인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 대비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은 14.2%로, 전체 보육아동 수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은 9.2%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8; 보건복지부, 2019).

[그림 Ⅲ-1-1] 각 년도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및 이용률



자료: 1) 유해미(2017. 11). 육아정책 Brief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균형 배치와 질 담보 되어야". 육아정책연구소.
2) 보건복지부(2018). 2017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19). 2018년 보육통계.

19)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체계 개편,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부모 양육지원 확대

2019년 2월, 2019년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2018년도 주요 추진 성과를 점검하였는데, 발표된 성과는 다음 〈표 Ⅲ-1-4〉과 같다.

〈표 Ⅲ-1-4〉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확대 관련 2018년 추진실적

추진실적	상세 내용
국공립어린이집 574개소 확충	-확충방식 다양화, 국비지원 확대, 민관협력 강화 등을 통해 당초 목표(450개소)를 124개소 초과하여 달성(30%↑)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시설부지 확보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 설치 의무화 및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 마련 -학교 유휴공간 내 돌봄시설 설치 관련 복지부·교육부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
국공립 장기임차 민간어린이집 71개소 선정	-'18년 국공립 장기임차 방식을 신규 도입하여, 지침 제정·배포, 지자체 수요조사 및 현장확인, 중앙 심의(3회) 등 실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완화	-국공립 신축의 국비 최대 지원 한도 인상(3.27억→4.61억) 및 민간어린이집 매입 지원단가 2배 상향(2.1억원→3.92억원) -지자체 자체 설치 어린이집 인건비 국고 지원(46개소)

자료: 보건복지부(2019. 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시행계획. pp. 9-10.

〈표 Ⅲ-1-4〉에서 볼 수 있듯이 2019년에는 당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목표인 450개보다 28% 초과하여 574개를 확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식을 다양화하고자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 장기임차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정부는 단순히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로 확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방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균형배치 여건을 개선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식을 다양화하고 매년 450개소 이상을 확충하는 방안을 세부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 2).

그 결과 당초 2022년까지 공공보육 40%를 달성하려던 목표를 1년 앞당긴 2021년에 조기 달성하기로 하고, 2019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연차별 확충 목표를 기존 450개에서 550개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장기임차 국공립 시설을 100개 이상 선정하기로 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2. 28). 2018년 12월에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였는데, 2019년에는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2019. 2). 또한 지방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균형 배치 여건을 개선하고자 서울-지방 간 차등보조율 도입에 대하여 지속 협

의를 추진하고, 지자체 자체설치 국공립어린이집에 국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2019. 2).

2) 국공립유치원

정부는 2017년 12월, '공공성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본 방안에서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한 국가책임 확대를 통한 국가책임 확대'를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하며, 국공립 유치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교육부 보도자료, 2017. 12. 27). 정부는 2013년에서 2017년까지 국공립 유치원이 지속적으로 증가(연평균 6.0%)하였으나, 지역간 차이(세종 54.0%, 부산 15.7%, 서울 9.3% 등 평균 이상인 지역이 있는 반면, 경북 1.1%, 경남 1.6%, 강원 1.8% 등 평균 미만인 지역도 있음)가 다소 존재하였음을 밝히며, 지역특성, 인구동향, 기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별 단계적으로 신·증설할 계획임을 밝혔다(교육부 보도자료, 2017. 12. 27).

이어서 2018년 2월,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22.4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5년간 최소 2,600개 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을 발표했다(교육부 보도자료, 2018. 2. 12).

〈표 Ⅲ-1-5〉 연도별 국·공립 신증설 계획

구분	'17.4월	'18	'19	'20	'21	'22	'18~'22
국공립 학급수 (신증설 수)	10,484	10,981 (497)	11,481 (500)	12,011 (530)	12,541 (530)	13,084 (543)	↑2,600
국공립 취학 아동수 (비중)	172,521 (24.8%)	182,461 (27.4%)	192,461 (29.8%)	203,061 (32.0%)	213,661 (36.0%)	224,337 (40%)	↑5.2만명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18. 2. 12). 5년간 2,600학급 이상 신설로 국공립유치원 40% 달성.

2018년 2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전국 국공립유치원의 신·증설 학급 수는 총 497개로, 단설유치원 31개원, 병설유치원 55개원을 신설할 계획이라 밝혔다(교육부 보도자료, 2018. 2. 12). 본 계획 이후 2018년 국공립유치원 증설 학급 수는 총 501학급으로 파악되었다(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19. 1. 22: 18). 각년도 유치원 원아 수와 취원율을 살펴보면 다음 〈표 Ⅲ-1-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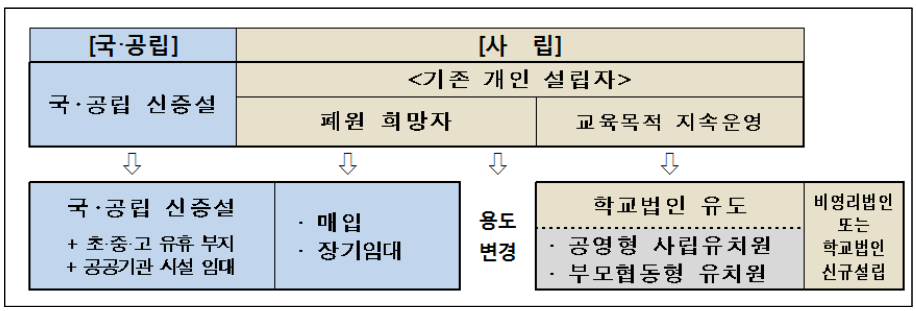
〈표 Ⅲ-1-6〉 연도별 유치원 원아수와 취원률(2016. 11.~2018. 11.)

구분	2016년 11월		2017년 11월		2018년 11월	
	원아수	취원율	원아수	취원율	원아수	취원율
국공립유치원	170,091명	24.2%	172,272명	24.8%	174,869명	25.6%
사립유치원	533,789명	75.8%	522,110명	75.2%	507,328명	74.4%

자료: 유해미(2019). 육아정책 분야 국정과제 추진 성과 및 과제. 2019년 제1차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 문재인정부 2주년 육아정책의 성과와 과제 자료집, 육아정책연구소, p. 14.

2018년 시점, 국공립유치원 학급 수는 4개 학급이 초과된 501개 학급으로 파악되었으며, 정부는 2019년 연내에 500개 학급을 확충함과 동시에 중·고교 부지 내 병설형 단설, 사립유치원 매입 등을 통해 500개 학급을 추가할 계획이라 밝혔다(교육부 보도자료, 2018. 10. 25). 이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설립하게 되는데, 그 계획은 다음 [그림 Ⅲ-1-2]와 같다.

[그림 Ⅲ-1-2] 국공립어린이집 신·증설 계획(안)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18. 10. 25). 당정「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확정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 달성–

2018년 12월에는 부모들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요구를 반영하여 기존 500학급 신설에 580학급을 추가하여 총 1,080학급을 증설하여 국·공립유치원 유아 정원을 2만 여명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을 발표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18. 12. 5). 1,000학급 확충계획은 다음 〈표 Ⅲ-1-7〉과 같은데, 2019년 3월과 2019년 9월로 나누어 개원하였다.

〈표 Ⅲ-1-7〉 2019년 국공립 유치원 1,080개 학급 이상 확충 계획

구분	학급수	유형별 신증설
2019년 3월 개원	692개 학급	단설 211학급 (매입형 7학급 포함) 병설 473개 학급 공영형 8학급(2개원)
2019년 9월 개원	388개 학급	단설 110학급 (매입형 31학급 포함) 병설 198 학급 공영형 80학급(20개원)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18. 12. 5). 2019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신·증설 및 서비스 개선.

2019년 5월 시점으로, 3월 개원을 완료한 국공립 유치원은 총 702학급으로 당초 2019년 상반기 목표인 692학급을 초과로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보도자료, 2019. 5. 20).

그러나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양적 확충이라는 성공적 이행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인프라 확충의 지역 간 격차에 대한 지적이 있으며, 민간전환형 국공립기관에 대한 공공성 확보의 노력이 요구된다(유해미, 2019: 18). 또한 국공립 인프라의 양적 확충이 과연 수요자가 기대하는 질적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충원되고 있는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지원 및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를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증가하는 사교육보육비용에 대한 영유아가구의 가계지출 수요를 볼 때(김인경·이종관·최윤경·김태완, 2018), 현행 국공립인프라 확충이 공공성이 포괄해야 할 질적 수요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국공립기관의 확충과 영유아 수의 감소가 함께 진행됨에 따라 공-사립 기관 간의 격차와 상생 방안에 대한 모색이 결여되어 있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과 질적 제고를 위해 도입한 사회서비스원의 지역별 시범도입이 갖는 의미와 효과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즉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제시한 연도별 국공립기관 확충의 양적 목표치는 달성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드러난 국공립인프라의 지역간 격차와 비등하는 질적 수요에의 충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현 정부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앞서 교육혁신 및 중장기 교육정책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국가교육회의'를 설립하였다(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에서 2019. 6. 2, 인출). 국가교육회의는 교육 관련 정책과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각 분야를 나누거나 현안을 중심으로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국가교육회의, 2018. 12: 39). 전문위원회는 유초중등교육전문위원회를 포함한 3개 전문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초중등교육전문위원회에서는 유치원-어린이집 격차(이하 유보격차로 서술) 완화 분야에 중점을 두고 민간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활동하고 있다(국가교육회의, 2018. 12: 39).

2018년 기준으로 유초중등교육전문위원회는 총 12차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해당 회의에서 유보격차에 대한 논의는 총 3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표 Ⅲ-1-8〉 2018년 유초중등교육전문위원회 회의 내용 중 유보격차 안건

구분	날짜	주요 내용	비고
2차	2018. 1. 30.	-유초중등교육위원회 운영방향 논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 등 국정과제 추진 계획 및 내용 포함
9차	2018. 8. 24.	-교원 양성 및 임용 체제 개편방안 정책연구 착수 및 논의	-유초중등교육의 공공성과 교육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필요성 포함
10차	2018. 10. 12.	-유초중등교육 공공성과 교육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연구 착수 및 논의	-해당 연구는 유보격차 완화 내용이 포함된 연구

자료: 국가교육회의(2018. 12). 국가교육회의 1주기백서.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pp. 41-44 내용 발췌 및 재구성

또한 유초중등교육전문위원회는 교육비전, 교원정책, 학교교육력 강화, 유아교육·돌봄 분야의 4개의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아교육·돌봄의 소위원회의 주요 소관업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 방안'이다(국가교육회의, 2018. 12: 40).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에 대한 세미나를 2회에 걸쳐 진행하였고(2018년 5월 23일, 5월 30일), 육아정책연구소를 방문하여 2회에 걸쳐 정책간담회를 진행하였다(2018년 4월 5일, 4월 11일). 또한 '유초중등교육의 공공성과 교육격차해소 방안 연구'를 정책연구로 진행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방안을 연구주제로 다루었다(국가교육회의,

2018. 12: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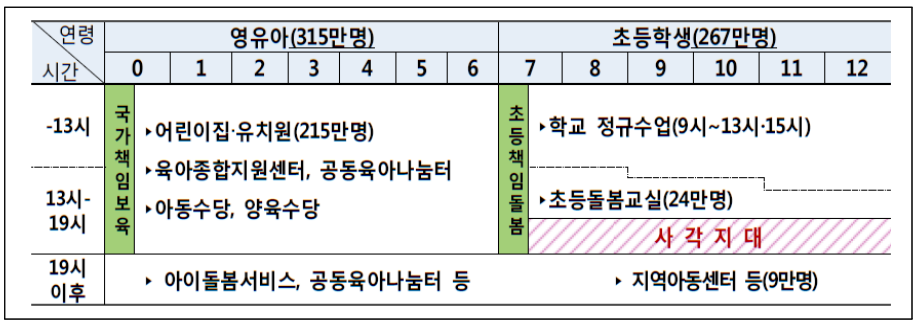
각 부처에서도 유보 격차의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보건복지부는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을 통해 보육교사-유치원 교사의 양성체계와 자격체계 등 격차 해소를 위해 자격체계를 1·2급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발표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7. 12. 26). 본 계획에서는 보육교사를 유치원 교사와 같이 대학을 중심으로 하여 신규 자격취득 과정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대학 외에 현행 보육교사교육원, 학점은행제 방식의 양성과정을 정비해 나가도록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7. 12. 26). 또한 교육부에서도 누리과정을 개정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들에게 경험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놀이중심의 공통의 교육과정으로서 개정 누리과정 성격을 명시하였다(교육부, 2019: 4).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유보통합이 유보격차 완화로 국정과제화 되고, 이후 격차완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의 추진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음에 따라 교사 수당과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격차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차이는 줄지 않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유보간 격차는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정부에 이어 추진이 기대되고 계획으로 제시되어있는 교사 양성/자격 체계의 정비와 관련하여 추진된 바가 전혀 없음은 이 과제의 달성도 평가가 '미달성'임을 보여준다. 유보 격차완화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구체적 정책이 계획대로 실행되고 이를 추진하는 동력이 필요한 가운데, 한편 놀이 중심의 누리과정 개편으로 국가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으로 통합되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교수학습의 실행력의 제고가 추진되고 있음을 고무적이라 하겠다.

라. 온종일 돌봄체제 도입

정부는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두 개의 국정과제에 겹쳐있는 온종일 돌봄체제 정비와 보완을 위해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0~12세 공적돌봄체계는 다음 [그림 Ⅲ-1-3]과 같다.

[그림 Ⅲ-1-3] 0~12세 공적돌봄체계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참고자료(2018. 4. 5).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

그림과 같이 국가책임보육으로 인하여 0~5세 영유아의 경우 비교적 공백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반면, 초등학생의 경우 오후 시간에 돌봄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초등돌봄 부처별 추진 현황은 다음 〈표 Ⅲ-1-9〉, 〈표 Ⅲ-1-10〉과 같다. 우선 초등방과후 돌봄은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유형마다 운영 체계가 다르고 관할 부처가 상이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초등돌봄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차원에서 부처 간 연계없이 분절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내 빈틈없는 전달체계가 미비하여 통합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참고자료, 2018. 4. 5).

〈표 Ⅲ-1-9〉 초등돌봄 부처별 추진현황

구분		초등돌봄 이용 아동 : 약 33만명		
학교돌봄	초등돌봄교실(교육부)	맞벌이,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등 대상 (1~2학년 21만명, 3~6학년 3만명)		약 24만명
마을돌봄	지역아동센터(복지부)	취약계층 대상	8.2만명	약 9만명
	방과후 어린이집(복지부)	저소득층, 장애아동 등 중심	0.6만명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여가부)	취약계층 대상(4~6학년)	0.6만명	

주: 이외 아이돌봄서비스(연인원 1.6만명), 공동육아나눔터(210개소)도 초등돌봄 일부 제공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참고자료(2018. 4. 5).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

〈표 Ⅲ-1-10〉 부처별 초등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약33만명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총계
전체 학생수(A)	458,353	433,289	452,297	476,713	434,069	419,506	2,674,227
이용 학생수(B)	134,662	105,660	33,015	24,471	18,627	16,604	333,039
초등돌봄교실(교육부)	124,000	91,166	16,421	7,708	3,399	2,609	245,303
지역아동센터(복지부)	10,662	14,494	16,594	15,352	13,156	11,882	82,140
방과후청소년아카데미(여가부)	-	-	-	1,411	2,072	2,113	5,596
이용률(B/A)	29.4%	24.4%	7.3%	5.1%	4.3%	4.0%	12.5%

자료: 장명림·김인숙(2019). [유·초·중등교육 분야] 교육의 공공성 확대. 문재인정부 2주년, 교육 분야 성과 진단 포럼 자료집, p.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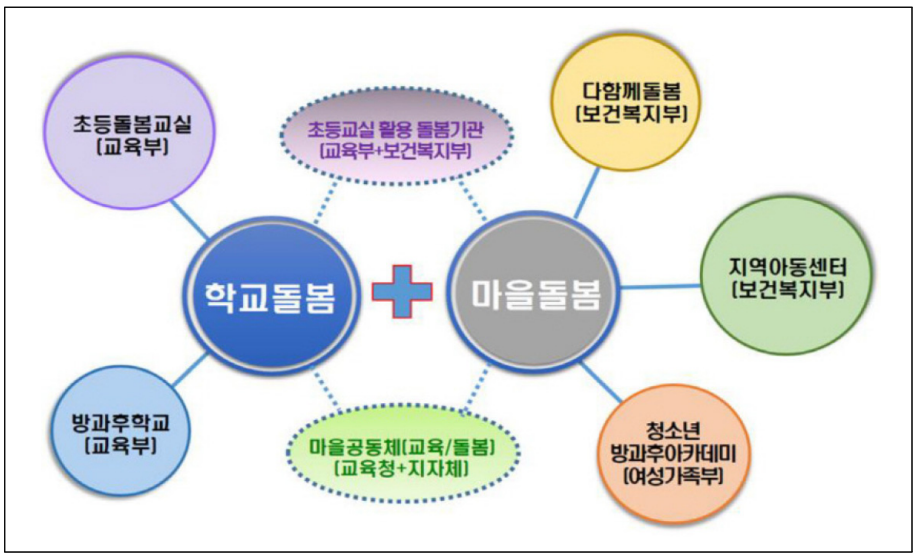
실제로 부처별로 실행되고 있는 돌봄서비스는 다음 〈표 Ⅲ-1-11〉과 같이 나누어져 있다.

〈표 Ⅲ-1-11〉 부처별 돌봄서비스 현황

구분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돌봄서비스	방과후학교	초등 돌봄교실	지역 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공동육아 나눔터
시행시기	1995	2004	2004	2017	2005	2010
지원근거	초·중등교육 과정총론 교육부 고시	초·중등교육 과정총론 교육부 고시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아이돌봄 지원법
지원대상	초1~고3학년	초1~6학년	만18세 미만	만12세 미만	초4~중3학년	18세 미만
운영규모	11,775개교 365만명 (초등176만명)	11,920실 (초등24만명)	4,107개소 총11만명 (초등8만명)	10개소 총140명*	250개소 총1만명 (초등6천명)	120개소 51만명 (이용 연인원)
운영형태	자율적 선택 일시 돌봄형태	맞벌이 가정 중심 상시 돌봄	취약계층 중심 상시 돌봄	맞벌이 가정 중심 상시·일시 돌봄	취약계층 중심 상시 돌봄	취약계층 중심 상시 돌봄
지원형태	유상	무상 (프로그램, 간식비 등 일부 자부담)	무상 (소득별 이용료 5만원 이내 부담)	이용료 자부담	무상	무상
예산('17)	5,019억원 (지방비 100%)	5,010억원 (지방비 100%)	3,055억원 (국비 48%, 지방비 52%)	1.5억원 (국비 0%, 지방비 100%) *행안부 특교세	381억원 (국비 50%, 지방비 50%) *서울(3:7)	26억원 (국비 70%. 지방비 30% *서울(3:7)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참고자료(2018. 4. 5).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

[그림 Ⅲ-1-4] 다양한 초등돌봄서비스 현황



자료: 장명림·김인숙(2019). [유·초·중등교육 분야] 교육의 공공성 확대. 문재인정부 2주년, 교육 분야 성과 진단 포럼 자료집, p.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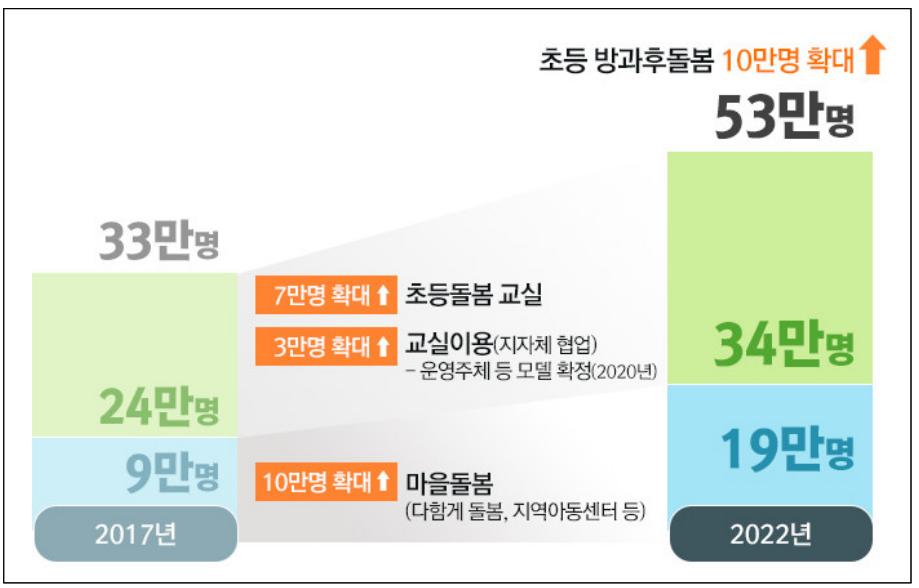
정부는 현재 24만명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돌봄을 34만명으로, 현재 9만명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돌봄을 19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참고자료, 2018. 4. 5). 즉. 2017년 33만명 대상에서 2022년까지 53만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19. 6. 25). 학교돌봄 경우에는 돌봄공간 증축, 겸용교실 리모델링 및 신설 학교의 돌봄교실 설치를 의무화하고(이상 7만명 추가), 활용가능교실의 경우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안전한 학교 내에서 돌봄을 제공하고자 하는 계획(이상 1,500실, 3만명 추가)을 세웠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참고자료, 2018. 4. 5). 정부는 2019년 6월, 보도자료를 통하여 2019년 기준으로 당초 목표 37.2만명을 상회한 40만명에게 온종일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교육부 보도자료, 2019. 6. 25).

〈표 Ⅲ-1-12〉 초등돌봄 부처별 개선 계획

구분	현재	향후
학교돌봄	-24만명 대상 돌봄 -1~2학년 중심, 17시까지 운영 * 일부 학교는 22시까지 운영	-34만명 대상 돌봄 * 초등돌봄교실 확대: 3,500실, 7만명 추가 * 교실활용(+지자체): 1,500실, 3만명 추가 -대상 및 운영시간 단계적 확대
마을돌봄	-9만명 취약계층 중심 돌봄 *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	-19만명 대상 돌봄 * 다함께돌봄사업 확대: 1,817개소, 9만명 추가 * 지역아동센터 등: 1만명 추가 -보편적 돌봄지원체계 구축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참고자료(2018. 4. 5).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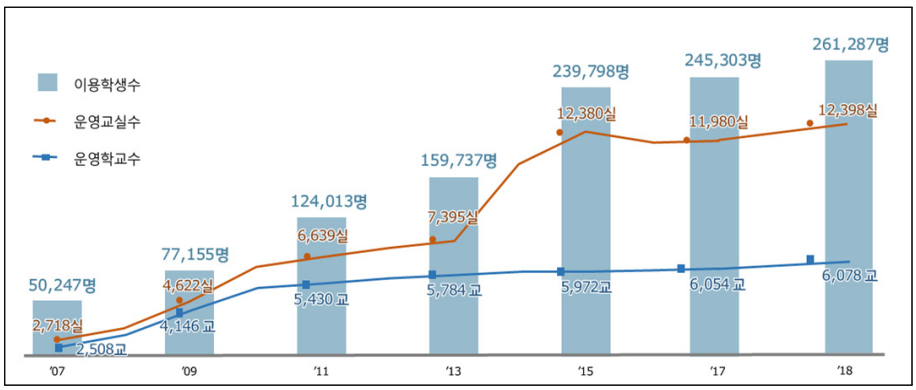
[그림 Ⅲ-1-5] 온종일돌봄 공급 계획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위키: 온종일돌봄,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3867, 2019. 11. 7, 인출

연간 추이를 통해 살펴보면, 2017년부터 추진 중인 초등돌봄교실 확대 사업에 의해 최근 10년간 초등돌봄교실 운영 교실 수와 운영 학교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8). 초등돌봄교실 이용 대상자 수가 2017년 245,303명에서 2018년 261,287명으로 전년 대비 6.5%p가 증가하였다(교육부, 2018).

[그림 Ⅲ-1-6] 초등돌봄교실 운영 추이



자료: 교육부(2018). 2019학년도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

2018년 1월 기준으로 다함께 돌봄센터는 23개소인데 2018년에 150개소를 추가 설립하고, 2022년에는 총 1,800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1. 31).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환경개선비를 2,200개소 대상 96억원을 신규 지원할 계획을 세웠으며(유해미, 2019), 맞벌이가정의 방과후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초등돌봄 공동육아나눔터를 2019년 218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2017년 149개소, 2018년 196개소)(유해미, 2019).

정부는 또한 가정양육지원으로 공동육아나눔터와 함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내실화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정부지원시간을 연간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했고, 정부지원비율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소득기준을 상향했다(여성가족부, 2018. 12. 20). 이로 인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를 2018년 46,000가구에서 2019년 90,000가구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유해미, 2019).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는 시간제 서비스 60,053가구, 영아 종일제 서비스의 경우 4,538가구이다(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2019. 6. 10, 인출[20]).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2019년 8월 시점으로 이용아동 11만명에서 2020년까지 15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 8. 28).

2019년 초, 아이돌보미의 학대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외

20)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주요통계, https://www.idolbom.go.kr/ intro/index2.go(2019. 6. 10, 인출)

형적 확장 뿐 아니라 아이돌보미 선발부터 서비스 품질관리까지, 체계 자체를 개선하겠다고 밝히며 그 대책을 제시하였는데(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 4. 25), 해당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Ⅲ-1-13〉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대책

추진과제	추진과제 상세 내용
채용 검증 및 교육 강화	인·적성검사 도입, 면접 검증 강화, 교재 개편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현장실습 확대, 소규모 교육 등 교육방식 개편, 아이돌보미 간 정보교환, 사례공유, 전문강사 풀 구축
이용자 참여 돌봄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정보공개, 활동내역 관리, 이용자 실시간 만족도 평가제 도입, 모니터링 항목 개편 및 이용자 사전 신청제 도입, 방문모니터링 비중 확대 등 모니터링 내실화,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전동의제 도입, 사전고지 안내 강화
아동학대의 철저한 예방 및 엄정 근절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 운영, 기관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대처 교육 강화, 아동학대 대처 요령 구체화, 신고 처리절차 개선, 학대 피해 아동치유지원 등 사후관리, 아동학대 발생 시 처벌 강화
공공관리체계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전담기관 지정 검토(중·장기),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직무분석, 행정업무 전자화, 아이돌보미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등 검토(중·장기), 치유프로그램 지원, 우수 아이돌보미 포상,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신뢰 회복 수칙 배포

자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9. 4. 25). 아이돌보미 선발부터 서비스 품질관리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종합개선.

여성가족부는 2019년 8월 시점으로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2020년부터 실제로 아이돌보미 대상 채용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아이돌보미 양성·보수교육 내실화 및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담인력을 신규로 222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 8. 28). 또한 현장 사례 중심의 소규모 교육과 현장 실습을 기존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한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 8. 28).

이상의 계획을 바탕으로 초등 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을 2020년에는 총 53만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상세 확대 계획은 다음 〈표 Ⅲ-1-14〉와 같다. 2018년, 6월에는 서울 구로구, 노원구, 성동구, 성북구, 대전 서구, 경기 시흥시, 오산시, 충남 홍성군, 전남 광양시의 9개 지역을 선정하여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8. 6. 28).

〈표 Ⅲ-1-14〉 연도별 돌봄 인원 확대계획

단위: 만명

구분		현재	확대계획						총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소계	
학교 돌봄	돌봄교실	24	1.4	1.4	1.4	1.4	1.4	7	31
	교실활용(지자체)	-	선도사업			1.5	1.5	3	3
마을돌봄		9	0.2	1.2	2.2	2.2	4.2	10	19
총계		33	1.6	2.6	3.6	5.1	7.1	20	53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참고자료(2018. 4. 5).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

온종일돌봄체계의 도입과 추진에 있어 33만명에서 53만명으로 돌봄아동수를 목표로 하는 과정에서, 학교돌봄(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과 마을돌봄(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이 동시에 추진되고 여기에 지자체별 인프라가 더해져 중복되고 산발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돌봄 확충의 추진체계와 지역별 인프라가 복잡하게 설계되어있으나, 돌봄 인프라의 확충과 이용자 저변 확대라는 목표의 달성, 즉 온종일돌봄체계의 도입과 양적 확충의 측면에서는 일정수준 달성되었다. 다만 이는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접근성과 질적 수요까지 충족되어야 수요자가 체감하는 구체적 성과의 달성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수요자 관점을 고려한 평가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마. 일·가정 양립 일상화

1)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및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정부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 각각 1년씩 총 2년씩 사용 가능)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해왔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 1. 24).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인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를 2014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해왔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 1. 24).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삶의 질이 나아졌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 혁신의 목표이므로, 앞으로도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삶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밝혔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 5. 18). 이를 위하여 정부는 기존 육아휴직 정책을 강화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향상하여 휴직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였다.

2019년 1월,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상승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제도 변동 전까지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 1. 24). 정부는 이를 통하여 소득 감소

를 이유로 주로 저소득자로 추정되는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던 근로자들의 육아휴직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 1. 24).

또한 정부는 2019년부터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월 상한액을 상향한다고 발표하였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 1. 1). 지금까지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번갈아가며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휴직한 자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월 최대 200만원)를 받았으나, 변동 이후로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였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 1. 1).

2019년 상반기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1,080명으로, 2018년 상반기와 비교할 때 30.9% 증가하였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 7. 29). 아울러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도 4,833명(남성 4,258명)으로 2018년 상반기(3,094명)에 비해 56.2% 늘어났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 7. 29). 아울러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도 4,833명(남성 4,258명)으로 2018년 상반기 기준(3,094명)에 비해 56.2% 늘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 7. 29).

다만 남성 육아휴직자 중 56.7%가 300인 이상의 비교적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규모가 기업에서만 큰 남성 육아휴직이 활성화된 것으로 파악하여 개선을 요하고 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 7. 29). 그러나 정부는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43.3%)이 지난해 같은 시기(40.8%)에 비해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남성육아휴직자 비율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 7. 29).

〈표 Ⅲ-1-15〉 남성 육아휴직 현황(2009년~2019년)

구분	남성 육아휴직자	
	전체 인원(명)	남성(명)
2009년	35,400	502
2011년	58,130	1,402
2013년	69,616	2,293
2015년	87,326	4,872
2017년	90,110	12,042
2018년	99,199	17,662
2018년 6월	50,087	8,466
2019년(예측치)	105,000	20,000
2019년 6월	53,494	11,080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9. 7. 29). 2019년 상반기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은 아빠!

〈표 Ⅲ-1-16〉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 현황(2014년~2019년)

구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		
	계(명)	남성(명)	여성(명)
2014년	91	82	9
2015년	1,345	1,171	174
2016년	2,703	2,396	307
2017년	4,409	3,896	513
2018년	6,606	5,737	869
2019년	9,000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9. 7. 29). 2019년 상반기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은 아빠!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와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에 대해서는 제도적 변화와 증가의 추이를 볼 때 2018-2019년 계획이 일정수준 달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제도적 확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우 낮은 수혜율과 대기업/공공기관 위주의 편중된 이용 패턴으로 인한 불균형의 수혜를 해소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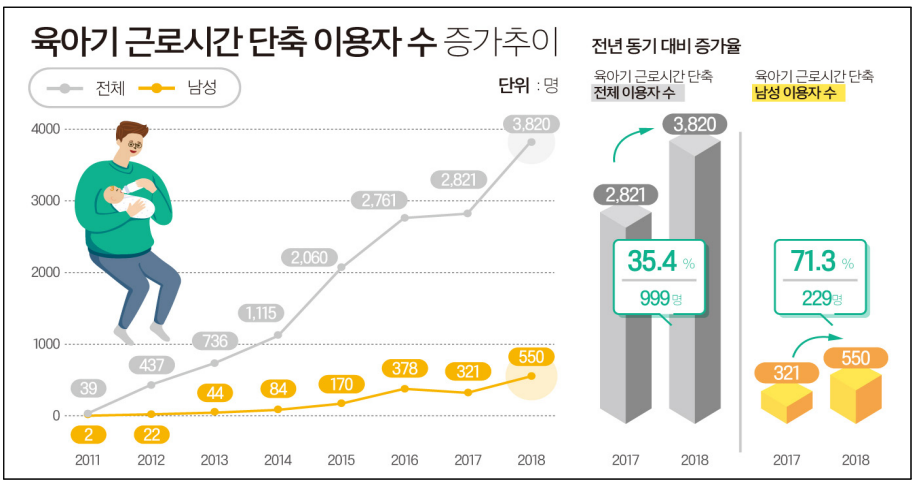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15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주에게는 정액의 지원금을 지급(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5. 6. 30)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2018년 7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하루 1시간이었으나 2시간부터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였고,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만 가능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2년간 사용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음을 밝혔다(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8. 7. 5). 또한 임금 지원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에서 하루 1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다(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8. 7. 5).

2018년 파악된 민간 부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는 3,820명으로, 전년도 2,921명보다 1,000명 가까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용자 중 남성 비율은 아직 14.4%에 지나지 않아 육아휴직 제도와 마찬가지로 한계점이 있다(그림 Ⅲ-1-7 참고).

[그림 Ⅲ-1-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 증가추이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9. 1. 24). 소중하고 확실한 행복, 아빠 육아휴직 1만7천명 돌파!

2019년 1월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부여 장려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는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매달 20만원씩 지급하던 장려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한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 1. 1).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성평등 관점의 저출산/육아정책의 추진이 완만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양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 어젠다와 관련된 제도적 정비가 양육의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데이터로 드러난 결과 외에도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정에서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고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6. 20). 여성의 육아시간과 참여도가 남성에 비해 여전히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부모의 양육과정에 대한 공동참여와 양육시간의 변화를 고려할 때 그 변화의 추이에 정부가 추진하는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양성이 함께 하는 가정양육의 중요성이 그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바. 출산에 대한 사회책임 확립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정부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3. 4).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으로, 산모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19. 6. 10, 인출[21]).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의 가격을 적용한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19. 6. 10. 인출).

2018년 기준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며, 전체 출생아의 22%인 8만명 정도가 지원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1. 21). 2018년에 이용한 이용자의 평균 만족도가 88점(100점 만점)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 제공 기관 수도 2014년에 337개소에서 2015년 404개소, 2016년 522개소, 2017년 664개소, 2018년 837개소로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3. 4).

2019년부터는 해당 서비스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로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종전보다 확대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1. 21).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정부는 서비스 지원 대상 산모가 약 3만 7천여명 증가하여 전체 출생아의 33%인 11만 7천명이 본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1. 21).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기존 유급 3일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로 확대

2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사회서비스 정책-사회서비스 사업,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60201&PAGE=1&topTitle=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019. 6. 10, 인출)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의 경우는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 10. 1). 또한 하루 1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인상(통상임금의 80→100%, 월상한 200만원)한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 10. 1). 청구 시기도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늘리고(현행의 경우 30일 이내임), 1회 나눠서 사용하는 것 역시 허용하는 등 노동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고자 한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 1. 24).

양육지원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있던 출산 전후 및 건강·의료에 대한 지원을 강조함으로써, 육아정책의 범주를 내용적 질적으로 확대 보강한 긍정적 성과를 보인다. 이로써 육아정책이 출산 전 태내기에 대한 산모와 태아에 대한 건강관리와 보호로부터 시작하고, 이후 출산 및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어머니와 아동에 대한 건강관리로 육아정책의 범위를 확대 및 체계화 하였다.

사.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문재인정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오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9. 2. 19). 이 중 정부는 2019년을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의 원년'으로 선포하기 위하여 종합대책인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2. 19). 포용국가 아동정책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 [그림 Ⅲ-1-8]과 같다.

[그림 Ⅲ-1-8] 포용국가 아동정책 주요 추진과제

비전	아동이 행복한 나라 “내일 만큼 오늘이 빛나는 우리”
4대 분야	10대 핵심 과제
보호권	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 혁신
	②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③ 보호종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인권·참여권	④ 누락 없는 출생등록
	⑤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 등 아동 권리 강화
	⑥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건강권	⑦ 아동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지원 강화
	⑧ 마음건강 돌봄 지원 강화 대책
놀이권	⑨ 아동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⑩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9. 5. 23). 포용국가 아동정책. p. 3.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아동 양육 책임을 사회와 가정이 함께 하는 것으로 하되 국가 책임을 확대해왔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2. 19). 앞서 언급한 아동수당 및 국공립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충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이 포함된 포용국가 아동정책 계획은 다음 [그림 Ⅲ-1-9]과 같다.

[그림 Ⅲ-1-9]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 건강, 취약아동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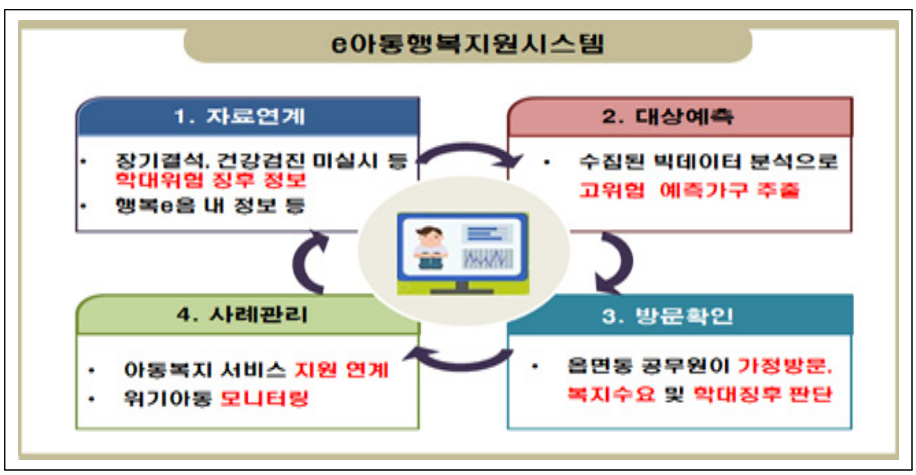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2019. 2. 19).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 인포그래픽 중 '건강', '취약아동 보호' 부분만 발췌

우선 아동 건강을 위하여 아동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을 대폭 낮추고('17년 10~20%→5%),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컸던 선천성 대사 검사와 난청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2. 19). 또한 2018년 12월부터 아동 건강 위해 요인 감소를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 금연 구역을 지정하였으며,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을 12세까지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2. 19). 아울러 최근 높아지는 소아비만을 감소시키기 위해 2018년 7월, 국가 비만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학교 내 비만예방교육 강화, 신체활동 장려 및 균형있는 영

양섭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9. 5. 23).

또한 2018년 4월에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장기결석 아동,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취약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2. 19).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18년 12월 기준 총 55,000명의 위기 예측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였으며, 이 중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2,333명의 아동에게 서비스를 연계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2. 19).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아동을 예측·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이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2017년부터 빅데이터 활용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도 활용된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2. 19). 2019년 2월 현재,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유치원·어린이집 출결,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 치료 중단 등 병원기록, 예방접종 미실시, 양육수당·보육료 미신청, 아동학대 전력, 아동복지시설 퇴소 등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2. 19).

[그림 Ⅲ-1-10]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 체계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 2. 19).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확대한다. p. 12.

〈표 Ⅲ-1-17〉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2018년 추진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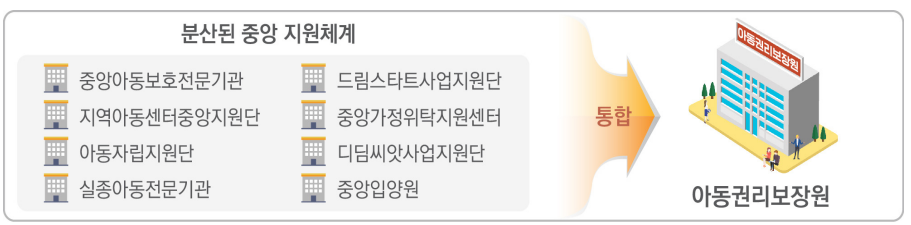
구분	위기예측 아동	서비스 연계 실적			기타 (문제없음. 정보오류 등)
		소계	복지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조사	
1차수(3.19~6.1)	21,992명	1,192명	1,169명	23명	20,800명
2차수(6.25~9.14)	18,602명	658명	651명	7명	17,944명
3차수(10.24~12.28)	14,770명	527명	513명	14명	14,243명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 2. 19).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확대한다.

또한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에 따라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2019년 10~11월에 실시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9. 29). 그동안은 2017년부터 초등학교 예비소집 과정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있는데,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도 일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공적 양육체계 내에서는 보육교사 등에 의해 일차적 사회 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반영하여, 가정 내에서 양육중인(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아동 약 2만 9000명을 중심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9. 29).

한편 정부는 그동안 여러 민간기관에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던 아동관련 중앙지원 기관들을 통합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2018년 12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함에 따라 마련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2. 19). 이 근거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은 7월에 설립되었고, 그동안 민간에 흩어져 분절적으로 수행되던 아동 관련 중앙지원업무를 통합하여 아동보호서비스를 통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7. 16).

[그림 Ⅲ-1-11]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안)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9. 5. 23). 포용국가 아동정책. p. 21.

〈표 Ⅲ-1-18〉 아동권리보장원 구성 조직

구분	사업지원단명	위탁기관	2019 예산 (백만원)	인력(명)
입양	①중앙입양원 (실종아동전문기관 포함)	-	7,193	27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②아동자립지원단	보건복지인력개발원	1,326.5	10
	③디딤씨앗지원사업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52	4
아동보호전달 체계지원	④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456(848)	11
	⑤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부스러기사랑나눔회	1,556	16
	⑥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	908	12
학대예방	⑦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1,592(1,006)	25
계			13,284(3,546)	142

자료: 류정희(2019).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방향 및 과제-아동보호체계의 재편을 중심으로. 2019년 제1차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 문재인정부 2주년 육아정책의 성과와 과제 자료집, 육아정책연구소, pp. 44-45.

아동권리에 기초한 아동기본계획의 수립은 국가수준의 출산 제고와 부모 대상 양육지원에 초점을 두었던 과거와는 다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긍정적 성과를 갖는 정책설계로 볼 수 있다.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와 아동학대예방시스템 등 취약요건에 있는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정책비전에서 제시한 보편적 아동정책으로서의 아동권 증진이 미약해보이는 가운데), 요보호아동과 학대예방이 취약한 상황에서 적절한 정책설계로 볼 수 있다. 제시된 정책 목표의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정책 성과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제에서 제시한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의 구축은 일정 수준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아. 유아 학습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법제화

정부는 2018년 유아교육발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놀이·유아 중심으로 유아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혁신하여 유아 중심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계획은 2018년 3월에 발표된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에 나타나 있는데, 본 계획에서 발표된 누리과정 혁신방향은 다음 〈표 Ⅲ-1-19〉와 같다.

〈표 Ⅲ-1-19〉 누리과정 혁신방향

현행 누리과정	구분	개편방향
-초등학교 준비교육 위주의 학습 -유아 개개인의 특성 반영 미흡	구성방향	-개별 유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내용 구성 최소화
-계획서 위주의 교사 주도적 교육 -구조화된 놀이학습 위주 교육	주요내용	-유아의 자유놀이 권장 -놀이 관찰과 기록, 교사-유아와의 질적 상호작용 등 강조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복잡한 구성(5개 영역-주제-소주제-단위활동)으로 현장의 자율적 구성에 한계	구성체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세부 내용 삭제

자료: 교육부(2018. 3).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공공성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p. 17.

정부는 현재 영어, 한글 등 초등학교 준비위주의 교육, 학습과 습득을 위한 주입식 교육으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유아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으므로, 개별 유아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자유놀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한다(교육부 보도자료, 2017. 12. 27). 이번 누리과정 개편은 3회의 전국 토론회, 5회의 현장 포럼, 3회의 현장교사 간담회, 4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서 교육 현장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교육부 유치원교육과정심의회, 보건복지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및 행정예고를 거쳐 2019년 7월에 최종 확정 발표되었다(교육부 보도자료, 2019. 7. 19). 본 개편 누리과정의 특징은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며,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서 구성 체계를 확립하고 내용 구성 간략화를 통한 현장 자율성을 확대하며, 교사의 누리과정 실행력을 지원한다(교육부 보도자료, 2019. 7. 19).

또한 교원 역량강화를 통하여서 유아중심의 교육을 위한 지도방법 변화를 촉진하고, 유아와 현장이 중심이 되도록 혁신 유치원[22]을 2017년 33개원에서 2022년에는 130개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교육부, 2018. 3 : 18-19). 또한 무분별한 특성화 프로그램(과도한 영어 등) 위주의 방과후 과정을 개선하고, 놀이와 돌봄이 중심이 되는 방과후 놀이유치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여 2018년 기준 10개에서 2022년에는 5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교육부 보도자료, 2017. 12. 27).

22) 구성원 간 참여와 소통, 개방과 협력, 공감과 지원으로 함께 유아중심의 혁신교육문화를 만들어 가는 공·사립 유치원

〈표 Ⅲ-1-20〉 방과후 놀이유치원 운영 주요사항(안)

주요 내용
-(운영 주체) 방과후 전담인력(교원 및 유치원 밖의 놀이조력자가 지원 가능) -(운영 주체의 역할) 유아 스스로 놀이를 주도할 수 있도록 운영 주체의 개입과 통제를 최소화하고, 유아가 자발적으로 놀이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조성 -(운영 형태) 지역적 특수성, 유치원 환경 등을 놀이 자원으로 충분히 활용

자료: 교육부(2018. 3). 공공성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p. 21.

국정과제를 위한 추진과제의 하나인 '유아 중심으로 교육패러다임 전환' 외에도 '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획되어 있다(교육부, 2018. 3: 20). 정부는 현재 무분별한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의 방과후 과선을 개선하여 방과후과정의 역할을 정립하고, 선행학습, 교과 위주의 특성화 과정을 운영하여 유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프로젝트 방식을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교육부, 2018. 3: 20).

놀이와 유아 중심의 누리과정 개정이 갖는 의미가 크며, 특히 유아 학습 및 휴게시간에 대한 법제화는 아동 중심의 정책 의지가 잘 반영된 설계로 보인다. 누리과정의 개편은 달성되어 현장에 안착시키는 연수와 보급의 과정이 계획대로 시행중에 있다. 다만 사교육·보육에 대한 수요와 욕구가 비등한 상황에서 정책 목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놀이중심, 유아중심의 누리과정과 방과후과정이 교원의 전문성과 양질의 상호작용 실행에 기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동 중심의 교육과정 및 시간 설계는 교사의 자격·양성·교육·복지 체계의 정비 및 기관/지역 인프라의 물리적환경 개선이라는 유보 격차 해소의 국정과제 이행과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자. 소결

앞서 논의한 8개 주요 핵심과제의 연도별 추진계획 및 목표 대비 달성도를 점검한 결과, 8개 과제의 실행 목표가 제도 도입과 확대 위주로 설정되어 있으며,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와 유아 학습/휴식시간 보장, 일·가정양립 일상화를 제외한) 다수의 핵심과제가 연도별 계획대로 일정수준 이상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실천계획이 ① 아동수당 제도 도입(달성), ② 국공립어린이집 및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제고(40%)(달성), ③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미달

성), ④ 온종일 돌봄체제 도입(아이돌보미 확충 및 질관리를 통한 가정양육지원 여건 개선 포함)(어느정도 달성), ⑤ 일·가정 양립 일상화(남성)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도입 달성), ⑥ 출산에 대한 사회책임 확립(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달성), ⑦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건강, 취약아동보호-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중앙지원체계 통합-아동권리보장원 설립)(달성), ⑧ 유아 놀이 보장-누리과정 개편(달성) 및 유아 학습/휴식시간 보장(달성도 평가 보류)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제도의 도입과 인프라 등의 확대를 위해 설정한 실행 계획이 달성되었어도, 현장에서 체감하고 도입된 제도적 기반과 확대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성과평가와 효과분석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의 보편적 현금지원의 확대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러한 정책 목표의 설정은 적절한 것이었고, 양육부담의 완화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이라는 아동수당 도입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등 단기 달성도 평가에 이어 실행계획과 목표의 달성이 갖는 육아정책의 성과와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달성 여부와 성과가 육아환경의 제 요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모니터링(효과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절에서 논의한 8개 과제의 이행과정과 성과는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향후 개별 과제의 달성도 평가 외에 육아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육아정책 성과평가(1)-전문가 조사 분석

이 절에서는 전문가 응답 결과에 기초하여 육아정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우선 평가의 대상이 되는 (1) 육아정책의 범주 구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고, (2) 육아정책 국정과제(17개)에 대한 주관적 성과평가를 7점척도로 질문하였다. 이어서 (3) 육아정책 전반과 3개 분야(저출산, 유아교육보육돌봄, 아동 정책)별로 국정과제 수행 달성도를 평가하였으며, (4) 정책 수행의 과정을 고려하여 육아정책의 단계(계획-실행-성과)와 요소(효과성, 형평성, 지속가능성 등 8개 요소)별로 평가하게 하였다. 끝으로 (5) 육아정책의 중장기 효과를 국가-부모-아동-기관 수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며, 그 밖에 육아정책의 주요 전략과 우선적으로 실행이 요구되는 중요 과제와 성과달성이 미흡한 과제 등 정책 제언을 묻는 질문과

오픈응답이 있었다(부록 1. 전문가 조사 설문지 참조).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담도 이루어졌다.

가. 육아정책의 범주 재구조화에 대한 의견

육아정책의 범주에 대한 적절성을 육아 관련 전문가에게 질문한 결과, 적절하다(4+5+6점)는 긍정 응답의 합이 66.0%, 적절하지 않다(1+2+3점)는 부정 응답의 합이 14.2%로, 7점 척도 평균 4.9점('적절한 편')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교육 전문가의 적절성 평균 점수(5.3점)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사회복지/정책 분야 전문가의 적절성 평균 점수(4.2점)가 다소 낮았다.

〈표 Ⅲ-2-1〉 육아정책 범주 구성 관련 의견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적절치 않음	적절치 않음	적절치 않은 편	보통	적절한 편	적절함	매우 적절	계(수)	7점 평균
전체	0.9	6.6	6.6	19.8	26.4	35.8	3.8	100.0(106)	4.9
유아교육/교육	0.0	6.5	4.3	8.7	21.7	50.0	8.7	100.0(46)	5.3
보육/아동/가족	0.0	5.6	11.1	16.7	33.3	33.3	0.0	100.0(36)	4.8
사회복지/정책	4.2	8.3	4.2	45.8	25.0	12.5	0.0	100.0(24)	4.2
$X^2(df)$/F				29.067(12)**					6.7**

주: 본 연구를 위한 '2018-2019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대상 조사' 결과임.
** $p < .01$.

범주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오픈응답을 살펴보면, 대체로 현행 부처의 수행체계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무리가 없는 분류이며, 체계성을 갖고 있다는 긍정 응답이 주를 이루었으나, 구분된 영역 간에 균형성과 중복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영역/구분 간에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저출산정책이 각 부처의 정책들을 모아놓은 집합체로 구성된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있었다. 이로써 저출산정책과 육아정책의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는 저출산정책 의제 설정의 모호함으로 보여진다는 비판적 의견이 있었다. 저출산정책과 다른 정책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부모 대상의 지원 정책을 저출산정책으로 구성하고, 아동/유아 대상의 정책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저출산정책이 삶의 질 전반의 제고와 일·가정양립 위주의 정책, 그리고 인구구조와 출산 관련 총괄 기능을 반영한 영역으로 재구조화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긍정적 의견 중에서는 제시된 육아정책의 범주가 전반적으로 아동과 부모, 기관, 지역사회 등 대상과 기능 중심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특히 아동 중심의 정책 분류를 반영한 점이 긍정적이며, 추후 아동의 발달 및 가족 생애 주기(출산/신생아기-영아기-유아기-학령전기-학령후기 등)를 고려한 정책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 있었다. 반면에 대상 중심의 분류인지, 정책 내용 중심의 분류인지,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부정 응답도 있었다. 한편 정책의 범주와 분류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저출산정책의 궁극적 목적 달성이 요원해지고 패러다임 전환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저출산정책이라는 용어 사용에서부터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즉 저출산대응정책 또는 저출생정책으로 바뀌어야 하며, 저출산정책을 육아정책의 범주에서 접근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재구조화에 대한 검토 요구가 있었다.

나.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17개)에 대한 전문가 성과평가

문재인정부의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17개(하위과제 6개 포함)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을 질문한 결과, 7점 평균 3~4점대로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잘 못하는 편'에 가까운 응답으로 평정되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응답 비율의 합이 54.7%로 긍정 응답 과반을 넘은 유일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긍정 응답률이 높은 국정과제로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긍정 응답 46.2%,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투자 강화' 43.4%,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40.6%,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여가부)' 39.6%로 40%대의 긍정 응답을 보였다.

〈표 Ⅲ-2-2〉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성과 평가

단위: %(명), 점

구분	관련 국정과제	긍정비율	7점 평균	계(수)
1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40.6	4.0	100.0(106)
2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복지부)	23.6	3.5	100.0(106)
3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33.0	3.8	100.0(106)
4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15.1↓	3.2	100.0(106)
5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교육부)	40.6	3.9	100.0(106)
6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교육부)	26.4	3.5	100.0(106)
7	아동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27.4	3.9	100.0(106)

구분	관련 국정과제	긍정비율	7점 평균	계(수)
8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교육부)	34.9	3.9	100.0(106)
9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여가부)	39.6	4.1	100.0(106)
1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	54.7↑	4.6	100.0(106)
11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여가부)	38.7	4.0	100.0(106)
12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28.3	3.7	100.0(106)
13	-일·가정 양립 일상화	34.9	3.8	100.0(106)
14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18.9↓	3.2	100.0(106)
15	자녀 출산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34.9	3.8	100.0(106)
16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투자 강화	43.4↑	4.2	100.0(106)
17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46.2↑	4.2	100.0(106)

주: 본 연구를 위한 '2018-2019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대상 조사' 결과임.

〈5대 정책 목표〉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더불어 잘사는 경제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출처: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p. 15.

반면에 '강력한 저출산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15.1%,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18.9%로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긍정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육아정책의 최상위 목표인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 40.6%, 못하고 있다 39.6%로 7점 평균 4점의 '보통' 수준으로 평정되었으며,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투자 강화', '온종일 돌봄의 실현'과 같은 국정과제에서 긍정적 평가 어느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의 중요도 및 실행수준 평가

제시된 국정과제에 대해 중요도와 정책 추진과 실행이 잘 된 부분, 상대적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각각 1, 2순위로 평정하게 한 결과, 먼저 국정과제 중요도 우선 순위에서는 (1+2순위 중복응답 기준) 포괄적인 상위 목표에 해당하는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31.1%)가 중요도 1순위로 응답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23.6%), '아동·청소년의 안전하

고 건강한 성장'(17.0%)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 일상화'(16.0%)와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14.2%)에 대한 중요도 역시 우선순위에서 긍정적으로 응답되었다.

한편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2.8%)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3.8%),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3.8%)'에 대한 중요도 우선순위는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되었다.

〈표 Ⅲ-2-3〉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중요도 및 실행수준 (성과)평가

단위: %

구분	관련 국정과제	중요도		실행 우수		실행 미흡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23.6↑	31.1↑	5.7	6.6	3.8	16.0
2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복지부)	5.7	12.3	-	1.9↓	14.2	20.8
3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16.0↑	23.6↑	3.8	4.7↓	8.5	18.9
4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6.6	11.3	-	0.9↓	16.0↑	22.6↑
5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교육부)	8.5	19.8	18.9↑	29.2↑	7.5	15.1
6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교육부)	1.9↓	3.8↓	2.8	7.5	7.5↑	21.7↑
7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8.5↑	17.0↑	3.8	8.5	3.8	9.4
8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교육부)	2.8	6.6	1.9	8.5	1.9	5.7
9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여가부)	2.8	7.5	6.6	14.2	1.9	3.8↓
1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	0.9↓	3.8↓	19.8↑	27.4↑	0.9	0.9↓
11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여가부)	4.7	5.7	6.6	11.3	8.5	10.4
12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3.8	9.4	1.9	5.7	2.8	7.5
13	-일·가정 양립 일상화	4.7	16.0↑	4.7	11.3	6.6	12.3
14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5.7	14.2↑	0.9	4.7	13.2↑	20.8↑
15	자녀 출산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2.8	9.4	2.8	10.4	2.8	8.5
16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투자 강화	0.9	5.7	8.5	21.7↑	-	2.8↓
17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	2.8↓	11.3↑	25.5↑	-	2.8↓

주: 1) (1+2순위 중복응답 기준) 20% 이상 긍정 응답 항목에 대해 음영 표기
2) 본 연구를 위한 '2018-2019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대상 조사' 결과임.

정부 정책의 추진과 실행이 우수한 국정과제로 (1+2순위 중복응답 기준) '교육의 공공성 강화'(29.2%)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27.4%), '공공성 높은 온종일돌봄 실현'(25.5%) 그리고 '아동·가족에 대한 사

회적지지 및 투자 강화'(21.7%)에 대한 실행 우수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0.9%)와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1.9%)에 대한 우선순위 응답은 적게 나타났다.

실행이 미흡한 과제로는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22.6%),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21.7%),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20.8%)이 높은 순으로 응답되었다.

제시된 국정과제가 지향하는 목표와 정책의 층위, 구체적으로 포괄하는 범위가 다르고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평정인 만큼, 과제 간의 비교가 엄밀히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국정과제 「중요도-실행우수-실행미흡」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를 살펴보면, 저출산정책의 경우 높은 중요도에 비해 구체적인 정책 추진과 실행이 미흡한 것으로, 특히 정책 추진의 컨트롤타워 기능 측면에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의의 육아정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상위의 목적에 해당하는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의 중요도 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실행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행이 우수한 과제로는 교육부의 '공공성 강화' 정책의 추진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구체적인 정책 입안으로 성과가 드러난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가족 지원', 그리고 '돌봄 정책' 추진과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 투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의 정책 추진과 실행이 높게 평가된 것에 비해,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과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에 대한 실행과 추진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컨트롤타워 기능과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한편 정부의 아동수당의 도입 등 양육비용 지원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대, 온종일 돌봄 구축과 공공성에의 노력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라. 육아정책 분야별 국정과제 수행의 달성도 인식 평가

1) 저출산분야 달성도 인식 평가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추진한 구체적 정책 과제의 '달성도'에 대한 질문으로, 육아정책의 범주별(저출산-유아교육·보육·돌봄-아동-육아정책 전반)로 세부

정책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전문가가 7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먼저 저출산정책과 관련된 개별 과제별 달성도 결과를 살펴보면, 구체적 정책 추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기타지원 확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다자녀지원 등)'에 대한 달성도 평가가 긍정 응답률 72.6%(7점 척도 평균 5.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의료비지원 강화'(70.8%), '양육지원체계 개편'(66.0%),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65.1%)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약계층 등) 포용적 가족정책'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에 대한 달성도 평가가 과반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응답되었다.

상대적으로 '아동수당의 도입과 연령 확대'(21.7%), '저출산 패러다임과 전환(삶의 질 제고)'(25.5%)에 대한 전문가의 달성도 평가가 낮게 나타났다.

오픈응답을 통해 살펴보면, 아동수당과 관련해서는 아동수당의 도입과 연령의 확대라는 구체적인 정책 성과보다는, 현금지원이라는 비용 중심의 지원체계를 도입한 것에 대한, 즉 정책 설계와 내용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일부 현금지원의 비용수준에 대한 불만족 의견도 있었다.

〈표 Ⅲ-2-4〉 육아정책 저출산 분야 국정과제 수행 달성도 인식 평가

단위: %(명), 점

구분	관련 국정과제	긍정 비율	7점 평균	계(수)
1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25.5↓	3.5	100.0(106)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54.7	4.4	100.0(106)
3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51.9	4.5	100.0(106)
4	육아시간 지원	49.1	4.3	100.0(106)
5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65.1↑	4.7	100.0(106)
6	부모의 노동권 보장	34.0	4.1	100.0(106)
7	부모의 육아권 보장	37.7	4.0	100.0(106)
8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21.7↓	5.5	100.0(106)
9	출산·양육 세제 개선	47.2	4.5	100.0(106)
10	양육지원체계 개편(보육료-수당 관련 개편)	66.0↑	4.7	100.0(106)
11	의료비 지원 강화(영유아의료비제로화, 임신출산의료비경감 등)	70.8↑	5.2	100.0(106)
12	기타지원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다자녀지원 등	72.6↑	5.1	100.0(106)
13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포용적 가족정책	57.5	4.7	100.0(106)
14	(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혁신	50.0	4.5	100.0(106)
15	종합적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	47.2	4.3	100.0(106)

주: 본 연구를 위한 '2018-2019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대상 조사' 결과임.

(삶의 질 제고로의)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달성도 평가가 낮은 이유로 전문가 오픈응답을 살펴본 결과, 저출산패러다임의 전환이 공표되었고 이러한 방향성에 동의할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과 프로그램이 좀 더 고민되고 제시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사회적으로 출산과 출생이 필요하다는 현재의 접근이 젊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전혀 다가가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변화하는 가치관과 문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사실상 저출산/저출생보다 고령화가 더 문제라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현실을 냉정히 파악하고 젊은 세대에 좀 더 다가가는 정책설계에 대한 중장기적인 접근과 철학적 고민이 함께 반영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유아교육·보육·돌봄 분야 달성도 평가

이어서 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의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추진한 개별 정책 과제의 '달성도' 평정 결과,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67.0%, 7점 척도 평균 4.9점)에 대한 긍정평가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60.4%), '놀이중심의 누리과정 개편'(57.5%)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과반을 넘게 나타났다.

〈표 Ⅲ-2-5〉 육아정책(유아교육·보육·돌봄 분야) 관련 국정과제 수행 달성도 평가

단위: %(명), 점

구분	관련 국정과제	긍정비율	7점 평균	계(수)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편	57.5↑	4.5	100.0(106)
2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60.4↑	4.6	100.0(106)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41.5	4.1	100.0(106)
4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	45.3	4.4	100.0(106)
5	사립민간 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35.8	4.2	100.0(106)
6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31.1↓	3.8	100.0(106)
7	보육서비스 질 제고	45.3	4.3	100.0(106)
8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55.7	4.7	100.0(106)
9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관리체계	55.7	4.7	100.0(106)
10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67.0↑	4.9	100.0(106)

구분	관련 국정과제	긍정비율	7점 평균	계(수)
11	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50.0	4.4	100.0(106)
12	육아지원의 확대	52.8	4.6	100.0(106)
13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	47.2	4.3	100.0(106)
14	아이돌보미, 육아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53.8	4.6	100.0(106)
15	취학전 출발선 평등	36.8	4.0	100.0(106)
16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	34.9↓	4.0	100.0(106)
17	양육비 부담 완화	49.1	4.4	100.0(106)

주: 본 연구를 위한 '2018-2019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대상 조사' 결과임.

한편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31.1%)와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34.9%)에 대한 달성도에서 긍정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 온 유보통합을 명시적인 국정과제로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정책의 추진이 사실상 중단되었다는 의견과 격차가 벌어지는 양상을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격차 완화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과제(예: 교사 양성과정 자격 일원화)의 추진이 부재한 점, 그리고 아동수가 감소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유보일원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는 의견이 있었다.

'놀이중심의 누리과정 개편'의 달성도가 과반이상의 긍정 응답률로 우수하게 평가된 것에 비해, 아동의 놀 권리와 놀이시간의 확대라는 전반적인 변화는 실질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누리과정의 개편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실제 아동 입장에서 놀 권리의 확보는 과제로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아동의 놀 권리와 놀이시간 확대를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부모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 정책의 변화 없이 놀 권리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3) 아동 분야 달성도 평가

아동 정책의 개별 정책과제 '달성도'를 평가한 결과,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개편하는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평가가 과반 이상의 긍정 응답률을 보이며 높게 평가되었다. 상대적으로 '부모의 육아행복감 증진'에 대한 달성도 평가는 저조하게 나타났다.

〈표 Ⅲ-2-6〉 육아정책(아동 분야) 관련 국정과제 수행 달성도 평가

단위: %(명), 점

구분	관련 국정과제	긍정비율	7점 평균	계(수)
1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편	36.8	4.3	100.0(106)
2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체계 개편)	54.7↑	4.5	100.0(106)
3	아동권리보장(4영역: 보호, 참여, 건강, 놀이)	39.6	4.3	100.0(106)
4	아동정책 (수혜)의 사각지대 보완	41.5	4.2	100.0(106)
5	부모의 육아 행복감	23.6↓	3.6	100.0(106)
6	아버지의 양육참여	44.3	4.1	100.0(106)
7	아동의 웰빙/행복	44.3	4.1	100.0(106)

주: 본 연구를 위한 '2018-2019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대상 조사' 결과임.

'부모의 육아행복감' 증진 달성이 상대적으로 미비했던 이유로 오픈응답을 살펴보면, 기업문화의 변화가 어려운 점(즉 일·가정 양립의 현실적 어려움), 여전히 경쟁적인 사회구도 속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현실과 입시 등 교육정책이 영유아기에까지 미치는 영향, 경제적·사회적으로 한국사회의 불안감 고조로 육아행복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육아행복감을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다.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요보호아동의 보호체계 구축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지난 2년간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았고 인력 보강과 전문성 강화의 대책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의견, 시설보호 아동과 학대경험 아동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과 해당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체계가 제대로 갖춰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동의 웰빙/행복'에의 달성도 평가가 긍정적으로 응답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 육아정책 성과 세부평가(1, 2순위 응답)

제시된 육아정책의 세부과제(39개)를 전문가에게 모두 제시하고 성과가 가장 큰(즉 수요자 효능감이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 정책과제와 그렇지 않은 성과가 가장 적은 정책, 그리고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을 1, 2순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가시적으로 성과가 우수한 정책과제로는 아동수당의 도입과 연령 확대와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가 (1+2순위 중복응답

기준) 각 25.5%, 2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놀이중심의 누리과정 개편, 의료비지원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경우 정책 성과가 크다는 응답과 적다는 응답이 약 10% 내외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평가가 엇갈리는 과제로 해석된다.

성과가 미흡한 정책과제와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할 과제는 비슷한 응답패턴을 보였는데, 먼저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저조한 성과평가와 향후 우선집중과제라는 응답이 모두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성과가 미흡한 정책과제에 대한 응답은 아동의 웰빙과 행복, 유치원-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부모의 육아행복감과 부모의 육아권 보장의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요하거나 우선 집중이 필요한 정책 과제로는 저출산패러다임 전환 다음으로, 아동의 웰빙/행복,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와 부모의 육아행복감, 그리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온 유보통합의 추진이 중단되고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로 과제화 되었으나, 실제 가시적으로 체감한 부분이 없었다는 의견이 있으며, 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정책의 추진과 기여도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의 질과 안정성에 대한 정책과제의 수행이 불변의 중요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의 행복과 웰빙, 부모의 육아행복감 회복과 증진이 성과가 가장 미흡하고 향후 우선적으로 집중해야할 과제로 중요하게 제시되었다.

〈표 Ⅲ-2-7〉 육아정책 관련 성과 세부 평가(1, 2순위 응답)

단위: %

구분	관련 국정과제	성과 큰 정책		성과 적은 정책		집중 필요 정책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2.8	4.7	22.6↑	29.2↑	22.6↑	24.5↑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8.5	12.3	2.8	3.8	4.7	5.7
3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1.9	2.8	3.8	5.7	1.9	4.7
4	육아시간 지원	-	0.9	-	0.9	-	-
5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8.5	14.2↑	0.9	0.9	0.9	1.9
6	부모의 노동권 보장	-	0.9	4.7	0.9	-	0.9
7	부모의 육아권 보장	1.9	1.9	0.9	7.5	6.6	13.2
8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15.1↑	25.5↑	-	0.9		0.9
9	출산·양육 세제 개선	0.9	1.9	0.9	1.9	0.9	0.9

구분	관련 국정과제	성과 큰 정책		성과 적은 정책		집중 필요 정책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0	양육지원체계 개편(보육료-수당 관련 개편)	0.9	2.8	0.9	2.8	1.9	2.8
11	의료비 지원 강화(영유아의료비제로화, 임신출산의료비경감 등)	8.5	15.1↑	-	-	-	-
12	기타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다자녀지원 등	-	0.9	-	0.9	-	-
13	(취약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등) 포용적 가족정책	0.9	1.9	2.8	3.8	-	-
14	(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혁신	-	0.9	4.7	8.5	3.8	3.8
15	종합적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	1.9	2.8	3.8	6.6	4.7	6.6
16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편	14.2↑	18.9↑	3.8	5.7	1.9	4.7
17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12.3↑	20.8↑	1.9	5.7	2.8	5.7
18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5.7	10.4↑	4.7	9.4↑	2.8	6.6
19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	-	2.8	1.9	1.9	1.9	3.8
20	사립민간 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0.9	1.9	3.8	4.7	0.9	1.9
21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	-	6.6	11.3↑	8.5	14.2↑
22	보육서비스 질 제고	-	0.9	1.9	4.7	1.9	5.7
23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3.8	13.2↑	-	0.9	1.9	2.8
24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관리체계	1.9	4.7	-	3.8	0.9	4.7
25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9	4.7	0.9	0.9	-	1.9
26	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0.9	6.6	2.8	5.7	0.9	7.5
27	육아지원의 확대	0.9	1.9	-	1.9	-	2.8
28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	-	1.9	2.8	5.7	4.7	12.3↑
29	아이돌보미, 육아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	0.9	0.9	0.9	0.9
30	취학전 출발선 평등	2.8	4.7	0.9	4.7	3.8	5.7
31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	0.9	3.8	2.8	5.7	-	3.8
32	양육비 부담 완화	0.9	4.7	0.9	5.7	-	2.8
33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편	-	0.9	0.9	3.8	0.9	0.9
34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	0.9	1.9	0.9	5.7	2.8	6.6
35	아동권리보장(4영역: 보호, 참여, 건강, 놀이)	0.9	2.8	-	1.9	-	3.8
36	아동정책 (수혜)의 사각지대 보완	-		-	-	-	4.7
37	부모의 육아 행복감	-	0.9	1.9	10.4↑	5.7	14.2↑
38	아버지의 양육참여	-	-	0.9	-	0.9	0.9
39	아동의 웰빙/행복	-	1.9	9.4	17.0↑	7.5	16.0↑

주: 본 연구를 위한 '2018-2019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대상 조사' 결과임.

바. 육아정책의 평가: 단계/요소별 평가

1) 육아정책의 계획-실행-성과 단계별 평가

육아정책의 평가를 육아정책 전반과 정책별로 정책의 계획 수립과 실행과 추진, 성과의 3단계에 대해 평가하게 한 결과, 육아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7점 척도 평균

4.0~4.2점으로 보통 수준을 보였다. '육아정책 전반'의 경우 '계획수립'에 대한 긍정 응답률이 정책의 '추진과 실행', '성과' 단계와 비교하여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계획 수립과 실행과 추진, 성과의 3개 측면에서 돌봄정책에 대한 평가가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보육정책과 아동정책에 대한 평가가 우수하였다. 저출산정책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표 Ⅲ-2-8〉 육아정책 계획-실행-성과 평가

단위: %(명), 점

구분	관련 국정과제	계획수립 평가		실행·추진 평가		성과		계(수)
		긍정비율	7점 평균	긍정비율	7점 평균	긍정비율	7점 평균	
1	저출산정책	27.4	3.3	19.8	3.2	20.8	3.1	100.0(106)
2	유아교육정책	38.7	4.1	37.7	3.9	34.9	4.0	100.0(106)
3	보육정책	47.2	4.3	41.5	4.2	44.3	4.2	100.0(106)
4	돌봄정책	50.9	4.4	48.1	4.3	45.3	4.3	100.0(106)
5	아동정책	45.3	4.3	40.6	4.2	39.6	4.1	100.0(106)
6	육아정책 계획 전반	43.4	4.2	36.8	4.0	41.5	4.1	100.0(106)

주: 본 연구를 위한 '2018-2019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대상 조사' 결과임.

2) 육아정책의 구체적 설계-의제-수행체계-투입요소-집행 평가

구체적 육아정책의 설계(정책의 내용과 구성)와 정책 의제 설정(사회적 이슈와 관련문제, 내재된 욕구를 제대로 반영), 투입요소(예산과 인력/조직), 수행 및 전달체계, 집행(서비스 산출)로 나누어 실시한 전문가 평가 결과, 육아정책의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의 설계, 즉 '정책의 내용과 구성'에 대한 평가가 7점 평균 4.9점으로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정책 의제의 설정'으로 당면한 사회적 이슈와 문제, 내재된 욕구를 잘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를 실제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과 인력 등의 '투입요소와 수행/전달체계', 구체적인 정책 집행으로 '산출된 서비스 성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긍정 응답되었다. 남은 임기 동안 계획된 정책 내용과 의제를 구체적으로 추진, 실행하고 서비스로 산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겠다.

〈표 Ⅲ-2-9〉 구체적 정책설계-정책의제설정-투입요소-수행체계-정책집행 평가[23)]

단위: %(명), 점

구분	관련 국정과제	긍정비율	7점 평균	계(수)
1	육아정책 구체적 정책 설계 평가	66.0↑	4.9	100.0(106)
2	육아정책 정책 의제 평가	50.0↑	4.2	100.0(106)
3	육아정책 투입요소 평가	26.4	3.7	100.0(106)
4	육아정책 수행 및 전달체계 평가	26.4	3.8	100.0(106)
5	육아정책 정책집행 평가	27.4	3.8	100.0(106)

주: 본 연구를 위한 '2018-2019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대상 조사' 결과임.

3) 육아정책의 평가요소별 평가

정책을 평가하는 주요 요소별로 전문가에게 질문한 결과, 정책 추진과 실행의 '노력'에 대한 평가가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적· 포괄적 정책 설계와 추진'에 대한 긍정 평가가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포괄성'은 '형평성' 요소 평가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영되었다. 반면 비용투입 대비 '효율성'과 구체적 정책타겟 집단과 수요자에의 욕구 충족의 '대응성'과 '추진체계'에서는 긍정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육아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형평성 요소에서 상대적으로 긍정 평가 되었다.

〈표 Ⅲ-2-10〉 육아정책 관련 평가요소별 평가

단위: %(명), 점

구분	요소	1	2	3	잘 안된편 (1+2+3)	4 (중간)	5	6	7	잘 된편 (5+6+7)	7점 평균	계(수)
1	효과성	5.7	17.0	16.0	38.7	29.2	25.5	6.6	-	32.1	3.7	100.0(106)
2	효율성	3.8	19.8	27.4	50.9	26.4	17.9	3.8	0.9	22.6↓	3.5	100.0(106)
3	형평성	0.9	9.4	23.6	34.0	23.6	30.2	11.3	0.9	42.5↑	4.1	100.0(106)
4	적절성	2.8	13.2	21.7	37.7	29.2	21.7	10.4	0.9	33.0	3.9	100.0(106)
5	포괄성	1.9	7.5	11.3	20.8	26.4	31.1	18.9	2.8	52.8↑	4.5	100.0(106)
6	노력	-	4.7	12.3	17.0	17.0	37.7	22.6	5.7	66.0↑	4.8	100.0(106)

23) 문15. (구체적 정책 설계) 제시된 육아정책(예: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현금지원 확대, 돌봄체계 구축 등)의 주요 계획을 고려할 때, 육아정책의 내용과 구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16. (정책의제평가) 육아정책의 의제가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 관련 사회적 이슈와 문제, 내재된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17. 귀하는 상기한 '육아정책' 전반의 수행 및 전달 체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18. (투입요소평가) 결과/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집행체계(예: 예산, 인력/조직 등 거버넌스, 전달체계)는 적절히 구성되어 작동하고 있습니까?
문19. (정책집행평가) 육아정책이 의도하는 서비스가 제대로 산출되고 있습니까?

구분	요소	1	2	3	잘 안된편 (1+2+3)	4 (중간)	5	6	7	잘 된편 (5+6+7)	7점 평균	계(수)
7	대응성	3.8	13.2	21.7	38.7	32.1	20.8	7.5	0.9	29.2↓	3.8	100.0(106)
8	추진체계	-	15.1	19.8	34.9	35.8	19.8	9.4	-	29.2↓	3.9	100.0(106)
9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1.9	19.8	16.0	37.7	24.5	28.3	8.5	0.9	37.7	3.9	100.0(106)

주: 본 연구를 위한 '2018-2019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대상 조사' 결과임.

■ 효과성: 목표성취 - (가시적인, 가치 있는) 결과가 나타났는가?
■ 효율성: 비용 등 투입 대비 산출 및 대상 설정(targeting)의 적절성
■ 형평성: 비용과 편익이 여러 집단 사이에 형평성 있게 배분되었는가?
■ 적절성: 가치 있는 결과가 어느정도 문제를 해결하였는가. 즉 전체적인 성과의 정도가 전체 욕구 수준에 어느정도 부합하였는가?
■ 포괄성: 정책의 대상과 내용 설계에 있어 (기존 대비) 사회적 취약계층과 사각지대를 포괄하여 전체 수요자를 대상으로 정책화하는데 얼마나 성공적인가?
■ 노력: 정책수행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가?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노력을 위한 역량이나 노력 그 자체에 초점을 둠.
■ 대응성: 성취된 정책결과가 해당집단의 욕구, 선호, 가치 등을 만족시켜주는가. 즉 정책이 수혜자/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것에 얼마나 제대로 대응하는가?

자료: 문항 구성에 '권기헌(2010). 정책분석론. 박영사'를 참조함.

사. 육아정책의 중장기효과 분석을 위한 지표별 현재수준 및 정책기여도 평가

1) 국가-부모-아동-기관 영역 총괄

정부의 국정과제와 부처별로 수행되는 개별 정책의 추진과 목표달성 및 성과가 현재와 향후 육아 환경 전반에 미치는 중장기 효과에 대한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육아정책의 대상이자 주체가 되는 국가-부모-아동-기관 영역별 주요 지표 12개에 대해 질문하였다. 제시된 지표별로 우리나라의 '현재 수준'이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해당 지표별로 현 정부의 정책들이 긍정적으로 '기여한 정도'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는지 7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표 Ⅲ-2-11〉 정책 효과평가-정책의 중장기 영향 평가 지표 및 항목

단위: 점(명)

구 분 (영역/지표)	국가 영역 (5개, 35점)		부모 영역 (3개, 21점)		아동 영역 (2개, 14점)		기관 영역 (2개, 14점)		사례수 (명)
	현재 수준	정책 기여도	현재 수준	정책 기여도	현재 수준	정책 기여도	현재 수준	정책 기여도	
전체	19.1	19.9	12.4	13.2	7.8	8.6	8.6	8.9	(106)
(100점 만점)	54.6	56.9	59.0	62.9	55.7	61.4	61.4	63.4	
유아교육/교육	19.7	19.7	12.7	13.3	7.9	8.4	9.2	9.2	(46)
보육/가족/아동	19.0	19.9	12.6	13.6	8.1	8.9	8.5	9.1	(36)
사회복지/정책/기타	18.1	20.5	11.4	12.2	7.2	8.3	7.5	8.3	(24)
F	0.9	0.2	1.4	1.1	1.2	0.5(a)	3.8*	1.1	

주: 본 연구를 위한 '2018-2019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대상 조사' 결과임.
* $p < .05$.

〈표 Ⅲ-2-12〉 국가/부모/아동/기관 영역 현재 수준 및 기여도 평가

구분		지표/항목
국가	출산율	- 출산율 제고
	접근성 (access, diversity)	- 다양한 서비스(교육·보육·돌봄, 종일제-시간제)에의 접근성 - 무상/의무 교육·보육 및 돌봄 체계(교육연한, 시간) 구축
	재정투자 확대	- GDP 대비 ECEC/가족복지 재정 비율 - 아동 1인당 보육·교육·돌봄 예산
	육아환경	- 지역사회 육아환경 조성 - 육아지원 인프라(센터, 공원, 도서관 등)
	삶의 질 전반	- 사회적 격차 완화(계층별, 출산율, 결혼율, 부모취업률, 양육비지출 차이) - Quality of Life(삶의 질, 육아친화문화 등)
부모	양육비용 부담 (affordability, 양육지원체계)	- 양육비용(평균, 편차, 양육비용부담비율) - 공-사 교육·보육·돌봄 비용 부담
		- 비용지원체계(서비스-현금 지원 조합 및 선택권) - 보건의료 지원(산전-산후 출산지원, 양육지원 - 포용성(inclusiveness): 취약계층 지원체계 - 다문화, 장애, 한부모/조손 가족 서비스 이용률 및 지원율
	서비스의 질	- 서비스 이용만족도(질, 이용시간, 내용/프로그램 등) - 부모 참여(교사와의 소통, 부모교육 및 참여)
	양육역량 및 가정환경	- 부모 육아휴직 비율 및 급여수준 - 부모역량(양육역량, 육아행복감, 부모 양육시간) - 가정환경의 질(HOME)

구분		지표/항목
아동	형평성(equity)	- 취학전 출발선 평등(학습준비도)
	웰빙 및 발달성과 (learning or developmental outcome)	- 아동웰빙(행복감, 생활시간조사: 보육·교육-놀이-수면-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등) - 아동사망률/유병률, 아동학대, 안전사고 발생건수/비율
기관	서비스의 질 (quality, pedagogy)	- 국가수준 공통의 커리큘럼 - 평가/모니터링 체계, 평가/모니터링 참여율 - 교직원 자격, 교육(연수), 급여, 복지(근로시간, 이직률, 근속률 등) - 과정적 질: 교직원 전문성(역량/효능감, 페다고지, 상호작용) - 구조적 질: 교사 대 아동 비율, 집단크기, 아동1인당 면적 - 아동학대, 안전사고 발생건수/비율
	공공성	- 인프라(다양한 서비스인프라, 국공립기관인프라(이용률)) - 직장어린이집 설치 포함 - 기관지원체계(유-보, 공-사립 격차 완화)

주: 본 연구를 위한 '2018-2019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대상 조사' 결과임.

4개 영역별로 합쳐진 긍정 응답률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 '기관' 영역 지표에 대한 현재 수준 긍정평가가 61.4점으로 4개 영역 중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그 다음으로 '부모'-'아동'-'국가' 영역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분야에 따라 '기관' 영역에 대한 평가에서 다소 차이가 있어 사회복지/정책/기타 분야 전문가의 기관영역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영역별로 현재수준에 대한 평가보다 정부의 정책추진의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긍정평가가 우세한 항목에서도 부정평가의 응답률이 일정수준 이상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4개 영역별

영역의 지표별로 살펴보면 국가 수준에서 '출산율'에 대한 현재수준 및 정책기여도 평가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삶의 질' 전반에 대한 평가도 저조하게 나타났다. 큰 차이는 아니었으나, 부모 영역에서 '양육역량과 가정환경' 지표와 그리고 아동 영역에서 '아동의 웰빙과 발달성과'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이는 향후 육아정책에서 변화를 꾀할 부분과 보다 역량을 집중해야할 부분을 보여준다 하겠다.

먼저 '국가' 수준의 육아 관련 지표는 저출산정책이 목표로 하는 '출산율', 그 외

에 육아관련 다양한 서비스에의 '접근성'(accessibility, diversity), 자녀양육에 대한 '재정투자', '육아환경', '삶의 질' 전반에 대한 5개 항목 평가로 구성하였다. 5개 지표 중 '출산율'에 대한 현재 수준과 정부 정책의 기여도 평가가 부정 응답률 80.2%, 58.5%로 가장 저조하게 평가되었다.

현재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는 7점 척도 평균 '재정투자 확대'와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긍정평가가 가장 많았으며, 이는 2019년 OECD의 한국 육아정책에 대한 최근의 평가와 일치한다(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9. 10. 28)[24]. 그 다음으로 '육아환경' 전반에 대한 평가가 40% 대의 긍정평가를 보였으며,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의 키워드가 된 '삶의 질'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 응답이 50%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문재인정부의 정책 추진의 기여도 평가에서도 서비스 접근성과 재정투자, 육아환경에 대해 우수한 반면, 출산율과 삶의 질 척도에서는 저조하게 나타났다.

둘째, 부모 영역에서는 양육비용 부담과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가 7점 평균 보통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으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양육역량과 가정환경의 질에 대한 부분에서 다소 저조하게 나타났다.

셋째, 아동 영역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현재수준 평가보다 정부 정책의 기여도 평가가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아동의 웰빙과 발달성과 부분에서 현재수준에 대한 평가가 3.8점으로 정책의 기여도 평가에 비해 저조하게 나타났다.

넷째, 기관 영역에서는 서비스의 질과 공공성 확보의 2개 지표에서 긍정 응답이 부정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7점 평균 보통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이 지표에서도 부정 응답률이 20~30%로 나타났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육아 환경을 평가하는 4개 영역별 주요 지표에 대해 현재수준과 정부정책의 기여도 평가가 7점 척도 평균 '보통 이상'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는 정부 정책의 기여도를 현재수준 보다 양호하게 평가하였다. 이로써 육아정책의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동력을 평가한 것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부정 응답률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나타나 육아정책의 구체적인 실효성과 정책추진 과정 등에 대해서는 긍-부정의 상반된 평가가 공존함을 알 수 있다.

24)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9. 10. 28).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OECD 공동 국제 인구컨퍼런스: 한국의 저출산현상와 아동·가족 정책의 발전 방향.

〈표 Ⅲ-2-13〉 육아정책 중장기 평가

단위: %, 점

현재 수준				영 역	기여도 평가			
1+2+3 (부정)	4 (보통)	5+6+7 (긍정)	7점 평균		1+2+3 (부정)	4 (보통)	5+6+7 (긍정)	7점 평균
				〈국가수준〉				
80.2	9.4	10.4	2.6↓	1. 출산율	58.5	26.4	15.1	3.1↓
17.9	35.8	46.2	4.4	2. 접근성	17.9	32.1	50.0	4.4
17.9	27.4	54.7	4.4	3. 재정투자(확대)	23.6	28.3	48.1	4.3
35.8	21.7	42.5	4.2	4. 육아환경	30.2	20.8	49.1	4.3
50.0	25.5	24.5	3.5↓	5. 삶의 질	37.7	32.1	30.2	3.8↓
54.6점(100점 환산)				영역 평균(5개)	56.9점(100점 환산)			
				〈부모수준〉				
29.2	26.4	44.3	4.3	1. 양육비용 부담	21.7	24.5	53.8	4.6
28.3	23.6	48.1	4.2	2. 서비스의 질	24.5	21.7	53.8	4.5
38.7	29.2	32.1	3.9↓	3. 양육역량 및 가정환경	30.2	26.4	43.4	4.1
59.0점(100점 환산)				영역 평균(3개)	62.9점(100점 환산)			
				〈아동수준〉				
34.9	28.3	36.8	4.0	형평성	24.5	24.5	50.9	4.4
40.6	26.4	33.0	3.8↓	2. 웰빙 및 발달성과	30.2	23.6	46.2	4.2
55.7점(100점 환산)				영역 평균(2개)	61.4점(100점 환산)			
				〈기관 수준〉				
32.1	22.6	45.3	4.2	1. 서비스의 질	20.8	31.1	48.1	4.4
29.2	21.7	49.1	4.3	2. 공공성	19.8	22.6	57.5	4.5
61.4점(100점 환산)				영역 평균(2개)	63.4점(100점 환산)			

주: 본 연구를 위한 '2018-2019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대상 조사' 결과임.

아. 육아정책의 조정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전략

향후 육아정책의 조정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전략을 1가지 고르도록 질문한 결과, 정책내용에 대한 점검과 수요자/대중과의 소통에 대한 응답이 각 23.6%, 22.6%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 전달체계의 변화와 거버넌스 점검에 대한 응답이 각 14.2%, 13.2%로 이를 합칠 경우 '수행체계'에 대한 점검과 변화에 대한 응답이 27.4%로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전문가 오픈응답을 살펴보면, 정책 실행을 위한 '인프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Ⅲ-2-14〉 육아정책 조정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전략

단위: %(명)

구분	정책내용 점검	수요자/대중과의 소통	전달체계 변화	거버넌스 점검	문화형성	목적/목표 설정	기타	계(수)
전체	23.6	22.6	14.2	13.2	13.2	12.3	0.9	100.0(106)

주: 본 연구를 위한 '2018-2019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대상 조사' 결과임.

관련 문화의 형성과 정책의 목적과 목표의 설정이 각 13.2%, 12.3%로 나타났다. 즉 수요자/대중과의 소통 및 문화의 형성과 같은 육아정책의 과정에 대한 소프트파워 전략이 약 35% 이상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으며, 정책의 수행체계(전달체계, 거버넌스, 인프라)도 중요하게 지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 현장전문가 면담조사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각각 FGI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로 논의되었다. 첫째, 그동안 육아정책이 비용투자 대비 효율성은 차치하더라도 국가가 개별 가정의 자녀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아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 하는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온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지원 위주의 정책과 예산의 투입이 실제 비용투자 대비 어느정도의 효과를 갖는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정부가 재정적으로 투자한 만큼 수혜자(부모, 기관)는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효율성과 정책수행의 연결고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둘째, 국가의 육아정책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쉽게 변하지 않는 장기적인 비전과 가치체계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육아정책의 설계와 비전의 제시에 있어 이러한 철학적인 고민과 기본적인 담론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즉 육아정책의 장-단기 설계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 정책의 단기목표 달성 위주로 추진되는 분절적이고 산발된 경향에 대한 지적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셋째, 정책 추진체계에서 저출산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과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설계가 보다 정교하고 통합적으로 점검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넷째, 그 간의 정책기조가 부모/성인 중심, 기관 중심의 지원 체계였다면, 이제는 아동과 가정 내 양육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고 제시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놀이중심의 누리과정 개편과 놀 시간의 확보, 아동권 중심의 아동정책의 제시, 그리고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정책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현장에서 접하는 영유아의 문제행동이 과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양질의 가정양육 환경과 가정 내 양육의 질 제고가 육아정책의 최우선과제로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가정양육과 부모의 양육역량이 기관 보육·교육의 질 제고와 정책적으로 함께 가야한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논의되었다.

다섯째, 육아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여전히 공공성과 무상 보육·교육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다음 단계로의 질적인 전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공공성의 확대가 가져온 가시적인 성과를 인정함과 동시에 질적·과정적인 설계가 보완되어 공공성의 확보가 양적 확충과 설계에 머무르지 않아야 함을 제안하였다. 부모는 전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원하므로 공공성의 확대가 질적 수요를 수반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사교육에의 의존도가 해소되지 않는 현황을 직시하여,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정책의 추진이 기관운영에 대한 신뢰와 자율성 존중, 유연한 적용을 주문하고 있으며, 국공립 인프라의 확충은 사립/민간 기관과의 상생 발전에 기인함을 논의하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제안한 중요한 정책 과제로는 '교사 대 아동 비율'과 단절된 유보통합의 추진 중 교사의 '양성자격체계의 정비'가 필요함을 제안함으로써, 긴 과정으로서의 유보격차 완화와 유보통합 노력의 지속을 당면 과제로 제시하였다.

3. 육아정책 성과평가(2)–수요자 조사 분석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에서 수행한 2018-2019년 육아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성+정량)평가를 위해 초등 3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국의 부모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가. 응답자 특성

먼저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수요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 결과, 남성(아버지)의 참여가 약 1/3 이상이었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2/3 이상 참여하였다. 첫째아를 기준으로 영아-유아-초등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비교적 고르게 참여하였으며, 맞벌이 가구가 과반 이상 참여하여 외벌이보다 다소 많이 표집되었다. 휴직자, 학업 중까지 포함하면 취/학업 중인 모가 전체 55.5%로 나타났으며, 구직 중을 포함하여 미취업모는 44.5%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경우 전일제 취업과 시간제 취업이 약 3:1의 비율을 보였다.

월 소득기준에 의하면 월평균 소득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가 10.0%로 나타났으며, 기초수급/한부모 등의 취약가구 특성을 갖는 경우는 약 1% 내외로 참여하였다.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육아정책에서 산출하는 대표적인 서비스들에 대한 가구별 이용 여부에 따라 서비스이용집단을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 직접돌봄과 어린이집 이용자, 그리고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수혜자 비율이 70~80%대 이상으로 높으며, 맞벌이/취업모의 비중이 과반 이상 참여함에 따라 초등돌봄이용과 모 육아휴직 이용 비율이 30% 내외로 나타났다.

〈표 Ⅲ-3-1〉 수요자 조사 응답자 분포

단위: %(명)

구분	계(수)		계(수)
전체	100.0(1,013)	응답자 최종학력	
성별		고졸 이하	12.8(130)
남성	37.6(381)	대졸 이상	87.2(883)
여성	62.4(632)	취업모 여부	
지역 구분		취업	39.7(402)
대도시	22.0(223)	휴직 중	14.3(145)
중소도시	56.3(570)	학업 중	1.5(15)
읍·면	21.7(220)	구직 중	10.6(107)
연령		미취업	33.9(343)
20대	5.0(51)	맞벌이 여부	
30대	71.2(721)	맞벌이	51.8(525)
40대 이상	23.8(241)	외벌이	43.3(439)
첫째아 기준		소득없음	3.8(39)
초등부모	34.8(353)	해당없음	1.0(10)
유아부모	43.0(436)	가구내 여성취업	
영아부모	22.1(224)	전일제 취업	77.3(423)
모든자녀기준(중복응답)		시간제 취업	22.7(124)
초등부모	34.8(353)	취약가구 여부	
유아부모	62.7(635)	기초수급 또는 차상위	1.4(14)
영아부모	40.6(411)	해당 없음	98.6(999)
서비스이용여부		다문화 여부	
부모 직접 돌봄	79.0(799)	다문화	1.5(15)

구분	계(수)		계(수)
어린이집 이용자	73.3(741)	다문화 아님	98.5(998)
유치원 이용자	38.4(388)	한부모 여부 여부	
반일제 이용자	9.4(95)	한부모	1.0(10)
초등 돌봄 전반	26.8(271)	한부모 아님	99.0(1,003)
양육수당 이용자	85.4(863)	소득 기준(무응답2제외)	
아동수당 이용자	88.6(896)	150만원 이하	1.7(17)
모 근로단축 이용자	10.4(105)	150~250만원	8.3(84)
부 근로단축 이용자	3.3(33)	250~350만원	22.6(228)
모 육아휴직 이용자	31.2(315)	350~500만원	29.8(301)
부 육아휴직 이용자	4.9(50)	500만원 이상	37.7(381)

주: 1) 본 연구를 위한 '2018-2019 육아정책 성과평가 수요자 대상 조사' 결과임.
2) 취업모 여부의 경우 혼인상태 이혼인 사례 1 제외

월평균 가구소득은 조사참여 가구 전체 평균 51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부의 월평균 소득은 367만 7천원, 모의 월평균 소득은 119만 8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서 월 가구소비지출 평균은 289만 4천원으로 조사되었다.

하위특성별 소득분포를 살펴보면, 취업모 대비 휴직중인 모의 소득수준이 1/2 비중 이상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맞벌이가구와 전일제취업모의 소득수준이 비맞벌이가구 및 시간제취업모와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소득수준 500만원 이상에서 모의 소득수준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맞벌이 및 모의 전일제취업과 월가구소득수준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연동하여 부-모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의 모 근로소득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근로시간단축의 육아시간지원제도 이용이 모 취업특성 및 모 소득수준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정책효과 분석-3장 4절).

〈표 Ⅲ-3-2〉 가구 월 평균 소득 및 지출액-(부모 소득과 취업특성, 서비스 이용간의 관계)

단위: 만원(명)

구분	부 평균 소득			모 평균 소득			가구 월 소비 지출		
	평균	표준편차	(명)	평균	표준편차	(명)	평균	표준편차	(명)
전체	367.7	224.7	(1,004)	119.8	119.8	(1,012)	289.4	164.5	(1,013)
지역 구분									
대도시	395.0	227.8	(221)	136.1	136.1	(223)	312.2	232.3	(223)
중소도시	362.0	244.6	(565)	122.7	122.7	(569)	289.4	142.3	(570)
읍·면	354.9	156.2	(218)	95.7	95.7	(220)	266.3	129.4	(220)
F	2.2			4.6*(a)			4.3*(a)		
연령									
20대	275.6	275.6	(50)	78.9	107.2	(51)	202.1	96.9	(51)
30대	365.8	365.8	(715)	128.5	149.6	(720)	287.1	170.7	(721)
40대 이상	392.7	392.7	(239)	102.3	136.8	(241)	314.7	150.2	(241)
F	5.8**			5.1**(a)			10.3***		

구분	부 평균 소득			모 평균 소득			가구 월 소비 지출		
	평균	표준편차	(명)	평균	표준편차	(명)	평균	표준편차	(명)
응답자 최종학력									
고졸 이하	324.0	150.9	(129)	61.2	102.0	(129)	265.8	123.8	(130)
대졸이상	374.1	233.0	(875)	128.3	148.8	(883)	292.9	169.5	(883)
t	−2.4*			−6.5***			−1.8		
취업모 여부									
취업	359.5	181.2	(394)	241.9	128.0	(402)	328.7	201.8	(402)
휴직 중	351.6	154.8	(145)	110.2	122.3	(145)	257.1	121.7	(145)
학업 중	316.1	90.8	(14)	41.3	90.5	(15)	214.0	81.2	(15)
구직 중	331.8	141.5	(107)	45.4	88.8	(107)	261.5	142.5	(107)
미취업	397.7	304.0	(343)	6.6	41.0	(343)	269.4	127.8	(343)
F	2.7*			271.2***(a)			10.3***(a)		
맞벌이 여부									
맞벌이	361.6	172.9	(525)	208.8	140.2	(525)	314.4	188.0	(525)
외벌이	370.7	180.4	(439)	13.3	51.0	(439)	262.4	121.9	(439)
소득없음	419.2	745.1	(39)	94.7	129.2	(39)	287.2	200.7	(39)
해당없음	300.0	-	(1)	211.1	73.7	(9)	174.0	87.0	(10)
F	0.8(a)			255.7***(a)			9.9***(a)		
가구내 여성취업									
전일제 취업	365.6	182.2	(416)	240.2	136.4	(423)	324.6	200.7	(423)
시간제 취업	329.4	142.0	(123)	93.8	74.1	(124)	259.0	114.3	(124)
t	2.0*			15.6***			4.6***		
첫째아 기준									
초등부모	372.4	150.0	(347)	114.4	140.9	(352)	309.7	141.1	(353)
유아부모	364.1	203.1	(433)	124.2	151.7	(436)	295.3	197.5	(436)
영아부모	367.4	335.3	(224)	119.6	139.8	(224)	245.9	112.6	(224)
F	0.1			0.4			11.0***		
소득 기준									
150만원 이하	77.5	51.6	(16)	18.3	29.6	(17)	122.4	79.2	(17)
150~250만원	208.0	51.7	(81)	20.2	31.4	(84)	170.8	61.6	(84)
250~350만원	292.7	53.8	(224)	23.4	54.5	(227)	223.3	79.5	(228)
350~500만원	347.1	90.2	(301)	78.5	90.7	(301)	284.0	99.4	(301)
500만원 이상	474.5	317.0	(380)	236.2	155.2	(381)	367.1	215.3	(381)
F	55.0***(a)			176.4***(a)			55.6***(a)		
서비스/해당여부별									
부모 직접 돌봄	369.4	241.5	(791)	117.0	146.0	(799)	285.4	171.8	(799)
어린이집 이용자	359.0	181.8	(733)	122.5	146.7	(740)	292.3	169.2	(741)
유치원 이용자	364.2	144.6	(382)	114.8	145.2	(387)	297.4	134.3	(388)
반일제 이용자	412.2	285.2	(94)	182.8	201.8	(95)	372.2	341.5	(95)
초등 돌봄 전반	370.4	155.4	(267)	124.9	143.4	(271)	308.7	136.2	(271)
양육수당 이용자	366.1	221.2	(857)	115.6	141.1	(862)	284.8	141.5	(863)
아동수당 이용자	366.2	220.9	(890)	118.6	140.8	(895)	286.3	141.1	(896)
모근로단축이용자	381.9	155.7	(105)	238.0	147.2	(105)	333.3	179.1	(105)
부근로단축이용자	357.3	166.5	(33)	235.8	235.2	(33)	272.1	125.8	(33)
취약가구	194.2	132.4	(12)	110.7	93.1	(14)	194.3	119.8	(14)
다문화 가구	320.0	101.7	(15)	102.0	95.9	(15)	263.3	167.4	(15)
한부모 가구	300.0	-	(1)	211.1	73.7	(9)	174.0	86.9	(10)

주: 1) 기타 가구 소득의 경우 평균 27.9만원, 총 가구 소득의 경우 평균 512.0만원(사례 수: 1,013명).
2) 근로단축은 '근로시간단축'을 의미함.
3) 본 연구를 위한 '2018-2019 육아정책 성과평가 수요자 대상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월 평균 자녀양육비용은 68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취학전 자녀의 경우 월평균 55만원 4천원, 취학 이후 초등 3학년까지 자녀의 경우 월 57만 5천원으로 응답되었다. 자녀연령이 많아질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양육비용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모의 자녀양육비용이 미취업모보다 약 20만원 이상 많았다(각 79.5만원, 57.7만원).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서도 자녀양육비용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반일제서비스 이용자와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유치원 이용자의 자녀양육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영유아서비스 이용률-만족도-인지도

육아정책이 산출하는 주요 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수요자의 이용률, 만족도, 인지도, 향후 이용의향의 주요 지표를 부모 온라인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주로 영유아기 자녀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5].

〈표 Ⅲ-3-3〉 영유아서비스 이용률-만족도-인지도

단위: %(명), 점

구분	이용률	만족도		인지도		계(수)
		만족비율	5점 평균	인지비율	5점 평균	
부모 직접양육	70.7	57.8	3.7	-	-	100.0(1,013)
부모 돌봄	38.3	63.7	3.7	-	-	100.0(1,013)
조부모/친인척 돌봄	53.1	70.1	3.8	-	-	100.0(1,013)
아이돌보미	10.0	43.6	3.3	57.6	3.6	100.0(1,013)
민간 베이비시터	6.7	39.7	3.2	53.1	3.4	100.0(1,013)
공공 산후도우미	19.6	56.8	3.6	54.5	3.5	100.0(1,013)
민간 산후도우미	14.4	48.6	3.4	54.6	3.5	100.0(1,013)
어린이집 이용	73.1	73.4	3.9	80.5	4.2	100.0(1,013)
유치원 이용	38.3	74.7	3.9	74.9	4.1	100.0(1,013)
시간제 보육/돌봄	14.0	63.4	3.8	56.5	3.6	100.0(1,013)
반일제 이상	9.4	62.1	3.7	46.2	3.4	100.0(1,013)
영유아기 사교육	53.3	54.1	3.6	44.2	3.3	100.0(1,013)
영아기 사설놀이공간	78.3	51.3	3.5	60.0	3.7	100.0(1,013)
육아종합지원센터	17.2	58.6	3.6	30.4	2.9	100.0(1,013)
육아공동체	3.9	60.0	3.6	21.7	2.6	100.0(1,013)
지역아동센터	3.7	56.8	3.6	31.9	2.9	100.0(1,013)
자녀 혼자	12.9	-	-	-	-	100.0(1,013)

주: 1) 만족비율과 인지비율은 (조금+매우) 만족하고 있다/알고있다고 긍정 응답(4, 5점)한 비율을 합친 결과임.
2) 본 연구를 위한 '2018-2019 육아정책 성과평가 수요자 대상 조사' 결과임.

25) 가구 내 자녀들의 연령을 모두 고려하여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엄격히 제한한 이용률 분석은 아님에 유의

1) 이용률

먼저 최근 2년 이내(2018-2019년)에 다음의 육아정책 서비스 이용 경험(이용률)을 질문한 결과, 기관이나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없이 부모가 직접 양육한 경우가 약 71%로 나타났으며, 기관이용 및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을 병행하면서 부모가 돌본 경우가 약 38%로 나타났다. 부모 직접돌봄의 경우 (첫째아 기준)영아자녀를 둔 부모의 비율이 87.5%로 높았으며,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모 직접돌봄의 비율이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26]. 또한 부가 근로시간단축을 이용하는 가구와 취약가구에서 부모직접양육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각 81.8%, 100.0%), 제도적 지원과 함께 부모의 양육스타일, 가구의 경제적 특성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 직접양육보다 높은 이용률을 보인 것으로, 어린이집 이용과 영아기 사설놀이공간(예: 키즈카페) 이용이 70% 이상으로 응답되었다. 그 다음으로 조부모/친인척돌봄이 과반 이상(53.1%), 유치원 이용률은 38.3%로 나타났다. 공공아이돌보미 이용률이 민간베이비시터 이용률보다, 그리고 공공산후도우미 이용률이 민간산후도우미 이용률보다 높게 나타나 (엄밀한 비교는 어려우나) 공공의 돌보미/산후조리 서비스 제공이 민간서비스 인력 제공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서비스에 해당하는 시간제보육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육아공동체의 이용률은 각 14.0%, 17.2%, 3.7%, 3.9%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 혼자있는 경우는 약 13%로 나타난 가운데, 초등자녀를 둔 경우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사례수는 적으나) 취약가구와 한부모가구에서 자녀를 혼자 두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자녀양육의 취약성을 보였다.

2) 만족도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약간+매우) 만족하였다'는 긍정응답의 비율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에서 7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조부모/친인척돌봄을 이용한 경우 만족도가 70.1%로 높았으며, 시간제보육과 (기관이용과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부모가 돌보는 경우 그리고

26) 최근 2년 이내 경험을 질문함에 따라, 전체 응답 자료를 분석함. 하위분석 변인에 의한 조사결과는 〈부록 3〉을 참조

반일제이상 서비스 이용 만족도가 각 63.4%, 63.7%, 62.1%로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만족도도 각 58.6%, 56.8%로 과반이상이 만족응답을 보였으며, 육아공동체에 대한 만족도도 60%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민간산후도우미에 비해 공공산후도우미에 대한 이용 만족도가, 그리고 민간베이비시터에 비해 공공아이돌보미에 대한 이용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좀 더 높았다. 그러나 영유아기 사교육과 사설놀이공간 이용률도 과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사교육과 사적놀이공간이 영유아 서비스 이용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인지도

영유아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질문한 결과, '(약간+매우) 알고 있다'는 긍정응답의 비율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각 74.9%, 8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사설놀이공간에 대한 인지도가 60%로 나타난 가운데, 아이돌보미, 시간제보육, 민간산후도우미, 공공산후도우미, 민간베이비시터 인지도가 50% 이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일제이상 서비스와 사교육에 대한 인지도가 40% 이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인지도는 30%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편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가운데, 아이돌봄과 산후돌봄과 관련하여 공공 인력서비스와 민간 인력서비스가 비슷한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서비스 인지도는 이용경험이나 접근성이 있는 이용자 위주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상세표는 부록 참조).

4) 미이용이유

영유아 서비스에 대한 이용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미이용 이유를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이용의향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40%대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여건이 안되어서'라는 응답이 많았는데 특히 조부모/친인척 돌봄과 부모직접양육의 경우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 밖에 이용의향이 있으나, '접근성'이 떨

어지고 신청해도 '이용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제한된 서비스 공급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서비스 내용과 질, 시기가 기대수준과 맞지 않아서라는 '질적 수요'에 의한 미이용 이유도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Ⅲ-3-4〉 육아관련 서비스 미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이용의 향이 없어서/ 특별히 필요성 느끼지 않아	여건이 안 되어	서비스 질/ 내용을 신뢰 하기 어려워	원하는 시간/ 시기에 이용 하기 어려움	이용의 향이 있으나 이용 방법/ 절차를 몰라	이용의 향이 있으나 이용 자격이 안됨	기타	비용 부담 되어	이용 의향이 있으나 주위에 가까이 없음	신청 하였으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	계(수)
부모 직접양육	43.4	29.3	6.7	4.7	4.4	3.4	3.4	2.4	2.0	0.3	100.0(297)
부모 돌봄	54.9	12.5	10.1	4.3	7.5	4.2	1.9	2.1	1.9	0.6	100.0(625)
조부모/친인척 돌봄	37.1	42.9	2.5	3.4	1.1	0.8	1.3	1.3	9.5	0.2	100.0(475)
아이돌보미	47.1	6.5	18.5	4.2	6.3	7.1	0.8	5.2	2.7	1.5	100.0(734)
민간 베이비시터	45.6	7.7	24.4	1.5	3.2	1.8	0.3	13.5	1.8	0.1	100.0(713)
공공 산후도우미	42.8	5.8	11.6	2.1	5.1	23.3	1.4	3.5	1.4	2.9	100.0(622)
민간 산후도우미	45.4	10.8	13.7	1.5	2.2	3.2	0.7	21.0	1.0	0.4	100.0(685)
어린이집 이용	48.5	3.1	13.1	8.5	1.5	5.4	7.7	1.9	2.3	8.1	100.0(260)
유치원 이용	39.3	5.1	3.9	8.4	1.0	11.5	11.0	6.7	4.6	8.6	100.0(593)
시간제 보육/돌봄	47.4	5.1	12.9	7.4	9.6	5.1	0.1	6.0	3.8	2.5	100.0(719)
반일제 이상	46.1	9.7	6.3	3.2	5.4	3.1	1.3	19.0	4.7	1.0	100.0(679)
영유아기 사교육	46.6	11.3	6.8	5.4	4.0	1.7	2.3	15.5	6.2	0.3	100.0(354)
영아기 사설놀이공간	47.3	7.5	12.4	4.3	2.7	2.7	3.8	9.7	9.7	-	100.0(186)
육아종합지원센터	47.0	4.3	9.1	5.1	12.8	3.2	1.0	3.2	12.3	2.0	100.0(506)
육아공동체	49.0	2.8	9.8	3.9	17.4	1.5	0.7	2.2	11.1	1.5	100.0(459)
지역아동센터	48.1	2.2	11.3	5.2	14.8	7.1	0.3	1.5	8.1	1.3	100.0(594)

주: 본 연구를 위한 '2018-2019 육아정책 성과평가 수요자 대상 조사' 결과임.

다. 초등 서비스 이용률-만족도-인지도

그 다음으로 주로 초등입학 이후 학령기 자녀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7].

27) 가구 내 자녀들의 연령을 모두 고려하여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엄격히 제한한 이용률 분석은 아님에 유의

〈표 Ⅲ-3-5〉 초등 서비스 이용률-만족도-인지도

단위: %(명), 점

구분	이용률	만족도		인지도		계(수)
		만족비율	5점 평균	인지비율	5점 평균	
초등돌봄 전반	76.8	68.3	3.8	-	-	100.0(353)
초등돌봄교실	42.8	70.9	3.9	69.8	4.0	100.0(353)
초등 방과후과정	87.0	70.0	3.8	78.3	4.1	100.0(353)
지역아동센터	4.2	73.3	3.9	40.5	3.2	100.0(353)
온종일 돌봄	2.5	44.4	3.2	22.7	2.7	100.0(353)
기타 인프라	36.5	62.8	3.7	25.0	2.8	100.0(353)
초등학교 사교육	66.6	53.2	3.5	-	-	100.0(353)
학원-학습	49.9	50.0	3.5	59.9	3.8	100.0(353)
학원-예체능	80.5	65.1	3.8	49.3	3.4	100.0(353)
학원 외 사교육	62.3	44.1	3.4	57.1	3.7	100.0(353)
문화/오락/체험활동	63.7	64.9	3.7	30.5	3.1	100.0(353)

주: 본 연구를 위한 '2018-2019 육아정책 성과평가 수요자 대상 조사' 결과임.

1) 이용률

최근 2년 이내(2018-2019년)에 다음의 주로 초등학생 대상 서비스 이용 경험(이용률)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초등 방과후학교(87.0%)와 이를 포함한 초등돌봄 전반(76.8%)에 대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예체능 학원(80.5%)과 초등사교육(66.6%), 학습지, 온라인수강과 같은 학원 외 사교육(62.3%), 문화/오락/체험활동(63.7%), 그리고 학원 외 사교육에 대한 이용률도 모두 고르게 높게 나타나, 초등 저학년의 사교육 프로그램의 이용이 일정수준 보편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돌봄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률도 높게 나타났으나, 제한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방과후학교에 비해 초등돌봄교실(42.8%)과 온종일돌봄(2.5%)과 같은 구체적인 돌봄서비스의 이용은 저조하게 나타났다. 기타 인프라(공공기관/센터/기관 등)의 경우 초등 저학년 아동의 이용률은 36.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아동센터 이용률은 4.2%이다. 즉 정부에서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돌봄의 저변 확대와 인프라 강화에서는 학교 중심의 초등돌봄교실의 이용률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돌봄인프라 강화는 매우 적절한 정책 방향으로 보이며, 현재 드러나는 초등 돌봄서비스의 이용과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간의 불균형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가) 공공 초등서비스 이용률

‘초등돌봄교실’의 이용은 미취업모보다 취·학업중인 모와 맞벌이 가구, 그리고 가구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읍면지역에서 이용이 많은 반면, ‘초등방과후학교’는 모의 취·학업과 맞벌이/외벌이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높게 나타난 가운데 가구소득수준이 150만원 이하로 낮은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았다. 방과후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과 등록의 과정에 저소득 가정의 참여가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돌봄전반’의 이용률은 읍면지역, 취학업중인 모, 맞벌이, 그리고 소득수준 500만원 이상 가구에서 다소 높아 다양한 사적/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고소득가구의 돌봄서비스 수요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온종일돌봄’의 경우 취학업 및 구직 중인 모와 맞벌이가구, 그리고 전일제취업보다 시간제취업을 하는 모 집단에서,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지역아동센터’는 대도시지역, 학업중인 모에게서 이용률이 다소 많았으며, 맞벌이/외벌이와 소득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로써 공적 영역의 돌봄서비스 이용은 돌봄 외에 다양한 수요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돌봄 및 돌봄 외의 다양한 층위의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급을 필요로 한다. 정부의 온종일돌봄의 구축은 이제 정책이행 초기로 이용률에서 성과를 보기에는 이르나, 상대적으로 취업모와 휴직중인 모, 그리고 맞벌이가구에서,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에서 이용률이 일관되게 나오는 것은 정책대상의 설정과 이행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3-6〉 초등 서비스 이용률-1) 공공서비스

단위: %(명)

구분	돌봄 전반	초등돌봄교실	초등 방과후	지역아동센터	온종일 돌봄	기타 인프라	계(수)
전체	76.8	42.8	87.0	4.2	2.5	36.5	100.0(353)
지역 구분							
대도시	73.7	40.8	88.2	**9.2**	2.6	38.2	100.0(76)
중소도시	75.2	41.1	88.1	2.0	2.5	33.2	100.0(202)
읍·면	**84.0**	**49.3**	82.7	5.3	2.7	44.0	100.0(75)
$\chi^2(df)$	2.867(2)	1.675(2)	1.555(2)	7.370(2)*	0.011(2)	2.876(2)	
취업모 여부							
취업	**83.8**	**66.2**	87.0	5.2	3.9	29.9↓	100.0(154)

구분	돌봄 전반	초등돌봄교실	초등 방과후	지역아동센터	온종일 돌봄	기타 인프라	계(수)
휴직 중	91.3	52.2	91.3	4.3	4.3	52.2	100.0(23)
학업 중	100.0	75.0	100.0	25.0	0.0	50.0	100.0(4)
구직 중	69.6	23.9	89.1	2.2	2.2	47.8	100.0(46)
미취업	68.0	18.4	84.8	3.2	0.8	37.6	100.0(125)
$x^2(df)$	14.981(4)**	74.120(4)***	1.685(4)	5.383(4)	3.085(4)	8.267(4)	
맞벌이 여부							
맞벌이	85.0	64.1	86.8	4.8	4.2	34.1	100.0(167)
외벌이	70.5	21.7	86.7	4.2	1.2	39.8	100.0(166)
소득없음	61.5	30.8	84.6	0.0	0.0	38.5	100.0(13)
해당없음	57.1	57.1	100.0	0.0	0.0	14.3	100.0(7)
$x^2(df)$	13.273(3)**	64.458(3)***	1.123(3)	1.008(3)	3.544(3)	2.675(3)	
가구내 여성취업							
전일제 취업	85.2	68.8	91.4	4.7	3.1	27.3	100.0(128)
시간제 취업	83.7	53.1	77.6	6.1	6.1	46.9	100.0(49)
$x^2(df)$	0.060(1)	3.805(1)	6.250(1)*	0.151(1)	0.838(1)	6.176(1)*	
소득 기준							
150만원 이하	75.0	75.0	75.0	0.0	0.0	0.0	100.0(4)
150~250만원	73.9	39.1	95.7	4.3	0.0	39.1	100.0(23)
250~350만원	68.3	29.3	82.9	2.4	2.4	36.6	100.0(82)
350~500만원	77.1	32.4	89.5	5.7	1.9	33.3	100.0(105)
500만원 이상	82.0	58.3	86.3	4.3	3.6	39.6	100.0(139)
$x^2(df)$	5.569(4)	26.207(4)***	3.873(4)	1.394(4)	1.500(4)	3.385(4)	
서비스/해당여부별							
부모 직접돌봄	79.8	42.6	89.0	5.1	2.6	38.2	100.0(272)
어린이집 이용자	78.2	43.1	88.3	6.0	3.2	38.7	100.0(248)
유치원 이용자	78.3	40.9	88.4	5.6	4.0	37.9	100.0(198)
반일제 이용자	86.5	62.2	94.6	16.2	16.2	67.6	100.0(37)
초등 돌봄 전반	100.0	55.4	95.6	4.8	3.3	40.2	100.0(271)
양육수당 이용자	76.4	40.9	86.9	4.6	2.7	41.3	100.0(259)
아동수당 이용자	79.0	43.2	87.5	4.3	3.1	38.1	100.0(257)
모 근로단축 이용자	86.4	63.6	90.9	9.1	0.0	54.5	100.0(22)
부 근로단축 이용자	66.7	66.7	100.0	33.3	33.3	66.7	100.0(3)
취약가구	85.7	57.1	100.0	28.6	14.3	42.9	100.0(7)
다문화 가구	66.7	44.4	88.9	11.1	-	44.4	100.0(9)
한부모 가구	57.1	57.1	100.0	-	-	14.3	100.0(7)

주: 본 연구를 위한 '2018-2019 육아정책 성과평가 수요자 대상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나) 초등 대상 사교육 이용률

공공 돌봄서비스 외에 사교육의 이용률이 모두 높은 가운데, 제시된 사교육의 경우 취업모와 휴직중/구직중인 모, 전일제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그리고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예체능학원 등 초등 사교육 전반에 대한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취업모와 맞벌이 가구의 돌봄 수요를 사교육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과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모/맞벌이가구와 육아시간이 있는 휴직중 및 근로시간단축 가구에서 사교육 이용이 다소 높은 경향은 경제력과 시간을 갖춘 고소득집단에서의 사교육 지출 비중을 볼 수 있다.

양가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초등 돌봄 및 사교육 서비스 이용에 대해 온전한 돌봄 수요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원하는 교육적 수요를 포괄할 수 있는 양질의 초등돌봄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표 Ⅲ-3-7〉 초등 서비스 이용률-2) 사교육

단위: %(명)

구분	초등 사교육	학원-학습	학원-예체능	학원 외	문화/오락/체험	계(수)
전체	66.6	49.9	80.5	62.3	63.7	100.0(353)
지역 구분						
대도시	67.1	52.6	88.2	60.5	68.4	100.0(76)
중소도시	64.9	53.0	80.2	62.4	59.4	100.0(202)
읍·면	70.7	38.7	73.3	64.0	70.7	100.0(75)
$x^2(df)$	0.843(2)	4.774(2)	5.295(2)	0.195(2)	3.919(2)	
취업모 여부						
취업	68.2	57.1	80.5	70.1	65.6	100.0(154)
휴직 중	78.3	47.8	82.6	56.5	73.9	100.0(23)
학업 중	50.0	50.0	100.0	75.0	50.0	100.0(4)
구직 중	69.6	54.3	87.0	65.2	76.1	100.0(46)
미취업	62.4	39.2	76.8	52.0	56.0	100.0(125)
$x^2(df)$	3.252(4)	9.355(4)	3.330(4)	10.424(4)*	7.870(4)	
맞벌이 여부						
맞벌이	70.1	56.3	81.4	68.3	67.1	100.0(167)
외벌이	63.3	42.2	78.3	53.6	60.2	100.0(166)
소득없음	76.9	61.5	92.3	84.6	69.2	100.0(13)
해당없음	42.9	57.1	85.7	85.7	57.1	100.0(7)
$x^2(df)$	4.130(3)	7.545(3)	1.871(3)	12.253(3)**	1.980(3)	
가구내 여성취업						
전일제 취업	71.9	59.4	85.9	71.9	62.5	100.0(128)
시간제 취업	63.3	46.9	67.3	59.2	77.6	100.0(49)
$x^2(df)$	1.239(1)	2.223(1)	7.891(1)**	2.639(1)	3.612(1)	
소득 기준						
150만원 이하	0.0	0.0	25.0	25.0	25.0	100.0(4)
150~250만원	47.8	8.7	56.5	43.5	65.2	100.0(23)
250~350만원	57.3	40.2	75.6	56.1	57.3	100.0(82)
350~500만원	75.2	50.5	80.0	60.0	58.1	100.0(105)
500만원 이상	70.5	63.3	89.2	71.9	72.7	100.0(139)
$x^2(df)$	19.263(4)***	32.673(4)***	24.210(4)***	12.924(4)*	10.318(4)*	

구분	초등 사교육	학원-학습	학원-예체능	학원 외	문화/오락/체험	계(수)
서비스/해당여부별						
부모 직접돌봄	69.9	49.3	81.3	62.1	67.3	100.0(272)
어린이집 이용자	67.3	50.4	81.9	63.3	66.5	100.0(248)
유치원 이용자	69.7	50.0	82.3	65.2	66.2	100.0(198)
반일제 이용자	75.7	83.8	97.3	78.4	91.9	100.0(37)
초등 돌봄 전반	69.7	51.7	80.8	65.7	66.8	100.0(271)
양육수당 이용자	67.2	49.0	83.0	60.6	66.4	100.0(259)
아동수당 이용자	67.7	50.2	81.3	62.3	65.8	100.0(257)
모 근로단축 이용자	86.4	45.5	95.5	72.7	86.4	100.0(22)
부 근로단축 이용자	100.0	66.7	100.0	100.0	100.0	100.0(3)
취약가구	42.9	28.6	85.7	28.6	85.7	100.0(7)
다문화 가구	44.4	33.3	66.7	77.8	55.6	100.0(9)
한부모 가구	55.6	55.6	88.9	77.8	66.7	100.0(9)

주: 본 연구를 위한 '2018-2019 육아정책 성과평가 수요자 대상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2) 만족도

초등서비스 이용 '만족도'의 경우, 초등돌봄교실과 초등방과후,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만족도가 모두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돌봄서비스 이용 전반과 기타 공공인프라에 대한 만족도(68.3%, 62.8%)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온종일돌봄에 대한 만족도는 44.4%로 다른 초등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으로, 정책시행 초기로 이용만족도에 의한 성과는 아직 잘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초등사교육 경우, 예체능학원(65.1%)과 문화/오락/체험 활동(64.9%)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그 외 학습 위주의 사교육 만족도는 50% 내외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 돌봄프로그램의 내용과 질이 초등돌봄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경우 공-사 서비스 이용과 선택 간에 변화가 있을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3) 인지도

초등서비스 이용 '인지도'의 경우, 초등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인지도가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학습위주의 학원에 대한 인지도가 60%로 높게 나타났다. 온종일돌봄교실의 인지도가 22.7%로 기타 공공인프라에 대한 인지도 25.0%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수준으로 나타나 사업시행 초기의

인지수준으로 보인다. 다양한 사교육 활동의 인지도는 50% 내외로 나타났다. 초등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와 아동이 정책의 타겟 대상 집단인 만큼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만족도는 제고될 필요가 있다.

4) 미이용이유

제시된 초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질문하였다. 이용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이용의향이 있으나 이용자격이 안 되었다는 접근성에 대한 응답이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대한 신뢰문제가 응답되었다. 특히 초등방과후학교의 경우 원하는 시기/시간에 이용하기 어렵다는 응답과 함께 이용의향이 있으나 이용자격/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접근성과 공급에 관한 이슈가 미이용이유로 응답되었다. 정부의 다양한 돌봄인프라에 대한 이용의향과 관심이 증가하는 중요한 시기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돌봄서비스 이용의 저변을 확대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표 Ⅲ-3-8〉 초등 관련 서비스 미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이용의향 없어서/ 특별히 필요성 느끼지 않아	여건이 안되어	서비스 질/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워	원하는 시간/ 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움	이용 의향이 있으나 이용 방법/ 절차를 몰라	이용 의향이 있으나 이용자격이 안됨	기타	비용 부담 되어	이용 의향이 있으나 주위에 가까이 없음	신청하였으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	계(수)
초등돌봄 전반	47.6	7.3	12.2	4.9	2.4	18.3	1.2	1.2	-	4.9	100.0(82)
초등돌봄교실	45.6	3.3	10.0	7.2	1.1	24.4	2.2	1.1	-	5.0	100.0(180)
초등 방과후과정	35.7	14.3	4.8	23.8	2.4	9.5	2.4	4.8	-	2.4	100.0(42)
지역아동센터	47.3	1.8	11.4	3.2	10.9	14.1	-	0.9	8.2	2.3	100.0(220)
온종일 돌봄	50.3	4.3	11.0	6.1	11.0	8.0	0.6	-	7.4	1.2	100.0(163)
기타 인프라	46.3	2.2	7.5	8.2	11.9	3.0	0.7	1.5	17.9	0.7	100.0(134)
초등학교 사교육	40.7	9.3	5.1	10.2	6.8	2.5	-	17.8	2.5	5.1	100.0(118)
학원-학습	39.5	6.4	5.1	3.8	3.2	0.6	3.2	33.1	5.1	-	100.0(157)
학원-예체능	34.6	7.7	7.7	1.9	-	-	-	34.6	13.5	-	100.0(52)
학원 외	50.9	6.0	10.3	2.6	1.7	1.7	0.9	24.1	0.9	0.9	100.0(116)
문화/오락/체험활동	40.4	7.9	10.1	6.7	7.9	4.5	-	12.4	10.1	-	100.0(89)

주: 본 연구를 위한 '2018-2019 육아정책 성과평가 수요자 대상 조사' 결과임.

라. 현금-시간-건강 지원 제도: 이용률, 인지도, 이용의향

주요 서비스 이용에 관한 수요자 이용률-만족도-인지도에 관한 질문에 이어, 문재인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제시되어 새로이 도입된 현금-시간-건강지원 제도에 대한 질문을 통해 관련 제도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표 Ⅲ-3-9〉 현금-시간-건강 지원 제도/서비스 이용률-만족도-인지도

단위: %(명), 점

구분		이용률	이용의향	만족도		인지도		계(수)
				만족비율	5점 평균	인지비율	5점 평균	
현금	출산장려금	64.8	-	39.2	3.2	45.7	3.3	100.0(1,013)
	양육수당	85.2	85.6	41.1	3.3	56.7	3.7	100.0(1,013)
	아동수당	88.5	-	43.9	3.3	46.2	3.4	100.0(1,013)
	자녀장려금	30.7	70.3	41.8	3.2	35.0	3.0	100.0(1,013)
	세제지원	49.0	-	35.9	3.2	23.0	2.7	100.0(1,013)
시간	모 출산휴가	38.9	47.2	61.4	3.7	51.8	3.6	100.0(1,013)
	부 출산휴가	35.2	46.9	34.7	3.0	64.7	3.7	100.0(1,013)
	모 근로시간 단축	10.4	48.2	61.9	3.7	54.9	3.6	100.0(1,013)
	부 근로시간 단축	3.3	46.6	51.5	3.5	47.4	3.3	100.0(1,013)
	모 육아휴직	31.1	46.0	50.5	3.4	57.6	3.7	100.0(1,013)
	부 육아휴직	4.9	47.1	48.0	3.2	67.7	3.8	100.0(1,013)
	모 유연근무제	6.7	60.1	64.7	3.8	49.2	3.4	100.0(1,013)
	부 유연근무제	3.3	60.3	72.7	3.8	45.0	3.3	100.0(1,013)
의료	의료비 지원	33.8	75.5	65.2	3.7	20.3	2.8	100.0(1,013)
	산후조리 지원	20.3	71.6	46.6	3.3	27.6	2.9	100.0(1,013)
	임신출산 지원	48.1	76.6	44.4	3.4	29.4	3.0	100.0(1,013)
	취약가구 양육 지원	2.1	33.3	38.1	3.4	21.7	2.7	100.0(1,013)
	기타	1.4	-	57.1	3.8	9.6	2.5	100.0(1,013)

주: 본 연구를 위한 '2018-2019 육아정책 성과평가 수요자 대상 조사' 결과임.

1) 주요 제도 이용률(수혜율)

먼저 문재인정부에서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현금-시간-건강/의료지원의 이용률(수혜율)을 조사한 결과,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의 수혜율이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출산장려금 수혜도 약 65%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현금지원의 수혜율이 높게 분포함을 보여준다.

시간지원제도의 이용률은 주로 출산휴가 이용이 30% 이상을 보이는 가운데, 부-모의 출산휴가 이용률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31%로 나타났으며, 모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도 10% 이상으로 응답되었다. 부의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이 5% 미만으로 적은 수치를 보이나 사업시행 초기임

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부-모 간의 시간지원 제도 이용률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시간지원의 다양한 제도가 도입된 부분과 이용률이 완만하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긍정 평가가 가능하다.

건강/의료지원에서는 임신출산지원에 대한 수혜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의료비 지원이 30% 이상, 산후조리 지원의 수혜율이 20% 이상으로 나타났다.

2) 향후 이용 의향

시간지원제도에 대한 향후 이용의향을 질문한 결과, 현금지원에 대한 이용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연근로제를 비롯한 시간지원에 대한 이용의향도 약 50% 미만으로 적지 않은 수준으로 응답되었다. 미취업모와 외벌이가구가 함께 분포한 응답자 구성을 고려할 때 시간지원정책의 주요 정책대상인 맞벌이/취업모의 이용의향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건강 지원에 대한 이용의향도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3) 만족도

해당 제도와 서비스를 실제 이용한 경우 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의료비지원과 시간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과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금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인지도와 수혜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

즉 시간지원과 의료지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용률(수혜율)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반면, 현금지원의 경우 높은 이용률에도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인지도

관련 제도와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질문한 결과,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시간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현금지원에 대한 인지도도 높은 수준을 보인다. 즉 정책 인지도가 시간지원, 현금지원, 건강/의료지원의 순으로 나타나, 새로 도입/변화한 정책인만큼 정책인지율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미이용이유

제도와 서비스에 대한 미이용 이유를 질문한 결과, 이용의향이 있으나 이용방법과 절차를 모르거나, 이용자격과 기회가 안된다는 접근성에 대한 이유가 많았다.

〈표 Ⅲ-3-10〉 현금-시간-건강 지원 제도/서비스 미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이용 의향이 없어서/ 특별히 필요성 느끼지 않아	여건이 안되어	서비스 질/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워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움	이용의향이 있으나 이용방법/절차를 몰라	이용의향이 있으나 이용자격이 안됨	기타	비용 이부담되어	이용 의향이 있으나 실제 이용이 어려움	이용 의향이 있으나 제도적으로가능하지 않음	신청하였으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	계(수)
출산장려금	16.9	11.3	5.6	1.4	15.5	19.7	2.8	-	8.5	12.7	5.6	100.0(71)
양육수당	18.2	10.9	3.6	1.8	14.5	18.2	9.1	-	5.5	10.9	7.3	100.0(55)
자녀장려금	18.4	5.9	4.4	-	26.5	20.6	1.5	-	5.9	10.3	6.6	100.0(136)
세제지원	16.3	8.7	6.5	1.1	29.3	15.2	3.3	-	9.8	5.4	4.3	100.0(92)
모 출산휴가	30.4	9.5	3.6	0.6	1.8	7.7	9.5	1.2	27.4	7.1	1.2	100.0(168)
부 출산휴가	17.0	9.7	0.6	4.3	1.2	2.4	2.1	1.2	52.6	7.3	1.5	100.0(329)
모 근로시간 단축	21.5	7.1	2.0	3.4	3.1	5.4	4.8	0.6	44.9	6.2	1.1	100.0(354)
부 근로시간 단축	15.5	6.2	0.7	2.5	2.1	2.5	1.1	0.9	59.9	7.5	1.1	100.0(439)
모 육아휴직	25.4	6.9	0.4	3.9	2.6	3.4	7.8	1.3	38.4	7.3	2.6	100.0(232)
부 육아휴직	12.7	8.9	0.7	2.5	1.1	1.6	2.0	4.5	57.7	7.4	0.9	100.0(553)
모 유연근무제	21.3	5.8	0.3	4.7	3.5	2.9	4.7	1.2	45.5	8.2	2.0	100.0(343)
부 유연근무제	17.3	6.6	0.2	3.5	3.0	1.4	1.2	0.7	58.3	6.6	1.2	100.0(427)
의료비 지원	17.5	5.5	2.2	1.6	32.2	17.5	1.1	-	8.7	11.5	2.2	100.0(183)
산후조리 지원	22.6	7.9	7.1	1.7	19.2	18.4	1.3	5.4	6.7	6.7	2.9	100.0(239)
임신출산 지원	23.8	6.1	4.3	3.7	21.3	18.3	1.8	1.8	7.3	7.9	3.7	100.0(164)
취약가구 양육 지원	26.3	7.8	3.0	1.2	11.4	26.3	3.0	0.6	9.0	8.4	3.0	100.0(167)
기타	47.8	7.5	1.6	4.3	8.6	4.3	9.7	1.6	6.5	4.3	3.8	100.0(186)

주: 본 연구를 위한 '2018-2019 육아정책 성과평가 수요자 대상 조사' 결과임.

6) 추가 출산 의향

한편 추가 출산 의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남녀 응답자간에 차이가 없이 전체 32%에서 출산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변인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휴직 중인 모의 집단에서 취업중, 구직중, 그리고 미취업 모 집단에 비해 출산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다른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출산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물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의향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등, 소득수준과 연령의 효과가 반영된

측면이 있으나, 하위변인에 따른 차이에 의하면 휴직의 효과와 일·가정양립의 시간지원의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Ⅲ-3-11〉 향후 출산 의향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전체	32.0	68.0	100.0(1,013)
성별			
남성	34.4	65.6	100.0(381)
여성	30.5	69.5	100.0(632)
$x^2(df)$	1.616(1)		
취업모 여부			
취업	34.1	65.9	100.0(402)
휴직 중	42.8	57.2	100.0(145)
학업 중	53.3	46.7	100.0(15)
구직 중	30.8	69.2	100.0(107)
미취업	24.5	75.5	100.0(343)
$x^2(df)$	20.600(4)***		
맞벌이 여부			
맞벌이	36.4	63.6	100.0(525)
외벌이	27.6	72.4	100.0(439)
소득없음	25.6	74.4	100.0(39)
해당없음	20.0	80.0	100.0(10)
$x^2(df)$	9.992(3)*		
소득 기준			
150만원 이하	29.4	70.6	100.0(17)
150~250만원	31.0	69.0	100.0(84)
250~350만원	31.6	68.4	100.0(228)
350~500만원	31.9	68.1	100.0(301)
500만원 이상	32.5	67.5	100.0(381)
$x^2(df)$	0.166(4)		
서비스/해당여부별			
부모 직접돌봄	34.3	65.7	100.0(799)
어린이집 이용자	30.0	70.0	100.0(741)
유치원 이용자	22.2	77.8	100.0(388)
반일제 이용자	42.1	57.9	100.0(95)
초등 돌봄 전반	18.1	81.9	100.0(271)
양육수당 이용자	33.3	66.7	100.0(863)
아동수당 이용자	32.7	67.3	100.0(896)
모 근로단축 이용자	42.9	57.1	100.0(105)
부 근로단축 이용자	51.5	48.5	100.0(33)

주: 본 연구를 위한 '2018-2019 육아정책 성과평가 수요자 대상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7) 출산지원제도 이용 의향

출산휴가와 의료비지원, 산후조리 지원 등 정부에서 확대 보강한 정책에 대한 향후 이용의향을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60% 이상의 높은 이용 의향을 보이고 있다. 미취업모보다 취학업/휴직/구직중인 모의 출산지원제도의 이용의향이 높았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시간단축을 경험한 적 있는 경우 제도 이용의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역시 소득 및 연령의 효과를 배제한 논의는 아니나, 일·가정 양립 지원의 정책적 효과를 볼 수 있는 결과이다. 한편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이용 의향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 월소득 150만원 이하에서는 이용 의향 약 53%로 조사되었다.

〈표 Ⅲ-3-12〉 출산 관련 지원 제도 이용 의향

단위: %(명)

구분	모 출산휴가	부 출산휴가	의료비 지원	산후조리 지원	임신출산 지원	취약가구 양육 지원	계(수)
전체	60.1	60.3	75.5	71.6	76.6	33.3	100.0(1,013)
성별							
남성	57.0	63.3	78.7	75.9	78.7	34.9	100.0(381)
여성	62.0	58.5	73.6	69.0	75.3	32.3	100.0(632)
$x^2(df)$	5.308(2)	4.323(2)	6.821(2)*	10.925(2)**	7.374(2)*	6.118(2)*	
지역 구분							
대도시	60.1	62.8	74.4	73.1	74.9	37.2	100.0(223)
중소도시	61.6	60.0	74.7	70.4	76.7	31.8	100.0(570)
읍·면	56.4	58.6	78.6	73.2	78.2	33.2	100.0(220)
$x^2(df)$	2.133(4)	3.533(4)	3.617(4)	1.042(4)	1.278(4)	7.432(4)	
취업모 여부							
취업	79.6	61.7	74.4	70.4	76.9	32.3	100.0(402)
휴직 중	70.3	67.6	81.4	78.6	81.4	34.5	100.0(145)
학업 중	80.0	86.7	93.3	86.7	93.3	46.7	100.0(15)
구직 중	61.7	57.0	71.0	65.4	69.2	42.1	100.0(107)
미취업	31.8	55.7	75.2	71.1	75.8	30.3	100.0(343)
$x^2(df)$	205.971(8)***	18.978(8)*	8.721(8)	8.879(8)	8.674(8)	8.945(8)	
맞벌이 여부							
맞벌이	77.7	64.0	76.8	72.8	78.5	32.0	100.0(525)
외벌이	38.3	56.5	73.3	69.2	74.0	32.1	100.0(439)
소득없음	66.7	53.8	84.6	79.5	79.5	51.3	100.0(39)
해당없음	70.0	60.0	70.0	80.0	80.0	80.0	100.0(10)
$x^2(df)$	169.270(6)***	15.316(6)*	6.006(6)	6.210(6)	6.502(6)	18.264(6)**	

구분	모 출산휴가	부 출산휴가	의료비 지원	산후조리 지원	임신출산 지원	취약가구 양육 지원	계(수)
가구내 여성취업							
전일제 취업	81.3	64.8	74.7	72.3	77.1	30.7	100.0(423)
시간제 취업	62.9	58.1	81.5	73.4	81.5	40.3	100.0(124)
$x^2(df)$	18.990(2)***	1.896(2)	2.648(2)	0.158(2)	1.438(2)	4.079(2)	
첫째아 기준							
초등부모	55.8	55.0	68.6	62.3	67.7	34.3	100.0(353)
유아부모	61.0	60.6	77.8	73.4	78.4	33.9	100.0(436)
영아부모	65.2	68.3	82.1	82.6	87.1	30.4	100.0(224)
$x^2(df)$	6.931(4)	15.979(4)**	16.573(4)**	30.493(4)***	30.908(4)***	6.239(4)	
소득 기준							
150만원 이하	47.1	58.8	64.7	64.7	58.8	52.9	100.0(17)
150~250만원	44.0	50.0	73.8	69.0	75.0	48.8	100.0(84)
250~350만원	51.3	61.4	79.8	75.4	80.3	38.6	100.0(228)
350~500만원	51.5	58.1	73.4	70.4	75.4	27.6	100.0(301)
500만원 이상	76.1	63.5	75.3	70.9	76.4	29.9	100.0(381)
$x^2(df)$	68.323(8)***	7.228(8)	9.458(8)	9.978(8)	11.666(8)	26.649(8)***	
서비스/해당여부별							
부모 직접돌봄	61.5	62.8	77.5	73.7	78.8	33.0	100.0(799)
어린이집 이용자	61.7	60.1	76.4	71.4	76.5	34.4	100.0(741)
유치원 이용자	59.0	57.7	69.6	64.7	70.6	33.8	100.0(388)
반일제 이용자	70.5	68.4	80.0	72.6	80.0	44.2	100.0(95)
초등 돌봄 전반	58.7	56.8	70.5	64.2	69.0	34.7	100.0(271)
양육수당 이용자	60.6	61.8	77.8	74.0	79.7	33.3	100.0(863)
아동수당 이용자	60.8	61.9	76.7	72.8	78.2	33.0	100.0(896)
모 근로단축 이용자	88.6	65.7	81.0	72.4	81.0	33.3	100.0(105)
부 근로단축 이용자	78.8	93.9	84.8	81.8	90.9	24.2	100.0(33)

주: 본 연구를 위한 '2018-2019 육아정책 성과평가 수요자 대상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마. 국정과제 수행에 대한 수요자 성과평가

1) 국정과제 수행에 대한 평가

주요 육아정책의 수요자인 초등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정책과 관련된 정부의 국정과제의 수행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다고 혹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항목별로 국정과제 수행에 대한 체감 평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어느정도+매우) 잘 하고 있다는 긍정 응답률이 10% 이하로 나타나 국정과제별로 체감하는 수요자 부모의 평가는 평균 '못하는 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가족지원서비

스에 대한 긍정평가 응답률이 15.9%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10.1%,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투자 강화 9.3%로 나타났다. 큰 차이는 아니나 긍정 응답률이 저조한 국정과제로는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사회로의 전환(5.3%)과 강력한 저출산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기능 강화(5.5%),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5.6%)이 있었다.

〈표 Ⅲ-3-13〉 국정과제 수행에 대한 체감 긍정 평가

단위: %(명), 점

구분	평가		계(수)
	긍정비율	5점 평균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7.8	2.0	100.0(1,013)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복지부)	6.2	1.9	100.0(1,013)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7.3	2.0	100.0(1,013)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5.5	1.9	100.0(1,013)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교육부)	10.1	2.1	100.0(1,013)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교육부)	5.6	2.0	100.0(1,013)
아동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9.2	2.1	100.0(1,013)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교육부)	8.1	2.2	100.0(1,013)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여가부)	9.2	2.1	100.0(1,01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	15.9	2.5	100.0(1,013)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여가부)	8.1	2.1	100.0(1,013)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5.3	1.9	100.0(1,013)
일·가정 양립 일상화	6.0	2.0	100.0(1,013)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7.0	2.1	100.0(1,013)
자녀 출산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7.5	2.0	100.0(1,013)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투자 강화	9.3	2.1	100.0(1,013)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7.5	2.1	100.0(1,013)

주: 본 연구를 위한 '2018-2019 육아정책 성과평가 수요자 대상 조사' 결과임.

제시된 국정과제 중 성과가 우수한 것과 미흡한 것에 대해 1, 2순위로 응답하게 한 결과에서도 5점 척도 평정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먼저 1순위로 성과가 가장 우수한 과제로 응답된 것은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로, 포괄적인 육아정책의 목표와 지향에 대해 수요자 부모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과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긍정평가가 많았다.

1+2순위 중복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의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가장 우세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투자 강화'에 대한 긍정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14〉 국정과제 성과가 우수/미흡한 과제 인식 평가(1순위 응답률)

단위: %(명)

구분	우수한 과제	미흡한 과제	계(수)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14.2	33.5	100.0(1,013)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복지부)	3.8	11.0	100.0(1,013)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7.6	8.2	100.0(1,013)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2.2	9.1	100.0(1,013)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교육부)	13.1	5.1	100.0(1,013)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교육부)	2.0	2.4	100.0(1,013)
아동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7.1	4.4	100.0(1,013)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교육부)	3.2	2.4	100.0(1,013)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여가부)	4.2	2.7	100.0(1,01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	13.3	0.9	100.0(1,013)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여가부)	3.4	4.8	100.0(1,013)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1.0	3.5	100.0(1,013)
일·가정 양립 일상화	5.2	4.8	100.0(1,013)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2.8	2.9	100.0(1,013)
자녀 출산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3.4	1.9	100.0(1,013)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투자 강화	7.3	0.9	100.0(1,013)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6.2	1.7	100.0(1,013)

주: 본 연구를 위한 '2018-2019 육아정책 성과평가 수요자 대상 조사' 결과임.

한편 제시된 국정과제 중 성과가 가장 미흡한 것에 대한 응답에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아, 이는 성과가 우수한 과제임과 동시에 가장 미흡한 과제로 나타났다. 1, 2순위를 합친 응답에서도 33.5%, 41.3%로 나타나 미흡한 과제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과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나, 육아친화적이고 행복한 육아 환경 조성에 대한 응답과 함께 저출산정책의 효과와 컨트롤타워 기능에 대한 성과평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 2순위를 합친 응답에서는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대해 미흡하다는 응답률도 높은 편이었다.

〈표 Ⅲ-3-15〉 문재인정부에서 성과가 우수한 국정과제(1순위, 1+2순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계(수)
1순위	14.2	3.8	7.6	2.2	13.1	2.0	7.1	3.2	4.2	13.3	3.4	1.0	5.2	2.8	3.4	7.3	6.2	100.0(1,013)
1+2순위	18.4	8.7	13.2	5.8	23.0	5.5	13.9	8.5	11.3	24.4	7.1	3.8	9.6	7.5	8.1	17.3	14.0	100.0(1,013)

주: 1) ①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②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③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④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⑤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⑥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⑦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⑧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⑨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⑩(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 ⑪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⑫결혼 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⑬일·가정 양립 일상화, ⑭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⑮자녀 출산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⑯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투자 강화, ⑰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2) 본 연구를 위한 '2018-2019 육아정책 성과평가 수요자 대상 조사' 결과임.

〈표 Ⅲ-3-16〉 문재인정부에서 성과가 미흡한 국정과제(1순위, 1+2순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계(수)
1순위	33.5	11.0	8.2	9.1	5.1	2.4	4.4	2.4	2.7	0.9	4.8	3.5	4.8	2.9	1.9	0.9	1.7	100.0(1,013)
1+2순위	41.3	21.5	17.8	17.7	12.5	5.1	10.2	4.7	7.8	2.2	10.1	11.5	13.4	7.6	7.1	3.8	5.7	100.0(1,013)

주: 1) ①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②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③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④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⑤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⑥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⑦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⑧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⑨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⑩(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 ⑪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⑫결혼 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⑬일·가정 양립 일상화, ⑭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⑮자녀 출산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⑯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투자 강화, ⑰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2) 본 연구를 위한 '2018-2019 육아정책 성과평가 수요자 대상 조사' 결과임.

바. 국정과제 추진 달성도 평가

1) 저출산정책

국정과제 추진의 (단기) 달성도를 육아정책 범주별로 세부과제와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질문한 결과, 첫째 저출산정책에서는 '아동수당의 도입과 연령 확대'에 대한 응답이 46.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의료비 지원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양육지원체계 개편'이 약 30% 내외로 높게 나타났다. 양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달성도 평가는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지원의 도입을 반영한 응답으로 보인다. 그 밖에 '출산양육 세제 개선'과 (취약계층 지원 등) '포용적 가족 정책', '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에 대한 달성도 평가가 20%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응답되었다. '저출산 패러다임의 전환: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와 '부모의 노동권 보장', '육아권 보장', '종합적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에 대한 달성도 평가는 10%대 응답률을 보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주요 정책의 실행과 미이행에 대한 수요자의 체감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Ⅲ-3-17〉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 달성도 평가: 1) 저출산정책

단위: %(명), 점

구분	평가		계(수)
	긍정비율	5점 평균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10.2	2.3	100.0(1,01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5	2.6	100.0(1,013)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23.0	2.7	100.0(1,013)
육아시간 지원	20.2	2.6	100.0(1,013)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9.8	2.8	100.0(1,013)
부모의 노동권 보장	15.0	2.5	100.0(1,013)
부모의 육아권 보장	16.7	2.5	100.0(1,013)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46.9	3.3	100.0(1,013)
출산·양육 세제 개선	26.5	2.8	100.0(1,013)
양육지원체계 개편(보육료-수당 관련 개편)	29.7	2.9	100.0(1,013)
의료비지원 강화(영유아의료비제로화, 임신출산의료비경감 등)	37.6	3.1	100.0(1,013)
기타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다자녀지원 등	35.0	3.1	100.0(1,013)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포용적 가족정책	26.9	3.0	100.0(1,013)
(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혁신	20.4	2.8	100.0(1,013)
종합적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	18.1	2.7	100.0(1,013)

주: 본 연구를 위한 '2018-2019 육아정책 성과평가 수요자 대상 조사' 결과임.

2) 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의 (단기) 달성도를 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의 주요 과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저출산정책과 달리) 전반적으로 20% 내외로 비교적 고른 긍정 응답률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놀이중심의 누리과정 개편'과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의 질 강화',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 '육아지원의 확대',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긍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긍정 응답률이 가장 낮았던 정책과제로는 '취학전 출발선 평등'으로 긍정 응답률이 약 13%였으며, 그 다음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과 돌봄 서비스', 그리고 '사립/민간 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와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의 확대', '양육비 부담 완화'가 약 17%대로 응답되었다. 양육지원의 개선 과제로 응답되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와 양육비 부담 완화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가 여전히 드러난 가운데, 출발선 평등과 사립/민간 기관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아동의 놀이시간 확보에서 실질적 성과가 부재한 것에 대한 수요자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

〈표 Ⅲ-3-18〉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 달성도 평가: 2) 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

단위: %(명), 점

구분	평가		계(수)
	긍정비율	5점 평균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편	25.8	3.0	100.0(1,013)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24.9	2.8	100.0(1,01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18.9	2.6	100.0(1,013)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	25.0	2.9	100.0(1,013)
사립민간 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17.7	2.6	100.0(1,013)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20.2	2.7	100.0(1,013)
보육서비스 질 제고	21.1	2.8	100.0(1,013)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21.4	2.8	100.0(1,013)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관리체계	22.7	2.8	100.0(1,013)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24.1	2.8	100.0(1,013)
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19.6	2.8	100.0(1,013)
육아지원의 확대	24.5	2.8	100.0(1,013)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	15.4	2.5	100.0(1,013)
공공성 확대	21.3	2.7	100.0(1,013)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확대	20.0	2.7	100.0(1,013)
취학전 출발선 평등	13.3	2.4	100.0(1,013)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	17.2	2.6	100.0(1,013)
양육비 부담 완화	17.7	2.5	100.0(1,013)

주: 본 연구를 위한 '2018-2019 육아정책 성과평가 수요자 대상 조사' 결과임.

3) 아동정책

아동정책의 세부과제 추진에 대한 달성도 평가에서도 전반적으로 10%대로 앞서 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 응답과는 차이를 보인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양육 참여' 정책의 달성도에 대한 긍정평가가 21.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아동의 권리보장(4영역)'에 대한 긍정평가가 많았다. 응답률에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부모의 육아행복감'과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개편'에 대한 긍정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표 Ⅲ-3-19〉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 달성도 평가: 3) 아동 정책

단위: %(명), 점

구분	평가		계(수)
	긍정비율	5점 평균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편	15.4	2.7	100.0(1,013)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개편)	18.6	2.7	100.0(1,013)
아동권리보장(4영역 : 보호, 참여, 건강, 놀이)	19.2	2.7	100.0(1,013)
아동정책(수혜)의 사각지대 보완	17.6	2.6	100.0(1,013)
아동권리 보장 확대	16.9	2.7	100.0(1,013)
부모의 육아 행복감	15.0	2.5	100.0(1,013)
아버지의 양육 참여	21.6	2.7	100.0(1,013)
아동의 웰빙/행복	17.2	2.7	100.0(1,013)

주: 본 연구를 위한 '2018-2019 육아정책 성과평가 수요자 대상 조사' 결과임.

사. 육아정책분석-요소별 평가

수요자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정책의 내용 구성과 주요 의제와 사회이슈/내재된 수요의 반영, 정책이 의도하는 서비스의 산출과 이로써 정책의 성과 및 효과성에 대한 평가 등 정책평가에 필요한 요소별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먼저 정책의 인지도에서 보육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유아교육과 돌봄정책에 이어, 저출산정책과 아동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Ⅲ-3-20〉 문재인정부의 육아정책 평가(1)-인지도 및 성과평가

단위: %(명), 점

구분	저출산정책		유아교육 정책		보육정책		돌봄정책		아동정책		계(수)
	인지 비율	5점 평균	인지 비율	5점 평균	인지 비율	5점 평균	인지 비율	5점 평균	인지 비율	5점 평균	
육아정책 인지도	26.8	3.0	32.5	3.1	35.6	3.2	32.1	3.1	20.8	2.8	100.0(1,013)
육아정책 성과평가	12.4	2.5	20.4	2.8	21.6	2.8	21.7	2.8	17.5	2.7	100.0(1,013)

주: 본 연구를 위한 '2018-2019 육아정책 성과평가 수요자 대상 조사' 결과임.

문재인정부의 육아정책의 성과와 효과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정책 범주별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돌봄정책과 보육정책의 성과에 대한 긍정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으로 아동정책과 저출산정책에 대한 성과평가가 가장 저조하였다. 이는 정책의 인지도 결과와 유사하다.

〈표 Ⅲ-3-21〉 문재인정부의 육아정책 평가(2)-내용, 서비스, 효과성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②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①+② 적절하지 않다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적절하다	⑤ 매우 적절하다	④+⑤ 적절하다	5점 평균	계(수)
육아정책 내용 구성	6.5	20.9	27.4	45.7	25.3	1.6	26.9	2.9	100.0(1,013)
의제 반영	10.8	32.0	42.7	36.2	19.6	1.4	21.0	2.7	100.0(1,013)
서비스 산출	13.6	37.6	51.2	35.4	12.7	0.6	13.3	2.5	100.0(1,013)
효과성 평가	12.2	29.0	41.3	39.7	17.8	1.3	19.1	2.7	100.0(1,013)

주: 본 연구를 위한 '2018-2019 육아정책 성과평가 수요자 대상 조사' 결과임.

이어서 정책의 설계와 서비스 산출, 효과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첫째, 육아정책의 내용 구성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긍정 응답과 적절하지 않다는 부정 응답이 공히 약 27% 내외로 나타나, 5점 척도 평균 2.9점으로 '보통'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육아정책이 주요 의제와 사회이슈 및 사회적으로 내재된 욕구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부정 응답이 42.7%로 긍정 응답보다 많아 5점 평균 2.7점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책이 의도하는 서비스의 산출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평가하게 한 결과,

그렇지 않다는 부정 응답이 과반을 넘어 5점 평균 2.5점으로 나타났다.

넷째, 육아정책 전반이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유의한 효과가 없다는 부정 응답이 긍정 응답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가운데 보통으로 평가한 응답도 많았으며, 평균 2.7점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5점 척도 평균 2점대로 '보통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응답되었다.

아. 육아정책의 중장기 효과 분석

지난 2년간의 육아정책의 추진과 실행이, 육아정책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지표의 관점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모니터링을 하였다.

〈표 Ⅲ-3-22〉 문재인정부의 육아환경 현재수준과 이에 대한 정책의 기여도 평가

단위: %(명), 점

구분	현재 수준 평가		기여도 평가		계(수)
	긍정비율	5점 평균	긍정비율	5점 평균	
출산율	4.1↓	1.9	6.1↓	2.1	100.0(1,013)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14.5	2.5	17.7↑	2.6	100.0(1,013)
육아 재정투자 확대	18.6↑	2.6	21.7↑	2.7	100.0(1,013)
육아환경 전반	15.0↑	2.5	18.0↑	2.6	100.0(1,013)
삶의 질 전반	10.9↓	2.4	13.5	2.5	100.0(1,013)
양육비용 부담	13.1	2.4	19.9↑	2.6	100.0(1,013)
서비스의 질	14.1	2.5	15.8	2.6	100.0(1,013)
부모 양육역량 및 가정 환경	11.5	2.4	13.4	2.5	100.0(1,013)
형평성	9.2↓	2.3	11.8↓	2.4	100.0(1,013)
자녀의 행복/웰빙	11.9	2.5	14.2	2.6	100.0(1,013)
서비스의 질	13.1	2.5	15.9	2.6	100.0(1,013)
공공성	13.0	2.5	16.6	2.6	100.0(1,013)

주: 본 연구를 위한 '2018-2019 육아정책 성과평가 수요자 대상 조사' 결과임.

1) 주요 항목별 우리나라 현재 수준

수요자 부모들은 제시된 주요 항목에서 출산율에 대한 현재수준 평가가 가장 저조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형평성에 대한 현재수준 평가도 낮게 나타났다. 육아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와 육아환경 전반,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과 서비스의 질 항목에서 15% 내외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대체로 5점 척도 평균 2.3~2.5점으로 '보통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2) 주요 항목별 육아정책의 기여도 평가

주요 항목별 우리나라의 현재 수준의 현황 및 개선에 지난 2년간의 정부 육아정책의 추진과 실행이 기여한 정도를 평가한 결과, 앞서 현재수준 평가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2.4~2.7점이 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보통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 중에서도 육아 재정투자의 확대에 대한 기여도 평가가 가장 높았으며, 이로써 양육비용부담 완화에 대한 기여도 평가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출산율에 대한 기여도 평가가 가장 저조한 가운데, 형평성(equity), 삶의 질 전반에 대한 정부정책의 기여도 평가가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수요자 부모의 정책 성과평가는 전체적으로 전문가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자. 부모 심층면담 결과

영유아 부모와 초등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각각 FGI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논의되었다.

첫째, 정부의 육아지원 확대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육아지원 인프라와 공공성의 확대, 돌봄체계에 대한 확충 노력, 시간지원의 확대가 체감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놀이중심의 접근과 혁신학교의 추진 등이 진행됨을 알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를 고려할 때 부모들이 공교육에만 자녀들을 맡기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다. 돌봄교실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편이나, 단순히 돌봄에만 치중하지 않는, 교육적 활동과 지원이 보강된 돌봄교실 프로그램을 기대한다는 의견이 있다. 둘째, 교사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데 학교 교사의 역할 수행이 어려워, 사교육의 이용이 최선의 대안이 아님을 알면서도 사교육체계에의 의존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셋째,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지원의 확대가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가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지원된 현금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가구의 소득수준별로 살펴보고 선별지원의 설계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이 제안되었다. 즉 아동수당의 정책 목표인 양육부담의 완화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의 지원은 소

득수준이 높은 가구보다는 적은 가구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였다. 과거 무상보육의 지원이 도입되었을 때 영유아 자녀 사교육으로 지출했다는 응답이 일부 있었다. 즉 현금지원의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 정책 효과의 제고를 위해 보다 면밀한 정책대상와 내용설계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넷째, 아버지의 육아참여가 늘어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좋은 직장(예: 대기업)을 다니는 경우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등 시간지원의 수혜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생계형 맞벌이 등 육아지원의 공백이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섯째, 자녀를 키워보니 연령대별로 영유아기에 대한 정책이 많고 지원의 체감도가 큰 반면, 상대적으로 취학 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적게 느껴지고 지원의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만24개월까지는 집에서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민간/사립과 국공립 기관 간의 격차가 여전히 크게 느껴지고, 유치원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부분 등이 지속되어 영유아기에 비용부담이 되고 있다는 응답이 있었다.

일곱째, 예방접종의 연령 확대와 난임센터 등의 난임지원 확대가 있음을 들어서 알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설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끝으로, 육아지원의 서비스와 정책은 많이 이용할수록(즉 서비스 이용 개수와 이용률이 높을수록) 정책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정부에서 하는 지원 중에 보편적 지원이 아닌 것은 가용한 예산 내에서 선착순 마감인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정부지원의 수혜가 정보력의 싸움과 선착순 경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다수의 부모와 아동이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정책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였다.

4. 정책효과 계량분석

정부의 육아정책을 저출산정책/유아교육정책/보육정책/돌봄정책/아동정책으로 나누어 각각의 성과 수준에 대하여 설문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 정책의 성과 수준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로 사용된 정책의 성과

수준은 순위 만족도(전혀 잘 되지 않았다/잘 되지 않았다/보통/잘 됐다/매우 잘 됐다)로 조사되었으므로 순서화 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가. 정책 성과 분석

1) 분석모델

종속변수로 사용된 정책의 성과 수준은 순위 만족도(전혀 잘 되지 않았다/잘 되지 않았다/보통/잘 됐다/매우 잘 됐다)로 조사된 리커트형(Likert-type scale)응답이다. 따라서 순서화(ordered)된 형태의 자료로 하나의 응답에서 다음 응답으로의 순서가 있는 형태의 응답이므로 순서화 로짓모델(Ordered logit model)을 사용하여 응답 확률 개념으로 분석한다. 해당 모델은 로짓 모델(Logit model)을 연장시킨 차원으로, 단순한 이항(binary) 선택이 아니라 순서화된 다항(polytomous) 선택을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이다. 우선 아래 식(1)과 같은 이항 로짓모델(Binary logit model)로부터 순서화 된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간의 관계를 가정하면 아래와 같다(이성우·민성희·박지영·윤성도, 2005: 145: 김나영·김은설·이재희·이혜민, 2018: 73-74 재인용).

$$y^{*} = \sum_{k=1}^{K} \beta_i x_{i+} \epsilon, \text{ 단}, \epsilon(0, \sigma^2) \tag{1}$$

y^{*}는 관찰 불가능한 응답변수이며, 관찰 가능한 응답 y를 선택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순서 로짓 모델은 아래 식(2)와 같이 도출된다(이성우 외, 2005: 145: 김나영 외, 2018: 73-74, 재인용).

$$\log[\frac{P(y \leq j|x)}{1-P(y \leq j|x)}] = \mu - \sum_{k=1}^{K} \beta_k x_k, \text{ 단}, j = 1, 2, \cdots, J-1 \tag{2}$$

이에 따라 현재 이용 양육형태 만족도에 대해 영향을 준 요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모형을 구성하여 순서화 로짓모델로 분석하였다.

$$Y_{n} = \alpha_0 + \alpha_1 NC + \alpha_2 NA + \alpha_3 LS + \alpha_4 RA + \alpha_5 RS + \alpha_6 DW + \alpha_7 MW + \alpha_8 CS + \epsilon$$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각의 모델에서 종속변수인 저출산정책/유아교육정책/보육정책/돌봄정책/아동정책 등은 정책에 대한 성과 수준을 5점 척도(전혀 잘 되지 않았다/잘 되지 않았다/보통/잘 됐다/매우 잘 됐다)로 응답한 자료이다. 독립변수로는 (막내자녀)연령, 응답자 연령, 응답자 성별, 거주지 규모(대도시/중소도시/읍면), 맞벌이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십만원), 현금지원 정책 이용 경험 등을 사용하였다.

〈표 Ⅲ-4-1〉 분석변수

변수명		측정단위	내용
저출산정책(Y1)		5점 만족도	1: 전혀 잘 되지 않았다 2: 잘 되지 않았다 3: 보통 4: 잘됐다 5: 매우 잘됐다
유아교육정책(Y2)			
보육정책(Y3)			
돌봄정책(Y4)			
아동정책(Y5)			
자녀수(NC)			명수
자녀연령(막내자녀)(NA)		만 나이	
거주지 규모(LS)		대도시/중소도시/읍면	
	대도시(LS_1)		0: 아니요/1: 예
	중소도시(LS_2)		0: 아니요/1: 예
	읍면(LS_3)1)		0: 아니요/1: 예
응답자 연령(RA)		만 나이	
응답자 성별(RS)			0: 남성/1: 여성
맞벌이 여부(DW)			0: 아니요/1: 예
가구 월평균 소득(MW)		십만원	
현금지원 정책 이용경험(CS)			0: 아니요/1: 예

2) 분석결과

가) 종속변수: 저출산정책에 대한 성과 수준

응답자 연령, 가구 월평균 소득, 현금지원 정책 이용 경험은 저출산정책 성과 수

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간지원 정책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서화 로짓모델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연령, 가구 월평균 소득, 현금지원 정책 이용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저출산정책의 성과 수준과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지원 정책 이용경험과 자녀연령(막내자녀)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해당 정책과 양의 관계가 있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오즈비를 통하여 결과를 해석해 보면, 응답자 연령이 1세 증가할 때, 정책 성과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이 3.5%(OR=0.965, $p < 0.05$) 낮아지며, 가구 월평균 소득이 십만원 증가할 때 저출산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이 0.3%(OR=0.997, $p < 0.05$) 낮아진다. 현금지원 정책 이용경험의 경우 유경험자가 무경험자 보다 저출산정책 성과수준을 높게 평가 할 가능성이 40.4% 낮다. 자녀연령(막내자녀)의 경우 자녀연령이 1세 증가할 때, 저출산정책에 대한 성과 수준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이 6%(OR=1.06, $p < 0.05$)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시간지원 정책 이용의 경우, 유경험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 보다 성과 수준을 높게 평가할 확률이 39%(OR=1.39, $p < 0.01$) 증가하는 것을 뜻한다.

〈표 Ⅲ-4-2〉 상관관계: 저출산정책에 대한 성과 수준

구분	저출산정책	자녀수	자녀연령 (막내자녀)	거주지 규모	응답자 연령	응답자 성별	맞벌이 여부	가구 월평균 소득	현금지원 정책 이용경험	시간지원 정책 이용경험	건강/의료 지원 정책 이용 경험	돌봄 및 교육 정책 이용 경험
저출산정책	1											
자녀수	0.025 (0.422)	1										
자녀연령(막내자녀)	0.029 (0.353)	−0.136*** (0)	1									
거주지 규모	0.002 (0.94)	0.089*** (0.005)	−0.03 (0.338)	1								
응답자 연령	−0.06* (0.057)	0.043 (0.168)	0.397*** (0)	−0.09*** (0.004)	1							
응답자 성별	0.023 (0.469)	0.059* (0.061)	−0.041 (0.192)	−0.062** (0.048)	−0.017 (0.6)	1						
맞벌이 여부	0.009 (0.769)	−0.036 (0.254)	0.152*** (0)	−0.051 (0.103)	0.023 (0.458)	−0.049 (0.118)	1					
가구 월평균 소득	−0.07** (0.026)	−0.009 (0.77)	−0.023 (0.459)	−0.034 (0.278)	−0.025 (0.426)	−0.012 (0.711)	−0.034 (0.281)	1				
현금지원 정책 이용경험	−0.062** (0.049)	0.078** (0.013)	−0.236*** (0)	0.032 (0.311)	−0.084*** (0.008)	−0.002 (0.954)	−0.034 (0.275)	0.008 (0.793)	1			
시간지원 정책 이용경험	0.059* (0.063)	−0.013 (0.688)	−0.228*** (0)	−0.016 (0.614)	−0.075** (0.017)	−0.005 (0.887)	0.159*** (0)	−0.053* (0.091)	0.132*** (0)	1		
건강/의료지원 정책 이용 경험	0.004 (0.894)	0.078** (0.013)	−0.151*** (0)	0.088*** (0.005)	−0.074** (0.019)	0.032 (0.308)	−0.056* (0.077)	−0.055* (0.078)	0.169*** (0)	0.122*** (0)	1	
돌봄 및 교육 정책 이용 경험	−0.022 (0.481)	0.146*** (0)	0.189*** (0)	−0.033 (0.298)	0.079** (0.012)	0.001 (0.977)	0.083*** (0.009)	0.009 (0.78)	0.05 (0.115)	−0.042 (0.187)	0.016 (0.607)	1

* $p < .05$, ** $p < .01$, *** $p < .001$.

〈표 Ⅲ-4-3〉 분석결과: 저출산정책에 대한 성과 수준

구분	계수(S.D.)	Odds Ratio(S.D.)
자녀수	0.135 (0.097)	1.145 (0.111)
자녀연령(막내자녀)	0.058** (0.028)	1.06** (0.03)
대도시	0.081 (0.179)	1.084 (0.194)
중소도시	-0.112 (0.148)	0.894 (0.132)
응답자 연령	-0.035** (0.015)	0.965** (0.014)
응답자 성별	0.052 (0.121)	1.053 (0.128)
맞벌이 여부	0.003 (0.128)	1.003 (0.128)
가구 월평균 소득	-0.003** (0.002)	0.997** (0.002)
현금지원 정책 이용경험	-0.701** (0.343)	0.496** (0.17)
시간지원 정책 이용경험	0.329*** (0.126)	1.39*** (0.175)
건강/의료지원 정책 이용 경험	0.026 (0.124)	1.026 (0.127)
돌봄 및 교육 정책 이용 경험	-0.239 (0.31)	0.787 (0.244)
N	1,013	
Pseudo R2	0.0112	

** p 〈 .01, *** p 〈 .001.

나) 종속변수: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성과 수준

자녀연령(막내자녀), 시간지원정책 이용경험이 유아교육정책 성과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 월평균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분석결과를 보면, 자녀연령과 시간지원 정책 이용경험은 유아교육정책 성과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응답자 연령과 가구 월평균 소득은 통계적으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즈비를 통하여 결과를 해석해 보면, 자녀연령(막내자녀)이 1세 증가할수록,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성과 수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이 1.14배(OR=1.14, p 〈

0.01) 증가하며, 시간지원 정책 유경험자는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유아교육정책 성과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이 46.5%(OR=1.465, $p < 0.01$) 증가한다. 응답자 연령이 1세 증가할수록, 유아교육정책 성과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이 13.8%(OR=0.962, $p < 0.05$) 낮으며, 가구 월평균 소득이 십만원 증가할 때 해당 확률은 0.3%(OR=0.997, $p < 0.1$)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표 Ⅲ-4-4〉 상관관계: 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성과 수준

구분	유아교육 정책	자녀수	자녀연령 (막내자녀)	거주지 규모	응답자 연령	응답자 성별	맞벌이 여부	가구 월평균 소득	현금지원 정책 이용경험	시간지원 정책 이용경험	건강/의료 지원 정책 이용 경험	돌봄 및 교육 정책 이용 경험
유아교육정책	1											
자녀수	0.009 (0.774)	1										
자녀연령 (막내자녀)	0.118*** (0)	-0.136*** (0)	1									
거주지 규모	0.01 (0.752)	0.089*** (0.005)	-0.03 (0.338)	1								
응답자 연령	-0.029 (0.349)	0.043 (0.168)	0.397*** (0)	-0.09*** (0.004)	1							
응답자 성별	0.017 (0.599)	0.059* (0.061)	-0.041 (0.192)	-0.062** (0.048)	-0.017 (0.6)	1						
맞벌이 여부	0.046 (0.145)	-0.036 (0.254)	0.152*** (0)	-0.051 (0.103)	0.023 (0.458)	-0.049 (0.118)	1					
가구 월평균 소득	-0.084*** (0.008)	-0.009 (0.77)	-0.023 (0.459)	-0.034 (0.278)	-0.025 (0.426)	-0.012 (0.711)	-0.034 (0.281)	1				
현금지원 정책 이용경험	-0.042 (0.179)	0.078** (0.013)	-0.236*** (0)	0.032 (0.311)	-0.084*** (0.008)	-0.002 (0.954)	-0.034 (0.275)	0.008 (0.793)	1			
시간지원 정책 이용경험	0.057* (0.068)	-0.013 (0.688)	-0.228*** (0)	-0.016 (0.614)	-0.075** (0.017)	-0.005 (0.887)	0.159*** (0)	-0.053* (0.091)	0.132*** (0)	1		
건강/의료지원 정책 이용 경험	-0.004 (0.912)	0.078** (0.013)	-0.151*** (0)	0.088*** (0.005)	-0.074** (0.019)	0.032 (0.308)	-0.056* (0.077)	-0.055* (0.078)	0.169*** (0)	0.122*** (0)	1	
돌봄 및 교육 정책 이용 경험	0.006 (0.846)	0.146*** (0)	0.189*** (0)	-0.033 (0.298)	0.079** (0.012)	0.001 (0.977)	0.083*** (0.009)	0.009 (0.78)	0.05 (0.115)	-0.042 (0.187)	0.016 (0.607)	1

* $p < .05$, ** $p < .01$, *** $p < .001$.

〈표 Ⅲ-4-5〉 분석결과: 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성과 수준

구분	계수(S.D.)	Odds Ratio(S.D.)
자녀수	0.113 (0.097)	1.12 (0.109)
자녀연령(막내자녀)	0.131*** (0.029)	1.14*** (0.033)
대도시	0.048 (0.179)	1.049 (0.188)
중소도시	0.063 (0.148)	1.065 (0.158)
응답자 연령	-0.038** (0.015)	0.962** (0.014)
응답자 성별	0.055 (0.121)	1.056 (0.128)
맞벌이 여부	0.084 (0.128)	1.087 (0.139)
가구 월평균 소득	-0.003* (0.002)	0.997* (0.002)
현금지원 정책 이용경험	-0.296 (0.342)	0.743 (0.254)
시간지원 정책 이용경험	0.382*** (0.127)	1.465*** (0.186)
건강/의료지원 정책 이용 경험	0.024 (0.124)	1.024 (0.126)
돌봄 및 교육 정책 이용 경험	-0.171 (0.309)	0.843 (0.261)
N	1,013	
Pseudo R^2	0.0155	

* $p < .05$, ** $p < .01$, *** $p < .001$.

다) 종속변수: 보육정책에 대한 성과 수준

보육정책 성과 수준과 자녀연령(막내자녀), 맞벌이 여부, 시간지원 정책 이용경험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연령, 가구 월평균 소득 등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순서화 로짓모델 분석 결과를 보면, 자녀연령(막내자녀), 맞벌이 여부, 시간지원 정책 이용 경험은 보육정책 성과 수준에 통계적으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연령, 가구 월평균 소득, 현금지원 정책 이용 경험은 통계적으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즈비를 보면, 자녀연령(막내자녀)의 경우 1세 증가할 때, 보육정책에 대한 성과 수준이 긍정적일 확률이 1.108배(OR=1.108, $p < 0.01$) 증가하며, 맞벌이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성과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이 25.8%(OR= 1.258, $p < 0.1$)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시간지원 정책의 경우 유경험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해당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이 1.343배(OR=1.343, $p < 0.05$)이지만, 응답자 연령이 1세 증가할 때, 성과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은 6.1%(OR=0.939, $p < 0.01$) 낮다. 가구 월평균 소득이 십만원 상승할 때, 그 확률은 0.4%(OR=0.996, $p < 0.05$) 낮으며, 현금지원 정책 이용경험이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보육정책 성과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이 43%(OR=0.57, $p < 0.1$) 낮은 것을 의미한다.

〈표 Ⅲ-4-6〉 상관관계: 보육정책에 대한 성과 수준

구분	보육정책	자녀수	자녀연령 (막내자녀)	거주지 규모	응답자 연령	응답자 성별	맞벌이 여부	가구 월평균 소득	현금지원 정책 이용경험	시간지원 정책 이용경험	건강/의료 지원 정책 이용 경험	돌봄 및 교육 정책 이용 경험
보육정책	1											
자녀수	0.031 (0.327)	1										
자녀연령(막내자녀)	0.075** (0.017)	−0.136*** (0)	1									
거주지 규모	0.012 (0.71)	0.089*** (0.005)	−0.03 (0.338)	1								
응답자 연령	−0.093*** (0.003)	0.043 (0.168)	0.397*** (0)	−0.09*** (0.004)	1							
응답자 성별	0.043 (0.176)	0.059* (0.061)	−0.041 (0.192)	−0.062** (0.048)	−0.017 (0.6)	1						
맞벌이 여부	0.066** (0.036)	−0.036 (0.254)	0.152*** (0)	−0.051 (0.103)	0.023 (0.458)	−0.049 (0.118)	1					
가구 월평균 소득	−0.086*** (0.006)	−0.009 (0.77)	−0.023 (0.459)	−0.034 (0.278)	−0.025 (0.426)	−0.012 (0.711)	−0.034 (0.281)	1				
현금지원 정책 이용경험	−0.048 (0.124)	0.078** (0.013)	−0.236*** (0)	0.032 (0.311)	−0.084*** (0.008)	−0.002 (0.954)	−0.034 (0.275)	0.008 (0.793)	1			
시간지원 정책 이용경험	0.052* (0.097)	−0.013 (0.688)	−0.228*** (0)	−0.016 (0.614)	−0.075** (0.017)	−0.005 (0.887)	0.159*** (0)	−0.053* (0.091)	0.132*** (0)	1		
건강/의료지원 정책 이용 경험	0.024 (0.441)	0.078** (0.013)	−0.151*** (0)	0.088*** (0.005)	−0.074** (0.019)	0.032 (0.308)	−0.056* (0.077)	−0.055* (0.078)	0.169*** (0)	0.122*** (0)	1	
돌봄 및 교육 정책 이용 경험	0.039 (0.217)	0.146*** (0)	0.189*** (0)	−0.033 (0.298)	0.079** (0.012)	0.001 (0.977)	0.083*** (0.009)	0.009 (0.78)	0.05 (0.115)	−0.042 (0.187)	0.016 (0.607)	1

* $p < .05$, ** $p < .01$, *** $p < .001$.

〈표 Ⅲ-4-7〉 분석결과: 보육정책에 대한 성과 수준

구분	계수(S.D.)	Odds Ratio(S.D.)
자녀수	0.127 (0.099)	1.135 (0.112)
자녀연령(막내자녀)	0.103*** (0.029)	1.108*** (0.032)
대도시	0.048 (0.182)	1.05 (0.191)
중소도시	0.005 (0.149)	1.005 (0.15)
응답자 연령	-0.063*** (0.015)	0.939*** (0.014)
응답자 성별	0.154 (0.122)	1.167 (0.143)
맞벌이 여부	0.23* (0.129)	1.258* (0.163)
가구 월평균 소득	-0.004** (0.002)	0.996** (0.002)
현금지원 정책 이용경험	-0.563* (0.337)	0.57* (0.192)
시간지원 정책 이용경험	0.295** (0.127)	1.343** (0.171)
건강/의료지원 정책 이용 경험	0.137 (0.125)	1.146 (0.143)
돌봄 및 교육 정책 이용 경험	0.276 (0.309)	1.318 (0.408)
N	1,013	
Pseudo R^2	0.0201	

* $p < .05$, ** $p < .01$, *** $p < .001$.

라) 종속변수: 돌봄정책에 대한 성과 수준

돌봄정책 성과 수준은 자녀연령(막내자녀), 시간지원 정책 이용경험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가구 월평균 소득, 현금지원 정책 이용경험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순서화 로짓모델 분석 결과를 보면, 자녀연령(막내자녀), 시간지원 정책 이용경험은 돌봄정책 성과 수준과 통계학적으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응답자 연령과 가구 월평균 소득은 통계적으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즈비를 보면

자녀연령(막내자녀)이 1세 증가할 때, 돌봄정책 성과 수준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 확률이 16.9%(OR=1.169, $p < 0.01$) 증가하며, 시간지원 정책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성과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55.9%(OR=1.559, $p < 0.01$) 증가한다. 반면 응답자 연령이 1세 증가할수록 평가 수준이 긍정적일 확률은 3.8%(OR=0.962, $p < 0.01$) 감소하고, 가구 월평균 소득도 0.4%(OR=0.996, $p < 0.05$) 감소한다.

〈표 Ⅲ-4-8〉 상관관계: 돌봄정책에 대한 성과 수준

구분	돌봄정책	자녀수	자녀연령 (막내자녀)	거주지 규모	응답자 연령	응답자 성별	맞벌이 여부	가구 월평균 소득	현금지원 정책 이용경험	시간지원 정책 이용경험	건강/의료 지원 정책 이용 경험	돌봄 및 교육 정책 이용 경험
돌봄정책	1											
자녀수	0.017 (0.58)	1										
자녀연령 (막내자녀)	0.14*** (0)	-0.136*** (0)	1									
거주지 규모	0.002 (0.943)	0.089*** (0.005)	-0.03 (0.338)	1								
응답자 연령	-0.025 (0.423)	0.043 (0.168)	0.397*** (0)	-0.09*** (0.004)	1							
응답자 성별	0.046 (0.14)	0.059* (0.061)	-0.041 (0.192)	-0.062** (0.048)	-0.017 (0.6)	1						
맞벌이 여부	0.044 (0.161)	-0.036 (0.254)	0.152*** (0)	-0.051 (0.103)	0.023 (0.458)	-0.049 (0.118)	1					
가구 월평균 소득	-0.084*** (0.007)	-0.009 (0.77)	-0.023 (0.459)	-0.034 (0.278)	-0.025 (0.426)	-0.012 (0.711)	-0.034 (0.281)	1				
현금지원 정책 이용경험	-0.065** (0.039)	0.078** (0.013)	-0.236*** (0)	0.032 (0.311)	-0.084*** (0.008)	-0.002 (0.954)	-0.034 (0.275)	0.008 (0.793)	1			
시간지원 정책 이용경험	0.057* (0.072)	-0.013 (0.688)	-0.228*** (0)	-0.016 (0.614)	-0.075** (0.017)	-0.005 (0.887)	0.159*** (0)	-0.053* (0.091)	0.132*** (0)	1		
건강/의료지원 정책 이용경험	0.006 (0.845)	0.078** (0.013)	-0.151*** (0)	0.088*** (0.005)	-0.074** (0.019)	0.032 (0.308)	-0.056* (0.077)	-0.055* (0.078)	0.169*** (0)	0.122*** (0)	1	
돌봄 및 교육 정책 이용경험	0.001 (0.987)	0.146*** (0)	0.189*** (0)	-0.033 (0.298)	0.079** (0.012)	0.001 (0.977)	0.083*** (0.009)	0.009 (0.78)	0.05 (0.115)	-0.042 (0.187)	0.016 (0.607)	1

* $p < .05$, ** $p < .01$, *** $p < .001$.

〈표 Ⅲ-4-9〉 분석결과: 돌봄정책에 대한 성과 수준

	계수(S.D.)	Odds Ratio(S.D.)
자녀수	0.15 (0.097)	1.161 (0.112)
자녀연령(막내자녀)	0.156*** (0.029)	1.169*** (0.034)
대도시	0.084 (0.179)	1.087 (0.194)
중소도시	-0.072 (0.147)	0.931 (0.137)
응답자 연령	-0.039*** (0.015)	0.962*** (0.014)
응답자 성별	0.173 (0.121)	1.189 (0.144)
맞벌이 여부	0.074 (0.127)	1.076 (0.137)
가구 월평균 소득	-0.004** (0.002)	0.996** (0.002)
현금지원 정책 이용경험	-0.448 (0.344)	0.639 (0.22)
시간지원 정책 이용경험	0.444*** (0.127)	1.559*** (0.198)
건강/의료지원 정책 이용 경험	0.082 (0.124)	1.086 (0.134)
돌봄 및 교육 정책 이용 경험	-0.255 (0.307)	0.775 (0.238)
N	1,013	
Pseudo R^2	0.0209	

** $p < .01$, *** $p < .001$.

마) 종속변수: 아동정책에 대한 성과 수준

자녀연령(막내자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아동정책 성과 수준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가구 월평균 소득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분석 결과를 보면, 자녀연령(막내자녀), 시간지원 정책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아동정책수준과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 연령, 가구 월평균 소득은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즈비를 보면 자녀연령(막내자녀)의 경우 연령이 1세 증가할 때, 아동정책 성과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이

13.4%(OR=1.134, $p < 0.0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지원 정책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아동정책 성과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이 41.4%(OR=1.414, $p < 0.0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응답자 연령이 1세 높아질수록 아동정책 성과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은 3.7%(OR=0.963, $p < 0.0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 월평균 소득 역시 십만원 상승할 때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이 0.3%(OR=0.997, $p < 0.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10〉 상관관계: 아동정책에 대한 성과 수준

구분	아동정책	자녀수	자녀연령 (막내자녀)	거주지 규모	응답자 연령	응답자 성별	맞벌이 여부	가구 월평균 소득	현금지원 정책 이용경험	시간지원 정책 이용경험	건강/의료 지원 정책 이용 경험	돌봄 및 교육 정책 이용 경험
아동정책	1											
자녀수	0.003 (0.924)	1										
자녀연령 (막내자녀)	0.103*** (0.001)	-0.136*** (0)	1									
거주지 규모	0.022 (0.486)	0.089*** (0.005)	-0.03 (0.338)	1								
응답자 연령	-0.036 (0.247)	0.043 (0.168)	0.397*** (0)	-0.09*** (0.004)	1							
응답자 성별	0.008 (0.792)	0.059* (0.061)	-0.041 (0.192)	-0.062** (0.048)	-0.017 (0.6)	1						
맞벌이 여부	0.022 (0.486)	-0.036 (0.254)	0.152*** (0)	-0.051 (0.103)	0.023 (0.458)	-0.049 (0.118)	1					
가구 월평균 소득	-0.079** (0.012)	-0.009 (0.77)	-0.023 (0.459)	-0.034 (0.278)	-0.025 (0.426)	-0.012 (0.711)	-0.034 (0.281)	1				
현금지원 정책 이용경험	-0.048 (0.125)	0.078** (0.013)	-0.236*** (0)	0.032 (0.311)	-0.084*** (0.008)	-0.002 (0.954)	-0.034 (0.275)	0.008 (0.793)	1			
시간지원 정책 이용경험	0.04 (0.204)	-0.013 (0.688)	-0.228*** (0)	-0.016 (0.614)	-0.075** (0.017)	-0.005 (0.887)	0.159*** (0)	-0.053* (0.091)	0.132*** (0)	1		
건강/의료지원 정책 이용 경험	-0.004 (0.898)	0.078** (0.013)	-0.151*** (0)	0.088*** (0.005)	-0.074** (0.019)	0.032 (0.308)	-0.056* (0.077)	-0.055* (0.078)	0.169*** (0)	0.122*** (0)	1	
돌봄 및 교육 정책 이용 경험	-0.028 (0.367)	0.146*** (0)	0.189*** (0)	-0.033 (0.298)	0.079** (0.012)	0.001 (0.977)	0.083*** (0.009)	0.009 (0.78)	0.05 (0.115)	-0.042 (0.187)	0.016 (0.607)	1

* $p < .05$, ** $p < .01$, *** $p < .001$.

〈표 Ⅲ-4-11〉 분석결과: 아동정책에 대한 성과 수준

구분	계수(S.D.)	Odds Ratio(S.D.)
자녀수	0.103 (0.098)	1.109 (0.108)
자녀연령(막내자녀)	0.126*** (0.029)	1.134*** (0.033)
대도시	-0.026 (0.179)	0.975 (0.174)
중소도시	-0.006 (0.148)	0.994 (0.147)
응답자 연령	-0.038** (0.015)	0.963** (0.015)
응답자 성별	0.019 (0.121)	1.019 (0.123)
맞벌이 여부	0.017 (0.128)	1.017 (0.13)
가구 월평균 소득	-0.003* (0.002)	0.997* (0.002)
현금지원 정책 이용경험	-0.258 (0.343)	0.773 (0.265)
시간지원 정책 이용경험	0.346*** (0.128)	1.414*** (0.18)
건강/의료지원 정책 이용 경험	0.027 (0.123)	1.027 (0.127)
돌봄 및 교육 정책 이용 경험	-0.460 (0.315)	0.631 (0.199)
N	1,013	
Pseudo R^2	0.0137	

* $p < .05$, ** $p < .01$, *** $p < .001$.

나. 정책목표 달성도 평가

본 절에서는 정부의 육아정책을 저출산정책/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아동정책 등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한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이들 정책의 달성도 수준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였다. 즉, 각 정책과제 및 목표의 달성 평가점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이에 대하여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였다.

1) 분석모델

정책과제 및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각각의 정책부문별로 여러 문항 관련 문항[28]을 설문하여 '1. 전혀 잘 달성되지 않았다/2. 잘 달성되지 않았다/3. 보통/4. 잘 달성됐다/5. 매우 잘 달성됐다' 등 달성도를 평가하도록 한 후, 관련 문항의 평가 점수를 평균하여 각 정책부문의 달성도 점수로 처리하고, 어떠한 요인들이 이에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아래와 같은 모형을 구성하여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 OLS)으로 분석하였으며, 사용된 변수는 아래 〈표 Ⅲ-4-12〉와 같다.

$$Y_{n=}\beta_0+\beta_1 NC+\beta_2 NA+\beta_3 LS+\beta_4 RA+\beta_5 RS+\beta_6 DW+ \beta_7 MW+\beta_8 CS+\epsilon$$

〈표 Ⅲ-4-12〉 분석변수

변수명		측정단위	내용
저출산정책(Y6)		5점 평가	각 카테고리의 세부 정책별 평가 점수를 평균하여 정책의 수치로 사용함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Y7)			
아동정책(Y8)			
자녀수(NC)		명	
자녀연령(막내자녀)(NA)		만 나이	
거주지 규모(LS)		대도시/중소도시/읍면	
	대도시(LS_1)		0: 아니오/1: 예
	중소도시(LS_2)		0: 아니오/1: 예
	읍면(LS_3)1)		0: 아니오/1: 예
응답자 연령(RA)		만 나이	
응답자 성별(RS)			0: 남성/1: 여성
맞벌이 여부(DW)			0: 아니오/1: 예
가구 월평균 소득(MW)		십만원	
현금지원 정책 이용경험(CS)			0: 아니오/1: 예

주: 1) reference.

28) 자세한 설문 항목 내용은 '부록 2. 수요자용 설문지' 18번 문항 참조.

2) 분석결과

우선 상관관계 분석에서, 맞벌이일수록 시간지원정책과 돌봄 및 교육정책 이용경험이 높은 것은 시간지원과 돌봄/교육 정책의 서비스 산출 및 수혜가 일·가정양립의 저출산정책의 대상을 적절히 목표로 하여(targeting) 실행 및 전달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다만 맞벌이가구의 건강/의료지원 이용경험은 맞벌이가구가 아닌 경우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금지원과 시간지원, 건강/의료지원 이용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자녀양육지원체계가 다양한 서비스(현물)-현금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가) 종속변수: 저출산정책 과제/목표 달성도 평가

자녀연령(막내자녀), 거주지 규모, 시간지원 정책 이용경험 등은 저출산정책 과제/목표 달성도 평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가구 월평균 소득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정책 과제/목표 달성도 평가의 OLS 분석 결과를 보면, 자녀연령(막내자녀), 시간지원 정책 이용경험, 거주지 규모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녀연령이 1세 증가할 때, 저출산정책 과제/목표 달성도에 대한 평가 (평균)점수는 0.035점 증가하며, 시간지원 정책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평가 (평균)점수가 0.206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주지 규모 변수에서는 읍면에 거주할 때 보다 대도시는 0.197점, 중소도시는 0.186점 감소하여 달성도를 더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13〉 상관관계: 저출산정책 과제/목표 달성도 평가

구분	저출산정책	자녀수	자녀연령 (막내자녀)	거주지 규모	응답자 연령	응답자 성별	맞벌이 여부	가구 월평균 소득	현금지원 정책 이용경험	시간지원 정책 이용경험	건강/의료 지원 정책 이용 경험	돌봄 및 교육 정책 이용 경험
저출산정책	1											
자녀수	-0.01 (0.754)	1										
자녀연령 (막내자녀)	0.054* (0.087)	-0.136*** (0)	1									
거주지 규모	0.054* (0.087)	0.089*** (0.005)	-0.03 (0.338)	1								
응답자 연령	0.03 (0.347)	0.043 (0.168)	0.397*** (0)	-0.09*** (0.004)	1							
응답자 성별	0.046 (0.143)	0.059* (0.061)	-0.041 (0.192)	-0.062** (0.048)	-0.017 (0.6)	1						
맞벌이 여부	0.033 (0.291)	-0.036 (0.254)	0.152*** (0)	-0.051 (0.103)	0.023 (0.458)	-0.049 (0.118)	1					
가구 월평균 소득	-0.076** (0.016)	-0.009 (0.77)	-0.023 (0.459)	-0.034 (0.278)	-0.025 (0.426)	-0.012 (0.711)	-0.034 (0.281)	1				
현금지원 정책 이용경험	-0.013 (0.685)	0.078** (0.013)	-0.236*** (0)	0.032 (0.311)	-0.084*** (0.008)	-0.002 (0.954)	-0.034 (0.275)	0.008 (0.793)	1			
시간지원 정책 이용경험	0.08** (0.011)	-0.013 (0.688)	-0.228*** (0)	-0.016 (0.614)	-0.075** (0.017)	-0.005 (0.887)	0.159*** (0)	-0.053* (0.091)	0.132*** (0)	1		
건강/의료지원 정책 이용 경험	0.05 (0.11)	0.078** (0.013)	-0.151*** (0)	0.088*** (0.005)	-0.074** (0.019)	0.032 (0.308)	-0.056* (0.077)	-0.055* (0.078)	0.169*** (0)	0.122*** (0)	1	
돌봄 및 교육 정책 이용 경험	-0.009 (0.785)	0.146*** (0)	0.189*** (0)	-0.033 (0.298)	0.079** (0.012)	0.001 (0.977)	0.083*** (0.009)	0.009 (0.78)	0.05 (0.115)	-0.042 (0.187)	0.016 (0.607)	1

* $p < .05$, ** $p < .01$, *** $p < .001$.

〈표 Ⅲ-4-14〉 분석결과: 저출산정책 과제/목표 달성도 평가

구분	계수(S.D.)
자녀수	-0.011 (0.06)
자녀연령(막내자녀)	0.035** (0.017)
대도시	-0.197* (0.11)
중소도시	-0.186** (0.091)
응답자 연령	0.004 (0.009)
응답자 성별	0.120 (0.074)
맞벌이 여부	0.040 (0.076)
가구 월평균 소득	0.000** (0.000)
현금지원 정책 이용경험	-0.083 (0.205)
시간지원 정책 이용경험	0.206*** (0.077)
건강/의료지원 정책 이용 경험	0.108 (0.076)
돌봄 및 교육 정책 이용 경험	-0.107 (0.198)
N	1,013
Adjusted R^2	0.0147

* $p < .05$, ** $p < .01$, *** $p < .001$.

나) 종속변수: 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에 대한 과제/목표 달성도 평가

자녀연령(막내자녀)과 거주지 규모는 유아교육·보육 돌봄 정책 과제/목표 달성도 평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가구 월평균 소득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보면, 자녀연령(막내자녀), 응답자 연령, 가구 월평균 소득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연령이 1세 증가할 때, 유아교육·보육 돌봄 정책 과제/목표 달성도에 대한 평가 (평균)점수는 0.057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에 응답자 연령이 1세 증가할 때 (평균)점수는 0.017점 감소하고, 가구 월평균 소득이 십만원 증가할 때, (평균)점수는 0.000점[29]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9) 실제 계수값=-0.0000173을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함.

〈표 Ⅲ-4-15〉 상관관계: 유아교육·보육 돌봄 정책에 대한 과제/목표 달성도 평가

구분	유아교육 정책	자녀수	자녀연령 (막내자녀)	거주지 규모	응답자 연령	응답자 성별	맞벌이 여부	가구 월평균 소득	현금지원 정책 이용경험	시간지원 정책 이용경험	건강/의료 지원 정책 이용 경험	돌봄 및 교육 정책 이용 경험
유아교육정책	1											
자녀수	-0.008 (0.811)	1										
자녀연령(막내자녀)	0.07** (0.027)	-0.136*** (0)	1									
거주지 규모	0.059* (0.063)	0.089*** (0.005)	-0.03 (0.338)	1								
응답자 연령	-0.028 (0.367)	0.043 (0.168)	0.397*** (0)	-0.09*** (0.004)	1							
응답자 성별	0.023 (0.473)	0.059* (0.061)	-0.041 (0.192)	-0.062** (0.048)	-0.017 (0.6)	1						
맞벌이 여부	0.034 (0.276)	-0.036 (0.254)	0.152*** (0)	-0.051 (0.103)	0.023 (0.458)	-0.049 (0.118)	1					
가구 월평균 소득	-0.073** (0.021)	-0.009 (0.77)	-0.023 (0.459)	-0.034 (0.278)	-0.025 (0.426)	-0.012 (0.711)	-0.034 (0.281)	1				
현금지원 정책 이용경험	-0.012 (0.703)	0.078** (0.013)	-0.236*** (0)	0.032 (0.311)	-0.084*** (0.008)	-0.002 (0.954)	-0.034 (0.275)	0.008 (0.793)	1			
시간지원 정책 이용경험	0.025 (0.427)	-0.013 (0.688)	-0.228*** (0)	-0.016 (0.614)	-0.075** (0.017)	-0.005 (0.887)	0.159*** (0)	-0.053* (0.091)	0.132*** (0)	1		
건강/의료지원 정책 이용 경험	0.051 (0.106)	0.078** (0.013)	-0.151*** (0)	0.088*** (0.005)	-0.074** (0.019)	0.032 (0.308)	-0.056* (0.077)	-0.055* (0.078)	0.169*** (0)	0.122*** (0)	1	
돌봄 및 교육 정책 이용 경험	-0.024 (0.438)	0.146*** (0)	0.189*** (0)	-0.033 (0.298)	0.079** (0.012)	0.001 (0.977)	0.083*** (0.009)	0.009 (0.78)	0.05 (0.115)	-0.042 (0.187)	0.016 (0.607)	1

* $p < .05$, ** $p < .01$, *** $p < .001$.

〈표 Ⅲ-4-16〉 분석결과: 유아교육·보육 돌봄 정책에 대한 과제/목표 달성도 평가

구분	계수(S.D.)
자녀수	0.015 (0.064)
자녀연령(막내자녀)	0.057*** (0.018)
대도시	-0.186 (0.116)
중소도시	-0.098 (0.096)
응답자 연령	-0.017* (0.01)
응답자 성별	0.069 (0.078)
맞벌이 여부	0.053 (0.08)
가구 월평균 소득	-0.000** (0.000)
현금지원 정책 이용경험	-0.012 (0.216)
시간지원 정책 이용경험	0.082 (0.082)
건강/의료지원 정책 이용 경험	0.130 (0.080)
돌봄 및 교육 정책 이용 경험	-0.267 (0.210)
N	1,013
Adjusted R^2	0.0116

* $p < .05$, ** $p < .01$, *** $p < .001$.

다) 종속변수: 아동정책의 과제/목표 달성도 평가

자녀연령(막내자녀), 거주지규모, 시간지원 정책 이용경험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아동정책 과제/목표 달성도 평가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가구 월평균 소득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보면, 자녀연령(막내자녀), 시간지원 정책 이용 경험, 건강/의료지원 정책 이용 경험, 거주지 규모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연령이 1세 증가할 때, 아동정책 과제/목표 달성도에 대한 평가 (평균)점수는 0.064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간지원 정책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평균)점수가 0.228점 높았으며, 건강/의료지원 정책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평균)점수가 0.163점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거주지 규모를 보면, 읍면에 거주하는 경우 대도시에 비해서 0.405점, 중소도시에 비해서 0.264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17〉 상관관계: 아동정책의 과제/목표 달성도 평가

구분	아동정책	자녀수	자녀연령 (막내자녀)	거주지 규모	응답자 연령	응답자 성별	맞벌이 여부	가구 월평균 소득	현금지원 정책 이용경험	시간지원 정책 이용경험	건강/의료 지원 정책 이용 경험	돌봄 및 교육 정책 이용 경험
아동정책	1											
자녀수	-0.001 (0.967)	1										
자녀연령(막내자녀)	0.057* (0.07)	-0.136*** (0)	1									
거주지 규모	0.096*** (0.002)	0.089*** (0.005)	-0.03 (0.338)	1								
응답자 연령	-0.018 (0.565)	0.043 (0.168)	0.397*** (0)	-0.09*** (0.004)	1							
응답자 성별	0.034 (0.288)	0.059* (0.061)	-0.041 (0.192)	-0.062** (0.048)	-0.017 (0.6)	1						
맞벌이 여부	0.014 (0.653)	-0.036 (0.254)	0.152*** (0)	-0.051 (0.103)	0.023 (0.458)	-0.049 (0.118)	1					
가구 월평균 소득	-0.061* (0.052)	-0.009 (0.77)	-0.023 (0.459)	-0.034 (0.278)	-0.025 (0.426)	-0.012 (0.711)	-0.034 (0.281)	1				
현금지원 정책 이용경험	-0.019 (0.547)	0.078** (0.013)	-0.236*** (0)	0.032 (0.311)	-0.084*** (0.008)	-0.002 (0.954)	-0.034 (0.275)	0.008 (0.793)	1			
시간지원 정책 이용경험	0.061* (0.051)	-0.013 (0.688)	-0.228*** (0)	-0.016 (0.614)	-0.075** (0.017)	-0.005 (0.887)	0.159*** (0)	-0.053* (0.091)	0.132*** (0)	1		
건강/의료지원 정책 이용 경험	0.059* (0.06)	0.078** (0.013)	-0.151*** (0)	0.088*** (0.005)	-0.074** (0.019)	0.032 (0.308)	-0.056* (0.077)	-0.055* (0.078)	0.169*** (0)	0.122*** (0)	1	
돌봄 및 교육 정책 이용 경험	-0.029 (0.362)	0.146*** (0)	0.189*** (0)	-0.033 (0.298)	0.079** (0.012)	0.001 (0.977)	0.083*** (0.009)	0.009 (0.78)	0.05 (0.115)	-0.042 (0.187)	0.016 (0.607)	1

* $p < .05$, ** $p < .01$, *** $p < .001$.

〈표 Ⅲ-4-18〉 분석결과: 아동정책의 과제/목표 달성도 평가

구분	계수(S.D.)
자녀수	0.021 (0.077)
자녀연령(막내자녀)	0.064*** (0.022)
대도시	-0.405*** (0.141)
중소도시	-0.264** (0.116)
응답자 연령	-0.014 (0.012)
응답자 성별	0.120 (0.095)
맞벌이 여부	-0.002 (0.097)
가구 월평균 소득	0.000 (0.000)
현금지원 정책 이용경험	-0.143 (0.262)
시간지원 정책 이용경험	0.228** (0.099)
건강/의료지원 정책 이용 경험	0.163* (0.097)
돌봄 및 교육 정책 이용 경험	-0.312 (0.254)
N	1,013
Adjusted R^2	0.0181

* $p < .05$, ** $p < .01$, *** $p < .001$.

다. 소결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시간지원 정책 이용경험, 자녀연령(막내자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각각의 정책들과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 연령, 가구 월평균 소득은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육아정책의 범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용경험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현금지원을 받은 경우 정책의 성과평가와 달성도 평가가 상대적으로 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시간지원과 건강/의료지

원의 경험은 정책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지원은 맞벌이가구를 지원하는 일·가정양립의 긍정효과를 유의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다.

보편적 현금지원이 갖는 정책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책목표 대비: 양육부담 경감 및 아동발달지원)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수요자가 체감하는 성과평가/달성도평가 결과에 의하면 현금지원의 효과가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반면에 시간지원과 건강/의료지원 (그리고 제한적이나 돌봄 및 교육정책 이용)의 경험은 관련 정책의 성과평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간지원과 의료지원, 돌봄정책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현금지원의 정책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정책 수립 및 운영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시간지원' 정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한편으로 가구소득과 연계한 비용지원의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설계의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요자 조사 결과와 심층면담결과를 고려할 때, 현금지원 수혜에 대한 단기 정책성과를 분명히 인지하고 향후 이용의향 등에서 높게 평가하는 동시에, 현금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비판적 의견과 불만족을 표출하고 있어, 현금 위주의 비용지원을 육아지원의 정책 설계로 한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함께 실제 수혜 경험에서 오는 현금지원수준에 대한 불만족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금지원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에 근거한 지원 정책 설계 보강이 요구된다 하겠다.

Ⅳ

2018-2019 육아정책 분석 및 제언

01 육아정책 성과분석

02 육아정책의 효과성 제고 제언

Ⅳ. 2018-2019 육아정책 분석 및 제언

1. 육아정책 성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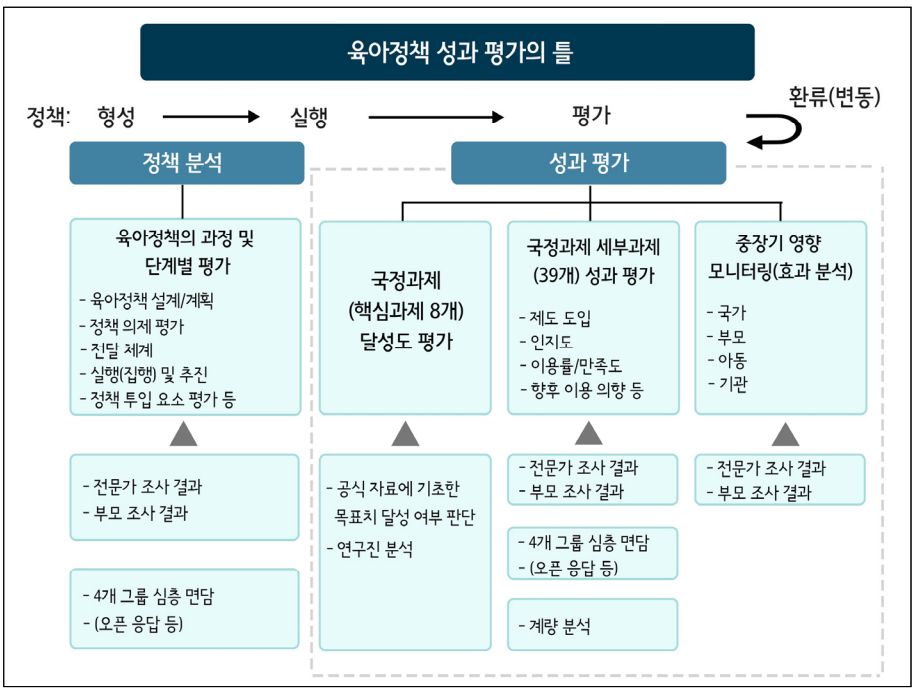
가. 육아정책 분석 및 평가의 틀

본 연구는 육아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저출산과 양육지원, 유아교육과 보육, 아동복지의 제 영역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기준과 지표에 근거하여 접근할 것인지, 정부에서 제시한 국정과제와 주요 부처별 계획의 정책 목표치를 중심으로 달성 여부를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출발하였다. 3년차에 접어든 정부의 육아정책의 추진을 정책의 과정(설계-집행-결과-성과)에 대한 단계적 접근과 요소별 평가를 고려하여 각 과정에 필요한 분석과 평가를 평가의 틀로 구성하고자 하였으며, 이로써 제시된 목표 대비 (단기) 성과 위주의 점검에서 나아가 중장기 효과와 영향력에 대한 점검과 평가로 이어지도록 제안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의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 시 정책의 조정과 대안 모색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속과제(2018~2022년)로 수행되는 「육아정책의 분석과 과제」의 수행을 위해 정책의 진행 단계를 고려하여 사회적 이슈로부터 정책의 의제가 구성되고 정책의 내용이 결정되는 정책의 설계와 목표설정, 추진체계 등에 관한 '정책분석'과, 정책 실행을 통해 나타나는 구체적 결과와 성과에 관한 '성과평가'의 두 축으로 나누어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다만, 2019년 본 연구에서는 정부 출범 이후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임을 고려하여, 국정과제 중심의 육아정책의 성과평가를 위주로 진행하였다(그림 Ⅳ-1-1 참조).

2019년 시점 우리나라의 육아정책 발전 과정과 각 계 관계자와 수요자의 관점과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서, 육아정책의 범주와 이에 대한 성과평가의 틀은 구성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Ⅳ-1-1] 육아정책 성과 평가의 틀



첫째, 육아정책의 성과평가는 정책별로 제시된 구체적 계획과 세부목표가 연도별로 제시한 목표치를 달성했는지에 대해 단기적 정책 달성도를 평가하고, 이러한 계획 및 목표의 달성 여부가 미치는 정책의 성과와 중장기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는 ① 가용한 양적데이터와 ② 전문가/수요자 설문조사 결과, ③ 계량분석에 근거하여 실시하였다.

둘째, 육아정책의 중장기 영향 모니터링은 육아정책의 상위목적 및 주요지표에 의한 평가: 개별 정책 목표의 달성이 육아정책이 추구하는 상위의 목적과 궁극적인 지향(예: 출산율 제고, 삶의 질 보장, 육아행복, 아동웰빙 등)을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음을 고려하여, 즉 미시적 성과 달성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육아의 환경과 서비스 질의 개선과 같은 상위목적의 달성은 체감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반영하였다. 연도별 평가에 이어, 이러한 정책성과가 중장기적인 육아정책의 목적 달성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정책수행의 중장기 영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1) 육아정책 목록 재구조화

기존 저출산-유아교육-보육 정책의 구성된 육아정책의 목록을, 저출산-유아교육·보육·돌봄-아동 정책의 3개 카테고리로 확대, 범주화 하였다.

〈표 Ⅳ-1-1〉 2018년 핵심육아정책 목록 및 2019년 육아정책 범주 재구조화

2018년 핵심정책과제	2019년 육아정책범주
〈저출산정책〉	〈저출산정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급여현실화 및 일·가정양립제도재원확보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누리과정 국가 책임 확대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 달성	출산·양육 세제 개선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의료비제로화
만0~5세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기타지원: 난임, 다자녀지원 등
출산·양육 친화적 세제 개선	포용적 가족: 한부모양육지원, 출생등록제등
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 돌봄체제 도입	초등교육 혁신
공공보육 이용 아동비율 40% 달성	양육지원체계 개편
〈유아교육정책〉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한 국가책임 강화	놀이중심 누리과정/표준보육과정 개편
사립유치원 육성 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대
〈보육정책〉	사립유치원 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보육교사 전문성강화(자격) 및 처우개선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관리체계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등 다양한 서비스
	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돌봄체제 도입(돌보미자격)
	〈아동정책〉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편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아동권리보장(4영역: 보호, 참여, 건강, 놀이)

자료: 2018년-이윤진 외(2018).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Ⅰ). 육아정책연구소, p. 89.
2019년-본 연구과제에서 구성

정부는 육아정책의 슬로건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한 사회(저출산정책), 보육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보육정책), 사각지대를 보강하는 온종일돌봄체계의 구축(돌봄정책),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및 교육의 공공성 실현(유아교육정책), 아동이 행복한 나라(아동정책)으로 제시하였다.

2) 육아정책 분석 틀

2019년 시점 육아정책의 성과평가와 정책분석의 틀로서 다음과 같이 국정과제와 평가지표에 근거한 평가와 이에 대한 중장기영향 모니터링과 평가를 담은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논의·수렴한 주요 국정과제와 육아정책의 범주와 목록, 성과지표를 연계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1-2〉 정부 주요 국정과제-육아정책 성과평가 지표 연계

육아정책 성과지표	국정과제 핵심과제	결과지표(세부목표달성)	전문가/수요자 평가
〈저출산정책〉		달성도 평가	성과평가-정책분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일·가정양립 일상화	-최대 2년 사용가능 -통상임금의 80%(150만원 상한) -이용자 수 증가 -관련 장려금(20→30만원) 인상	· 제도도입 · 정책 인지도 · 서비스 이용률 · 이용 만족도 · 향후 이용의향 · 만족/불만족 및 미이용이유 (주관적 판단에 의한) · 국정과제 성과평가 · 육아정책수행의 단계별/요소별 평가 (정책분석) · 정부 정책의 수행이 미치는 중장기영향 모니터링(효과분석)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증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좌동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아동수당제도 도입	-대상연령 확대 -현금지원제도 보강	
출산·양육 세제 개선		-소득공제, 세액공제조정	
양육지원체계 개편		-현금/서비스지원체계 균형(조정) 및 수요자맞춤 확대	
의료비제로화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립	-의료비 감면 -예방접종 확대	
기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다자녀지원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배우자출산휴가확대	
포용적 가족정책		-한부모양육지원 -출생등록제	
초등교육 혁신	(놀이권/보호권 보장)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편 및 현장 안착	-놀이학교 개념 도입 -학교시간 연장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놀이중심 누리과정/표준보육과정 개편		-유아학습-휴식시간 보장 법제화 -방과후과정 개선 -유아기 사교육 문화 개선(사교육이	

육아정책 성과지표	국정과제 핵심과제	결과지표(세부목표달성)	전문가/수요자 평가
		용비용 및 이용률)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대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연도별 양적 목표 :(초과달성중) -질적 목표 :질적목표 부재 :국공립인프라 지역격차 :공-사립 상생방안	
사립유치원 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			
보육교사 전문성강화(자격) 및 처우개선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교사 양성 및 자격체계 격차 해소 -놀이중심 공통과정 누리과정 개정 및 안착 :구체적 어젠다 및 실행계획 부족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기타) 보육서비스 질 제고	-이용시간실수요보장 -교사 휴게시간 보장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관리체계		-의무평가제 도입 및 실시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 보육등 다양한 서비스		-서비스이용률 -효율적 전달체계	
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도입(돌보미자격)	온종일돌봄체제 도입	-공적돌봄체계 구축(53만명 돌봄 목표) -초등돌봄부족 해소 -아이돌봄사업 확대 (지원기준완화, 이용확대, 품질/돌보미 관리)	
〈아동정책〉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편	아동보호종합 지원체계 구축	-건강 지원 :아동의료비부담경감 -위기아동 발견 -위기아동 보호체계혁신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위기아동 예측지원시스템 가동 및 성과)	
아동권리보장(4영역: 보호, 참여, 건강, 놀이)		-요보호아동 지원 체계 통합(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이어서 육아정책의 궁극적인 목적 대비 육아정책의 실행이 육아 과정 및 환경 전반에 미치는 중장기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보편적 지표를 제시하였다.

〈표 Ⅳ-1-3〉 육아정책의 목적 대비 중장기 영향 모니터링(효과평가)을 위한 지표(안)

영역/지표		평가항목
국가수준	출산율	출산율
	접근성 (access, diversity)	다양한 서비스(교육·보육·돌봄, 종일제-시간제) 이용률 및 접근성 무상/의무 교육·보육 및 돌봄 체계(교육연한, 시간)
	재정	GDP 대비 ECEC/가족복지 재정 비율 아동 1인당 보육교육돌봄 예산
	삶의 질	사회적 격차 완화(계층별, 출산율, 결혼율, 부모취업률, 양육비 지출 차이)
부모대상	양육비용 (affordability, 양육지원체계)	양육비용(평균, 편차, 양육비용부담비율) 공-사 교육·보육·돌봄 비용 부담
		비용지원체계(서비스-현금 지원 조합 및 선택권)
		보건의료 지원(산전-산후 출산지원, 양육지원
		포용성(inclusiveness): 취약계층 지원체계 다문화, 장애, 한부모/조손 가족 서비스 이용률 및 지원율
	서비스의 질	서비스 이용만족도(질, 이용시간, 내용/프로그램 등)
		부모 참여(교사와의 소통, 부모교육 및 참여)
	양육역량 및 가정환경	부모 육아휴직 비율 및 급여수준 부모역량(양육역량, 육아행복감, 부모 양육시간) 가정환경의 질(HOME)
아동대상	형평성(equity)	취학전 출발선 평등(학습준비도)
	웰빙 및 발달성과 (learning or developmental outcome)	아동웰빙(행복감, 생활시간조사: 보육·교육-놀이-수면-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등) 아동사망률/유병률, 아동학대, 안전사고 발생건수/비율
기관관점	서비스의 질 (quality, pedagogy)	국가수준 공통의 커리큘럼 평가/모니터링 체계, 평가/모니터링 참여율 교직원 자격, 교육(연수), 급여, 복지(근로시간, 이직률 등) 과정적 질: 교직원 전문성(역량/효능감. 페다고지, 상호작용) 구조직 질: 교사 대 아동 비율, 집단크기, 아동1인당 면적 아동학대, 안전사고 발생건수/비율
	공공성	인프라(다양한 서비스인프라, 국공립기관인프라(이용률)) 기관지원체계(유-보, 공-사립 격차 완화)

나. 전문가의 육아정책 성과분석

먼저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실행계획 달성도 평가에 의하면, 핵심 8개 과제의 실행목표가 제도 도입과 확대 위주로 설정됨에 따라 다수의 핵심과제가 연도별 계획대로 일정수준 이상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실천계획이 ① 아동수당 제도 도입(달성), ② 국공립어린이집 및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제고(달

성), ④ 온종일 돌봄체제 도입(일정수준 달성), ⑤ 일·가정 양립 일상화((남성)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도입 달성), ⑥ 출산에 대한 사회책임 확립(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달성), ⑦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건강, 취약아동보호-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중앙지원체계 통합-아동권리보장원 설립)(달성), ⑧ 유아 놀이 보장-누리과정 개편(달성) 및 유아 학습/휴식시간 보장(추후 달성도 평가 필요)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③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는 유보통합 추진의 중단으로 현재 시점 가시적인 추진이 드러나지 않는 미달성의 상태로 평가되었으며, 유아 학습/휴식시간 보장, 일·가정양립 일상화와 확대에 대해서도 현 시점 달성도 평가가 어려운 과제로, 사실상 추진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은 것으로 논의되었다.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핵심과제의 이행과 추진이 수요자와 전문가에게 공통적으로 체감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서는 수요자 평가가 전문가에 비해 저조하게 나타났다. 정책의 방향성과 설계, 추진과정의 실행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는 전문가 집단과 달리, 수요자 부모는 실제 체감하고 경험을 통해 아는 정책 위주로 평가함에 따라 긍정 응답률에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정책의 주요 타켓집단인 수요자 부모의 이용률과 만족도, 인지도와 향후 이용의향은 정부의 육아정책 국정과제와 세부과제에 대한 성과평가에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였다.

1) 육아정책 성과평가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17개에 대한 전문가 성과평가 결과, 7점 평균 3~4점대로 전반적으로 '보통'수준으로 응답되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응답이 54.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투자 강화',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로 40%대의 긍정 응답을 보였다. 반면에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15.1%,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18.9%로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긍정 응답률을 보였고, 육아정책의 최상위 목표인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 40.6%, 못하고 있다

39.6%로 7점 평균 4점의 '보통' 수준으로 평정되었다.

국정과제의 중요도 평가에서는 상위 목표에 해당하는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31.1%)가 1순위로 응답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23.6%),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17.0%)의 순으로 나타나, 전문가 평가에서 중요도 대비 실행 우수 과제 평가결과 간에 격차가 있었다. 즉 전문가의 국정과제 「중요도-실행우수-실행미흡」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를 살펴보면, 저출산정책의 경우 전문가가 평정한 높은 중요도에 비해 구체적인 정책 추진과 실행이 미흡한 것으로, 특히 저출산정책 추진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부족하며 삶의 질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하는 구체적 정책설계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육아정책이 추구하는 상위 목적에 해당하는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의 중요도 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실행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행성과가 우수한 과제로는 교육부의 '공공성 강화' 정책의 추진이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정책 입안으로 성과가 드러난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온종일 돌봄체계'의 추진과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투자 강화'에 대해 전문가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의 정책 추진과 실행이 높게 평가된 것에 비해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과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에 대한 실행과 추진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포용정책의 기조 하에서 육아분야 교육정책의 공공성 이외의 관점에서 미흡하게 나타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육아정책 전반에 대한 요소별 평가에서 '형평성'과 '포괄성'에 대한 평가가 정부의 전반적인 포용국가 정책 기조가 반영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정부의 아동수당의 도입 등 양육비용 지원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대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정과제 수행에 대한 전문가의 달성도 평가에서 '아동수당의 도입과 연령 확대'가 저조하게 평가된 점은, (단기목표의 달성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현금지원의 도입과 이러한 정책방향이 가져오는 실질적인 성과평가에 대해 숙제를 남긴다 하겠다. 육아정책의 설계와 실행에서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지 숙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며, 육아정책=비용지원이라는 틀을 깨고 비용지원 외에 육아정책의 내용구성과 실행과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육아정책 분석 및 중장기 영향

육아정책의 평가를 육아정책 전반과 정책과제별로 계획 수립과 실행/추진, 성과의 3단계에 대해 평가하게 한 결과, 육아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7점 평균 4.0~4.2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육아정책 전반의 경우 계획수립에 대한 긍정 응답률과 비교하여 정책의 추진과 실행 단계에 대한 긍정 응답률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계획 수립과 실행과 추진, 성과의 3개 측면에서 '돌봄정책'에 대한 평가가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보육정책'과 '아동정책'에 대한 평가가 우수하였다. '저출산정책'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육아정책의 분석에서는 육아정책의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의 설계, 즉 '정책의 내용과 구성'에 대한 평가가 7점 평균 4.9점으로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정책의제 설정'으로 정책의 내용 구성에서 당면한 사회적 이슈와 문제, 내재된 욕구를 잘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를 실제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과 인력 등의 투입요소와 수행/전달체계, 구체적인 정책집행으로 '산출된 서비스 성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응답되었다. 앞으로 계획된 정책 내용과 의제를 구체적으로 추진, 실행하고 다양한 서비스 결과로 산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겠다.

정책을 평가하는 주요 요소별로 전문가에게 질문한 결과, 정책 추진과 실행의 '노력'에 대한 평가가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적·포괄적 정책 설계와 추진'에 대한 긍정 평가가 과반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포괄성'은 육아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가의 '형평성' 요소 평가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영되었다. 반면 비용투입 대비 '효율성'과 구체적 정책타겟 집단과 수요자에의 욕구 충족의 '대응성'과 '추진체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실행단계에서 중앙정부-지역 단위의 전달체계와 인프라 가동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함을 전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육아 환경을 평가하는 4개 영역별 주요 지표에 대해 현재수준과 정부정책의 기여도 평가가 7점 척도 평균 '보통 이상'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는 정부 정책의 기여도를 현재수준보다 양호하게 평가하였다. 이로써 전문가집단은 육아정책의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동력을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

나, 부정 응답률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나타나 육아정책의 구체적인 실효성과 정책 추진 과정 등에 대해서는 긍-부정의 상반된 평가가 공존함을 알 수 있다.

다. 수요자의 육아정책 성과분석

1)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와 달리 수요자 부모는 국정과제 수행에 대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평가를 내려 국정과제별로 체감하는 수요자 부모의 평가는 '못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제시된 17개 국정과제 중,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의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가장 우세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투자 강화'에 대한 긍정응답이 많았다(1+2순위 중복응답 기준).

성과가 가장 미흡한 과제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성과가 우수한 과제임과 동시에 가장 미흡한 과제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과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에 대한 응답이 많고, 육아친화적이고 행복한 육아 환경 조성에 대한 응답과 함께 저출산정책의 효과와 컨트롤타워 기능에 대한 성과평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대해 미흡하다는 응답률도 높은 편이었다.

영유아서비스의 공공영역 이용률과 만족도가 사적영역 서비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영유아기 사교육과 사적 놀이공간 및 프로그램의 이용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공공성 확대에 관한 정책 성과가 수요자에게 긍정적으로 체감되는 있으나 사적 영역의 서비스 이용과 사교육 이용 의향이 여전히 유의한 부분은 육아정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주요 과제라 할 수 있으며, 질적 수요를 담보하는 공공성 확충이어야 함을 가리킨다. 다양한 서비스에 해당하는 시간제 보육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공동체 등은 이용률과 인지도가 낮은 편이나, 이용자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정책추진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초등서비스의 경우 방과후과정을 제외하고는 학교 및 공공영역의 돌봄서비스 등 초등돌봄의 이용률과 이용만족도가 양호하게 나타난 반면, 지역사회 온종일 돌봄

에 대해서는 이용률과 이용만족도가 다른 초등서비스 이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초등 저학년 시기의 사교육 이용률과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정책 추진 초기임을 고려해야 하나, 현재 시점 '초등' 서비스 영역의 수요자 성과평가 지표는 전반적으로 취학전 '영유아기' 평가에 비해 저조함을 알 수 있다.

현금지원의 높은 수혜율에 비해 수요자 만족도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시간지원은 낮은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지도와 이용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의료지원의 경우 이용률은 높지 않으나, 향후 이용의향이 높고 만족도도 양호하게 나타났다. 시간지원과 의료지원의 정책 추진은 정책의 성과 뿐만 아니라 목표 대상집단(예: 취업모, 맞벌이, 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만족도와 향후이용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긍정적 성과평가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변인의 효과를 통제한 계량분석에서도 이러한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현금지원의 효과를 담보 또는 보완하는 현금지원의 서비스화에 대한 정책설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고안될 필요가 있으며, 현금지원 수혜 경험자의 정책평가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에 대해 보다 면밀한 해석이 필요하다. 부모 심층면담 결과, 현금지원에 대해 긍정적 체감을 하면서도 정책의 설계가 보편적 재정지원인 점에 대해 긍·부정의 다양한 견해가 있었으며, 일부 현금급여의 수준이 낮은 점에 대한 불만족요인도 표출되었다. 결과해석에 대한 다각적 접근을 통해 현금지원의 효과성 제고와 서비스화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하겠다.

2) 육아정책 분석 및 중장기 영향

정책 인지도에서 보육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유아교육과 돌봄 정책에 이어, 저출산정책과 아동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성과평가에서도 돌봄정책과 보육정책의 성과에 대한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긍정 응답도 비슷하게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아동정책과 저출산정책에 대한 성과평가가 저조하였다.

정책의 설계와 서비스 산출, 효과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첫째, 육아정책 내용구성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5점 척도 평균 2.9점으로 '보통'에 해당하며, 둘째 육아정책이 주요 의제와 사회이슈/욕구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수요자 부모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부정 응답이 긍정 응답보다 많아 5점 평균 2.7점으로 나

타났다. 셋째, 정책이 의도하는 서비스의 산출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정 응답이 과반을 넘어 5점 평균 2.5점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육아정책 전반이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부정 응답이 긍정 응답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가운데 보통에 대한 응답도 많아 평균 2.7점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5점 척도 평균 2점대로 '보통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요소별 평가가 이루어졌다.

2018-2019년 육아정책의 추진과 실행이 주요 항목별로 우리나라의 현재 육아환경의 수준과 개선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한 결과, 현재수준 평가에 비해 정책의 기여도 평가는 다소 높은 2.4~2.7점이 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보통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 중에서도 '육아 재정투자의 확대'에 대한 기여도 평가가 가장 높았으며, 이로써 '양육비용 부담 완화'에 대한 기여도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출산율'에 대한 기여도 평가가 가장 저조한 가운데, '형평성(equity)', '삶의 질 전반'에 대한 정부정책의 기여도 평가가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2. 육아정책의 효과성 제고 제언

육아정책의 발전과정을 고려할 때, 현 시점은 육아정책의 하드파워를 일정수준 이상 달성하고 이제 소프트파워로 전환해야 하는 정책의 성숙과 변화의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는 시기로, 임기 내 목표로 한 구체적 정책 추진의 가시적 성과의 달성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평가와는 달리) 수요자 부모가 인식하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와 아동 및 부모의 육아 행복, 삶의 질 등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 문재인정부의 육아정책은 하드웨어로서의 양육지원체계에서 상대적으로 결여되었던 현금지원을 아동수당의 도입을 통해 보완하고, 일·가정양립의 육아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지원의 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돌봄의 사각지대를 보강하는 학교 중심의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자녀양육과 출산에서의 의료보건 지원을 보강하고 취약계층 대상 지원체계도 부분적으로 강화하였다. 이러한 정책 내용의 구성과 설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정책추진의 달성과 성과는 가시적인 것으로 수요자 부모와 전

문가 평가에서도 일관되게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즉 정책분석에서 단계별로 살펴볼 때, 정책의 구성과 설계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 반면 정책 추진의 과정과 컨트롤타워의 역할 및 전달체계와 인프라에 있어서는 중복과 산발적인 측면이 있으며, 특히 현금지원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지원의 확대가 예산투입 대비 성과를 가늠하는 효율성의 측면에서 구체적 목표의 달성이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되었다.

가. 육아정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제언(성과평가 결과)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이었던 국정과제 및 정책과제별 성과평가에 근거하여 성과 제고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시간지원의 실행력 강화: 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보완

부모의 노동권과 육아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시간지원의 확대는 정책 인지도와 이용만족도, 향후 이용의향의 주요 지표를 비롯하여, 관련 정책의 수혜가 육아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향후 출산의향에까지 반영되는 긍정적 연결고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의한 정책성과가 이용가능한 대상의 측면에서 대기업과 공공기관과 같은 일부 우량 사업장의 근로자로 제한되고,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가 맞벌이/고소득 가구와 반일제 사교육서비스 이용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육아지원의 수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포용적 정책 추진 목표와 대치되는 측면으로, 중견기업 이하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의 시간지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가용한 재원의 마련과 실행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 대비 남성의 육아휴직이 실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지 실제 현장을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재원 체계에서 가용한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부모보험과 같은 별도의 기금 조성에 대한 논의을 통해 시간지원의 보편적 수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적용가능한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로제의 순차적 도입으로 효과성이 높고 수혜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시간지원 정책의 실행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 현금지원의 효과성 검증 및 후속정책 설계

과거 육아정책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온 (기관) 서비스 위주의 양육지원체계에 (세제지원을 포함하여) 보편적 현금지원 위에 선별적 지원체계를 보강한 수당체계의 수립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설계상의 균형 회복과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현금지원 확대의 실질적인 목표 달성과 성과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전문가-수요자에서 공통으로 나타남에 따라, 보편적 현금지원의 도입과 확대가 가져오는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다층적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즉 확보된 현금지원으로 개별 가구에서는 이후 어떠한 양질의 선택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서비스 이용과 인프라 단계에서의 숙제와 질문을 안고 있다.

가구의 취업 특성 및 소득수준, 선호하는 양육방식 등에 따라 현금지원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가구특성과 양육방식에 따른 현금지원의 효과를 분석하고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현금지원의 보완책과 연계전략이 요구된다. 즉 취약계층의 경우 양질의 교육·보육돌봄 프로그램 이용을 보장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 지원이 부가적으로 요구되며, 중산층 이상의 경우 방과후과정 및 초등돌봄교실/온종일 돌봄체계를 통해 돌봄 기능 이상의 교육/활동 프로그램이 보강되어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줄여가는 로드맵 설정이 요구된다. 또한 수요자 평가를 통해서도 긍정적으로 응답된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시간제보육,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와 공적 놀이공간과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가능성에 대한 보강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

현금지원 수혜자의 만족도가 비수혜자에 비해 저조하게 나타난 것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가구 특성과 이용자 양육패턴별로 현금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차별화 된 전략과 지원체계의 마련이 요구된다.

3) 초등시기 다양한 수요 충족과 양질의 프로그램/환경 구성

영유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초등학생 대상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초등돌봄 및 온종일돌봄체계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시행의 초기 단계에서 오는 낮은 인지도와 이용률, 그리고 다른 초등서비스 이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는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조사결과 돌봄체계에 대한 전반적으로 우세한 긍정평가에도 불구하고, 초등 대상

의 정책 설계가 온종일돌봄체계로 이루어지는 양적 확충에 대해 일부 우려의 시각이 있으며, 이는 질적·과정적으로 접근하는 돌봄체계에 대한 요구라 하겠다.

즉 놀이 중심의 휴식과 놀 시간의 확보를 통한 아동권의 보장이 구체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돌봄체계에서의 구체적 프로그램의 부재가 단순 돌봄 위주의 질적 저하로 인식되지 않도록, 놀이와 쉼 중심의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된다. 방과후학교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높음을 고려하여, 수요자 부모와 아동의 오후시간 휴식과 놀이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의 운영과 부모 대상의 프로그램 공유와 홍보도 함께 요구된다. 우선 학교 및 지역사회 내 돌봄의 공간 설계가 우수하고 지역의 수요와 의견이 반영되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프로그램 외에도 돌봄교사의 전문성 증진과 부모/지역사회의 참여와 연계를 제고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는 지자체에서 지역별 수요와 인프라를 고려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4) 육아정책의 새로운 비전과 어젠다 설정

육아환경 전반에 대한 현재수준과 정부정책의 기여도 평가에 의하면, 기관 중심의 서비스 접근성과 질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우수하게 평가되어, 그동안 육아정책이 추진한 지원체계와 투입의 누적된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국가수준에서 살펴본 우리사회의 삶의 질 제고와 육아 행복감, 부모의 양육역량 및 가정환경, 아동의 웰빙과 아동권의 보장과 같은 육아정책의 상위 지향에 대해서는 수요자 부모와 전문가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의 육아지원체계의 수립과 비용지원의 확대가 가져온 성과를 반영한 결과이자,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정책 어젠다와 수요를 드러내는 결과이다. 이제 기관 인프라에 기반하여 노동권의 보장 하에서 부모가 자녀를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가정 내 양육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기관이용률을 줄이고 가정 내 양육의 비율을 높이는 양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이는 아동중심의 관점와 육아권 존중에 대해 공유된 가치와 문화적 기반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어젠다가 육아정책의 주요 과제로 우선순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기 마련된 서비스 지원 체계를 토대로 가정 내 양육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보편적 현금지원이 정책목표의 달성(양육부담 완화,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육지원체계(현금, 시간의 지원의 보강)와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보육-연장보육)의 정합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공립기관 인프라와 다양한 공적 서비스의 확대 속에서 사교육·보육 시장의 이용 경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는 민간/사립 기관 및 서비스 영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규제와 기준의 마련, 필요시 이에 근거한 지원체계에의 편입이 요구된다. 아동대상의 양육과정과 교육·보육·돌봄에 관한 영역으로, 사적 영역에서도 공공서비스에 준하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관리와 지원체계의 마련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민간 산후도우미, 아이돌보미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립/민간 기관에 대한 규제-지원 체계의 균형 마련이 요구된다. 전문가 조사결과, 향후 중요하거나 우선 집중이 필요한 정책 과제로는 (39개 중) 저출산패러다임 전환 다음으로, 아동의 웰빙/행복,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와 부모의 육아행복감, 그리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이에 근거하여 우선순위가 필요한 육아정책의 어젠다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가)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와 가정환경의 질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전방위 설계

나) 아동 최우선의 원칙 적용 및 아동 웰빙과 발달성과 우선 모니터링

다) 양육지원체계(수당-서비스 지원의 정합성 제고) 및 보육지원체계(기본-연장보육의 효율성 제고) 개편의 연계성 확보: 서비스 인프라와 전달체계 정비, 현금지원의 효과성 연계 전략

라) 공-사 기관 인프라의 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지원 체계 마련

마)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 교사 양성/자격체계의 일원화 우선 추진

나. 육아정책의 단계·요소별 제언(정책분석 결과)

1) 저출산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및 집행/전달체계 개선: 중앙-지방정부 역할 설계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에 대한 문제인식이 나타났다. 주요 부처를 포괄하는 정책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부처의 정책 수행을 집합적으로 모아놓은 기능에 머물러 있다는 견해가 피력되고 있다. 또한 부처간/중앙-지방정부 내 에서 중복되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저출산정책 수행체계에 대해 조정하고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비판적 견해도 있었다(예: 학교돌봄-마을돌봄 추진 과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각 부처의 정책 수행을 토대로 하여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며, 부처의 주요 정책 추진에 대한 실행력을 저출산위원회가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과 실행단계에서의 구체적 연결고리가 요구된다. 또한 중앙-지방정부 정책과 사업 간 매칭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가수준의 정책과 지방정부 고유의 추진 사업을 구분하여 중복성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정책조정의 역할과 기본설계의 제시가 중요한 과제로 요구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현금지원과 국가수준 공통의 서비스지원을 관장하고, 지방정부는 확보된 예산으로 지방 고유의 시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의 영역과 재정에 대한 기준 마련을 필요로 한다.

2) 저출산정책의 재구조화: 정책 구성의 차별성 확보

저출산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욕구와 가치체계를 반영한 육아정책의 수립의 요구된다. 출산율 수치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닌, 태어난 아동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보호하고 삶의 질 전반을 향상시키는 저출산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나, 이를 어떻게 실현하고 특히 20-30대 세대에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가에 대한 적극적 철학적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 (4차 기본계획 등) 어젠다 설정과 정책의 구성이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각 부처의 정책을 관장하는 종합적인 조정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저출산정책의 추진 동력으로서 고유한 정책 어젠다를 발굴

하여 저출산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출산율 제고가 아닌 삶의 질로의 정책방향 전환을 공표한 만큼, 이에 걸맞는 미래세대의 가치를 제시하고 이를 반영한 저출생 정책의 구성이 요구된다. 태어난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의 마련과 관련된 것으로, 교육과 돌봄, 주거, 놀이와 문화, 환경의 제 측면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수혜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육아친화환경의 구현이 필요하며, 정책과 지원의 수혜가 출산양육시기 뿐만 아니라 생애주기에 걸쳐 체감되는 접근이 요구된다.

3) 온종일돌봄체계 및 국공립기관 확대 추진방식에 대한 재고

대표적인 정책으로 추진된 온종일돌봄의 확대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증가의 정책 실행과 추진 방식에 대한 논의가 많다. 정책 목표의 달성도에서는 초과 달성의 양적 평가가 우세했으나, 이러한 양적 확충의 과정에서 간과되는 질적·과정적 수요 충족에 대한 지적이 있다. 정책 추진의 과정에서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온종일돌봄과 확대된 국공립기관의 '질' 확보가 우선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국공립인프라 확충 방식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며, 실제 국공립기관 운영과 온종일돌봄 운영의 질과 전문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설계가 구체적으로 요구된다.

4) 육아정책의 설계와 추진 과정에서 소프트파워 강화: 3A(access, affordibility, availability)에 기초한 소프트전략의 중요성

그 간 확대해 온 재정투자(서비스확대, 현금지원 등)와 지원체계의 강화가 부모와 아동, 육아환경과 삶의 질 전반의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육아정책의 질적 수행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제는 재정투자의 확대, 양육지원의 강화가 아닌 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질적 성과를 이루고자 하는지 목표의 설정과 설정된 정책의 내용을 실행하는 정책 이행의 과정이 규제와 평가/모니터링 위주에서 질적, 과정적 실행과 맞춤형 대응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즉 국공립인프라 강화 등 공공성의 확대 정책이 가져온 정책의 긍정적 인식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질적 전략과 수요자와 정책을 이어주는 1:1 대응의 접근이 요구된다.

재정투자가 확대되고 서비스 접근성과 이용이 증가하고 부모 대상 양육지원이

강화되고 서비스 인프라가 보강된 것이 육아정책의 1차적 목표의 달성이라면, 이제는 이러한 육아정책의 투입요소의 확장이 수반해야 할 구체적 성과를 질적, 과정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정책의 과정을 세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육아정책의 추진과 재정투자를 통해 개별 아동이 실제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누리과정의 취학전 출발선 평등은 달성되고 있는지, 교원(교사, 돌보미, 원장, 종사자 등)의 역량과 효능감, 근속, 근로 환경의 구체적 지표는 어떠한지, 부모의 육아행복감과 양육역량, 가정환경의 질은 어떠한지, 궁극적으로 아동의 웰빙(행복과 건강)과 발달을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를 면밀히 살피는 과정으로서의 정책이어야 한다. 향후 필요한 전략에 대한 질문(마지막 질문)에서도 '문화의 형성'과 '수요자/대중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5% 이상으로 나타난 바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5) 포용정책 성과를 위한 정책대상집단의 확대

서비스이용과 정책수혜가 상호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정책이 타겟으로 하는 집단에 따라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가 소득수준 등의 사회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등, 육아정책에 따라 수혜 대상이 한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반일제서비스 이용자와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유치원 이용자의 자녀양육비용 지출과 시간지원 등의 정책수혜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특성에 따라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육아정책의 포용전략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이 정부의 포용정책의 추진을 높게 평가한 가운데, 수요자 부모들은 교육의 희망사다리와 같은 교육의 형평성(eguity) 인식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응답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육아정책의 수혜가 고르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차등지원의 설계가 요구된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육아휴직 비율이 고르게 상승할 수 있도록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을 제고하는 구체적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6) 지역간 격차, 사교육 이용, 그리고 인프라 문제를 적극 고려하는 육아정책의 과정

본 연구에서 드러난 또 다른 이슈로 지역간 육아환경 및 인프라의 격차가 있었

으며, 공적 기반의 육아지원 인프라 확대 속에서도 여전히 육아의 전 과정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교육(보육) 서비스 이용이 있었다. 공공성을 확대하는 정부의 정책 추진과 노력, 그리고 그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육아지원의 정책이 수요자 부모와 아동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얼마나 충족시키는가에 대한 전환적 고민이 보다 면밀히 이루어지고 이것이 육아정책 설계와 과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는 다름 아닌 질적 수요의 충족, 다양한 프로그램,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과 함께 교육력을 제고하는 우수한 환경을 의미하며, 이 속에서 드러나는 지역간 격차와 전달체계와 인프라의 조정은 지속적으로 보강되어야 할 부분이다. 육아정책의 내용을 전달하고 진행하는 과정상의 노력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수요자 부모들은 이야기 하고 있으므로, 지역 단위의 육아 친화 환경이 개별 가정과 아동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구체적으로 앞서 조사결과를 통해 드러난 성과가 우수한 과제와 미흡한 과제, 그리고 향후 우선 추진과제에 대한 공통된 의견을 적극 고려하여, 하반기 정부 정책 수행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2019. 5. 23). 포용국가 아동정책.

교육부(2018. 3).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공공성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교육부(2018). 2019학년도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

교육부(2019). 2019 개정 누리과정(안) 공청회 자료집. 교육부.

국가교육회의(2018. 12). 국가교육회의 1주기백서.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2019. 1. 22).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권기헌(2010). 정책분석론. 박영사

권미경·김문정(2012). 2012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김경준·이호균·서여정·김광혁·김형욱·윤상석 외(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 IV: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14-R14.

김나영·김은설·이재희·이혜민(2018).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의 설치효과 및 만족도 분석과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육아정책연구소.

김영록(2011). 정부정책과 성과평가. 한국학술정보.

김은설·유해미·김선화(2010). 2010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영·최은영·조혜주(2011). 2011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김인경·이종관·최윤경·김태완(2018). 생활비 부담 경감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대한민국 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대한민국 정부(2019a).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정본.

대한민국 정부(2019b).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

도남희·배윤진·김지예(2013). 유아기 행복감 증진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류정희(2019).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방향 및 과제-아동보호체계의 재편을 중심으로.

2019년 제1차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 문재인정부 2주년 육아정책의 성과와 과제 자료집. 육아정책연구소.

문무경(2016. 3). 육아정책 Brief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과제: 푸트라자야 선언문(Putrajaya Declaration)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백선희(2009).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의 보육정책 평가-국가계획을 중심으로-. 상황과 복지, 제28호, 95-141.

보건복지부(2015. 4).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15~2019).

보건복지부(2018). 2017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19). 2018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19. 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시행계획.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보건복지부(2019. 2. 19).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 인포그래픽.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9. 10. 28).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OECD 공동 국제인구컨퍼런스: 한국의 저출산현상와 아동·가족 정책의 발전 방향.

서문희·김혜진(2012). 2012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이혜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최윤경·김문정(2011). 2011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최혜선(2010). 2010 보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이성옥(2015). 참여권의 재해석에 기초한 보육현장의 영유아 청문권.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여성가족부(2018. 1). 2018-2022 제 2차 양성평등 기본계획.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18. 12. 20). 2019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여성가족부.

유해미(2017. 11). 육아정책 Brief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균형 배치와 질 담보되어야”. 육아정책연구소.

유해미(2019). 육아정책 분야 국정과제 추진 성과 및 과제. 2019년 제1차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 문재인정부 2주년 육아정책의 성과와 과제 자료집. 육아정책연구소.

유해미·강은진·조아라(2015). 2015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이성우·민성희·박지영·윤성도(2005). 로짓·프라빗모형 응용. 박영사.

이소영·백혜연·변수정·장인수(2018). 2017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진·양미선·김문정(2018).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Ⅰ). 육아정책연구소.

이정원·이혜민(2014). 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장명림·김인숙(2019). [유·초·중등교육 분야] 교육의 공공성 확대. 문재인정부 2주년, 교육 분야 성과 진단 포럼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장명림·이재연·김영옥·안동현·박수연·김홍희(2007). 한국의 육아지표 개발 및 정책 모니터링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참고자료(2018. 4. 5).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8. 1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최윤경(2019). 영유아기 아동양육의 쟁점 및 아동중심의 정책 방향. 제14차 저출산고령화포럼 자료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최은영·김정숙·송신영(2013). 2013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 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최은영·이진화·김승진(2015). 2015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OECD(2012). Starting Strong III: A Quality Toolbox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Publishing.

OECD(2017a). Starting Strong 2017: Key OECD Indicators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Publishing.

OECD(2017b). OECD Child Well-being Data Portal Country Factsheet: Korea (Nov. 2017).

Quennerstedt, A(2011). The Construction of Children's Rights in Education: A Research Synthesis.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19(4), 661-678.

Schőnberg, U. & Ludsteck, J.(2007). Maternity Leave Legislation, Female labor supply, and the Family Wage Gap. The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IZA).

UNICEF(2007).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Education for All: A framework for the realization of children's rights to education and rights within education.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5. 6. 30). 근로시간 단축하고 직장다니면서 육아하세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9. 1. 1). 19.1.1.부터 달라지는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근로자는 더 넉넉히 지원하고, 사업주는 더 꼼꼼히 챙깁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9. 1. 24). 소중하고 확실한 행복, 아빠 육아휴직 1만7천명 돌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9. 5. 18). 일하는 엄마·아빠의 우아한 일·생활 균형.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9. 7. 29). 2019년 상반기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은 아빠!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9. 10. 1).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8. 6. 28).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9개 지자체 선정.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9. 2. 19). "2022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8. 7. 5). 아이 낳고 키우는 2040 세대 부담은 낮추고 삶의 질은 높인다-"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추진 방안(보고안건)-.

관계부처 합동 보도참고자료(2019. 2. 19). 문재인 정부「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계획(안).

교육부 보도자료(2017. 12. 27). 출발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2018. 2. 12). 5년간 2,600학급 이상 신설로 국공립유치원 40% 달성.

교육부 보도자료(2018. 10. 25). 당정「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확정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 달성-.

교육부 보도자료(2018. 12. 5). 2019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신·증설 및 서비스 개선.

교육부 보도자료(2019. 5. 20). 제10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 개최.

교육부 보도자료(2019. 6. 25). 지자체 및 교육청(학교)협력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성과확산.

교육부 보도자료(2019. 7. 19). 2019 개정 누리과정 확정·발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3. 5. 29). 12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부처 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 12. 26).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발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 4. 16).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 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 10. 24). 두 번째 아동수당 209만 명에게 10월 25일 지급 예정.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 1. 2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 1. 31). 초등학교 새학기, 방과 후 돌봄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 2. 19).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 2. 28).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 확대하여 보육의 질 높인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 3.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별 만족도 공개한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 3. 18).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 삭제된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 4. 25). 4.25일, 아동 231만 명이 보편지급 아동수당 받는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 5. 23).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 6. 20). 국공립·직장어린이집 등 공공보육 이용 아동 증가 추세('15년 21.4% →'18년 25.2%), 학부모 만족도도 공공보육 시설이 높아, 표준보육비용은 1,017천 원(0세반)~396천 원(5세반)으로 계측.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 7. 16). 포용국가 아동정책·서비스 기관 통합된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 7. 22). 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 9. 24).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 9. 29). 2015년생 우리 아이, 잘 지내나요?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9. 1. 22). 가족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미래사회 준비-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 시행.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9. 4. 25). 아이돌보미 선발부터 서비스 품질관리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종합개선.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9. 8. 28). 보편적 가족서비스 확대, 여성·청소년 안전 강화에 중점.

통계청 보도자료(2019. 8. 28). 2018년 출생 통계(확정).

〈인터넷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위키: 온종일돌봄,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3867에서 2019. 11. 7, 인출.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설립목적. https://eduvision.go.kr/conference.do에서 2019. 6. 2, 인출.

박종관(2014). 정책분석평가에 대한 이해와 사례. 전라남도 제1회 정책분석평가사 보수교육 강의자료.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홈페이지(http://www.policyanalyst.net/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edudata/26%ED%9A%8C%EB%B3%B4%EC%88%98%EA%B5%90%EC%9C%A1/1.%EC%A0%95%EC%B1%85%EB%B6%84%EC%84%9D%ED%8F%89%EA%B0%80%EC%9D%98%EC%9D%B4%ED%95%B4_%EB%B0%95%EC%A2%85%EA%B4%80.pdf)에서 2019. 6. 22, 인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사회서비스 정책-사회서비스 사업,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60201

&PAGE=1&topTitle=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2019. 6. 10, 인출.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주요통계, https://www.idolbom.go.kr/intro/index2.go, 2019. 6. 10, 인출.

유네스코 홈페이지, https://en.unesco.org/news/unesco-unicef-promote-new-education-agenda, 2019. 3. 11, 인출.

Abstract

2018~2022 Childrearing Policy Analysis and Outcome Evaluation(II)

Yoon Kyung Choi·Nayoung Kim·Hyemin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2018-2019 Korean childrearing policy's outcome and impacts on families and children, in terms of its policy performance goals and major indicies about overall childrearing environment. The framework of childrearing policy impact analysis was composed of two major parts such as policy analysis and outcome/impact evaluation, considering the systemic processes and elements of policy implementation. The main focus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Moon government's national policy agenda of childrearing. First, this study identified the scope of childrearing policy arena and classified the main three areas as fertility policy, ECEC, and inclusive policy for children.

Second, the annual performance outcome of 8 key national agenda of childrearing was analyzed and as a result most of its annual goals were accomplished, except for the minimization of gap betwee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Third, the outcome analysis of professional stakeholders and parents, concerning 2018-2019 childrearing policies, were done based on the response results of online survey. The results have shown that the overall evaluation of childrearing policy was on average in the middle at the 7-point scale and the results of parents were relatively lower compared

to the results of professionals. The evaluation of care policy was highest, the early education policy in the middle, and the fertility policy evaluation was lowest, among the overall childreariing policy. Especially the control function of fertility committee was lowest, and the wellbeing and the happiness of children and parents were next to lowest. The issue of equity and the cash transfer policy were ranked low in the results.

Fourth, the outcome of overall care policy and infrastructure, parental leave, and the medical and health support for young children and parents were highly ranked.

Keyword: childrearing policy, policy impact analysis, output-outcome evaluation

부록

부록 1. 전문가용 설문지

2018-2019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대상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 2019년 일반과제인 「2018-2022 육아정책의 분석과 과제 연구(II)」의 일환으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수행과 육아정책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한 중간점검의 의미를 갖는 조사입니다.

전반적인 성과평가와 향후 제언을 위해 육아 관련 각 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의견이나 개인 정보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 제②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빠짐없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육아정책연구소장 백 선 희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본 설문은 2019년 시점에서 바라본 육아정책의 구성과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Ⅰ. 육아정책의 범주와 (내용) 구성에 대한 질문

□ 현재 정부에서 수행하는 육아 관련 정책을 주요 부처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부처	육아 관련 정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교육부	유아교육혁신방안
보건복지부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포용국가 아동정책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사업, 가족정책

□ 현재 정부에서 수행하는 육아정책을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범주	2019년 육아정책 목록
〈저출산정책〉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육아시간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부모의 노동권 보장
	부모의 육아권 보장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출산·양육 세제 개선
	양육지원체계 개편(보육료-수당 관련 개편)
	의료비 지원 강화(영유아 의료비 제로화, 임신 출산 의료비 경감 등)
	기타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다자녀지원 등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포용적 가족정책
	(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혁신
	종합적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 유아교육정책 유치원(운영, 설립, 지원, 평가 등) 및 교사, 교육과정, 유아학비 관련 정책 ▸ 보육정책 어린이집(운영, 설립, 지원, 평가인증 등) 및 교사, 보육과정, 보육료 관련 정책 ▸ 돌봄(보호)정책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편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
	사립민간 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관리체계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범주	2019년 육아정책 목록
보육·돌봄을 제외한 돌봄과 보호 서비스 관련 정책 예) 아이돌보미, 초등돌봄, 지역사회 돌봄, 긴급돌봄 등	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육아지원의 확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
	아이돌보미, 육아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취학전 출발선 평등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
	양육비 부담 완화
〈아동정책〉 취약계층 아동 지원 및 보건·의료 지원과 같은 아동 복지 및 아동 권리 등 관련 정책 일반-포용국가 아동정책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편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
	아동권리보장(4영역: 보호, 참여, 건강, 놀이)
	아동정책 (수혜)의 사각지대 보완
	부모의 육아 행복감
	아버지의 양육참여
	아동의 웰빙/행복

1. 귀하는 육아정책을 다음과 같이 주요 내용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분하고 이를 포괄하여 육아정책의 범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아정책 범주와 분류의 적절성을 7점 척도로 평가해주십시오.

   □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 ② 적절하지 않다 □ ③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 ④ 보통 □ ⑤ 적절한 편이다 □ ⑥ 적절하다 □ ⑦ 매우 적절하다

〈저출산정책〉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아동정책〉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편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아동권리보장(4영역: 보호, 참여, 건강, 놀이)
육아시간 지원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	아동정책 (수혜)의 사각지대 보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사립민간 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부모의 육아 행복감
부모의 노동권 보장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아버지의 양육참여
부모의 육아권 보장	보육서비스 질 제고	아동의 웰빙/행복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출산·양육 세제 개선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관리체계	
양육지원체계 개편(보육료-수당 관련 개편)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의료비 지원 강화(영유아의료비 제로화, 임신출산의료비경감 등)	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저출산정책〉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아동정책〉
기타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다자녀지원 등	육아지원의 확대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포용적 가족정책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	
(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혁신	아이돌보미, 육아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종합적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	취학전 출발선 평등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	
	양육비 부담 완화	

1-1.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 )

1-2. 귀하가 생각하시는 육아정책의 범주와 분류체계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로이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 )

2. 다음은 육아정책과 관련된 정부의 국정과제를 제시한 것입니다. 해당 항목별로 정부에서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귀하가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판단하시는 성과에 대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매우 못하고 있으며 1점, 매우 잘하고 있으면 7점으로 1~7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5대 정책 목표〉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더불어 잘사는 경제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관련 국정과제	매우 못하고 있다			보통			매우 잘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1.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1	2	3	4	5	6	7	9
2.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복지부)	1	2	3	4	5	6	7	9
3.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1	2	3	4	5	6	7	9
4.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1	2	3	4	5	6	7	9

관련 국정과제	매우 못하고 있다			보통			매우 잘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5.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교육부)	1	2	3	4	5	6	7	9
6.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교육부)	1	2	3	4	5	6	7	9
7. 아동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1	2	3	4	5	6	7	9
8.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교육부)	1	2	3	4	5	6	7	9
9.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여가부)	1	2	3	4	5	6	7	9
1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	1	2	3	4	5	6	7	9
11.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여가부)	1	2	3	4	5	6	7	9
12.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1	2	3	4	5	6	7	9
13. -일·가정 양립 일상화	1	2	3	4	5	6	7	9
14.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1	2	3	4	5	6	7	9
15. 자녀 출산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1	2	3	4	5	6	7	9
16.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투자 강화	1	2	3	4	5	6	7	9
17.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1	2	3	4	5	6	7	9

3. 문재인정부의 육아 관련 국정과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 중 실행이 가장 잘 된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 1-2순위로 응답해주십시오.

3-1. 가장 중요한 과제 2가지

보 기	
①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②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복지부) ③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④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⑤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교육부) ⑥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교육부) ⑦ 아동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⑧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교육부)	⑨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여가부) 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 ⑪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여가부) ⑫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⑬ -일·가정 양립 일상화 ⑭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⑮ 자녀 출산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⑯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투자 강화 ⑰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3-2. 정책 추진과 실행이 가장 잘 된 부분 2가지

보 기	
①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②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복지부) ③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④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⑤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교육부) ⑥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교육부) ⑦ 아동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⑧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교육부)	⑨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여가부) 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 ⑪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여가부) ⑫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⑬ -일·가정 양립 일상화 ⑭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⑮ 자녀 출산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⑯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투자 강화 ⑰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3-3. 가장 미흡한 부분 2가지

보 기	
①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②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복지부) ③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④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⑤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교육부) ⑥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교육부) ⑦ 아동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⑧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교육부)	⑨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여가부) 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 ⑪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여가부) ⑫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⑬ -일·가정 양립 일상화 ⑭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⑮ 자녀 출산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⑯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투자 강화 ⑰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4. 정부의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의 수립과 실행, 성과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평가해주십시오.

( )

5. 다음은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추진한 정책 과제입니다. 해당 항목별로 세부 정책의 추진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응답해주십시오. 먼저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 주요 목표 달성 평가는 문재인정부 이후(2017년 5월 이후) 최근 2년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 전혀 달성되지 않았으면 1점, 매우 잘 달성 되었으면 7점으로 1~7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관련 국정과제	전혀 달성 되지 않았다			보통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1.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1	2	3	4	5	6	7	9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2	3	4	5	6	7	9
3.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1	2	3	4	5	6	7	9
4. 육아시간 지원	1	2	3	4	5	6	7	9
5.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1	2	3	4	5	6	7	9
6. 부모의 노동권 보장	1	2	3	4	5	6	7	9
7. 부모의 육아권 보장	1	2	3	4	5	6	7	9
8.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1	2	3	4	5	6	7	9
9. 출산·양육 세제 개선	1	2	3	4	5	6	7	9
10. 양육지원체계 개편(보육료-수당 관련 개편)	1	2	3	4	5	6	7	9
11. 의료비 지원 강화(영유아의료비제로화, 임신출산의료비경감 등)	1	2	3	4	5	6	7	9
12. 기타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다자녀지원 등	1	2	3	4	5	6	7	9
13.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포용적 가족정책	1	2	3	4	5	6	7	9
14. (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혁신	1	2	3	4	5	6	7	9
15. 종합적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	1	2	3	4	5	6	7	9

6. 다음은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추진한 정책 과제입니다. 해당 항목별로 세부 정책의 추진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응답해주십시오. 다음으로 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 주요 목표 달성 평가는 문재인정부 이후(2017년 5월 이후) 최근 2년에 대해 평가해주십시오.

※ 전혀 달성되지 않았으면 1점, 매우 잘 달성 되었으면 7점으로 1~7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관련 국정과제	전혀 달성 되지 않았다			보통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편	1	2	3	4	5	6	7	9
2.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1	2	3	4	5	6	7	9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1	2	3	4	5	6	7	9

관련 국정과제	전혀 달성 되지 않았다			보통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 겠다
4.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	1	2	3	4	5	6	7	9
5. 사립민간 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1	2	3	4	5	6	7	9
6.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1	2	3	4	5	6	7	9
7. 보육서비스 질 제고	1	2	3	4	5	6	7	9
8.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1	2	3	4	5	6	7	9
9.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관리체계	1	2	3	4	5	6	7	9
10.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1	2	3	4	5	6	7	9
11. 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1	2	3	4	5	6	7	9
12. 육아지원의 확대	1	2	3	4	5	6	7	9
13.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	1	2	3	4	5	6	7	9
14. 아이돌보미, 육아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1	2	3	4	5	6	7	9
15. 취학전 출발선 평등	1	2	3	4	5	6	7	9
16.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	1	2	3	4	5	6	7	9
17. 양육비 부담 완화	1	2	3	4	5	6	7	9

7. 다음은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추진한 정책 과제입니다. 해당 항목별로 세부 정책의 추진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응답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아동정책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 주요 목표 달성 평가는 문재인정부 이후(2017년 5월 이후) 최근 2년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 전혀 달성되지 않았으면 1점, 매우 잘 달성 되었으면 7점으로 1~7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관련 국정과제	전혀 달성 되지 않았다			보통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 겠다
1.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편	1	2	3	4	5	6	7	9
2.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체계 개편)	1	2	3	4	5	6	7	9
3. 아동권리보장(4영역: 보호, 참여, 건강, 놀이)	1	2	3	4	5	6	7	9
4. 아동정책 (수혜)의 사각지대 보완	1	2	3	4	5	6	7	9
5. 부모의 육아 행복감	1	2	3	4	5	6	7	9
6. 아버지의 양육참여	1	2	3	4	5	6	7	9
7. 아동의 웰빙/행복	1	2	3	4	5	6	7	9

8. 문재인정부의 육아정책 중에서 성과가 가장 큰(수요자 효능감이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과가 가장 큰 2개 정책을 선택해 주십시오.

〈저출산정책〉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아동정책〉
1.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16.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편	33.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편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7.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34.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
3.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18.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5. 아동권리보장(4영역: 보호, 참여, 건강, 놀이)
4. 육아시간 지원	19.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	36. 아동정책 (수혜)의 사각지대 보완
5.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0. 사립민간 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37. 부모의 육아 행복감
6. 부모의 노동권 보장	21.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38. 아버지의 양육참여
7. 부모의 육아권 보장	22. 보육서비스 질 제고	39. 아동의 웰빙/행복
8.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23.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9. 출산·양육 세제 개선	24.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관리체계	
10. 양육지원체계 개편(보육료-수당 관련 개편)	25.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11. 의료비 지원 강화(영유아의료비제로화, 임신출산의료비 경감 등)	26. 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 체제 구축	
12. 기타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다자녀지원 등	27. 육아지원의 확대	
13.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포용적 가족정책	28.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	
14. (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혁신	29. 아이돌보미, 육아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15. 종합적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	30. 취학전 출발선 평등	
	31.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	
	32. 양육비 부담 완화	

9. (성공요인분석) 성과를 보인 정책이나 과제의 경우 성공적으로 추진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선택한 과제 1] 성공요인 ( )
2. [선택한 과제 2] 성공요인 ( )
3. [선택한 과제 3] 성공요인 ( )

10. 문재인정부의 육아정책 중에서 성과가 미흡한(수요자 효능감이 낮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대적으로 성과가 적은 2개 정책을 선택해 주십시오.

〈저출산정책〉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아동정책〉
1.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16.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편	33.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편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7.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34.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
3.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18.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5. 아동권리보장(4영역: 보호, 참여, 건강, 놀이)
4. 육아시간 지원	19.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	36. 아동정책 (수혜)의 사각지대 보완
5.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0. 사립민간 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37. 부모의 육아 행복감
6. 부모의 노동권 보장	21.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38. 아버지의 양육참여
7. 부모의 육아권 보장	22. 보육서비스 질 제고	39. 아동의 웰빙/행복
8.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23.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9. 출산·양육 세제 개선	24.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관리체계	
10. 양육지원체계 개편(보육료-수당 관련 개편)	25.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11. 의료비 지원 강화(영유아의료비제로화, 임신출산의료비 경감 등)	26. 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 체제 구축	
12. 기타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다자녀지원 등	27. 육아지원의 확대	
13.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포용적 가족정책	28.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	
14. (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혁신	29. 아이돌보미, 육아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15. 종합적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	30. 취학전 출발선 평등	
	31.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	
	32. 양육비 부담 완화	

11. (실패요인분석) 성과가 미약한 정책이나 과제의 경우 그 이유(요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선택한 과제 1] 실패요인 ( )
2. [선택한 과제 2] 실패요인 ( )
3. [선택한 과제 3] 실패요인 ( )

12.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가장 집중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개 정책을 선택해 주십시오.

〈저출산정책〉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아동정책〉
1.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16.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편	33.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편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7.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34.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
3.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18.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5. 아동권리보장(4영역: 보호, 참여, 건강, 놀이)
4. 육아시간 지원	19.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	36. 아동정책 (수혜)의 사각지대 보완
5.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0. 사립민간 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37. 부모의 육아 행복감
6. 부모의 노동권 보장	21.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38. 아버지의 양육참여
7. 부모의 육아권 보장	22. 보육서비스 질 제고	39. 아동의 웰빙/행복
8.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23.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9. 출산·양육 세제 개선	24.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관리체계	
10. 양육지원체계 개편(보육료-수당 관련 개편)	25.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11. 의료비 지원 강화(영유아의료비제로화, 임신출산의료비경감 등)	26. 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12. 기타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다자녀지원 등	27. 육아지원의 확대	
13.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포용적 가족정책	28.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	
14. (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혁신	29. 아이돌보미, 육아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15. 종합적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	30. 취학전 출발선 평등	
	31.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	
	32. 양육비 부담 완화	

Ⅱ. 육아정책 평가 : 육아정책의 계획-실행-수행체계-산출-성과에 대한 평가

13. 귀하는 '육아정책'의 중장기 계획 및 연간 계획 등을 고려할 때, '육아정책'의 계획 수립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시된 각 정책과 이를 포괄하는 '육아정책' 전반에 대해 응답해주십시오.

※ 전혀 잘 되지 않았으면 1점, 매우 잘 되었으면 7점으로 1~7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관련 국정과제	전혀 잘되지 않았다			보통			매우 잘 되었다
1. 저출산정책	1	2	3	4	5	6	7
2. 유아교육정책	1	2	3	4	5	6	7
3. 보육정책	1	2	3	4	5	6	7
4. 돌봄정책	1	2	3	4	5	6	7
5. 아동정책	1	2	3	4	5	6	7
6. 육아정책 계획 전반	1	2	3	4	5	6	7

14. 귀하는 정부 출범 이후, 그 간의 '육아정책'의 실행과 추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시된 각 정책과 이를 포괄하는 육아정책 전반에 대해 응답해주십시오.

※ 매우 못하고 있으면 1점, 매우 잘하고 있으면 7점으로 1~7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관련 국정과제	전혀 잘되지 않았다			보통			매우 잘 되었다
1. 저출산정책	1	2	3	4	5	6	7
2. 유아교육정책	1	2	3	4	5	6	7
3. 보육정책	1	2	3	4	5	6	7
4. 돌봄정책	1	2	3	4	5	6	7
5. 아동정책	1	2	3	4	5	6	7
6. 육아정책 계획 전반	1	2	3	4	5	6	7

15. (구체적 정책 설계) 제시된 육아정책(예: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현금지원 확대, 돌봄체계 구축 등)의 주요 계획을 고려할 때, 육아정책의 내용과 구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육아정책을 저출산-유아교육·보육·돌봄-아동정책의 범주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시고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적절한 편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1	2	3	4	5	6	7

16. (정책의제평가) 육아정책의 의제가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 관련 사회적 이슈와 문제, 내재된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육아정책을 저출산-유아교육·보육 돌봄-아동정책의 범주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시고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거의 반영하지 못한다	반영하지 못하는 편이다	보통	반영하는 편이다	대체로 반영하고 있다	매우 잘 반영하고 있다
1	2	3	4	5	6	7

17. 귀하는 상기한 '육아정책' 전반의 수행 및 전달 체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적절한 편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1	2	3	4	5	6	7

주요 부처	수행 및 전달 체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직속기구
보건복지부	시도청/시군구, 한국보육진흥원-육아종합지원센터/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등
교육부	교육(지원)청, 유아교육진흥원-유아체험교육원 등
여성가족부	시도청/시군구, 건강가정진흥원-건강·다가센터 등

18. (투입요소평가) 결과/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집행체계(예: 예산, 인력/조직 등 거버넌스, 전달체계)는 적절히 구성되어 작동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19. (정책집행평가) 육아정책이 의도하는 서비스가 제대로 산출되고 있습니까? [단수][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20. (정책성과평가)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의 육아정책 성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전혀 잘 되지 못했으면 1점, 매우 잘 되었으면 7점으로 1~7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관련 국정과제	전혀 잘되지 않았다			보통			매우 잘 되었다
1. 저출산정책	1	2	3	4	5	6	7
2. 유아교육정책	1	2	3	4	5	6	7
3. 보육정책	1	2	3	4	5	6	7
4. 돌봄정책	1	2	3	4	5	6	7
5. 아동정책	1	2	3	4	5	6	7
6. 육아정책 계획 전반	1	2	3	4	5	6	7

21. 정부의 육아정책을 다음의 평가요소별로 평가해주십시오. 각 요소별로 얼마나 잘 이루어 졌다고 혹은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잘 되지 못했으면 1점, 매우 잘 되었으면 7점으로 1~7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 육아정책을 저출산-유아교육·보육·돌봄-아동정책의 범주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시고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국정과제	매우 잘 되었다			보통			전혀 잘되지 않았다
1. 효과성(effectiveness)	1	2	3	4	5	6	7
2. 효율성(efficiency)	1	2	3	4	5	6	7
3. 형평성(equity)	1	2	3	4	5	6	7
4. 적절성(relevance)	1	2	3	4	5	6	7
5. 포괄성(inclusiveness)	1	2	3	4	5	6	7
6. 노력(effort)	1	2	3	4	5	6	7
7. 대응성(responsiveness)	1	2	3	4	5	6	7
8. 추진체계(governance)	1	2	3	4	5	6	7
9. 실현가능성/지속가능성	1	2	3	4	5	6	7

▶ 효과성: 목표성취 - (가시적인, 가치있는) 결과가 나타났는가?
▶ 효율성: 비용 등 투입 대비 산출 및 대상 설정(targeting)의 적절성
▶ 형평성: 비용과 편익이 여러 집단 사이에 형평성 있게 배분되었는가?
▶ 적절성: 가치 있는 결과가 어느정도 문제를 해결하였는가. 즉 전체적인 성과의 정도가 전체 욕구 수준에 어느정도 부합하였는가?
▶ 포괄성: 정책의 대상과 내용 설계에 있어 (기존 대비) 사회적 취약계층과 사각지대를 포괄하여 전체 수요자를 대상으로 정책화하는데 얼마나 성공적인가?
▶ 노력: 정책수행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가?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노력을 위한 역량이나 노력 그 자체에 초점을 둠.
▶ 대응성: 성취된 정책결과가 해당집단의 욕구, 선호, 가치 등을 만족시켜주는가. 즉 정책이 수혜자/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것에 얼마나 제대로 대응하는가?

자료: '권기헌(2010). '정책분석론' 참조

22-1. (정책 효과평가–정책의 중장기 영향 평가)

2018-2019 육아정책 개별 과제의 추진과 목표 달성이 궁극적으로 육아정책이 추구하는 위의 목적과 방향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시된 육아 지표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현재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정부의 육아정책 수립과 추진이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응답해주십시오. 국가수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 전혀 못하고 있거나 기여하지 못하면 1점, 매우 잘하고 있거나 기여하고 있으면 7점으로 1~7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현재 수준에 대한 평가〉							구분	〈전문가 기여도 평가〉 정부의 육아정책과 실행이 제시된 지표/항목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전혀 못함			보통			매우 잘함		전혀 기여하지 못함			보통			매우 기여함
1	2	3	4	5	6	7	1. 출산율	1	2	3	4	5	6	7
1	2	3	4	5	6	7	2. 접근성 (access, diversity)	1	2	3	4	5	6	7
1	2	3	4	5	6	7	3. 재정투자 확대	1	2	3	4	5	6	7
1	2	3	4	5	6	7	4. 육아환경	1	2	3	4	5	6	7
1	2	3	4	5	6	7	5. 삶의 질 전반	1	2	3	4	5	6	7

구 분		지표/항목
국가수준	출산율	- 출산율 제고
	접근성 (access, diversity)	- 다양한 서비스(교육·보육·돌봄, 종일제-시간제)에의 접근성 - 무상/의무 교육·보육 및 돌봄 체계(교육연한, 시간) 구축
	재정투자 확대	- GDP 대비 ECEC/가족복지 재정 비율 - 아동 1인당 보육·교육·돌봄 예산
	육아환경	- 지역사회 육아환경 조성 - 육아지원 인프라(센터, 공원, 도서관 등)
	삶의 질 전반	- 사회적 격차 완화(계층별, 출산율, 결혼율, 부모취업률, 양육비지출 차이) - Quality of Life(삶의 질, 육아친화문화 등)

22-2. (정책 효과평가 –정책의 중장기 영향 평가)

2018-2019 육아정책 개별 과제의 추진과 목표 달성이 궁극적으로 육아정책이 추구하는 상위의 목적과 방향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시된 육아 지표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현재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정부의 육아정책 수립과 추진이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응답해주십시오. 부모수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 전혀 못하고 있거나 기여하지 못하면 1점, 매우 잘하고 있거나 기여하고 있으면 7점으로 1~7점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현재 수준에 대한 평가〉							구분	〈전문가 기여도 평가〉 정부의 육아정책과 실행이 제시된 지표/항목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전혀 못함			보통			매우 잘함		전혀 기여하지 못함			보통			매우 기여함
1	2	3	4	5	6	7	1. 양육비용 부담 (affordability, 양육지원체계)	1	2	3	4	5	6	7
1	2	3	4	5	6	7	2. 서비스의 질	1	2	3	4	5	6	7
1	2	3	4	5	6	7	3. 양육역량 및 가정환경	1	2	3	4	5	6	7

구 분		지표/항목
부모	양육비용 부담 (affordability, 양육지원체계)	- 양육비용(평균, 편차, 양육비용부담비율) - 공-사 교육·보육·돌봄 비용 부담
		- 비용지원체계(서비스-현금 지원 조합 및 선택권)
		- 보건의료 지원(산전-산후 출산지원, 양육지원
		- 포용성(inclusiveness): 취약계층 지원체계 - 다문화, 장애, 한부모/조손 가족 서비스 이용률 및 지원율
	서비스의 질	- 서비스 이용만족도(질, 이용시간, 내용/프로그램 등)
		- 부모 참여(교사와의 소통, 부모교육 및 참여)
	양육역량 및 가정환경	- 부모 육아휴직 비율 및 급여수준 - 부모역량(양육역량, 육아행복감, 부모 양육시간) - 가정환경의 질(HOME)

22-3. (정책 효과평가 -정책의 중장기 영향 평가)

2018-2019 육아정책 개별 과제의 추진과 목표 달성이 궁극적으로 육아정책이 추구하는 상위의 목적과 방향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시된 육아 지표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현재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정부의 육아정책 수립과 추진이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응답해주십시오. 아동수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 전혀 못하고 있거나 기여하지 못하면 1점, 매우 잘하고 있거나 기여하고 있으면 7점으로 1~7점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현재 수준에 대한 평가〉							구분	〈전문가 기여도 평가〉 정부의 육아정책과 실행이 제시된 지표/항목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전혀 못함			보통			매우 잘함		전혀 기여하지 못함			보통			매우 기여함
1	2	3	4	5	6	7	1. 형평성(equity)	1	2	3	4	5	6	7
1	2	3	4	5	6	7	2. 웰빙 및 발달성과 (learning or developmental outcome)	1	2	3	4	5	6	7

구 분		지표/항목
아동	형평성(equity)	- 취학전 출발선 평등(학습준비도)
	웰빙 및 발달성과 (learning or developmental outcome)	- 아동웰빙(행복감, 생활시간조사: 보육·교육-놀이-수면-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등) - 아동사망률/유병률, 아동학대, 안전사고 발생건수/비율

22-4. (정책 효과평가 -정책의 중장기 영향 평가)

2018-2019 육아정책 개별 과제의 추진과 목표 달성이 궁극적으로 육아정책이 추구하는 상위의 목적과 방향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시된 육아 지표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현재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정부의 육아정책 수립과 추진이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응답해주십시오. 기관수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 전혀 못하고 있거나 기여하지 못하면 1점, 매우 잘하고 있거나 기여하고 있으면 7점으로 1~7점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현재 수준에 대한 평가〉							구분	〈전문가 기여도 평가〉 정부의 육아정책과 실행이 제시된 지표/항목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전혀 못함			보통			매우 잘함		전혀 기여하지 못함			보통			매우 기여함
1	2	3	4	5	6	7	1. 서비스의 질 (quality, pedagogy)	1	2	3	4	5	6	7
1	2	3	4	5	6	7	2. 공공성	1	2	3	4	5	6	7

구 분		지표/항목
기관	서비스의 질 (quality, pedagogy)	- 국가수준 공통의 커리큘럼 - 평가/모니터링 체계, 평가/모니터링 참여율 - 교직원 자격, 교육(연수), 급여, 복지(근로시간, 이직률, 근속률 등) - 과정적 질: 교직원 전문성(역량/효능감. 페다고지, 상호작용) - 구조적 질: 교사 대 아동 비율, 집단크기, 아동1인당 면적 - 아동학대, 안전사고 발생건수/비율
	공공성	- 인프라(다양한 서비스인프라, 국공립기관인프라(이용률)) - 직장어린이집 설치 포함 - 기관지원체계(유-보, 공-사립 격차 완화)

23. 육아정책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목적과 중장기 방향성에의 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 정책에서 조정하고 변화를 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 )

23-1. 육아정책의 조정과 변화를 위해 다음 중 어떠한 전략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책내용 점검 □ ② 전달체계 변화 □ ③ 거버넌스 점검
□ ④ 목적/목표 설정 □ ⑤ 수요자/대중과의 소통
□ ⑥ 문화형성 □ ⑦ 기타 ( )

배문 1.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가장 주되게 하시는 일을 응답해 주십시오.

□ ① 대학교수 및 연구원 □ ② 공무원
□ ③ 현장전문가(어린이집 및 유치원 종사자) □ ④ 기타 전문가 ( )

배문 2. 선생님의 전공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사회복지 □ ② 정책/행정 □ ③ 유아교육/교육 □ ④ 보육
□ ⑤ 가족 □ ⑥ 아동 □ ⑦ 경제 □ ⑧ 기타( )

◆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2. 수요자용 설문지

2018-2019 육아정책 성과평가 수요자 대상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 2019년 일반과제인 「2018-2022 육아정책의 분석과 과제 연구(II)」의 일환으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수행과 육아정책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한 중간점검의 의미를 갖는 조사입니다.

전반적인 성과평가와 향후 제언을 위해 자녀 양육 및 육아와 관련된 수요자 여러분의 의견과 주관적 평가가 중요합니다. 귀하의 평가와 응답은 정부의 육아정책에 대한 향후 정책 수립과 방향 설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의견이나 개인 정보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 제②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빠짐없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육아정책연구소장 백 선 희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선문1. 귀 댁의 자녀는 총 몇 명입니까?

□ ① 자녀 있음 (　　)명　　□ ② 자녀 없음 → 면접 중단

선문2. 각 자녀의 출생년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첫째 자녀 (　　)년　　□ ② 둘째 자녀 (　　)년
□ ③ 셋째 자녀 (　　)년　　□ ④ 넷째 자녀 (　　)년

선문3.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1) _____시·도
2) _____구·군
3) _____읍·면·동

문1-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세

문1-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성　　□ ② 여성

문1-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수료, 중퇴, 재학/휴학은 이전 학력으로 분류해주세요.

□ ① 초졸 이하　　□ ② 중졸　　□ ③ 고졸　　□ ④ 대졸 이상

문1-4.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미혼　　□ ② 유배우　　□ ③ 사별　　□ ④ 이혼

문1-5. 귀하의 취업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취업　　□ ② 휴직 중　　□ ③ 학업 중　　□ ④ 구직 중　　□ ⑤ 미취업

문2-1. 항목별로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예	수급경험 있음	아님	모름
	1	2	3	4
기초생활수급 여부				
법정차상위계층 여부				

문2-2. 항목별로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예	과거 그러함	아님	모름
	1	2	3	4
다문화가족 여부				
한부모가족 여부				

문3-1. 귀 댁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자녀의 부 □ ② 자녀의 모 □ ③ 자녀 부의 형제 자매
□ ④ 자녀 모의 형제자매 □ ⑤ 자녀의 조부 □ ⑥ 자녀의 조모
□ ⑦ 자녀의 외조부 □ ⑧ 자녀의 외조모 □ ⑨ 그 외 친인척( )

문3-2. 귀하의 경제활동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전일제 근로자 □ ② 시간제 근로자

문3-3. 귀하의 배우자의 취업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취업 □ ② 휴직 중 □ ③ 학업 중 □ ④ 구직 중 □ ⑤ 미취업

문3-4. 귀하의 배우자의 경제활동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전일제 근로자 □ ② 시간제 근로자

문4-1. 귀 댁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여, 세전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 부 근로소득 ( )만원
2) 모 근로소득 ( )만원
3) 기타 가구 소득(기타 임대 소득, 이자 소득 등) ( )만원
4) 총 가구 소득(기타 임대 소득, 이자 소득 등) ( )만원

문4-2. 귀 댁의 월 평균 자녀 양육 비용은 얼마입니까?

※ 자녀양육비의 경우, 가족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비, 공과금 등은 제외하고, 자녀 고유하게 사용하는 비용을 대략으로 말씀해주십시오.

1) 취학 전(만 0~5세) 자녀 양육비용, 월 평균 ( )만원
2) 취학 후 초등학교 3학년까지 자녀 양육비용, 월 평균 ( )만원

3) 초등학교 4학년부터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비용, 월 평균 (　　)만원

4) 총 자녀 양육비용, 월 평균 (　　)만원

구분	이용 경험		만족도				
	있음	없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부모 직접양육(기관이나 개별돌봄 미이용)	1	2	1	2	3	4	5
2. 부모 돌봄(기관이나 개별돌봄 이용)	1	2	1	2	3	4	5
3. 조부모/친인척 돌봄	1	2	1	2	3	4	5
4. 아이돌보미(아이돌봄서비스)	1	2	1	2	3	4	5
5. 민간 베이비시터/돌보미	1	2	1	2	3	4	5
6. 공공 산후도우미(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1	2	1	2	3	4	5
7. 민간 산후도우미	1	2	1	2	3	4	5
8. 어린이집 이용	1	2	1	2	3	4	5
9. 유치원 이용	1	2	1	2	3	4	5
10. 시간제보육/돌봄	1	2	1	2	3	4	5
11. 반일제 이상 영유아학원 이용(놀이학교, 영어유치원 포함)	1	2	1	2	3	4	5
12. 영유아기 사교육(시간제학원, 학습지, 문화센터 등)	1	2	1	2	3	4	5
13. 영아기 사설놀이공간(예: 키즈카페 등)	1	2	1	2	3	4	5
14. 육아종합지원센터/공동육아나눔터	1	2	1	2	3	4	5
15. 육아공동체	1	2	1	2	3	4	5
16. 지역아동센터	1	2	1	2	3	4	5
17. 자녀 혼자 있음(　　)	1	2	1	2	3	4	5

문5-1. 최근 2년 이내에 (2018~2019년) 아래 보기(서비스 이용)에 대해 이용 경험 유무와 그 만족도에 대해 응답해주십시오.

문5-2. 해당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신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구분	내용
1. 부모 직접양육(기관이나 개별돌봄 미이용)	(　　)
2. 부모 돌봄(기관이나 개별돌봄 이용)	(　　)
3. 조부모/친인척 돌봄	(　　)
4. 아이돌보미(아이돌봄서비스)	(　　)
5. 민간 베이비시터/돌보미	(　　)

구분	내용
6. 공공 산후도우미(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 )
7. 민간 산후도우미	( )
8. 어린이집 이용	( )
9. 유치원 이용	( )
10. 시간제보육/돌봄	( )
11. 반일제 이상 영유아학원 이용(놀이학교, 영어유치원 포함)	( )
12. 영유아기 사교육(시간제학원, 학습지, 문화센터 등)	( )
13. 영아기 사설놀이공간(예: 키즈카페 등)	( )
14. 육아종합지원센터/공동육아나눔터	( )
15. 육아공동체	( )
16. 지역아동센터	( )

문5-3. 해당 서비스의 인지도를 응답해주십시오.

구분	전혀 알지 못함	거의 알지 못함	보통	약간 알고있음	알고 있음
1. 아이돌보미(아이돌봄서비스)	1	2	3	4	5
2. 민간 베이비시터/돌보미	1	2	3	4	5
3. 공공 산후도우미(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1	2	3	4	5
4. 민간 산후도우미	1	2	3	4	5
5. 어린이집 이용	1	2	3	4	5
6. 유치원 이용	1	2	3	4	5
7. 시간제보육/돌봄	1	2	3	4	5
8. 반일제 이상 영유아학원 이용(놀이학교, 영어유치원 포함)	1	2	3	4	5
9. 영유아기 사교육(시간제학원, 학습지, 문화센터 등)	1	2	3	4	5
10. 영아기 사설놀이공간(예: 키즈카페 등)	1	2	3	4	5
11. 육아종합지원센터/공동육아나눔터	1	2	3	4	5
12. 육아공동체	1	2	3	4	5
13. 지역아동센터	1	2	3	4	5

문5-4.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골라 응답해주십시오.

구분	①이용의향이 없어서/특별히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②서비스 질/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워 ③(가족상황/경제력 등) 여건이 안되어 ④이용의향이 있으나 이용방법/절차를 몰라 ⑤이용의향이 있으나 이용자격이 안됨(지원자격 비해당, 중복지원불가 등) ⑥이용의향이 있으나 주위에 가까이 없음(접근성) ⑦비용이 부담되어 ⑧신청하였으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공급부족) ⑨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움 ⑩기타
1. 부모 직접양육(기관이나 개별돌봄 미이용)	
2. 부모 돌봄(기관이나 개별돌봄 이용)	
3. 조부모/친인척 돌봄	
4. 아이돌보미(아이돌봄서비스)	
5. 민간 베이비시터/돌보미	
6. 공공 산후도우미(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7. 민간 산후도우미	
8. 어린이집 이용	
9. 유치원 이용	
10. 시간제보육/돌봄	
11. 반일제 이상 영유아학원 이용(놀이학교, 영어유치원 포함)	
12. 영유아기 사교육(시간제학원, 학습지, 문화센터 등)	
13. 영아기 사설놀이공간(예: 키즈카페 등)	
14. 육아종합지원센터/공동육아나눔터	
15. 육아공동체	
16. 지역아동센터	

문6-1. 최근 2년 이내에 (2018~2019년) 아래 보기(서비스 이용)에 대해 이용 경험 유무와 그 만족도에 대해 응답해주십시오.

구분	이용 경험		만족도				
	있음	없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초등돌봄/방과후과정/온종일돌봄 등) 돌봄 전반	1	2	1	2	3	4	5

구분	이용 경험		만족도				
	있음	없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2. ㄴ 초등돌봄교실	1	2	1	2	3	4	5
3. ㄴ 초등학교 방과후과정(방과후학교)	1	2	1	2	3	4	5
4. ㄴ 지역아동센터	1	2	1	2	3	4	5
5. ㄴ 온종일돌봄(지역사회 마을돌봄 등)	1	2	1	2	3	4	5
6. 기타 공공기관/센터/인프라 이용(도서관 등)	1	2	1	2	3	4	5
7. 초등학교 사교육 전반	1	2	1	2	3	4	5
8. ㄴ 학원 – 학습관련	1	2	1	2	3	4	5
9. ㄴ 학원 – 예체능 관련	1	2	1	2	3	4	5
10. ㄴ 학원외 – 학습지, 방문과외, 온라인수강 등	1	2	1	2	3	4	5
11. ㄴ 사교육 기타 ( )	1	2	1	2	3	4	5
12. 문화/오락/체험활동	1	2	1	2	3	4	5
13. 기타 ( )	1	2	1	2	3	4	5

문6-2. 해당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신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구분	내용
1. (초등돌봄/방과후과정/온종일돌봄 등) 돌봄 전반	( )
2. ㄴ 초등돌봄교실	( )
3. ㄴ 초등학교 방과후과정(방과후학교)	( )
4. ㄴ 지역아동센터	( )
5. ㄴ 온종일돌봄(지역사회 마을돌봄 등)	( )
6. 기타 공공기관/센터/인프라 이용(도서관 등)	( )
7. 초등학교 사교육 전반	( )
8. ㄴ 학원 – 학습관련	( )
9. ㄴ 학원 – 예체능 관련	( )
10. ㄴ 학원외 – 학습지, 방문과외, 온라인수강 등	( )
11. ㄴ 사교육 기타 ( )	( )
12. 문화/오락/체험활동	( )
13. 기타 ( )	( )

문6-3. 해당 서비스의 인지도를 응답해주십시오.

구분	전혀 알지 못함	거의 알지 못함	보통	약간 알고 있음	알고 있음
1. 초등돌봄교실	1	2	3	4	5
2. 초등학교 방과후과정(방과후학교)	1	2	3	4	5
3. 지역아동센터	1	2	3	4	5
4. 온종일돌봄(지역사회 마을돌봄 등)	1	2	3	4	5
5. 기타 공공기관/센터/인프라 이용(도서관 등)	1	2	3	4	5
6. 학원 - 학습관련	1	2	3	4	5
7. 학원 - 예체능 관련	1	2	3	4	5
8. 학원외 - 학습지, 방문과외, 온라인수강 등	1	2	3	4	5
9. 사교육 기타 ( )	1	2	3	4	5
10. 문화/오락/체험활동	1	2	3	4	5
11. 기타 ( )	1	2	3	4	5

문6-4.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골라 응답해주십시오.

구분	①이용의향이 없어서/특별히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②서비스 질/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워 ③(가족상황/경제력 등) 여건이 안되어 ④이용의향이 있으나 이용방법/절차를 몰라 ⑤이용의향이 있으나 이용자격이 안됨(지원자격 비해당, 중복지원불가 등) ⑥이용의향이 있으나 주위에 가까이 없음(접근성) ⑦비용이 부담되어 ⑧신청하였으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공급부족) ⑨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움 ⑩기타
1. (초등돌봄/방과후과정/온종일돌봄 등) 돌봄 전반	
2. ㄴ 초등돌봄교실	
3. ㄴ 초등학교 방과후과정(방과후학교)	
4. ㄴ 지역아동센터	
5. ㄴ 온종일돌봄(지역사회 마을돌봄 등)	
6. 기타 공공기관/센터/인프라 이용(도서관 등)	
7. 초등학교 사교육 전반	
8. ㄴ 학원 - 학습관련	
9. ㄴ 학원 - 예체능 관련	

구분	①이용의향이 없어서/특별히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②서비스 질/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워 ③(가족상황/경제력 등) 여건이 안되어 ④이용의향이 있으나 이용방법/절차를 몰라 ⑤이용의향이 있으나 이용자격이 안됨(지원자격 비해당, 중복지원불가 등) ⑥이용의향이 있으나 주위에 가까이 없음(접근성) ⑦비용이 부담되어 ⑧신청하였으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공급부족) ⑨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움 ⑩기타
10. ㄴ 학원외 – 학습지, 방문과외, 온라인수강 등	
11. ㄴ 사교육 기타 ( )	
12. 문화/오락/체험활동	
13. 기타 ( )	

문7. 육아관련 서비스의 성과 제고를 위하여 정책적 제언이 있으신 경우,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구분	정책적 제언 내용
1. 부모 및 조부모, 친인척 직접돌봄	( )
2. 아이돌보미(아이돌봄서비스)	( )
3. 민간 베이비시터/돌보미	( )
4. 공공 산후도우미(정부지원)	( )
5. 민간 산후도우미	( )
6. 어린이집 이용	( )
7. 유치원 이용	( )
8. 시간제보육/돌봄	( )
9. 반일제 이상 영유아 학원 및 사교육, 사설놀이공간	( )
10. 육아종합지원센터/공동육아나눔터	( )
11. 육아공동체	( )
12. 지역아동센터	( )
13. 초등돌봄교실	( )
14. 초등학교 방과후과정(방과후학교)	( )
15. 온종일돌봄(지역사회 마을돌봄 등)	( )
16. 기타 공공기관/센터/인프라 이용(도서관 등)	( )
17. 초등학교 사교육 전반	( )
18. 문화/오락/체험활동	( )
19. 기타	( )

문8. 귀하는 다음 지원 제도 중 무엇을 이용하셨습니까? 각 지원 제도 별로 이용 경험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분		이용함	이용안함	비해당
현금 지원	1. 출산장려금			
	2. 양육수당			
	3. 아동수당			
	4. 자녀장려금			
	5. 세제지원(세액공제, 소득공제, 환급 등)			
시간 지원	6. 모 출산휴가			
	7. 부 출산휴가			
	8. 모 근로시간 단축			
	9. 부 근로시간 단축			
	10. 모 육아휴직			
	11. 부 육아휴직			
	12. 모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등)			
	13. 부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등)			
건강/의료 지원 등	14. 의료비 지원			
	15. 산후조리 지원			
	16. 임신·출산 지원			
	17. 취약가구 양육 지원 (저소득, 한부모, 조손, 장애, 다문화 등)			
기타	18. 기타( )			

문9. 각 지원 제도 별로 향후 이용의향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분	있음	없음	비해당
1. 양육수당			
2. 자녀장려금			
3. 모 근로시간 단축			
4. 부 근로시간 단축			
5. 모 육아휴직			
6. 부 육아휴직			
7. 모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등)			
8. 부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등)			

문10. 귀하께서는 향후 추가 출산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있음 □ ② 없음

문11. 추가 출산 시 모/부 출산휴가나 관련 지원을 이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분	있음	없음	비해당
1. 모 출산휴가			
2. 부 출산휴가			
3. 의료비지원			
4. 산후조리지원			
5. 임신출산지원			
6. 취약가구 양육지원			

문12. 귀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의 금액을 현재(취학전 자녀연령별로 20만원, 15만원, 10만원 지급)보다 늘려 부모의 가정양육-기관이용의 선택권을 늘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동의함 □ ② 동의함 □ ③ 보통
□ ④ 동의하지 않음 □ ⑤ 매우 동의하지 않음

문12-1. 가정양육수당이 현재보다 증가할 경우, 귀하라면 영아자녀(0~2세)의 양육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중 1-2순위로 선택해주십시오.

□ ① 집에서 전적으로 직접 양육(어린이집이나 기타 돌봄서비스 이용 없이)
□ ② 집에서 돌봄(직접양육+시간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 ③ 집에서 돌봄(직접양육+반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 ④ 집에서 돌봄(직접양육+전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 ⑤ 어린이집 등 기관을 전일 이용(전일 기관이용+집에서 돌봄)
□ ⑥ 어린이집 등 기관을 반일 이용(반일 기관이용+집에서 돌봄)
□ ⑦ 어린이집/기타 프로그램 등 시간제 이용(시간제 이용+집에서 돌봄)
□ ⑧ 기타 ( )

문13-1. 이용한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해주십시오.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출산장려금	1	2	3	4	5
2. 양육수당	1	2	3	4	5
3. 아동수당	1	2	3	4	5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4. 자녀장려금	1	2	3	4	5
5. 세제지원(세액공제, 소득공제, 환급 등)	1	2	3	4	5
6. 모 출산휴가	1	2	3	4	5
7. 부 출산휴가	1	2	3	4	5
8. 모 근로시간 단축	1	2	3	4	5
9. 부 근로시간 단축	1	2	3	4	5
10. 모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	1	2	3	4	5
11. 부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	1	2	3	4	5
12. 모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등)	1	2	3	4	5
13. 모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등)	1	2	3	4	5
14. 의료비 지원(예방접종, 건강검진확대 등)	1	2	3	4	5
15. 산후조리 지원	1	2	3	4	5
16. 임신·출산 지원(난임지원 확대 등)	1	2	3	4	5
17. 취약가구 양육 지원 (저소득, 한부모, 조손, 장애, 다문화 등) (한부모가족수당 확대 등)	1	2	3	4	5
18. 기타(　　)	1	2	3	4	5

문13-2. 해당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신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구분	정책적 제언 내용
1. 출산장려금	(　　)
2. 양육수당	(　　)
3. 아동수당	(　　)
4. 자녀장려금	(　　)
5. 세제지원(세액공제, 소득공제, 환급 등)	(　　)
6. 모 출산휴가	(　　)
7. 부 출산휴가	(　　)
8. 모 근로시간 단축	(　　)
9. 부 근로시간 단축	(　　)
10. 모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　　)
11. 부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　　)
12. 모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등)	(　　)
13. 부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등)	(　　)
14. 의료비 지원(예방접종, 건강검진확대 등)	(　　)
15. 산후조리 지원	(　　)
16. 임신·출산 지원(난임지원 확대 등)	(　　)
17. 취약가구 양육 지원 (저소득, 한부모, 조손, 장애, 다문화 등) (한부모가족수당 확대 등)	(　　)
18. 기타(　　)	(　　)

문13-3. 해당 서비스의 인지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알지 못함	거의 알지 못함	보통	약간 알고있음	잘 알고 있음
1. 출산장려금	1	2	3	4	5
2. 양육수당	1	2	3	4	5
3. 아동수당	1	2	3	4	5
4. 자녀장려금	1	2	3	4	5
5. 세제지원(세액공제, 소득공제, 환급 등)	1	2	3	4	5
6. 모 출산휴가	1	2	3	4	5
7. 부 출산휴가	1	2	3	4	5
8. 모 근로시간 단축	1	2	3	4	5
9. 부 근로시간 단축	1	2	3	4	5
10. 모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	1	2	3	4	5
11. 부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	1	2	3	4	5
12. 모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등)	1	2	3	4	5
13. 부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등)	1	2	3	4	5
14. 의료비 지원(예방접종, 건강검진확대 등)	1	2	3	4	5
15. 산후조리 지원	1	2	3	4	5
16. 임신·출산 지원(난임지원 확대 등)	1	2	3	4	5
17. 취약가구 양육 지원 (저소득, 한부모, 조손, 장애, 다문화 등) (한부모가족수당 확대 등)	1	2	3	4	5
18. 기타(　　)	1	2	3	4	5

문13-4.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골라 응답해주십시오.

구분	①이용의향이 없어서/특별히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②서비스 질/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워 ③(가족상황/경제력 등) 여건이 안되어 ④이용의향이 있으나 이용방법/절차를 몰라 ⑤이용의향이 있으나 이용자격이 안됨(지원자격 비해당, 중복지원불가 등) ⑥이용의향이 있으나 주위에 가까이 없음(접근성) ⑦비용이 부담되어 ⑧신청하였으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공급부족) ⑨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움 ⑩기타
1. 출산장려금	
2. 양육수당	
3. 자녀장려금	
4. 세제지원(세액공제, 소득공제, 환급 등)	
5. 모 출산휴가	
6. 부 출산휴가	

구분	①이용의향이 없어서/특별히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②서비스 질/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워 ③(가족상황/경제력 등) 여건이 안되어 ④이용의향이 있으나 이용방법/절차를 몰라 ⑤이용의향이 있으나 이용자격이 안됨(지원자격 비해당, 중복지원불가 등) ⑥이용의향이 있으나 주위에 가까이 없음(접근성) ⑦비용이 부담되어 ⑧신청하였으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공급부족) ⑨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움 ⑩기타
7. 모 근로시간 단축	
8. 부 근로시간 단축	
9. 모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	
10. 부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	
11. 모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등)	
12. 부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등)	
13. 의료비 지원(예방접종, 건강검진확대 등)	
14. 산후조리 지원	
15. 임신·출산 지원(난임지원 확대 등)	
16. 취약가구 양육 지원 (저소득, 한부모, 조손, 장애, 다문화 등) (한부모가족수당 확대 등)	
17. 기타(　　)	

문14. 육아 관련 서비스의 성과 제고를 위하여 정책적 제언이 있으신 경우,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구분	정책적 제언 내용
1. 출산장려금	(　　)
2. 양육수당	(　　)
3. 아동수당	(　　)
4. 자녀장려금	(　　)
5. 세제지원(세액공제, 소득공제, 환급 등)	(　　)

구분	정책적 제언 내용
6. 모 출산휴가	( )
7. 부 출산휴가	( )
8. 모 근로시간 단축	( )
9. 부 근로시간 단축	( )
10. 모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 )
11. 부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 )
12. 모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등)	( )
13. 모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등)	( )
14. 의료비 지원(예방접종, 건강검진확대 등)	( )
15. 산후조리 지원	( )
16. 임신·출산 지원(난임지원 확대 등)	( )
17. 취약가구 양육 지원 (저소득, 한부모, 조손, 장애, 다문화 등) (한부모가족수당 확대 등)	( )
18. 기타( )	( )

문15. 다음은 육아정책과 관련된 정부의 국정과제를 제시한 것입니다. 각 국정과제들은 얼마나 (잘) 이루어졌다고/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항목별로 정부에서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체감하시는 대로 응답해주십시오.

구분	매우 못하고 있다		보통		매우 잘 하고 있다
1.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1	2	3	4	5
2.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복지부)	1	2	3	4	5
3.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1	2	3	4	5
4.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1	2	3	4	5
5.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교육부)	1	2	3	4	5
6.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교육부)	1	2	3	4	5
7.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1	2	3	4	5
8.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교육부)	1	2	3	4	5

구분	매우 못하고 있다		보통		매우 잘 하고 있다
9.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여가부)	1	2	3	4	5
1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	1	2	3	4	5
11.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여가부)	1	2	3	4	5
12.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1	2	3	4	5
13. ㄴ 일·가정 양립 일상화	1	2	3	4	5
14. ㄴ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1	2	3	4	5
15. 자녀 출산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1	2	3	4	5
16. ㄴ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투자 강화	1	2	3	4	5
17. ㄴ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1	2	3	4	5

문16-1.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위에 제시된 국정과제 중, 문재인정부에서 성과가 가장 우수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1, 2순위로 응답해주십시오.

- □ ①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 □ ②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복지부)
- □ ③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 □ ④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 ⑤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교육부)
- □ ⑥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교육부)
- □ ⑦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 □ ⑧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교육부)
- □ ⑨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여가부)
- □ 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
- □ ⑪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여가부)
- □ ⑫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 □ ⑬ 일·가정 양립 일상화
- □ ⑭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 □ ⑮ 자녀 출산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 □ ⑯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투자 강화
- □ ⑰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문16-2.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위에 제시된 국정과제 중, 문재인정부에서 성과가 가장 미흡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1, 2순위로 응답해주십시오.

□ ①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 ②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복지부)
□ ③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 ④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⑤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교육부)
□ ⑥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교육부)
□ ⑦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 ⑧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교육부)
□ ⑨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여가부)
□ 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
□ ⑪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여가부)
□ ⑫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 ⑬ 일·가정 양립 일상화
□ ⑭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 ⑮ 자녀 출산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 ⑯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투자 강화
□ ⑰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문17. 정부의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의 실행과 성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평가해주십시오.

( )

문18. 다음은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추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와 목표입니다. 해당 항목별로 얼마나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체감하시는대로 응답해주십시오.

※ 주요 목표 달성 평가는 문재인정부 이후(2017년 5월 이후) 최근 2년에 대해 평가해주십시오.

구분		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보통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저출산 정책〉	1.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1	2	3	4	5	9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2	3	4	5	9
	3.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1	2	3	4	5	9
	4. 육아시간 지원	1	2	3	4	5	9

구분		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보통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5.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1	2	3	4	5	9
	6. 부모의 노동권 보장	1	2	3	4	5	9
	7. 부모의 육아권 보장	1	2	3	4	5	9
	8.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1	2	3	4	5	9
	9. 출산·양육 세제 개선	1	2	3	4	5	9
	10. 양육지원체계 개편(보육료 지원-수당 조정)	1	2	3	4	5	9
	11. 의료비 지원 강화(영유아 의료비지원, 임신출산의료 비경감 등)	1	2	3	4	5	9
	12. 기타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다자녀지원 등	1	2	3	4	5	9
	13.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포용적 가족정책	1	2	3	4	5	9
	14. (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혁신	1	2	3	4	5	9
	15. 종합적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	1	2	3	4	5	9
〈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	16.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편	1	2	3	4	5	9
	17.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1	2	3	4	5	9
	18.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1	2	3	4	5	9
	19.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	1	2	3	4	5	9
	20. 사립민간 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1	2	3	4	5	9
	21.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1	2	3	4	5	9
	22. 보육서비스 질 제고	1	2	3	4	5	9
	23.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1	2	3	4	5	9
	24.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관리체계	1	2	3	4	5	9
	25.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1	2	3	4	5	9
	26. 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1	2	3	4	5	9
	27. 육아지원의 확대	1	2	3	4	5	9
	28.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	1	2	3	4	5	9

구분		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보통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29. 공공성 확대	1	2	3	4	5	9
	30.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확대	1	2	3	4	5	9
	31. 육아정보/시간제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1	2	3	4	5	9
	32. 취학 전 출발선 평등	1	2	3	4	5	9
	33.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	1	2	3	4	5	9
	34. 양육비 부담 완화	1	2	3	4	5	9
〈아동 정책〉	35.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편	1	2	3	4	5	9
	36. 아동보호종합지원 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체계 개편)	1	2	3	4	5	9
	37. 아동권리보장(4영역: 보호, 참여, 건강, 놀이)	1	2	3	4	5	9
	38. 아동정책 (수혜)의 사각지대 보완	1	2	3	4	5	9
	39. 아동권리 보장 확대(참여권 등)	1	2	3	4	5	9
	40. 부모의 육아 행복감	1	2	3	4	5	9
	41. 아버지의 양육참여	1	2	3	4	5	9
	42. 아동의 웰빙/행복	1	2	3	4	5	9

문19. 문재인정부의 육아정책 중에서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개 정책을 선택해 주십시오.

〈저출산정책〉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아동정책〉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편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아동권리보장(4영역: 보호, 참여, 건강, 놀이)
육아시간 지원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	아동정책 (수혜)의 사각지대 보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사립민간 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부모의 육아 행복감
부모의 노동권 보장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아버지의 양육참여
부모의 육아권 보장	보육서비스 질 제고	아동의 웰빙/행복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출산·양육 세제 개선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관리체계	
양육지원체계 개편(보육료-수당 관련 개편)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저출산정책〉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아동정책〉
의료비 지원 강화(영유아의료비 제로화, 임신출산의료비경감 등)	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기타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다자녀지원 등	육아지원의 확대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포용적 가족정책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	
(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혁신	아이돌보미, 육아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종합적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	취학전 출발선 평등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	
	양육비 부담 완화	

문20. 문재인정부의 육아정책을 위에서 제시한대로 크게 저출산, 유아교육, 보육, 돌봄, 아동 정책으로 나눌 때 각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구분된 정책별로 5점 척도로 응답해주십시오.

구분		전혀 알지 못함	거의 알지 못함	보통	약간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저출산정책	저출산 관련 전반	1	2	3	4	5
유아교육정책	유치원	1	2	3	4	5
보육정책	어린이집	1	2	3	4	5
돌봄정책	돌보미, 초등돌봄 등	1	2	3	4	5
아동정책	취약아동지원, 아동권리보장, 아동학대 예방 등	1	2	3	4	5

문21. 문재인정부의 육아정책을 위에서 제시한대로 크게 저출산, 유아교육, 보육, 돌봄, 아동 정책으로 나눌 때 각 정책에 대한 성과 수준을 구분된 정책별로 5점 척도로 응답해주십시오.

구분		전혀 잘되지 않았다		보통		매우 잘 되었다
저출산정책	저출산 관련 전반	1	2	3	4	5
유아교육정책	유치원	1	2	3	4	5
보육정책	어린이집	1	2	3	4	5
돌봄정책	돌보미, 초등돌봄 등	1	2	3	4	5
아동정책	취약아동지원, 아동권리보장, 아동학대 예방 등	1	2	3	4	5

문22. 앞서 제시된 육아정책(예: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현금지원 확대, 돌봄체계 구축) 과제들을 고려할 때, 정책의 내용과 구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 ②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 ③ 보통
□ ④ 어느정도 적절하다 □ ⑤ 매우 적절하다

문23. 육아정책의 의제가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 관련 사회적 이슈와 문제, 내재된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③ 보통
□ ④ 어느정도 적절하다 □ ⑤ 매우 그렇다

문24. 정책이 의도하는 서비스가 제대로 산출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③ 보통
□ ④ 어느정도 적절하다 □ ⑤ 매우 그렇다

문25.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육아정책의 효과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① 전혀 효과가 없다 □ ② 별로 효과가 없다 □ ③ 보통
□ ④ 다소 효과가 있다 □ ⑤ 매우 효과가 있다

문26. 다음에 제시된 항목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현재 우리나라의 수준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못함		보통		매우 잘함
1. 출산율	1	2	3	4	5
2.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access, diversity)	1	2	3	4	5
3. 육아부분 재정투자 확대	1	2	3	4	5
4. 육아환경 전반	1	2	3	4	5
5. 삶의 질 전반	1	2	3	4	5
6. 양육비용 부담(affordability, 양육지원 체계)	1	2	3	4	5
7. 서비스의 질	1	2	3	4	5
8. 부모의 양육역량 및 가정환경	1	2	3	4	5
9. 형평성(equity)	1	2	3	4	5
10. 자녀의 행복/웰빙과 건강한 성장·발달 (learning or developmental outcome)	1	2	3	4	5
11. 서비스의 질	1	2	3	4	5
12. 공공성	1	2	3	4	5

문27. 다음에 제시된 항목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문재인정부의 육아정책과 실행이 기여한 정도를 대략적으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기여하지 못함		보통		매우 기여함
1. 출산율	1	2	3	4	5
2.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access, diversity)	1	2	3	4	5
3. 육아부분 재정투자 확대	1	2	3	4	5
4. 육아환경 전반	1	2	3	4	5
5. 삶의 질 전반	1	2	3	4	5
6. 양육비용 부담(affordability, 양육지원 체계)	1	2	3	4	5
7. 서비스의 질	1	2	3	4	5
8. 부모의 양육역량 및 가정환경	1	2	3	4	5
9. 형평성(equity)	1	2	3	4	5
10. 자녀의 행복/웰빙과 건강한 성장·발달 (learning or developmental outcome)	1	2	3	4	5
11. 서비스의 질	1	2	3	4	5
12. 공공성	1	2	3	4	5

구 분		지표/항목
국가수준	출산율	- 출산율 제고
	접근성 (access, diversity)	- 다양한 서비스(교육·보육·돌봄, 종일제-시간제)에의 접근성 - 무상/의무 교육·보육 및 돌봄 체계(교육연한, 시간) 구축
	재정투자 확대	- GDP 대비 ECEC/가족복지 재정 비율 - 아동 1인당 보육·교육·돌봄 예산
	육아환경	- 지역사회 육아환경 조성 - 육아지원 인프라(센터, 공원, 도서관 등)
	삶의 질 전반	- 사회적 격차 완화(계층별, 출산율, 결혼율, 부모취업률, 양육비지출 차이) - Quality of Life(삶의 질, 육아친화문화 등)
부모	양육비용 부담 (affordability, 양육지원체계)	- 양육비용(평균, 편차, 양육비용부담비율) - 공-사 교육·보육·돌봄 비용 부담
		- 비용지원체계(서비스-현금 지원 조합 및 선택권)
		- 보건의료 지원(산전-산후 출산지원, 양육지원
		- 포용성(inclusiveness): 취약계층 지원체계 - 다문화, 장애, 한부모/조손 가족 서비스 이용률 및 지원율
	서비스의 질	- 서비스 이용만족도(질, 이용시간, 내용/프로그램 등)
		- 부모 참여(교사와의 소통, 부모교육 및 참여)
	양육역량 및 가정환경	- 부모 육아휴직 비율 및 급여수준 - 부모역량(양육역량, 육아행복감, 부모 양육시간) - 가정환경의 질(HOME)

구 분		지표/항목
아동	형평성(equity)	- 취학전 출발선 평등(학습준비도)
	웰빙 및 발달성과 (learning or developmental outcome)	- 아동웰빙(행복감, 생활시간조사: 보육·교육-놀이-수면-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등) - 아동사망률/유병률, 아동학대, 안전사고 발생건수/비율
기관	서비스의 질 (quality, pedagogy)	- 국가수준 공통의 커리큘럼 - 평가/모니터링 체계, 평가/모니터링 참여율 - 교직원 자격, 교육(연수), 급여, 복지(근로시간, 이직률, 근속률 등) - 과정적 질: 교직원 전문성(역량/효능감. 페다고지, 상호작용) - 구조적 질: 교사 대 아동 비율, 집단크기, 아동1인당 면적 - 아동학대, 안전사고 발생건수/비율
	공공성	- 인프라(다양한 서비스인프라, 국공립기관인프라(이용률)) - 직장어린이집 설치 포함 - 기관지원체계(유-보, 공-사립 격차 완화)

문28. 문재인정부의 육아정책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로이 적어주십시오.

1) 가장 잘 된 부분 ( )
2) 가장 미흡한 부분 ( )
3) 향후 가장 중요한/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부분 ( )

◆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3. 조사결과 표

〈부록 표 1〉 육아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1

단위: %(명)

구분	부모 직접 양육	부모 돌봄	조부모/ 친인척 돌봄	아이 돌보미	민간 베이비 시터	공공 산후 도우미	민간 산후 도우미	어린이 집 이용	유치원 이용	계(수)
전체	70.7	38.3	53.1	10.0	6.7	19.6	14.4	73.1	38.3	100.0(1,013)
지역 구분										
대도시	73.1	36.8	58.7	13.5	10.8	16.6	20.6	66.4	38.6	100.0(223)
중소도시	68.1	38.9	53.2	8.2	5.8	18.6	11.9	73.5	40.7	100.0(570)
읍·면	75.0	38.2	47.3	10.9	5.0	25.5	14.5	79.1	31.8	100.0(220)
$\chi^2(df)$	4.482 (2)	0.323 (2)	5.853 (2)	5.118 (2)	7.646 (2)*	6.418 (2)*	9.835 (2)**	9.213 (2)**	5.309 (2)	
취업모 여부										
취업	65.2	49.0	69.7	12.2	8.7	14.4	16.9	80.1	40.5	100.0(402)
휴직 중	82.8	33.8	54.5	13.8	11.0	33.1	21.4	56.6	24.1	100.0(145)
학업 중	86.7	40.0	53.3	26.7	13.3	33.3	26.7	80.0	46.7	100.0(15)
구직 중	70.1	37.4	53.3	13.1	4.7	20.6	9.3	75.7	42.1	100.0(107)
미취업	71.7	28.0	32.9	4.1	2.9	19.2	9.3	70.8	39.9	100.0(343)
$\chi^2(df)$	18.159 (4)**	36.216 (4)***	100.277(4)***	23.609 (4)***	16.520 (4)*	25.423 (4)***	19.071 (4)***	31.844 (4)***	14.647 (4)**	
맞벌이 여부										
맞벌이	69.3	44.8	65.5	11.8	9.1	18.9	17.9	73.3	35.4	100.0(525)
외벌이	73.1	29.8	37.6	7.1	3.9	20.5	10.5	71.3	41.5	100.0(439)
소득없음	59.0	41.0	56.4	5.1	5.1	20.5	10.3	87.2	33.3	100.0(39)
해당없음	80.0	60.0	70.0	60.0	10.0	20.0	20.0	90.0	70.0	100.0(10)
$\chi^2(df)$	4.719 (3)	24.686 (3)***	76.289 (3)***	35.019 (3)***	10.935 (3)*	0.430 (3)	11.498 (3)**	6.129 (3)	8.344 (3)*	
가구내 여성취업										
전일제 취업	67.6	44.7	66.0	11.6	8.3	16.8	17.3	73.3	35.0	100.0(423)
시간제 취업	77.4	46.0	64.5	16.1	12.9	28.2	21.0	75.8	40.3	100.0(124)
$\chi^2(df)$	4.378 (1)*	0.064 (1)	0.088 (1)	1.797 (1)	2.430 (1)	8.034 (1)**	0.890 (1)	0.315 (1)	1.181 (1)	
첫째아 기준										
초등부모	67.7	41.9	45.9	10.5	4.0	14.7	12.5	70.3	56.1	100.0(353)
유아부모	64.4	42.0	52.8	10.6	8.7	20.9	15.1	89.9	42.4	100.0(436)
영아부모	87.5	25.4	65.2	8.0	7.1	25.0	16.1	45.1	2.2	100.0(224)
$\chi^2(df)$	40.255 (2)***	20.113 (2)***	20.508 (2)***	1.200 (2)	7.112 (2)*	9.885 (2)**	1.771 (2)	153.648(2)***	173.737(2)***	
소득 기준										
150만원 이하	76.5	52.9	64.7	11.8	5.9	11.8	5.9	76.5	35.3	100.0(17)
150~250만원	78.6	33.3	47.6	10.7	3.6	29.8	7.1	75.0	31.0	100.0(84)
250~350만원	73.7	30.3	41.2	9.2	3.5	23.7	11.0	73.7	37.7	100.0(228)
350~500만원	72.4	39.9	49.2	8.0	5.3	19.6	14.6	74.8	39.5	100.0(301)
500만원 이상	65.4	42.0	64.0	11.8	10.5	15.0	18.4	70.9	39.6	100.0(381)
$\chi^2(df)$	9.437 (4)	11.172 (4)*	35.022 (4)***	3.029(4)	14.712 (4)**	13.837 (4)**	11.633 (4)*	1.676(4)	2.493(4)	

구분	부모 직접 양육	부모 돌봄	조부모/ 친인척 돌봄	아이 돌보미	민간 베이비 시터	공공 산후 도우미	민간 산후 도우미	어린이 집 이용	유치원 이용	계(수)
서비스/해당여부별										
부모 직접돌봄	89.6	48.6	56.6	11.4	7.5	21.7	15.4	73.2	35.9	100.0(799)
어린이집 이용자	69.9	44.3	54.1	11.6	7.7	21.5	16.7	100.0	40.2	100.0(741)
유치원 이용자	63.7	41.8	51.5	13.9	8.0	19.1	17.3	76.8	100.0	100.0(388)
반일제 이용자	78.9	64.2	68.4	31.6	31.6	32.6	37.9	84.2	70.5	100.0(95)
초등 돌봄 전반	70.1	46.1	48.7	12.5	4.4	15.5	13.3	71.6	57.2	100.0(271)
양육수당 이용자	72.5	37.8	54.2	9.3	7.3	21.7	14.5	73.6	36.4	100.0(863)
아동수당 이용자	70.6	37.3	54.8	9.6	6.9	21.0	15.0	75.2	37.8	100.0(896)
모 근로단축 이용자	76.2	44.8	71.4	15.2	10.5	20.0	21.9	74.3	39.0	100.0(105)
부 근로단축 이용자	81.8	54.5	60.6	21.2	15.2	27.3	27.3	69.7	30.3	100.0(33)
취약가구	100.0	71.4	78.6	42.9	14.3	35.7	21.4	78.6	50.0	100.0(14)
다문화 가구	80.0	60.0	66.7	26.7	13.3	26.7	6.7	60.0	26.7	100.0(15)
한부모 가구	80.0	60.0	70.0	60.0	10.0	20.0	20.0	90.0	70.0	100.0(10)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 2〉 육아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2

단위: %(명)

구분	시간제 보육	반일제 이상	영유아기 사교육	영아기 사설놀이	육아종합 지원센터	육아 공동체	지역 아동 센터	자녀 혼자	계(수)
전체	14.0	9.4	53.3	78.3	17.2	3.9	3.7	12.9	100.0(1,013)
지역 구분									
대도시	13.5	12.6	50.2	75.3	22.9	5.8	5.8	16.6	100.0(223)
중소도시	13.5	8.8	52.6	78.4	14.2	3.2	2.8	12.3	100.0(570)
읍·면	15.9	7.7	58.2	80.9	19.1	4.1	3.6	10.9	100.0(220)
$x^2(df)$	0.834(2)	3.602(2)	3.056 (2)	2.038 (2)	9.173 (2)*	3.032 (2)	4.162 (2)	3.667 (2)	
취업모 여부									
취업	18.2	12.7	55.5	79.4	16.4	4.2	4.0	15.2	100.0(402)
휴직 중	13.8	6.9	49.0	72.4	22.1	5.5	4.8	11.7	100.0(145)
학업 중	13.3	13.3	60.0	86.7	20.0	6.7	6.7	20.0	100.0(15)
구직 중	22.4	12.1	63.6	85.0	23.4	5.6	4.7	15.9	100.0(107)
미취업	6.7	5.5	49.0	77.0	14.0	2.3	2.3	9.6	100.0(343)
$x^2(df)$	27.208 (4)***	13.407 (4)**	9.216 (4)	7.052 (4)	8.002 (4)	4.451 (4)	3.091 (4)	6.812 (4)	
맞벌이 여부									
맞벌이	16.6	11.2	53.3	77.5	17.5	4.6	4.2	14.1	100.0(525)
외벌이	10.0	7.3	51.5	78.1	16.9	3.4	3.0	10.7	100.0(439)
소득없음	20.5	7.7	71.8	89.7	15.4	2.6	5.1	17.9	100.0(39)
해당없음	30.0	10.0	60.0	80.0	20.0	0.0	0.0	30.0	100.0(10)
$x^2(df)$	12.138 (3)**	4.526 (3)	6.124 (3)	3.214 (3)	0.220 (3)	1.472 (3)	1.648 (3)	6.022 (3)	
가구내 여성취업									
전일제 취업	16.1	11.3	51.5	75.4	16.1	4.5	3.5	14.2	100.0(423)
시간제 취업	20.2	10.5	61.3	84.7	24.2	4.8	6.5	14.5	100.0(124)
$x^2(df)$	1.134 (1)	0.072 (1)	3.670 (1)	4.721 (1)*	4.297 (1)*	0.026 (1)	2.010 (1)	0.009 (1)	

구분	시간제 보육	반일제 이상	영유아기 사교육	영아기 사설놀이	육아종합 지원센터	육아 공동체	지역 아동 센터	자녀 혼자	계(수)
첫째아 기준									
초등부모	20.4	10.5	58.1	75.1	12.2	3.7	4.0	19.8	100.0(353)
유아부모	14.2	12.4	59.4	88.1	19.7	4.6	3.7	8.7	100.0(436)
영아부모	3.6	1.8	33.9	64.3	20.1	3.1	3.1	10.3	100.0(224)
$x^2(df)$	32.213 (2)***	20.339 (2)***	43.528 (2)***	52.538 (2)***	9.517(2) **	0.935 (2)	0.276 (2)	23.21 4(2)***	
소득 기준									
150만원 이하	17.6	11.8	23.5	47.1	17.6	5.9	5.9	11.8	100.0(17)
150~250만원	9.5	4.8	41.7	76.2	11.9	1.2	2.4	11.9	100.0(84)
250~350만원	14.0	6.6	51.3	77.2	18.4	2.6	3.5	12.7	100.0(228)
350~500만원	12.3	8.6	53.2	80.1	17.9	4.3	3.0	11.0	100.0(301)
500만원 이상	16.3	12.6	58.5	79.3	17.1	5.0	4.5	15.0	100.0(381)
$x^2(df)$	3.937 (4)	9.149 (4)	15.171 (4)**	10.887 (4)*	2.015 (4)	4.079 (4)	1.721 (4)	2.532 (4)	
서비스/해당여부별									
부모 직접돌봄	14.1	10.6	53.7	79.1	19.1	4.8	4.1	14.0	100.0(799)
어린이집 이용자	15.9	10.8	58.3	86.9	18.9	4.5	4.6	12.6	100.0(741)
유치원 이용자	19.6	17.3	68.0	86.1	18.0	5.7	6.2	15.7	100.0(388)
반일제 이용자	35.8	100.0	88.4	96.8	35.8	24.2	17.9	24.2	100.0(95)
초등 돌봄 전반	26.2	11.8	59.8	79.3	14.8	4.4	4.1	21.4	100.0(271)
양육수당 이용자	13.9	9.7	55.0	79.7	18.7	4.4	4.1	11.8	100.0(863)
아동수당 이용자	13.5	9.8	54.4	80.9	18.1	4.0	3.7	10.7	100.0(896)
모 근로단축 이용자	17.1	15.2	57.1	76.2	15.2	6.7	6.7	13.3	100.0(105)
부 근로단축 이용자	33.3	24.2	63.6	81.8	39.4	18.2	18.2	21.2	100.0(33)
취약가구	42.9	14.3	57.1	85.7	50.0	14.3	21.4	35.7	100.0(14)
다문화 가구	20.0	26.7	53.3	80.0	26.7	13.3	26.7	20.0	100.0(15)
한부모 가구	30.0	10.0	60.0	80.0	20.0	0.0	0.0	30.0	100.0(10)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 3〉 육아관련 서비스 이용 만족도 1

단위: %, 점

구분	부모 직접양육		부모 돌봄		조부모/친인척 돌봄		아이돌보미		민간 베이비시터	
	만족 비율	5점 평균	만족 비율	5점 평균	만족 비율	5점 평균	만족 비율	5점 평균	만족 비율	5점 평균
전체	57.8	3.7	63.7	3.7	70.1	3.8	43.6	3.3	39.7	3.2
지역 구분										
대도시	52.1	3.5	51.2	3.5	65.6	3.8	33.3	3.2	37.5	3.0
중소도시	57.7	3.7	63.1	3.7	72.6	3.9	44.7	3.3	39.4	3.3
읍·면	63.6	3.8	77.4	3.9	68.3	3.8	54.2	3.7	45.5	3.4
$x^2(df)/F$	13.408 (8)	2.8	14.038 (8)	4.4*(a)	7.087 (8)	0.6	7.281 (8)	2.0	6.847 (8)	0.5
취업모 여부										
취업	60.3	3.7	72.1	3.8	72.1	3.9	49.0	3.4	42.9	3.4
휴직 중	60.0	3.8	44.9	3.4	69.6	3.8	40.0	3.4	37.5	2.9
학업 중	30.8	3.1	33.3	3.2	62.5	3.5	25.0	3.0	50.0	3.0

구분	부모 직접양육		부모 돌봄		조부모/친인척 돌봄		아이돌보미		민간 베이비시터	
	만족 비율	5점 평균	만족 비율	5점 평균	만족 비율	5점 평균	만족 비율	5점 평균	만족 비율	5점 평균
구직 중	46.7	3.5	55.0	3.7	64.9	3.8	28.6	3.3	20.0	3.2
미취업	58.9	3.7	61.5	3.7	69.0	3.8	50.0	3.3	40.0	3.1
$x^2(df)/F$	29.620 (16)*	2.6*	23.533 (16)	3.5**	16.373 (16)	0.5	25.016 (16)	0.2	14.725(16)	0.5
맞벌이 여부										
맞벌이	60.4	3.7	67.2	3.8	71.5	3.9	50.0	3.4	43.8	3.3
외벌이	55.5	3.6	61.1	3.7	68.5	3.8	38.7	3.3	35.3	3.1
소득없음	52.2	3.6	37.5	3.4	59.1	3.7	0.0	3.0	0.0	3.0
해당없음	50.0	3.6	50.0	3.2	71.4	3.7	16.7	2.7	0.0	3.0
$x^2(df)/F$	6.410 (12)	0.5	25.381 (12)*	2.1	9.565 (12)	0.3	9.904 (12)	1.3	9.584 (12)	0.2
가구내 여성취업										
전일제 취업	61.5	3.7	67.7	3.8	73.8	3.9	49.0	3.4	45.7	3.4
시간제 취업	56.3	3.7	63.2	3.7	63.8	3.7	40.0	3.2	31.3	2.9
$x^2(df)/t$	8.715 (4)	0.6	0.683 (4)	0.5	3.477 (4)	1.6	3.437 (4)	1.0	3.521 (4)	1.4
첫째아 기준										
초등부모	60.7	3.7	65.5	3.8	67.9	3.8	37.8	3.2	14.3	3.0
유아부모	56.2	3.6	64.5	3.7	70.4	3.9	45.7	3.4	47.4	3.3
영아부모	56.6	3.6	56.1	3.6	71.9	3.8	50.0	3.4	43.8	3.3
$x^2(df)/F$	4.543 (8)	1.4	12.156 (8)	1.7	3.332 (8)	0.4	7.628 (8)	0.5	17.742(8)*	0.3(a)
소득 기준										
150만원 이하	38.5	3.3	22.2	2.8	45.5	3.5	0.0	2.0	100.0	4.0
150~250만원	54.5	3.6	67.9	3.9	55.0	3.6	33.3	3.1	66.7	3.3
250~350만원	58.3	3.7	52.2	3.6	68.1	3.8	42.9	3.4	12.5	2.6
350~500만원	58.3	3.7	64.2	3.8	70.9	3.9	45.8	3.4	18.8	2.9
500만원 이상	59.0	3.7	70.0	3.8	74.2	3.9	46.7	3.4	50.0	3.4
$x^2(df)/F$	20.892 (16)	0.9	35.417 (16)**	4.8***	20.178 (16)	1.4	12.855 (16)	1.2	16.645(16)	1.7
서비스/해당여부별										
부모 직접돌봄	57.8	3.7	63.7	3.7	70.1	3.8	44.0	3.3	38.3	3.2
어린이집 이용자	56.4	3.6	63.4	3.7	67.3	3.8	41.9	3.3	38.6	3.2
유치원 이용자	57.9	3.7	66.7	3.7	69.0	3.8	31.5	3.2	38.7	3.1
반일제 이용자	62.7	3.8	59.0	3.6	63.1	3.8	26.7	3.1	43.3	3.2
초등 돌봄 전반	60.5	3.7	65.6	3.8	67.4	3.8	38.2	3.2	16.7	3.0
양육수당 이용자	58.5	3.7	63.8	3.7	70.1	3.9	45.0	3.3	41.3	3.2
아동수당 이용자	58.0	3.7	62.6	3.7	71.1	3.9	41.9	3.3	41.9	3.2
모 근로단축 이용자	61.3	3.7	70.2	3.9	73.3	3.9	37.5	3.1	45.5	3.3
부 근로단축 이용자	81.5	4.0	66.7	3.9	65.0	3.9	42.9	3.6	60.0	3.2
취약가구	71.4	3.7	40.0	3.3	54.5	3.6	0.0	2.0	50.0	2.5
다문화 가구	75.0	4.1	66.7	3.8	70.0	3.7	25.0	3.0	100.0	4.0
한부모 가구	50.0	3.6	50.0	3.2	71.4	3.7	16.7	2.7	0.0	3.0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 4〉 육아관련 서비스 이용 만족도 2

단위: %, 점

구분	공공 산후도우미		민간 산후도우미		어린이집 이용		유치원 이용		시간제보육	
	만족비율	5점 평균	만족비율	5점 평균	만족비율	5점 평균	만족비율	5점 평균	만족비율	5점 평균
전체	56.8	3.6	48.6	3.4	73.4	3.9	74.7	3.9	63.4	3.8
지역 구분										
대도시	43.2	3.3	39.1	3.1	68.2	3.7	66.3	3.8	53.3	3.7
중소도시	60.4	3.7	55.9	3.5	74.2	3.9	75.4	3.9	72.7	3.9
읍·면	58.9	3.6	46.9	3.5	75.9	3.9	82.9	4.1	51.4	3.5
$x^2(df)/F$	6.673 (8)	2.1	8.309(8)	2.7	13.041 (8)	2.8(a)	8.698 (8)	3.0*(a)	11.663 (8)	1.8(a)
취업모 여부										
취업	55.2	3.5	50.0	3.5	75.2	3.9	76.1	3.9	64.4	3.8
휴직 중	56.3	3.5	54.8	3.3	80.5	4.0	80.0	3.9	60.0	3.6
학업 중	20.0	2.6	50.0	3.3	58.3	3.7	57.1	3.6	0.0	3.0
구직 중	54.5	3.5	30.0	3.2	72.8	4.0	73.3	3.9	54.2	3.8
미취업	62.1	3.7	46.9	3.5	70.0	3.8	73.7	3.9	78.3	3.9
$x^2(df)/F$	20.663 (16)	2.0	15.952 (16)	0.3(a)	18.211 (16)	2.0	11.069 (16)	0.3	19.252 (16)	0.7(a)
맞벌이 여부										
맞벌이	53.5	3.5	51.1	3.4	76.9	3.9	77.4	3.9	63.2	3.7
외벌이	62.2	3.7	45.7	3.4	70.6	3.8	74.7	3.9	65.9	3.8
소득없음	37.5	3.4	25.0	3.3	64.7	3.8	53.8	3.7	62.5	4.0
해당없음	50.0	4.0	50.0	3.5	55.6	3.6	42.9	3.1	33.3	3.3
$x^2(df)/F$	10.361 (12)	0.9	9.444 (12)	0.0	19.691 (12)	1.2(a)	20.974 (12)	2.6	6.725 (12)	0.4
가구내 여성취업										
전일제 취업	52.1	3.5	54.8	3.5	77.1	3.9	77.0	3.9	58.8	3.7
시간제 취업	62.9	3.6	42.3	3.2	73.4	3.9	76.0	3.8	76.0	3.9
$x^2(df)/t$	3.214 (4)	−0.6	3.401(4)	1.2	1.887(4)	0.9	2.074 (4)	0.8	3.839 (4)	−0.9
첫째아 기준										
초등부모	50.0	3.4	31.8	3.2	64.9	3.8	73.2	3.9	63.9	3.8
유아부모	61.5	3.7	56.1	3.5	78.6	3.9	77.3	3.9	67.7	3.8
영아부모	55.4	3.5	55.6	3.4	74.3	4.0	40.0	3.2	25.0	3.0
$x^2(df)/F$	8.438 (8)	1.2	12.017 (8)	1.9	25.145 (8)**	4.3*(a)	27.960 (8)***	2.0	11.897 (8)	3.1*
소득 기준										
150만원 이하	50.0	3.0	0.0	3.0	69.2	3.9	50.0	2.8	33.3	3.3
150~250만원	56.0	3.6	16.7	2.7	69.8	3.9	73.1	4.0	50.0	3.6
250~350만원	61.1	3.7	48.0	3.3	69.6	3.9	70.9	3.8	62.5	3.7
350~500만원	57.6	3.5	59.1	3.6	74.7	3.9	79.0	4.0	73.0	3.9
500만원 이상	54.4	3.5	45.7	3.4	76.3	3.9	74.8	3.9	61.3	3.8

구분	공공 산후도우미		민간 산후도우미		어린이집 이용		유치원 이용		시간제보육	
	만족비율	5점 평균	만족비율	5점 평균	만족비율	5점 평균	만족비율	5점 평균	만족비율	5점 평균
$x^2(df)/F$	19.302 (16)	0.7	11.646 (16)	1.4	22.302 (16)	0.2(a)	49.263 (16)***	3.5**(a)	12.766 (16)	0.5
서비스/해당여부별										
부모 직접돌봄	59.0	3.6	46.3	3.4	72.3	3.9	76.0	3.9	66.4	3.8
어린이집 이용자	55.3	3.5	46.0	3.4	73.4	3.9	73.2	3.9	61.0	3.7
유치원 이용자	50.0	3.5	43.3	3.3	69.8	3.8	74.7	3.9	60.5	3.7
반일제 이용자	54.8	3.5	33.3	3.3	66.3	3.7	65.7	3.7	61.8	3.7
초등 돌봄 전반	47.6	3.3	30.6	3.1	66.0	3.8	72.9	3.9	63.4	3.8
양육수당 이용자	58.8	3.6	49.6	3.4	75.1	3.9	75.5	3.9	64.2	3.8
아동수당 이용자	57.4	3.6	49.3	3.4	74.3	3.9	74.9	3.9	62.8	3.7
모 근로단축 이용자	57.1	3.6	43.5	3.5	75.6	3.8	75.6	3.9	72.2	3.9
부 근로단축 이용자	55.6	3.6	66.7	3.8	69.6	3.8	70.0	3.9	72.7	4.1
취약가구	40.0	2.8	33.3	3.0	54.5	3.5	42.9	3.1	66.7	3.7
다문화 가구	50.0	3.8	100.0	5.0	88.9	4.1	75.0	3.8	100.0	4.3
한부모 가구	50.0	4.0	50.0	3.5	55.6	3.6	42.9	3.1	33.3	3.3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 5〉 육아관련 서비스 이용 만족도 3

단위: %, 점

구분	반일제 이상		영유아기 사교육		영아기 사설놀이		육아종합지원 센터		육아공동체		지역아동센터	
	만족 비율	5점 평균	만족 비율	5점 평균	만족 비율	5점 평균	만족 비율	5점 평균	만족 비율	5점 평균	만족 비율	5점 평균
전체	62.1	3.7	54.1	3.6	51.3	3.5	58.6	3.6	60.0	3.6	56.8	3.6
지역 구분												
대도시	53.6	3.5	48.2	3.5	50.6	3.5	62.7	3.6	46.2	3.2	69.2	3.8
중소도시	64.0	3.8	55.7	3.6	50.8	3.5	53.1	3.6	66.7	3.8	37.5	3.4
읍·면	70.6	3.8	55.5	3.6	53.4	3.6	64.3	3.7	66.7	3.8	75.0	3.9
$x^2(df)/F$	7.839 (8)	1.5	5.514 (8)	1.6	5.691 (8)	0.7	7.709 (8)	0.5	5.812 (8)	2.3	7.958 (6)	1.0
취업모 여부												
취업	56.9	3.6	50.7	3.5	55.5	3.6	59.1	3.6	64.7	3.8	56.3	3.7
휴직 중	50.0	3.5	62.0	3.7	53.3	3.6	59.4	3.7	50.0	3.1	57.1	3.6
학업 중	0.0	3.0	44.4	3.6	61.5	3.7	66.7	3.7	0.0	3.0	100.0	4.0
구직 중	84.6	3.8	55.9	3.6	44.0	3.5	52.0	3.6	50.0	3.7	20.0	3.2
미취업	73.7	3.9	55.4	3.6	47.7	3.5	60.4	3.7	75.0	3.8	75.0	3.9
$x^2(df)/F$	26.662 (16)*	1.0(a)	10.774 (16)	0.6	16.385 (16)	0.6	15.802 (16)	0.1(a)	14.136 (16)	1.2	11.785 (12)	0.6(a)
맞벌이 여부												
맞벌이	55.9	3.6	52.9	3.6	54.3	3.5	59.8	3.6	62.5	3.6	54.5	3.6
외벌이	75.0	3.9	56.6	3.6	48.1	3.5	59.5	3.7	60.0	3.7	61.5	3.7
소득없음	66.7	3.7	50.0	3.5	45.7	3.5	33.3	3.5	0.0	3.0	50.0	3.5

구분	반일제 이상		영유아기 사교육		영아기 사설놀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공동체		지역아동센터	
	만족 비율	5점 평균	만족 비율	5점 평균	만족 비율	5점 평균	만족 비율	5점 평균	만족 비율	5점 평균	만족 비율	5점 평균
해당없음	0.0	3.0	33.3	3.5	62.5	3.8	50.0	3.5	-	-	-	-
$x^2(df)/F$	9.103 (12)	1.1(a)	5.421 (12)	0.6	11.520 (12)	0.4	7.994 (12)	0.2	3.532 (8)	0.3	2.291 (6)	0.1
가구내 여성취업												
전일제 취업	60.4	3.7	54.6	3.6	55.8	3.6	54.4	3.6	52.6	3.5	60.0	3.7
시간제 취업	38.5	3.2	50.0	3.5	52.4	3.5	70.0	3.7	83.3	3.7	50.0	3.5
$x^2(df)/t$	5.933 (4)	1.7	6.059 (4)	1.2	3.047 (4)	0.9	4.552 (4)	-0.7	7.077 (4)	-0.3	2.918 (3)	0.6
첫째아 기준												
초등부모	56.8	3.6	46.3	3.5	44.9	3.4	55.8	3.5	38.5	3.3	50.0	3.5
유아부모	68.5	3.8	58.3	3.6	54.4	3.6	54.7	3.6	70.0	3.8	62.5	3.7
영아부모	25.0	3.0	60.5	3.6	54.9	3.6	68.9	3.8	71.4	3.6	57.1	3.9
$x^2(df)/F$	8.001 (8)	1.9	12.454 (8)	2.1	12.146 (8)	2.2	11.206 (8)	1.1	11.665 (8)	1.6	4.670 (6)	0.5
소득 기준												
150만원 이하	50.0	3.5	50.0	3.5	50.0	3.6	33.3	3.3	100.0	4.0	0.0	3.0
150~250만원	100.0	4.0	54.3	3.5	54.7	3.6	90.0	4.0	100.0	4.0	100.0	4.5
250~350만원	46.7	3.4	53.8	3.6	46.6	3.5	57.1	3.6	33.3	3.0	50.0	3.4
350~500만원	69.2	3.8	55.0	3.6	48.5	3.5	59.3	3.6	69.2	3.8	66.7	3.8
500만원 이상	60.4	3.7	53.8	3.6	56.0	3.6	55.4	3.6	57.9	3.6	52.9	3.6
$x^2(df)/F$	26.628 (16)*	0.8(a)	11.595 (16)	0.1	10.169 (16)	0.8	10.975 (16)	0.7	10.352 (16)	1.2	8.655 (12)	1.0
서비스/해당여부별												
부모 직접돌봄	63.5	3.7	54.8	3.6	50.3	3.5	61.4	3.7	63.2	3.6	57.6	3.6
어린이집 이용자	58.8	3.6	53.2	3.6	50.8	3.5	55.7	3.6	54.5	3.5	55.9	3.6
유치원 이용자	58.2	3.6	49.2	3.5	48.8	3.5	55.7	3.6	45.5	3.4	54.2	3.5
반일제 이용자	62.1	3.7	58.3	3.6	58.7	3.6	41.2	3.4	52.2	3.4	35.3	3.3
초등 돌봄 전반	53.1	3.5	43.8	3.5	44.7	3.4	55.0	3.5	33.3	3.3	45.5	3.5
양육수당 이용자	61.9	3.7	54.9	3.6	51.3	3.5	57.1	3.6	57.9	3.6	54.3	3.6
아동수당 이용자	60.2	3.7	54.2	3.6	51.4	3.5	58.0	3.6	55.6	3.5	51.5	3.6
모 근로단축 이용자	50.0	3.5	48.3	3.5	53.8	3.6	37.5	3.4	57.1	3.6	57.1	3.7
부 근로단축 이용자	75.0	3.9	57.1	3.7	66.7	3.7	61.5	3.6	83.3	3.8	66.7	3.8
취약가구	50.0	2.5	37.5	3.4	50.0	3.5	71.4	3.7	50.0	2.5	66.7	3.3
다문화 가구	50.0	3.8	25.0	3.3	50.0	3.5	25.0	3.3	100.0	4.0	50.0	3.8
한부모 가구	0.0	3.0	33.3	3.5	62.5	3.8	50.0	3.5	-	-	-	-

* $p < .05$.

〈부록 표 6〉 육아관련 서비스 이용 인지도 1

단위: %, 점

구분	아이돌보미		민간 베이비시터		공공산후 도우미		민간 산후도우미		어린이집 이용		유치원 이용	
	인지 비율	5점 평균	인지 비율	5점 평균	인지 비율	5점 평균	인지 비율	5점 평균	인지 비율	5점 평균	인지 비율	5점 평균
전체	57.6	3.6	53.1	3.4	54.5	3.5	54.6	3.5	80.5	4.2	74.9	4.1
지역 구분												
대도시	51.8	3.3	49.2	3.3	46.8	3.2	46.9	3.4	74.7	4.1	71.5	4.1
중소도시	55.4	3.5	50.5	3.4	55.0	3.5	55.0	3.6	82.1	4.3	75.4	4.1
읍·면	68.9	3.8	63.6	3.7	62.2	3.7	60.6	3.7	84.8	4.4	76.7	4.2
$x^2(df)/F$	26.084 (8)**	8.2*** (a)	19.856 (8)*	8.0*** (a)	24.686 (8)**	8.2***	13.010 (8)	4.1*	7.458 (8)	2.4	8.203 (8)	1.4
취업모 여부												
취업	58.4	3.6	54.0	3.4	54.4	3.4	51.8	3.5	82.5	4.3	78.2	4.2
휴직 중	63.2	3.7	59.7	3.5	58.8	3.6	61.4	3.6	76.2	4.0	77.3	4.2
학업 중	54.5	3.6	53.8	3.5	80.0	4.0	72.7	3.8	100.0	5.0	75.0	4.1
구직 중	58.1	3.6	47.1	3.3	62.4	3.7	58.8	3.6	76.9	4.2	66.1	4.0
미취업	54.7	3.5	51.7	3.4	50.2	3.5	53.1	3.5	82.0	4.3	72.3	4.1
$x^2(df)/F$	10.487 (16)	0.7	11.493 (16)	0.4	23.509 (16)	1.4(a)	25.771 (16)	0.3	16.420 (16)	1.6	13.016 (16)	0.7
맞벌이 여부												
맞벌이	59.4	3.6	56.8	3.5	56.3	3.5	55.2	3.6	79.3	4.2	77.6	4.2
외벌이	55.4	3.5	49.5	3.4	52.7	3.5	54.5	3.5	81.0	4.3	71.6	4.1
소득없음	62.2	3.9	54.1	3.7	58.1	3.8	54.3	3.7	100.0	5.0	73.1	4.3
해당없음	25.0	2.8	22.2	2.7	25.0	2.8	25.0	2.6	100.0	5.0	66.7	3.7
$x^2(df)/F$	31.276 (12)**	2.7*	22.166 (12)*	2.4	25.356 (12)*	2.0	20.106 (12)	2.1	10.225 (12)	1.9(a)	15.933 (12)	1.0
가구내 여성취업												
전일제 취업	58.8	3.6	55.2	3.4	53.4	3.4	53.7	3.5	77.9	4.1	77.8	4.2
시간제 취업	62.5	3.6	56.5	3.5	62.9	3.8	56.1	3.7	86.7	4.4	78.4	4.2
$x^2(df)/F$	2.395 (4)	-0.7	3.736 (4)	-0.6	9.698 (4)*	-2.6*	7.715 (4)	-1.7	2.159 (4)	-1.3	3.380 (4)	-0.1
첫째아 기준												
초등부모	56.6	3.6	50.4	3.4	55.1	3.5	55.0	3.6	90.5	4.5	83.2	4.3
유아부모	60.3	3.6	54.8	3.4	52.8	3.5	55.1	3.5	84.1	4.3	78.5	4.2
영아부모	53.9	3.5	54.3	3.5	57.1	3.5	52.7	3.5	70.7	4.0	64.8	3.9
$x^2(df)/F$	9.735 (8)	1.1	4.201 (8)	0.4	4.737 (8)	0.3	5.671 (8)	0.4	25.613 (8)**	10.4***	25.978 (8)**	8.8***
소득 기준												
150만원 이하	40.0	3.3	25.0	2.9	13.3	2.9	25.0	3.1	100.0	4.8	45.5	3.8
150~250만원	54.7	3.6	45.7	3.3	59.3	3.7	51.3	3.5	57.1	3.8	62.1	3.9
250~350만원	58.5	3.6	56.4	3.5	54.0	3.5	55.2	3.6	85.0	4.3	76.8	4.2
350~500만원	57.0	3.5	48.8	3.3	55.4	3.6	52.1	3.5	84.2	4.3	76.4	4.1
500만원 이상	59.2	3.6	57.8	3.5	55.2	3.4	58.5	3.6	79.3	4.3	77.4	4.2
$x^2(df)/F$	7.314 (16)	0.3	26.095 (16)	1.9	23.868 (16)	1.9	16.492 (16)	0.9	18.590 (16)	2.0	28.970 (16)*	2.0(a)

구분	아이돌보미		민간 베이비시터		공공산후 도우미		민간 산후도우미		어린이집 이용		유치원 이용	
	인지 비율	5점 평균	인지 비율	5점 평균	인지 비율	5점 평균	인지 비율	5점 평균	인지 비율	5점 평균	인지 비율	5점 평균
서비스/해당여부별												
부모 직접돌봄	59.2	3.6	54.5	3.5	56.5	3.6	55.5	3.6	80.8	4.3	75.0	4.2
어린이집 이용자	58.5	3.6	53.5	3.4	55.8	3.5	54.6	3.5	-	-	76.7	4.2
유치원 이용자	56.0	3.5	52.7	3.4	55.1	3.5	57.3	3.6	90.0	4.4	-	-
반일제 이용자	58.5	3.6	58.5	3.6	54.7	3.4	62.7	3.7	86.7	4.4	75.0	4.1
초등 돌봄 전반	61.2	3.6	55.2	3.5	60.7	3.7	57.9	3.7	94.8	4.6	87.1	4.4
양육수당 이용자	58.9	3.6	54.8	3.5	57.1	3.6	56.6	3.6	79.8	4.2	75.2	4.2
아동수당 이용자	58.3	3.6	54.0	3.4	56.1	3.5	56.2	3.6	80.2	4.2	74.7	4.1
모 근로단축 이용자	65.2	3.7	63.8	3.6	61.9	3.6	59.8	3.6	81.5	4.3	81.3	4.3
부 근로단축 이용자	76.9	3.8	64.3	3.6	79.2	4.0	62.5	3.7	90.0	4.3	78.3	4.2
취약가구	62.5	4.0	41.7	3.1	55.6	3.7	27.3	3.0	33.3	3.7	57.1	4.1
다문화 가구	45.5	3.1	30.8	3.0	36.4	3.1	42.9	3.2	100.0	4.7	90.9	4.3
한부모 가구	25.0	2.8	22.2	2.7	25.0	2.8	25.0	2.6	100.0	5.0	66.7	3.7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 7〉 육아관련 서비스 이용 인지도 2

단위: %, 점

구분	시간제보육		반일제 이상		사교육		사설놀이 공간		육아종합 지원센터		육아공동체		지역아동 센터	
	인지 비율	5점 평균	인지 비율	5점 평균	인지 비율	5점 평균	인지 비율	5점 평균	인지 비율	5점 평균	인지 비율	5점 평균	인지 비율	5점 평균
전체	56.5	3.6	46.2	3.4	44.2	3.3	60.0	3.7	30.4	2.9	21.7	2.6	31.9	2.9
지역 구분														
대도시	50.8	3.4	42.6	3.3	35.1	3.1	50.9	3.5	20.9	2.7	16.7	2.5	26.2	2.8
중소도시	53.3	3.6	45.8	3.4	45.2	3.4	58.5	3.7	30.9	2.9	22.5	2.6	32.1	2.9
읍·면	70.8	3.9	50.7	3.4	52.2	3.5	76.2	4.1	38.2	3.1	24.6	2.7	36.8	3.1
$x^2(df)/F$	31.222 (8)***	11.0*** (a)	7.444 (8)	0.4	9.485(8)	2.9	11.348 (8)	3.7*	15.101 (8)	4.8**	7.402 (8)	1.5	10.282 (8)	3.9*
취업모 여부														
취업	57.4	3.6	48.7	3.4	45.3	3.4	60.2	3.7	30.7	2.9	21.8	2.6	33.4	2.9
휴직 중	56.8	3.6	45.2	3.3	43.2	3.3	57.5	3.7	37.2	3.1	24.1	2.7	34.1	3.0
학업 중	61.5	3.8	38.5	3.1	66.7	3.5	100.0	5.0	25.0	2.8	14.3	2.3	35.7	2.7
구직 중	61.4	3.8	44.7	3.3	30.8	3.1	75.0	3.9	32.9	3.0	27.7	2.7	36.3	3.0
미취업	54.1	3.5	44.8	3.4	45.7	3.4	57.0	3.6	27.1	2.9	19.1	2.6	27.8	2.9
$x^2(df)/F$	14.007 (16)	0.8	15.705 (16)	0.3	15.752 (16)	0.6	17.067 (16)	0.9 (a)	24.030 (16)	1.2	9.762(16)	0.6	18.206 (16)	0.3
맞벌이 여부														
맞벌이	57.5	3.6	47.4	3.4	44.1	3.3	61.0	3.7	32.8	2.9	22.6	2.6	33.4	2.9
외벌이	55.4	3.6	44.5	3.3	43.7	3.3	61.5	3.7	26.8	2.9	20.8	2.6	29.1	2.9
소득없음	61.3	3.8	55.6	3.6	54.5	3.7	25.0	3.5	45.5	3.5	26.3	2.8	43.2	3.2
해당없음	28.6	2.9	22.2	2.7	50.0	3.5	0.0	2.0	0.0	1.9	0.0	2.0	30.0	2.9
$x^2(df)/F$	18.459 (12)	1.6	9.153 (12)	1.9	14.695 (12)	0.5 (a)	22.689 (12)*	1.7	29.120 (12)**	5.1** (a)	14.275 (12)	1.4 (a)	12.389 (12)	1.0

구분	시간제보육		반일제 이상		사교육		사설놀이 공간		육아종합 지원센터		육아공동체		지역아동 센터	
	인지 비율	5점 평균	인지 비율	5점 평균	인지 비율	5점 평균	인지 비율	5점 평균	인지 비율	5점 평균	인지 비율	5점 평균	인지 비율	5점 평균
가구내 여성취업														
전일제 취업	58.3	3.6	47.2	3.3	43.4	3.3	63.5	3.8	31.0	2.9	22.3	2.6	33.1	2.9
시간제 취업	53.5	3.7	49.5	3.5	50.0	3.6	36.8	3.3	37.2	3.1	22.9	2.8	35.3	3.1
$x^2(df)/F$	7.545 (4)	-0.5	1.920 (4)	-1.0	5.04 1(4)	-1.7	5.048 (4)	1.6	9.873 (4)*	-1.7	8.821 (4)	-1.5	12.521 (4)*	-2.2*
첫째아 기준														
초등부모	56.6	3.6	48.1	3.4	45.9	3.4	59.1	3.7	30.3	2.9	23.8	2.7	37.2	3.1
유아부모	58.3	3.6	46.9	3.4	44.6	3.3	53.8	3.6	31.7	2.9	20.7	2.6	30.7	2.9
영아부모	53.2	3.6	42.3	3.3	41.9	3.3	65.0	3.8	27.9	2.9	20.3	2.5	25.8	2.7
$x^2(df)/F$	5.748 (8)	0.3	3.403 (8)	0.9	10.535 (8)	0.6	8.675 (8)	0.5	4.83 7(8)	0.1	13.134 (8)	3.6*	26.919 (8)***	10.1***
소득 기준														
150만원 이하	28.6	3.1	20.0	2.9	30.8	3.0	22.2	3.1	28.6	2.9	12.5	2.7	25.0	3.0
150~250만원	56.6	3.6	43.8	3.2	51.0	3.5	50.0	3.5	25.7	2.8	21.7	2.6	35.4	3.0
250~350만원	58.2	3.7	46.5	3.4	40.5	3.3	61.5	3.7	32.3	3.1	20.7	2.7	33.2	3.0
350~500만원	50.8	3.5	44.7	3.4	43.3	3.3	58.3	3.7	30.0	2.9	21.9	2.6	31.8	3.0
500만원 이상	61.4	3.6	48.9	3.4	46.2	3.4	67.1	3.8	30.7	2.9	22.7	2.6	30.8	2.8
$x^2(df)/F$	19.469 (16)	1.2	31.697 (16)*	1.6 (a)	11.729 (16)	0.6	14.890 (16)	1.2	13.499 (16)	1.3	13.303 (16)	0.1	30.175 (16)*	1.5 (a)
서비스/해당여부별														
부모 직접돌봄	57.6	3.7	47.3	3.4	44.1	3.4	62.3	3.8	31.3	3.0	21.6	2.6	32.2	3.0
어린이집 이용자	57.5	3.6	46.1	3.3	43.4	3.3	54.6	3.6	30.1	2.9	21.3	2.6	31.7	2.9
유치원 이용자	52.6	3.5	46.7	3.3	47.6	3.4	51.9	3.5	30.8	2.9	22.1	2.6	34.9	3.0
반일제 이용자	62.3	3.8	-	-	36.4	3.2	66.7	3.7	31.1	2.8	22.2	2.6	29.5	2.9
초등 돌봄 전반	63.0	3.7	52.7	3.5	50.5	3.6	66.1	3.9	34.2	3.0	25.9	2.8	41.5	3.2
양육수당 이용자	57.9	3.6	47.0	3.4	46.4	3.4	62.3	3.8	31.6	3.0	22.5	2.6	32.9	2.9
아동수당 이용자	57.3	3.6	46.2	3.4	44.7	3.4	61.4	3.7	30.7	2.9	21.4	2.6	31.5	2.9
모 근로단축 이용자	59.8	3.7	55.1	3.5	46.7	3.3	76.0	4.1	25.8	2.8	19.4	2.5	28.6	2.8
부 근로단축 이용자	72.7	3.8	60.0	3.6	33.3	3.1	83.3	4.0	40.0	3.2	33.3	2.9	33.3	2.9
취약가구	50.0	3.5	41.7	3.1	16.7	2.8	50.0	4.0	14.3	2.6	25.0	2.8	45.5	3.4
다문화 가구	66.7	3.8	54.5	3.5	14.3	2.9	66.7	3.3	27.3	3.3	15.4	2.7	9.1	2.5
한부모 가구	28.6	2.9	22.2	2.7	50.0	3.5	0.0	2.0	0.0	1.9	0.0	2.0	30.0	2.9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 8〉 가정 양육수당 증액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①+② 동의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동의하는 편이다	⑤ 매우 동의하는 편이다	④+⑤ 동의한다	5점 평균	계(수)
전체	4.1	10.6	14.7	16.7	34.5	34.2	68.6	3.8	100.0(1,013)
취업모 여부									
취업	5.7	13.9	19.7	15.4	36.1	28.9	64.9	3.7	100.0(402)
휴직 중	2.8	4.8	7.6	17.2	34.5	40.7	75.2	4.1	100.0(145)
학업 중	6.7	6.7	13.3	6.7	33.3	46.7	80.0	4.1	100.0(15)
구직 중	4.7	11.2	15.9	18.7	36.4	29.0	65.4	3.7	100.0(107)
미취업	2.6	9.0	11.7	17.8	31.8	38.8	70.6	4.0	100.0(343)
$x^2(df)/F$				26.875(16)*				4.5**(a)	
맞벌이 여부									
맞벌이	5.1	11.4	16.6	16.2	35.0	32.2	67.2	3.8	100.0(525)
외벌이	3.2	10.0	13.2	16.4	33.7	36.7	70.4	3.9	100.0(439)
소득없음	2.6	2.6	5.1	25.6	30.8	38.5	69.2	4.0	100.0(39)
해당없음	0.0	20.0	20.0	20.0	50.0	10.0	60.0	3.5	100.0(10)
$x^2(df)/F$				12.924(12)				1.6	
첫째아 기준									
초등부모	5.4	13.9	19.3	20.1	36.8	23.8	60.6	3.6	100.0(353)
유아부모	4.4	11.2	15.6	16.3	33.3	34.9	68.1	3.8	100.0(436)
영아부모	1.8	4.0	5.8	12.1	33.0	49.1	82.1	4.2	100.0(224)
$x^2(df)/F$				49.425(8)***				22.8***(a)	
소득 기준									
150만원 이하	0.0	0.0	0.0	41.2	35.3	23.5	58.8	3.8	100.0(17)
150~250만원	4.8	6.0	10.7	17.9	36.9	34.5	71.4	3.9	100.0(84)
250~350만원	2.2	11.0	13.2	14.9	34.6	37.3	71.9	3.9	100.0(228)
350~500만원	5.3	10.3	15.6	15.3	33.9	35.2	69.1	3.8	100.0(301)
500만원 이상	4.5	12.1	16.5	17.6	34.1	31.8	65.9	3.8	100.0(381)
$x^2(df)/F$				17.599(16)				0.9	
서비스/해당여부별									
부모 직접돌봄	4.4	10.8	15.1	15.6	33.8	35.4	69.2	3.9	100.0(799)
어린이집 이용자	4.5	11.7	16.2	17.3	34.0	32.5	66.5	3.8	100.0(741)
유치원 이용자	4.4	12.4	16.8	17.5	34.3	31.4	65.7	3.8	100.0(388)
반일제 이용자	3.2	6.3	9.5	17.9	30.5	42.1	72.6	4.0	100.0(95)
초등 돌봄 전반	6.6	15.9	22.5	18.8	35.1	23.6	58.7	3.5	100.0(271)
양육수당 이용자	3.7	9.4	13.1	16.3	33.4	37.2	70.6	3.9	100.0(863)
아동수당 이용자	4.2	9.9	14.2	16.2	33.6	36.0	69.6	3.9	100.0(896)
모 근로단축 이용자	5.7	14.3	20.0	15.2	34.3	30.5	64.8	3.7	100.0(105)
부 근로단축 이용자	3.0	3.0	6.1	15.2	54.5	24.2	78.8	3.9	100.0(33)
취약가구	0.0	7.1	7.1	7.1	50.0	35.7	85.7	4.1	100.0(14)
다문화 가구	0.0	0.0	0.0	6.7	53.3	40.0	93.3	4.3	100.0(15)
한부모 가구	0.0	6.7	6.7	13.3	46.7	33.3	80.0	4.1	100.0(15)

* $p < .05$, ** $p < .01$, *** $p < .00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Ⅱ)
: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93330
9 791190 485166
ISBN 979-11-90485-16-6